통일교육교수지침서

— 1971 —

국 토 통 일 원

제 출 문

국토통일원 장관 귀하

본서를 통일교육 교수지침서 작성 사업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1. 7.

작성기관 :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작성책임자 : 박 용 헌

서 문

통일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통일원에서는 이미 통일교육의 현황을 분석 검토하여 시대적 요청에 호응하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정립한바 있다. 새로이 정립한 「민주승공 통일교육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급 교육대상에 알맞는 학습내용 교수방법, 교재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나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재교육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호응하고 또 새로이 정립한 통일교육의 목표를 구현하는 교육내용을 설정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교육지침서」를 마련하고 과제를 연구위원들은 위촉받은 것이다.

본 교수지침서에서 취급한 교육내용은 이미 정립된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분류를 토대로하여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각 부로 구분하였다. 즉 제1부 한국의 전통적 가치, 제2부 민주주의, 제3부 공산주의, 제4부 민주·공산의 대결, 그리고 제5부 통일을 위한 사명의 다섯부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각부를 2~3장으로 다시 나누고 각장에서 취급해야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주제」를 각 장마다 둘 내지 셋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교수지침서는 5부 14장 40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는 학습단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각 주제 마다 비교적 독립적인 학습활동으로 구분하려 하였다. 따라서 애당초의 계획으로는 각주제마다 교수목표, 학습내용의 개요, 교수방법, 내용요약 및 강조점, 평가방법, 참고문헌등을 정리하려 했던 것이나 연구원들의 능

력부족과 한정된 연구기간등의 제한으로 이들 요목을 다 취급하지 못하고 다만 각주제에서 취급되어야 할 내용개요와 교수방법, 그리고 참고문헌의 세 가지만을 정리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본 교수지침서는 각계각층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점과 그리고 또한 앞으로 있을 각급 교육대상에 알맞는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모체가 되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하는 본 교수지침서는 기대수준에 미달되고 있음을 연구원들은 자인하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수정 보완하게 될 것이다.

통일교육 교수지침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완숙된 교수지침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비판과 조언을 연구원들은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1971. 7. 24.

연구위원 일동

목 차

서 문 ---------- 1

제1부 한국의 전통적 가치 ---------- 7

제1장 민족과 국가의식 ---------- 9

Ⅰ 조상들의 통일을 위한 노력 ---------- 11

Ⅱ 민족문화와 국민성 ---------- 20

Ⅲ 국가의식의 발달 ---------- 29

제2장 민주주의와 전통적 가치 ---------- 37

Ⅰ 전제(專制)를 피하려는 정치 ---------- 39

Ⅱ 한국인의 자성 ---------- 46

Ⅲ 사회적규범과 인간관계 ---------- 54

제3장 한국전통이 본 공산주의 ---------- 62

Ⅰ 한국인의 정치의식의 확대 ---------- 64

Ⅱ 한국사상으로 본 공산주의 ---------- 72

Ⅲ 유물사관과 한국사 ---------- 80

제2부 민주주의 ---------- 89

제1장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 91

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 ---------- 93

Ⅱ 인간의 기본권리와 자유 ---------- 101

Ⅲ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 109

제2장 민주적 제도와 과정 ---------- 118

Ⅰ 민주주의의 정치적 신념과 정치제도 ---------- 120

Ⅱ 개인의 정치참여와 정치과정 ---------- 128
Ⅲ 자유경제 체제 ---------- 138
제3장 민주적 생활양식 ---------- 148
Ⅰ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 149
Ⅱ 민주적 인성과 태도 ---------- 160
Ⅲ 갈등의 건설적 해결 ---------- 169

제3부 공 산 주 의 ---------- 179
제1장 공산주의 발생의 역사적 배경과 기본이론 ---------- 181
Ⅰ 공산주의 발생의 사회적 배경 ---------- 182
Ⅱ 공산주의의 이론적 근거 ---------- 192
Ⅲ 공산주의 주창자의 생애 ---------- 202
제2장 공산주의 이론의 변천과 모순 ---------- 216
Ⅰ 공산주의의 변천 ---------- 218
Ⅱ 공산주의 국가 및 프롤레타리아독재론 ---------- 228
Ⅲ 공산주의 이론 비판 ---------- 238
제3장 공산국가의 현실 ---------- 250
Ⅰ 소련의 권력체제 ---------- 252
Ⅱ 북괴공산정권의 수립 ---------- 266
Ⅲ 북괴사회의 현실 ---------- 274

제4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 283
제1장 민주·공산 대결의 기원 및 양상 ---------- 285
Ⅰ 민주·공산대결의 이론적 근거 및 시초 ---------- 287
Ⅱ 민주·공산 대결의 양상 ---------- 295
Ⅲ 공산세력의 팽창과 분산 ---------- 304

제2장 북괴의 도전 ------------------------ 314
Ⅰ 6.25 이전의 도전 ------------------------ 316
Ⅱ 6.25 동란 ------------------------ 325
Ⅲ 6.25 이후 ------------------------ 333
제3장 민주·공산대결의 전망 ------------------------ 340
Ⅰ 민주진영 대 공산진영 ------------------------ 342
Ⅱ 대한민국과 북괴 ------------------------ 350

제5부 통일을 위한 사명 ------------------------ 361
제1장 한국의 분단과 통일성의 요청 ------------------------ 363
Ⅰ 한국의 분단 ------------------------ 365
Ⅱ 통일의 요청 ------------------------ 373
제2장 우리의 통일정책과 사명 ------------------------ 382
Ⅰ 우리의 통일정책 ------------------------ 384
Ⅱ 우리의 정신적 자세 ------------------------ 393
Ⅲ 우리의 주체역량의 배양 ------------------------ 401

제 1 부

한국의 전통적 가치

제 1 장 민족과 국가의식

한국의 국가의식은 굳건한 민족의식위에 성립되었다는 특성이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비롯한 민족국가는 종족 언어 문자의 단일 문화공동체로 지속되어 왔고 한번도 분단된 일이 없이 20세기까지 이끌어져 왔다는 역사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통일국가를 유지하는데 경주하였던 조상들의 노력과 수천년의 역사시대속에 흐르고 있는 문화 창조에의 참여가 없었던들 이룩할 수 없는 과업이다.

한국의 전통적 가치는 승공통일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민족적 국가관을 세워주는데 공헌하여야 한다. 우리민족은 단일 혈통으로 구성된 문화공동체이며 민족과 국가에 대한 긍지를 가질 역사적 배경을 인식함으로서 국가의 융성을 개인의 행복과 동일시하는 새로운 국가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章에서는 우리의 조상들이 조국의 통일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큰 노력을 경주하였는가를 살펴 정치가, 종교가, 문화가, 예술가 및 서민층까지도 국가적 위기에는 개인보다 민족을 앞세웠던 사실에 대하여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음 주제에서는 민족문화의 국민성의 특징을 찾아보고 평화애호 외래문화의 승화 자주성이 강한 민족공동체 독창적이면서도 대중성을 띤 문화전통 개성보다는 조화를 강조하는 제 특성 등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문화가 결코 계급문화일수가 없고 지도층과 대중의 역학적 융합이 각 시대를 통하여 균형있게 나타나 있음을 보았다.

끝으로 국가의식은 시대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계속 발전되어 왔음을 고찰하였다. 신라의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노력과 고려의 북진정책은 불교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식이었고 이조시대의 성리학이 지나치게 도덕규범을 강조하여 일시적이나마 국가의식이 둔화되었지만 임진 병자의 국란을 계기로 17, 18세기에는 국가의식은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말에 이르러서 외래문화와의 접촉과 다면외교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여지자 민권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적 국가의식으로 발전하고 이것은 곧 일제에의 항쟁으로 연결되었다.

해방이후 우리의 국가의식은 공산주의의 도전을 받아 민주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국제적 고립을 회피하는 자주성을 지닌 새로운 국가관과 개인과 국가의 동일시를 내면화 가치화 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I 祖上들의 통일을 위한 노력

1. 내용개요

우리 민족은 나라를 세운 이래 반만년의 오랜역사를 이어오면서 種族, 言語, 文化가 하나로 뭉친대로 어떤 외국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이것은 몽고나 아라비아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을 자랑하던 시대가 있었던 민족은 지금에 와서 여러개의 민족으로 나뉘어져 있어도 우리 배달민족만은 지금껏 단일민족이 분열되지 않았음을 자랑한다.

여러차례로 걸친 왕조의 변혁이나 易姓革命에도 불구하고 신라통일(676)이후 민족이 분단된 일은 역사, 정치, 지리적, 조건이 언제나 북쪽 오랑캐의 남침을 방지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도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우리가 한 민족임을 자각하고 행동하였다. 현재 본의 아닌 분단의 비극을 맛보고 있으나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또 다시 되풀이 되어서도 안될 일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강토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우렸는가 하는 교훈은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지표가 될 것이다.

古代에서 부터 우리 民族은 漢族이나 胡族들의 공격목표가 되었다. 여러 部族들은 古朝鮮을 중심으로 이들의 침입을 막아냈다. 遼河를 경계선으로 燕과 대치하고 있던 古朝鮮은 가끔 匈奴族과 결탁하여 漢의 세력을 몰아내기도 하고 B.C. 108年에 한때 漢에게 서북지방을 점령당한 일도 있으나 20년후에는 부여, 옥저, 예, 고구려 등의 부족들은 일치단결하여 이를 만주벌판으로 축출하였으며 다만 대동강 유역의 樂浪지방만이 중국문화의 도입장소로 존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고구려의 반격에 견디지 못하여 만주의 서남부로 쫓겨갔다.

부족국가들이 세나라로 뭉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차차 국가적 조직을 가다듬을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가 강력한 힘으로 방파제의 구실을 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漢族, 鮮卑族을 비롯하여 隋、唐에 이르기까지 고구려가 민족의 위기를 막아 준 공적은 크다. 그러나 세 나라가 하나로 뭉치는 통일과업에는 여러가지 시련이 있었다. 고구려의 남진에 따라 백제는 수도를 公州에서 扶余로 옮겨야 했고 백제는 다시 신라와 충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가장 뒤늦게 일어난 新羅는 백제와 협력하여 고구려를 방어하고 또 漢江유역으로 진출하니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받게 되었다. 삼국이 제각기 통일의욕에서 경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 중국대륙에서는 唐이라는 새 세력이 동방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국제정세는 고구려와 백제를 연결시키고 신라는 당과 친교근공의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는 신라의 통일성공으로 끝났다. 이것이 민족국가로 뭉친 큰 사업이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흩어지지 않은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신라는 결코 이와 같이 외세와 결탁하여 손 쉽게 통일을 이룩한 것은 아니다. 당은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고구려와 백제의 옛땅을 식민지로 만들려 하였으므로 여기서 민족의식이 발휘되어 당의 세력을 몰아내는데 온갖 힘을 기울였다. 신라의 文武王은 이런 통일투쟁의 선봉이었다. 671년에는 백제 옛터에 남아 있던 당의 주둔군을 몰아내고 이어 한강유역과 평양에서 당을 격퇴시킴으로서 10년에 걸친 통일사업을 완수하였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고구려와 백제를 합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 실제 과정은 당의 영토적 야심을 분쇄하고 한반도에서 외국세력을 쫓아내는 자주정

신의 소산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비록 신라의 삼국통일이 만주의 넓다란 영토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백제와 고구려가 외국세력에 지배되는 경우 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으며 이로부터 민족이 하나로 뭉쳐 단일 혈통, 단일 문화를 육성해 나가는 기반을 이루었다는 중요한 계기를 이룩한 셈이다. 이 통일사업에 기둥이 된 花郞의 공적은 잊을 수 없다.

元述郞, 官昌, 金庾信과 같은 화랑의 정예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 조국통일을 성공시켰고 그 뒤에 숨은 화랑정신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었던 것이다.

군인들뿐 아니라 宗敎도 통일을 위한 목표에 공헌이 컸다. 선덕여왕때 유명한 慈藏法師는 佛力에 의하여 조국을 통일하고 9韓이 來貢하고 왕실이 평안하기 위하여 皇龍寺 九層塔을 건립하자 했고 이후 불교는 護國思想을 앞장세워 조국의 장래를 기원하는 종교로 고려시대까지 이끌어 나갔으니 유명한 석굴암도 실은 왜구의 침입을 막고자하는 종교적인 신념에서 건립된 것이라고 한다.

신라말기에 흩어졌던 지방세력을 뭉치고 일어난 高麗王室은 신라를 계승하여 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나라이름을 고려라 하였고 건국초기부터 만주지방에 있는 거란족 여진족과의 싸움에 바빴다. 종래 北進政策으로 一貫한 고려의 정신은 바로 화랑정신의 그것이며 徐熙, 姜邯贊, 河拱辰, 尹瓘등의 北進을 위한 노력은 바로 화랑정신의 발로이다. 이로서 고려의 국경은 압록강 하구에 도달하고 東北쪽은 함흥지방을 넘어서서 이 두선을 연결하는 千里長城을 쌓아 오랑캐들의 침입에서 조국을 보호하였다. 거란은 고려의 강경책에 굴복하여 더 넘겨다보지 못한채 쇄퇴했으며 여진족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일용잡품을 사다 쓰는 형편이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통일의욕과 북진정책만을 쓴 것은 아니다. 李資謙과 같이 권력이 탐이 나서 외국세력과 영합하는 비굴한 사람도 있었지만 妙淸과 같이 稱帝와 建元과 伐金論을 주장하여 자주정신을 드높인 승려도 있었다. 평화가 계속되면서 文臣들이 나약해지자 武臣들이 혁명을 일으켜 자주성을 되찾고 마침내 새 세력으로 세계를 휩쓴 몽고와 대결하여 용감히 싸웠다. 거의 세계의 모든 민족이 몽고의 군대에게 정벌당하였으나 오직 고려만은 사직을 유지하며 강화도에서 항몽투쟁을 계속하였고 몽고에 투항한 이후에도 끝까지 항쟁을 계속한 三別抄들은 화랑의 후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고려시대를 통하여 정치적 지도이념이 된것은 통일사업이었고 고구려의 영토회복이었다. 인종이 김부식에게 三國史記를 편찬하도록 명할때 仁宗은 "지금의 선비들이 진한 (중국)의 역사는 익히 알고 있으나 우리나라 사실에 대하여 어둡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지적한것만 보더라도 역사를 쓴다는 그 자체가 민족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것이다.

朝鮮時代에 들어와서 자주정신은 더 한층 높아졌다. 마침 중국에는 평화적인 정권 明이 건국하였으며 조선에서도 안정기에 들어서자 世宗때에는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까지 확대하는 사업을 이룩하였다. 이 당시의 김종서, 남이와 같은 사람들의 공적을 잊을 수 없다. 침략을 일삼는 야만의 무리를 몰아 내고 三南지방에서 북쪽으로 이주를 권장하여 문화를 전파시켜 통일된 민족문화의 형성에 이바지하였고 한글의 창제와 천문, 기계, 농사기술과 같은 과학의 발달은 민족문화의 정상을 이룰만한 큰 힘이 되었다. 흔히 조선시대는 유교문화와 사대주의로 일관된 암흑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기까지는 이와 같이 자주적인 민족문화 건립의 발전상

을 이룩하고 있었음을 알아야겠다.

16세기말 17세기초에 일어난 2개의 외국침략에서 다시금 우리는 민족의식과 통일조국을 지키겠다는 자주정신이 발동하였다.

곽재우, 조헌, 김천일 등 수많은 의병과 승병 전투, 이순신을 비롯한 명장들, 이이와 같은 학자들, 3학사와 같은 의인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났고 능경적인 평화애호족에게 무자비한 침략을 해온 남과 북의 적을 온 겨레가 합심하여 몰아낼 수 있었다. 청에 볼모로 끌려갔던 왕자, 학자들도 조국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행동으로 오랑캐들을 감동시켰으며, 전란뒤의 곤경속에서도 北伐을 계획하던 孝宗이나 외국에 까지 이름이 난 임경업 등은 모두가 조국을 빛낸 이들이다. 백두산의 定界碑를 세우고 間島지방까지 우리 영토로 관리하였던 사실과 비변사를 두어 국방에 더 관심을 갖게 된것등도 통일된 조국을 지키려는 의식이 높아진 까닭이다.

19세기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급작히 국제정치 무대에 나섰다. 서구문명의 물결이 들어오고 정치적, 경제적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러시아, 청 및 그 밖의 여러나라의 세력을 막아내는데 온 국민이 단합하였다. 大院君을 쇄국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의 신념은 조국의 수호에서 출발하였음이 확실하다. 동학사상도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한민족의 의식구조가 국가의식으로 나타날 때 보여준 사회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日帝가 노골적인 침략을 시작하자 광범위의 구국운동이 일어나서 금주 금연으로 국채보상을 서둘렀고 독립협회는 민주적 정치이념에 대하여 대중을 계몽시키는데 힘썼다.

1898年 서울의 종로광장에서 차일을 치고 万民共同会를 개최하였을 때의 六가지 개혁안은 자주독립과 민주정치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10年에 일본이 국권을 탈취하자 민족의 의분이 일어나 이곳 저곳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해외로 밀사를 파견하여 국제여론에 호소하는가 하면 일본인들과 매국적 고관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용사들이 나타났다. 10년의 무단정치에 항거하는 3.1운동을 일으켜 세계사에 기록될만한 민족의 슬기를 보여주었고 6.10만세사건, 광주학생운동, 임시정부수립, 독립군, 광복군의 조직등은 모두가 일제에서 조국을 찾으려는 줄기찬 노력이었다. 그 밖에도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에 항거하여 창씨개명에 반대하고 한글을 발전시키며 한국사 연구에 몰두하던 문화인들의 공적은 하나같이 조국광복을 위한 참여라고 할 것이다.

1945年 민족이 일제의 쇠사슬에서 해방되기는 하였으나 38선이란 것이 타의에 의하여 설정되고 우리강토의 반쪽은 우리 민족의 손에 돌아오지 못하고 공산주의라는 조국없는 사회로 고난을 계속 겪게 되었음은 슬픈 것이다.

이 경계 아닌 경계선은 신라통일 이후 한번도 분단된 일이 없는 민족의 역사에 오점을 남겨놓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이것이 강대국의 편의에 따른 결정이고 보면 민족의 이름으로 배격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동안 4반세기가 지났고 북한에 괴뢰정권이 수립되어 6.25의 비극까지 초래하였으며 현재도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6.25가 일어나자 한국민들은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여실히 보았고 그 사회에서 도저히 살 수 없음을 체험하였다. 8.15이후 통일된 조국을 그리워하고 노력하던 것으로부터 반공과 통일이 직결되어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변하게 된 것은 북괴들이 다시 없

는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역사상에 나타난 조상들의 모습은 통일된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큰 노력을 하였음을 보였다. 우리가 생각하던 역사와는 달리 조국을 지키는데 신념과 용기가 필요함도 아울러 느낄 수 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앞서간 조상들의 이름을 욕되지 않는 후손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교수 방법

성인들 중에는 한국의 역사를 조직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고 젊은 층이라 하더라도 한국역사에 대하여서는 비관적이거나 부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도 많다. 그러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강토를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하였는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많이 있다.

역사를 잘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이 정확하지 못한 선입감에 사로잡혀 오늘의 불우한 자기의 입장을 조상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서 합리화시키려 든다.

이 단원에서 삼국시대 이후에 우리 강토를 지켜가면서 강한 외세에 대항하던 조상들의 얼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한 학습방법은 훌륭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숭배하는 인물을 찾아내도록 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흔히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인물에 대하여 알아보는 일은 개인적으로도 공부하는 방법에 도움을 주며 인생관을 세우는데도 이로운 일이다.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읽어서 어느 한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아 보는 일을 전체를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일과 겸해 시키도록하면 더 효과적이다.

다만 정치문제이외에도 문화적 공적을 남긴 사람들도 아울러 연구시켜야만 직접 총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통일대열에 설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하여야 한다.

3. 참고 문헌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孫晋泰 韓國民族史槪論 上, 乙酉文化社, 1947.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서울신문사, 1946.

李瑄根 韓國獨立運動史, 尙文院, 1956.

柳洪烈 朝鮮獨立思想史攷, 正音社, 1948.

李仁榮 우리 民族史의 性格, 국사요론, 1950.

李弘稙 신라의 발흥기, 국사상의 제문제 3, 1959.

李龍範 고구려의 요서진출기도와 돌궐 사학연구 4. 1959.

李基白 고려 초기에 있어서의 五代와의 관계,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 1960.

金庠基 고려 태조의 건국과 경륜, 국사상의 제문제 1, 2, 1959

金庠基 妙淸의 천도운동과 칭제 건원론에 대하여 국사상

의 제문제 6, 1960.

金庠基 丹兵와의 抗爭, 국사상의 제문제 2, 1959.

金庠基 여진관계의 始末과 尹瓘의 北征, 국사상의 제문제 4, 1959.

金庠基 고려와 金.宋과의 관계, 국사상의 제문제 5, 1959.

申奭鎬 조선왕조 개국당시의 對明관계, 국사상의 제문제 1959.

李仁榮 신숙주의 北征, 한국만주관계사의 연구. 1954.

한우근 임진왜란 원인에 관한 검토, 역사학보 1. 1952.

金龍國 임진왜란중 서울수복전과 방위계획. 향토서울 22, 23, 1964.

조지훈 한국민족운동사 한국문화사대계 1. 1964.

Ⅱ 民族文化와 國民性

1. 내용 개요

한국에 고유한 문화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고 한국민의 국민성이 과연 어떤 것이냐는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우리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 보려는 태도와 관심이 부족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희승은 한국 문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① 고유한 언어

② 고유한 문자

③ 동양 최고의 천문대 창건

④ 금속활자의 창제

⑤ 충무공의 거북선

⑥ 김정호의 지도

이러한 문화유산 속에는 고유성 독창성이 농후하고 외래문화에 대한 소화력이 강하다는 점을 두어 민족문화를 설명하고 있다. 매우 타당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미술을 전공하는 학자에 의하면 한국의 그림, 서예, 조각, 공예의 문화는 맑은 하늘 아름다운 산천과 같은 자연미에 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또 정치학이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주업인 농경생활이 평화를 애호하는 성격을 형성하였다고도 말한다. 과학자들은 천문대, 금속활자, 측우기, 농업기술 등으로 미루어 독창적인 소질이 많다고 주장한다.

여러가지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의 문화는 자연 인간 그리고 전통에서 물려받은 것과 외래문화에서 배운 것을 조화시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요청에 맞게 창조하여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한국문화나 한국의 국민성이 서양에서 온 민주주의와 잘 융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민족성이 서양이 아니고 동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민주주의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데가 많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한국문화의 성격이 과연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일반화시켜 봄으로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여러 학자들의 입장과 견해는 그 밖에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대체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성격으로 규정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② 외래사상을 승화시키는 민족

③ 자주성이 강한 민족주의와 공동체의식

④ 독창적이면서도 대중성을 띤 문화

⑤ 개성미보다는 조화의 강조

이러한 몇가지를 김 태오는 • 한국인의 장점으로 결백, 관용, 인내, 양보정신, 평화애호, 민본사상, 정의감, 人道, 자유독립, 애국심, 민족의식, 민족정기, 통일정신, 독창성, 예술성, 용감성, 단결성이라고 지적하고,

단점으로는 사대사상, 보수성, 우유부단, 현실주의 체념, 정체성, 편협성, 관존민비, 忍從, 비사회성, 당파성, 중상모략, 허영, 의타심, 공덕심 등을 들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서 검토하기로 한다.

① 평화 애호사상

우리민족은 자고로 외국을 침략하던 일이 없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으며 어떤 이는 그것이 별로 자랑거리가 못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한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서구문명이 동양을 능가하였다는 것은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할 때 부터이고 공업전환의 가능성은 식민지 획득의 진척 때문이라고 풀이 한다면 서구의 물질문명은 침략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에 맞서려는 것이 유럽에서 가장 후진쪽이었던 소련이다. 즉 소련은 새로운 식민지 획득 방법으로서의 세계적화주의를 들고 나와 스스로 맹주가 되었다.

우리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인류의 정의와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그 넓은 땅을 차지하였다고 해서 그리이스나 로오마모양의 식민지 경영은 하지 않았고 윤관은 여진의 땅을 점령하고도 평화를 맹서하면 자치를 허용하여 주었다.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도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평화애호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때 이러한 긍지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다.

한국민의 성격은 수렵사회의 전통에서 오는 고구려의 정복국가적 성격과 신라의 농경위주의 평화적인 온후한 성격을 조화시켜 고려시대 전반까지 이끌어 왔으나 점차 농경사회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온순, 결백, 양보의 소극적자세로 흘러가고 예절의 존중이 직접적 인간관계를 주로 문제삼는 습관이 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현대에 이르러 주변에서 몰려드는 파괴적 요소에서 진정한 평화를 쟁취하는 적극성이 필요하게되어 새로운 가치의 형성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② 외래사상의 승화

사상면에서 각 시대를 지배하던 불교와 유교는 외래적이며 기독교는 서구사상이다. 외래 사상을 들여 오는데 있어 그 기본적 태도는 한결같이 자주적이었다. 외국인이 와서 포교하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가서 배워왔고 그것을 다시 한국의 것으로 토착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불교는 호국불교가 되어 국가의식과 결합되었던 것은 삼국의 국가체제 확립기와 불교의 승인 시기가 일치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유교의 성리학은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인 정의감이나 대의명분과 쉽게 융합될 수 있는 요소가 강했으며 義理를 존중하는 심성을 더 공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기에 중국인이 동방의 예절바른 나라로 칭송하기 까지 이른 것이다.

기독교는 도입된지 半世紀도 못되어 3.1운동때 보여준 애국적 행동에서 이미 한국의 종교로 승화시켰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외래사상을 모방에 그치지 않고 전통적인 문화가치와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민족의 특성이라 할 것이다.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고려자기가 송나라의 영향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도 없지만 송자와 고려자기는 전연 별개의 것이다. 한국의 음악(국악)이 중국의 영향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만주, 몽고, 시베리아 계통의 음악을 종합적으로 섭취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문화는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특성이 살아날 것이다.

③ 강한 민족주의적 색채

한국문화나 국민성에는 어느 것을 막론하고 민족주의적 색채가 농후하다. 종래의 역사가들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우리

나라의 문화가 대륙에서 흘러들어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습성이 있었다. 순수하게 어느 한 민족에게만 고유한 문화라는 것은 쉽지 않은것이지만 우리 문화의 유형을 외국에서 찾으려는 기본적인 태도 또한 옳은 것이 아니다.

문자(한글)가 그러하고 천문학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소재부터가 우리의 것으로 출발하였다. 농사직설이라는 책은 외국의 농업기술을 들여온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농업방법의 비결을 전국각지에서 수집하여 놓은 것이고 불정심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의 종교인의 손으로 설명된 것들이다. 고려시대의 재상 최 승로는 우리나라의 정치는 인성과 풍토가 중국과 다르니 만치 중국제도를 모방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고 그의 정책건의(시무책)에서 주장하였다.

민족이 시련의 위기에 다달았을 때에는 언제나 단군신화가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주었다. 고려중기가 바로 그 때이고 고려말 문집이나 이조시대의 국민학교 수준의 교과서인 동몽선습에서도 단군신화는 빼놓지 않았다. 독립선언문에 민족주의 색채가 여실하다는 것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자극된 것만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되며 전통적 의식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근세에 와서 단발령이 내려지고 소위 신학문이 들어오고 전신 전화 기차등이 생겼어도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문화도입이었고 민족의 주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신식학교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가르친 것은 국어와 국사가 중심이었고 일제가 가장 먼저 탄압한 것도 역사교육이었다는 것은 민족의식을 경계한 정책이다. 우리의 언어에 주어가 없다는 특징은 "나" 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우는 우리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증거의 하나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해방이후 서양문화의 아류가 지나치게 팽창하게 된것은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문

화를 맹종답습하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우리 민족의 문화선택의 가치기준은 언제나 자주적 입장에서 이루어졌음을 알아야겠다.

④ 독창적이면서 대중성을 띤 문화

우리의 고유문화라고 하면 곧 거북선이나 고려자기를 연상하기 때문에 천재에 의한 발명으로만 생각하기 쉽고 그 문화가 대중성을 잃은 것같이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천문기계가 얼마나 넓게 보급되었고 금속활자가 이조시대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서적을 인쇄하여 냈는가를 이해한다면 쉽게 납득이 갈 것이다. 고려자기의 예술성은 조선시대의 백자가 되어 일반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중적 예술품이 되었고 四君子나 묵화는 교양인이면 누구나 터득해야 하는 필수적인 소양이었다. 양반들이 규정한 예절은 조상숭배라는 전통가치와 연합하여 평민들에게 급속도로 보급되어 관혼상제뿐 아니라 행동양식의 기본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도덕관 경제관도 일반화된 것이다. 동방예의지국이 양반계층의 독점물이 아니었음은 오늘날의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소설 춘향전만 보더라도 그 안에는 기쁨, 슬픔, 유모어가 고루 표현되어 있고 인격구성에 있어서도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이 모두 망라되어 있는 대중적인 것이기에 고대소설중에서도 오늘날까지 가장 오랜 인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화의 능력은 거북선이나 금속활자에 못지 않은 독창력과 대중성의 겸비로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개화기 이후에 일어난 신문화운동도 새물결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에 대한 인내성있는 논리적 설득으로 지식층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문화가 엘리트와 대중이 연결되어 이루어 놓은 것임을 말해준다.

③ 개성미보다는 조화의 강조

우리문화에 있어서 개인적인 가치표현을 위주로 하는 개성미보다는 민족의 개성을 중시하는 특색이 있다. 개인적 가치보다는 집단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을 말함이다. 고려자기, 한글, 거북선등 모든 것이 發明者가 분명치 않다. 그것이 세종대왕이나 충무공의 창안으로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완성을 위해 중지를 모았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 거대한 문화적 업적은 서구에서의 발명품과 같이 어느 개인의 뚜렷한 업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기풍은 정치 경제면에 있어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왕조의 변혁이나 혁명도 대체로 어떤 특정인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 혁명이라고 하기보다는 反正이라는 이름으로 易姓革命대신 실리를 추구하고 체제를 바꾸는데 신중하며 대의명분을 잃지 않았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조화있는 문화형성의 기반은 비관주의가 바탕이 되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민족이 원래 낙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自然主義적인 숙명론에 잠겨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만약 개인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전통이었다면 우리의 역사는 더 많은 영웅과 발명가들을 열거하고 있을 것이지만 한국민은 이런 문화적 업적을 우리들의 것으로 다루었다. 고려사, 왕조실록등의 거대한 사업이 특정인의 작업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상은 개인이 아니라 그 사회와 시대의 것임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문화는 민족의식의 기반위에서 성장해 왔고 현대의 이익사회도 공동체적인 토대위에 건립하였기에 서양의 전통과 다르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의 역할이나 자아개별등의 발달이 부진하고, 강한 사회규범에 이끌리는 단점도 있지만 지도층과 대중의 융합은 이런 단점을 보충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 준 것이라 할 것이다.

2. 교수 방법

이상으로 간단하게 우리 문화의 특성과 국민성과의 관계를 민주주의와 연결시켜 간단히 고찰하였다. 이와같이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닌 다원적인 문제이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문화의 성격을 더 적절하게 구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첫째는 우리들이 우리들 자체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며 또 그 본질을 캐어낼 의욕이 부족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화라는 것이 원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칫하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잘못 보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구체적인 문화현상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알아내려는 습성을 길러야겠다.

둘째로 우리의 것을 다른 민족의 것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겠다. 우리들은 이 시점에서도 문화의 창조를 하고있으며 고유한 민족문화의 계승자인 동시에 개조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창조는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서 가능하므로 언제나 비교검토하는 태도를 지녀야한다. 자기 문화만의 정당성을 고집하면 보수적인데 기울어지고 지나치게 자기 문화를 부정하면 시련을 더 많이 겪어야 하기 마련이다.

3. 참고 문헌

李箕永 民族文化의 主体性, 世代 PP.40~47. 1965. 4.

李哲範 文化的 鎖國主義의 清算. 세대 PP.83~91. 1965. 6

呂石基 지금 우리 민족은 어디까지와 있는가. 세대 PP.81~87. 1965. 5

조윤제 역사관에 서야할 民族文化 사상계 PP.125~132, 1966. 1.

李仁榮 우리 民族史의 性格 국사요론. 1950.

李基白 한국民族性의 長短点 論議 신세계. 1963.

金哲埈 한국文化에 나타난 후진성에 대하여, 동아문화 5. 1966.

金廷鶴 단군신화와 토테미즘, 역사학보 1954.

李弘稙 단군신화와 민족의 이념. 국사상의 제문제 1. 1959.

尹喜淳 고려의 청자상감 조선 미술사연구. 1946.

조지훈 한국민족운동사. 한국문화사대계. 1964.

Ⅲ 國家意識의 発達

1. 내용 개요

단일민족으로 형성된 국가에서는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이 거의 동일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동족의식이 국가의식을 공고히 하여주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더구나 국가의 위기 즉 외국의 침입과 같은 사태에서 국가의식이 민족의식과 더불어 더욱 강하게 싹트기 마련이다.

삼국을 통일한 후 외국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싸움에서 성공한 신라의 문무왕이나 고구려의 후신임을 자부하고 거란족과의 외교관계를 거부하고 家訓에까지 남긴 고려 태조 왕건의 처사는 그 두드러진 예라 할 것이다. 고려의 광종은 중국의 연호대신 우리의 자주적 연호를 사용하여 자주독립정신을 고취하였고, 묘청도 건원 칭제를 주장하였다. 이보다 앞서 고려 성종 10년(993)에 거란군이 침입하였을때 왕을 비롯하여 중신들이 서북땅을 떼어 주고 화친하자고 말했으나 서희 이지백과 같은 견화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나가 싸울 것으로 주장하여 오히려 압록강하구의 강동 6주를 다시 찾은 사실에 대하여 고려사절요의 편자는 "이때 王이 중국의 풍습을 숭상하였지만 국민들은 이를 좋아하지 않았음을 이 지백 등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였다. 이와같은 사실들은 외세에서 도전받는데 대한 적극적 반응이 국가의식으로 나타난 것이며 정치지도자 보다도 국민들의 국가의식이 높은 것은 그 바탕이 민족의식이었기때문이라 할것이다.

불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자 마자 호국불교로 발전하여 국가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공헌하였다. 불교가 왕실이나 귀족계급들과 결부된 것 뿐 아니라 일반대중의 귀의를 받았다.

사찰건립, 불교행사의 연등회 팔관회 등도 모두 국가의 안녕과 직결되었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경의 간행, 조판등을 서둘렀다. 더구나 불교의 재산을 지키는 승병들은 국가 위기에 큰 공을 세웠던 것을 임진왜란에서 보았다.

고려중기에 이르러 사대주의와 산일을 일삼는 무리가 나타남에 대하여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단군조선을 필두로 국가의식이 강한 내용으로 삼국사기의 단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그 시대가 강력한 국가의식을 필요로 할 때 나타난 현상으로 학자가 아닌 승려의 저술이라는 점도 이 책의 특성의 하나이다. 고려말기의 문학자들도 고대의 신화속에서 우리의 조상의 건국모습을 보여줌으로서 고려왕조의 몰락과정 속에서도 국가 의식을 드높혔다. 고려가 몽고의 세력밑에 눌려지내던 시절 공민왕(1351~1374)은 몽고의 복장이나 두발형을 금지하고 몽고의 관제나 연호를 폐지하고 원래 고려의 제도로 다시 바꾸었다. 친원파를 조정에서 몰아내고 쌍성총관부(함흥지방)를 폐하고 영토를 회복하였다.

공민왕은 다시 동녕부(평양부근)의 원세력을 이성계로 하여금 공격케하고 새로 일어난 명의 세력과 손잡고 원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세운 것은 정치가에 의해서 국가의식이 나타난 예라고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사대주의로 인하여 국가의식이 둔화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봉건사회에서는 군주와 국가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국왕에 대한 충성이 곧 국가에 대한 충성이었다. 국왕은 국가의 상징으로서 때로는 국가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유교

의 영향을 받은 조선사회에서는 국가가 어떠하여야겠다는 생각보다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가가 더 문제시 되었다. 말하자면 국가관의 전환이라는 계기가 찾아온 것이다.

이 퇴계는 백성이 주리지 않고 춥지 않을 정도로 의식이 해결되어야 도의가 행하여 질 것이라 하였고 이 율곡도 民은 以食爲天이니만큼 無食無民이오, 無民則無口이라 하여 민생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야 교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면에서 유학은 국가의식보다 정치의식을 고취한 결과를 가져왔다.

18세기 이후는 실학의 영향을 받아 정치의 근본이 經國濟民에 있음을 주장하는 학자가 많아졌다. 金 堉, 朴 齊家 등에서 부터 丁 茶山에 이르는 경제학자들은 산업의 개발을 구체적으로 내세웠다.

실학자들이 경제관념에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民族的 주체의식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이 또한 중요하다. 우리의 歷史, 우리의 地理, 우리 말부터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방면의 책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안 정복(동사강목), 이 중환(택리지), 김. 정호(대동여지도) 등 그 밖의 많은 서적은 민족자체를 소재로 다룬것이므로 종래의 유학자들 보다 국가의식을 고취시켰다. 중국문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북학파에 속한 박 지원도 우리가 만일 한당의 흉내만 낸다면 수박의 겉 핥기요, 호추를 알맹이대로 삼키는 자와 같다고 비유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우리나라가 크지는 못하나 떳떳한 국가요 옛날부터 검소하여 백성이 여러가지 미속을 이루며 살아왔다. 우리의 아름다움이 살려질때 창작이 되는 것이오 眞髓가 나타나는 것이니 남의 것은 꾸어올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비싼돈을 주고 중국에서 사치품을 사들이는 풍조를 비난했고 허균은

홍길동전을 써서 그 주인공으로 하여금 유토피아를 그려보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고려시대에까지 강력하였던 국가의식이 유학의 영향으로 일시 둔화되었으나 18세기 이후에는 근대적인 국가의식이 싹트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과 같이 르네쌍스도 프랑스혁명이나 산업혁명도 거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중세사회가 서양과 유사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근대화의 길은 이미 18세기부터 걸어온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기 10여년전부터 한국은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독일 등 여러서양제국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시작했다. 청나라와의 외교관계뿐이었던 정세에 변화가 온 것이다.

대원군은 집권 10년에 군부실관한 내정개혁을 이룩하고 중앙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일단 성공하였지만 밀려오는 외국세력에의 능난한 솜씨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국제정세에 어두었던데도 원인이 있었으나 외국세력을 왕실의 분규에 이끌어들였다는데 잘못이 있었다.

문호개방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국의 문물제도를 아는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보내고 영선사를 청에 파견하여 새시대를 호흡하도록 했다. 신식학교가 세워지고 현대의료시설이 갖추어지기 시작했고 전신 전화의 가설과 철도, 항만의 시설을 서둘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하자원의 채굴권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고 농촌에 일본 상품이 범람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외국세력이 서로 다투어 가며 한국의 이권을 잠식하려들었다.

민비와 대원군의 알력은 독립당과 사대당의 반목으로 변하고 친청, 친일, 친러파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러한 지도층의 혼선에도 불구하고 국가의식은 대중속에서 더 크게 일어났다. 1882년 박영효가 일본에 수신사로 갈 때 국가의 상징인 국기를 정식으로 고안하

여 사용하던 것을 시초로 이듬해 정식 국기로 채택 공포하였다.

1883 년 어윤중은 서북경략사로서 백두산정계비를 조사하고 간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간도는 1909 년에 일본이 남만주의 철도부설권과 바꾸어 중국의 영토가 되어버리기까지 자주의식에 의해 줄기찬 노력이 있었다.

동학사상은 이러한 복잡한 시기에 일반대중에게 자주적 국가의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공헌하였고 최제우가 처형된 이후에는 더 널게 전파된 것도 대중의 자주의식과 결합된 증거이다. 외국의 간섭이 심하여 지고 국가의 자주성이 위협을 받게 되자 동학의 신봉자들은 일본세력의 침투가 한국농촌을 침식하는데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킨 것은 국가의식과 종교적 신념이 결부된 국민운동이었다.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점차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야심이 노골화하자 근대적인 국가관을 지닌 지식인들에 의한 애국운동이 다른 각도에서 전개되었다. 독립협회는 당시의 선각자들이 모인 단체로서 외국의존정책에 반대하는 자주독립과 내정개혁을 표방하고 나섰다.

초기에는 토론회 강연 및 신문발간으로 계몽을 위주로 하였으나 독립문을 세우고 외국의 정치, 군사고문을 두는 것을 반대하는 적극성을 띄었고 지하자원의 개발권 및 철도부설권을 외국에 허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독립협회는 다시 민권운동을 일으켰으며 만민공동회에서의 개혁안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적 사상의 발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강탈하자 죽음으로 항의하는 자, 언론으로 대항하는 자, 무력으로 항거하는 자,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자가 속출하였고 대한자강회, 흥사단, 국민교육회, 국문연구회 그 밖의 여러가지 학회와 단체가 생겨 문화운동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1910년 부터 일본이 완전히 식민지경영으로 전환하자 국가없는 슬픔을 처음으로 맛보게 된 온 국민은 3·1운동을 계기로 줄기찬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국가의식은 근대화의 물결속에서 새로운 국가관이 성립되어가는 과정에서 나라를 빼았긴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를 느끼게 하였다. 해방된지 오래된 오늘날에도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가시지 않는 것도 그런데 원인이 있다.

인도나 월남이 영국이나 프랑스에게 느끼는 감정과 다른 점이 19세기 말부터 우리에게는 근대적 국가의식이 싹텄다는데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국가의식은 일제의 식민주의 대신 세계적화주의로서 국가의식을 흐리게 하는 공산세력과 대적해야 할 처지에 있다.

국가의식이 국제정세에서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자주적인 긍지를 잃지 않는데는 공산주의가 침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는 다시 새로운 국가의식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할것이다.

2. 교수 방법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치적 대 사건이나 전쟁의 결과로서는 부족하다. 우리의 조상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여 왔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민족이 자주적인 국가의식이 어떤 경로를 겪어 오늘날에 이르렀는 가를 살펴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애국심이라는 것과 국가의식이라는 것이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같은 말은 아니다. 국가의식이

있어도 애국적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도 있으며 국가의식이 없던 시대에도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두터웠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 이전에 있어서 국가의식이 평소에는 강하지 않고 위기의식과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농후하다. 오늘날과 같이 경제 문화의 모든 면이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는 때는 일찌기 없었다. 조상들이 국가를 의식하지 못하는 생활속에서도 애국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겠다. 동시에 우리들의 책임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중대하여졌음도 느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 있던 정치적인 사대주의는 크게 탓할 것이 못될지도 모른다. 현금의 정세를 보더라도 국제관계는 강대국이 좌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외교관계가 국가의식을 둔화시키고 강대국에 의존도를 높였을 때 우리는 이러한 정신상태를 경고해야 한다. 경제적, 정신적, 문화적인 사대주의가 더 무섭고 주의해야 할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두고 싶다. 우리민족이 배타심이 강하면서도 사대사상이 농후하다는 평을 듣는 이율배반은 우리들이 자주적 자세가 결핍되었을 때 일어나는 건강하지 못한 분열현상인 것이다.

역사상에 나타난 소재, 인물, 사건을 가지고 토론을 거듭할수록 그 때의 사정이 이해되고 내가 지켜야 할 태도가 분명하여 질 것이다. 가령 대원군의 쇄국정치가 종래의 역사가들의 비판만을 받아오던 것과는 다른 해석을 내리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3. 참고 문헌

李丙燾　우리 民族史의 性格, 국사요론, 1950.

李基白　韓國民族性의 長短点論議　신세계　1963. 4.
金東華　佛敎의 호국사상　이병도기념논총　1956.
崔永禧　임진왜란중 對明事大에 대하여. 사학연구 18. 1964.
韓㳓劤　이조 실학의 개념에 대하여. 진단학보 19. 1958.
李瑄根　우리 國旗制定의 由來와 그 意義, 국사상의 제문제 2, 1959.
崔錫泰　國旗制定의 由來에 대한 管見, 역사학보 23, 1964.
金德模　伊藤博文과 海牙密使事件, 아세아학보 1, 1965.
申奭鎬　韓末 義兵의 槪況, 史叢 1, 1955.
崔南善　朝鮮独立運動史, 1946.
李炳憲　三·一운동 秘史　1959.
愛國同志援護會, 韓國独立運動史　1956.
조지훈　한국민족운동사, 한국문화사대계 1. 1964.
양주동　광주학생독립운동사　1956.
蔡根植　무장독립운동비사　1956.
金庠基　妙淸의 천도운동과 稱帝建元論에 대하여　국사상의 제문제 6. 1960.

제2장 민주주의와 전통적 가치

우리의 伝統的 思考方式이 民主主義와 쉽게 融合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서양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는데서 오는 단견이다. 민주주의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이룩한 정치이념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라는 데 전제를 받아 들인다면 이것은 결코 서양의 것이 아니라 인류문화의 소산임을 알 것이다.

불교나 유교의 영향을 기반으로 하여 오랫동안 군주정치를 지속하여 왔으나 그 안에서도 유능한 통치자들에 의하여 민본사상이 발휘되었던 바 있음이 역사에 나타나있다. 원래 한국사는 급격한 정치체제의 변혁보다도 점진적인 개혁이였으므로 보수적이고 정체적인 역사의 흐름으로 결론짓기가 쉽다. 이 章에서는 민주주의의 제요소가 한국사 속에서 어떤 형태로 싹이 트려 하였는가를 살피기로 한다.

첫째로 정치구조에 있어 각 왕조는 여러가지 제도를 통하여 군주의 전제성을 제어하려 했다. 신라의 화랑은 하나는 선발된 정치집단으로 발전하였고 문관과 무관의 분화도 그러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의정부가 입법부의 구실을 하였다면 6조가 행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관료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언관제(言官制)는 왕의 독주를 견제하는 큰 세력이며 엄격한 임기제를 전제로한 중앙관료의 지방파견과 지역사회를 단위의 자치가 혼합한 지방자치를 허용한 통치형태였다. 왕은 종교, 학문계의 고문과 비서격의 승지 면정에 어사등에서 자문을 받고 상소문, 신문고 등은 대중과의 의사소통수단이였다.

둘째로 한국인의 지성 속에도 민본주의의 싹은 트기 시작했다. 고

대의 혈연 귀족이 중세의 문벌귀족으로 확대되고 근대의 양반은 전 인구의 반수를 차지하는 계층변화를 일으켰다. 과거제도는 국가시험에서 관료를 선발하여 적재를 배치하려는 지성에의 자각이다. 실학관계에 있어서도 유학의 지배를 받는 17세기까지는 매우 자유스러웠고 무지(無知)로 부터의 자유를 부르짖는 학문의 세계에서도 이 율곡과 같이 공론이 바로 국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생겼다. 경제관념은 윤리규범이 우선하는 철학에 눌려는 느낌이지만 위정자의 권농책, 농업기술, 사간행, 상공업천시, 청빈사상등이 뭉쳐 정신적 안정으로 사회생활에 만족을 얻는 가치관을 세웠다.

셋째로 한국인의 대인관계는 추상적 이념보다 직접적인 가족관계가 기반이 되어 조상숭배, 예절준수, 상호부조와 같은 구체적인 도덕규범이 발달하였다. 이것은 인간주의가 모든 행위의 기본이 됨을 말함이다. 이러한 강력한 규범은 차차 형식화되고 횡적이기 보다 수직적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폐단도 생겨 자율적인 인간성이 무시되는 시대도 있었다.

19세기 말의 동학이나 민권운동은 한국의 지성이 인본주의적이었던 전통과 결합되어 나타난 형상이었다.

I 專制를 피하려는 政治

1. 내용 개요

역사를 비관적으로만 보아오던 종래의 한국사는 정치적 풍토가 가혹한 전제주의로 일관되어온 것 같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럽역사가 보여준 봉건영주나 절대군주와 같은 성격을 띤 정치체제는 아니고 동양적 전제정치 또는 한국의 독자적인 정치이념에 의하여 발전되어온 것이다.

한국사에 나타난 통치자는 부족국가의 족장이나 고대국가의 임금이나 고려, 조선시대의 국왕도 여러 형태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국운이 쇠약해지거나 농사가 잘 안되어도 그것은 통치자의 德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공동체의식의 강연한 존속과 국가를 가족의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하던 전통에서는 국가의 모든 책임이 국왕에게 있었고 상대적으로 그만치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른바 賢君이 되기위한 훈련은 적성을 통치자로 타고났건 아니건 간에 가정안에서 가장직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국가의 대권을 세습하였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것과 같이 국왕의 생활이 독선적이거나 화려하였다기 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별로 누리지 못한 비정상적인 면이 많았을 지도 모른다.

이런 군주제도하에서의 정치조직은 대권이 국왕에게 일임되어 있는 형식이면서도 자기의 주관대로 방자하게 행동할 수 없게 꾸며져 있다. 고대에 있던 화백제도는 부족사회의 여론정치의 계승된 형태요, 화랑제도 역시 중견청년지도자를 훈련하려는 정치적 집단이였다.

天君이나 天命思想은 정치에 무관심한 백성들을 만든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일거일동에 더 예민한 국민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하였던 것이다.

고대국가에서는 왕이 여러 혈연귀족들과 의논하는 정치제도였다. 신라에서는 전 국민이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왕족과 혈연 왕족은 성골과 진골이라고 불렀다. 고대나 중세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어 그 계급을 세습하는 습관이었다. 이 계급의 질서는 놀랄만치 잘 지켜졌고 신분에 따르는 권한범위에서 정치행위를 하였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는 일이 전 국민에게 나누어 맡겨진 것이나 다름없다.

3국이래의 훌륭한 군주들은 대체로 불교에 귀의했고 고려시대에는 정치고문으로 승려를 초빙한다든가 승과제도를 두어 불교인들에게 귀족대우를 하였다. 이것은 유교가 정치이념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이전의 현상이다. 불교는 유교와 달리 정치적인 성격이 적다. 따라서 불교는 정치에 관여하였다기 보다는 국왕의 보좌역으로 발탁된 지식인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신라와 고려시대를 통하여 많은 군주들이 명승들의 협조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한국의 정치권력이 전제화되지 않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서양에서 황제와 교황과의 관계와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정치적 구조의 특색을 중앙집권적 형태의 오랜 지속이라고 말한다. 과연 이런 표현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는 연구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왕은 최고 지존이어서 표면상 전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 정치적 기능이 절대적이었느냐에는 의문이 있다. 고려시대의 경기나 조선시대의 경기도는 봉건사회안에서의 왕의 직할지이고 그 밖의 여러 지방은 어느 정도 자치적인 제도를 허용하였다. 서양의 봉건제와 같이 철저한 지방분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철저한 중앙권력의 군림도 아닌 절충적 현상은 지방장관을 중앙에서 파견하고 지방관리는 지방에서 채용하며 지방장관의 임기를 일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 지방에 있는 지식계급이 모여서 생활개선, 풍속계량등에서 사소한 시비판단에 이르기까지 관여하는 일을 맡았던 사실등은 중앙권력이 정치제도와는 달리 자치적 성격이 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안에서도 왕권이 전제적이지는 못하였다. 조선시대의 의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입법부의 기능과 흡사하였고 6조가 행정부완을 담당했다. 사법부는 의금부 사헌부등 여러가지 관서에서 일을 나누어 맡았다. 엄격한 삼권분립은 아니라 하더라도 권력이 왕에게 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해석은 속단일지도 모른다.

한국의 왕은 언제나 공식적인 충고자를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어사대, 사간원과 같은 관청에서는 국왕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때 언제나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소신대로 행동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이나 주위의 압력을 배제하고 오로지 정의의 길을 지켰다. 국왕은 항상 자기 결정에 반대하는 일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제도를 폐지하려 들지도 않았고 아무리 폭군이라도 이 충고자를 죽이지 않았다. 얼핏 보기에는 대소롭지 않은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인가를 알 수 있다. 귀족이나 관료층의 의사와는 달리 조야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여론도 항시 들으려했다. 왕은 지방관리의 보고서나 국민이 올리는 상소문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고 억울한 일은 신문고라는 북을 매달아서 위급하거나 직접 호소하고 싶어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편 백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삼심제도는 서양보다 앞섰고 또 오래 계속되었다.

조선시대의 국왕은 왕국의 왕이면서도 왕가의 가장으로서의 위치가

또한 중요하였다. 예절이 엄격한 제약속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은 국왕에게 주어진 또 다른 압력이다. 왕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반경은 그리 넓지 못하여 홀로 조용하게 사색하고 행동할 시간여유는 거의 없다. 승지가 따랐고 언관의 눈이 있고 춘추관(역사가)은 언제나 그의 일거일동을 일일이 기록했다. 역사는 왕이 돌아간 후에 씌어졌으므로 역사에 대한 두려움은 컸다. 역사로 정치공부를 한 군주이기에 더욱 컸으며 역사의 심판을 언제나 염두에 두는 군주에게 전제성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일이다.

17세기와 18세기는 이른바 당파싸움의 시기였다. 정치의식이 발달되어 가면서 정치집단을 구성하려는 기운이 싹트고 정당정치로의 전진이었으나 정치이념이 유교적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고 논쟁의 실마리가 왕실의 가정질서나 법도에 관한 좁은 범위였기 때문에 역사가는 이를 정당정치의 맹아로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고 治者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는 단순한 원리에서 치자와 피치자 사이를 설명하였으므로 합리적 정책수립보다는 어질고 착한 임금이 나타나 주기만을 원한 사회에서는 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외교관계가 대 중국 일변도에 머무르던 좁은 세계관 속에서는 정치수단도 단순하여 백성들의 소치만으로 큰 모순은 나타나지 않았고 폭정에 대하여서도 왕조를 뒤집는 역성혁명보다 반정으로 왕위 교체를 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전문적인 정치가의 출현보다는 도의적인 인격자를 기대하였던 정치풍토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이다.

19세기에 이르러 산업이 발달하고 빈부의 차가 생기며 계급의 변동이 일어나자 왕권이 종전과 같이 평탄하지 못했다. 더구나 외국세력의 침략적 침입으로 궁정안에만 갖혀있던 국왕은 이를 처리하

지 못하고 유능한 관리도 없었다. 당쟁의 고질화된 족당의식은 외세와 각기 결탁하여 정치적 과오를 저지르고 참극을 빚어내었다. 왕실내부마저 분열되고 파벌의 대립은 더 심하여 청, 일, 러의 각축장으로 변하더니 종말에는 간악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다.

만일 양반층이 주자학적 노예가 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이 난국을 타개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고 정치지도자들이 도의정치이외의 경제와 사회에 관한 지도능력을 갖추었더라면 즉 역설적으로 말해서 왕의 전제적 권력이 구비되었다면 19세기 후반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전제권력을 장악하였던 군주나 독재성을 지닌 정치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중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전제군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폭군이기에 전제성을 지닌것으로 표현된 사람도 있다. 세조(수양대군)는 임금으로서는 탁월하였지만 그 시대의 도덕관이 그를 용서치 않았고 고려의 최 충헌은 독재적이었으나 시대적 압력으로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으니 이러한 예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가 전제정치를 제약하는 역사의 흐름을 이루고 있는 증거라 하겠다. 과거는 모두 낡은 것으로 보는 진화론적 역사관에서 벗어나서 과거를 그 시대의 눈으로 보는 능력이 있다면 한국의 정치풍토가 전제군주의 성격을 지닌채 오래도록 계속되었다는 서양학자들의 정체론이나 일본학자들의 사대주의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 교수 방법

역사를 잘 못 배우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마치 전제정치로 일관되어온 것 같이 오해하기 쉽다. 일본은 한국을 합병하고 곧 한국사 연구를 시작하여 조선시대가 얼마나 암흑시대였던가를 증명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름있는 학자들이 동원되어 한국의 이조사는 당쟁과 혼란과 독재로 꾸며졌다. 그러나 봉건사회나 중세시대는 동서를 막론하고 전제적인 성격이 농후하고 헤겔이 말한 것처럼 동방국가는 1인의 자유가 있었을 따름이라는 표현을 할만하다 그러나 민족에 따라서는 전제적인 정치제도 속에서도 어떻게하면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여러모로 시도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도의정치 이념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집약할 수 있다. 어떻게 다스리고 이를 복종시키느냐는 문제는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왔다. 적어도 서구적인 통치방식은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았다. 영특한 군주는 백성들의 고초를 몸소 맛보는 것으로 미덕을 삼았기에 경제적 빈곤에서도 큰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고 백성들도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로서 마음의 안락을 더 귀한 것으로 생각했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물질생활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행복에 대한 가치기준이 동요함에 따라 빈부의 차도 생기고 계급의 차이도 혈연적인데서 물질적 소유에 의하여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은 새로운 시련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이 단원을 통하여 우리는 물질이 지배하기 이전의 정치의식이나 정치제도와 근대이후의 그것을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군주가 통치하던 시대는 곧 전제정치

라고 해석해 버리는 속단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정치이념은 민본사상에 있고 그것이 비록 단순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전제정치와 멀어지려는 노력이 곳곳에 스며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성여왕 연산군과 같은 폭군이나, 이 자겸, 홍 국영과 같은 세도가도 있기는 하였으나 역사의 전체적 흐름과 지도자들의 이상은 전제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있었다.

역사를 아름답게 꾸밀 필요는 없고 또 그래서는 안된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옳게 보려는 태도는 종래 내려오던 편견에서 벗어나면 가능한 일이다. 역사속에 그릇된 것보다는 알고자 하는 사실을 눈여겨 찾아 보는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

3. 참고 문헌

金 哲 埈 신라 귀족세력의 기반, 인문과학7, 1962.

申 奭 鎬 조선왕조 실록의 편찬과 보관, 史叢5, 1960.

申 奭 鎬 高麗史 편찬 始末, 韓國史料解說集 1964.

邊 太 燮 新羅 官等의 性格, 역사교육1, 1954

金 哲 埈 高句麗 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李丙燾기념論叢, 1956.

Ⅱ 韓國人의 知性

1. 내용 개요

이조 이전의 지식인은 주로 승려, 문인, 유학자들로 대표되며 근대에 와서 동학, 실학, 사상가 개화운동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서로 입장을 달리하였으나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 속에서 인간생활의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현대 민주주의를 정치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간의 생활양식이라고 넓게 정의짓는다면 그중 으뜸가는 것이 인권존중이오 이어서 우러나오는 자유와 평등 책임과 협동 사회참여등의 요소가 포함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은 가족윤리의 사회적 확대로 인하여 개성의 발달을 북돋아 줄 만한 계기가 적었다고 한다. 봉건사회의 특징은 신분과 직업의 세습으로 인하여 출생과 동시에 장래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버리는 것으로서 동,서양이 비슷하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르네상스라는 문화혁명이 인간의 개성을 긍정하고 나섰는데 그것은 신으로 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원래 신에 의한 구속이라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전통을 박차고 나올 계기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봉건사회가 서양에 비하여 개성이 타율적으로 덜 억압되어 있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고려시대 초부터 과거제도가 실시되어 양반층을 구성하는데 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생겼다. 신라말기의 학자인 최 치원도 신분이 낮은 까닭에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 밖의 유능한 지식인이

초야에 묻히게 되었던 것을 고려시대에 이르러 혈연귀족에 대신하는 지식인을 등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가서 더 활발해진 과거제도는 늘어나는 양반의 수효를 조절하는 수단이었지만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으로서는 탁월한 방법이었다. 우수한 인재를 뽑는데 신분 혈연(인척), 지연관계를 초월하여 적성에 맞게 지식인을 배치하려는 것은 개성존중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세종이 장영실을 노비신분에서 발탁하여 과학연구를 시켜 자격루, 측우기등 수 많은 종류의 기계 기구를 발명케 하고 그 신분을 높여준 사실도 하나의 개성발굴의 표본이기도 하다.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의 전통이 고루한 남존여비로 표현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신라, 고려시대를 통하여 보면 남녀의 애정표시가 자유로왔으며 여성들의 왕위계승권이나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만 관리나 직업전선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구조가 여성의 역할을 외부로 확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여성에 대한 대우가 달라진 것은 유교적 질서하에서 남녀의 역할이 안과 밖으로 고정되어 버리고 그 규제를 지나치게 엄격히 다룬데 원인이 있다.

남자가 가정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여성은 밖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자녀교육, 가정관리, 재산관리, 그밖의 범사를 도맡아 다스렸다. 부부유별이란 . . 여성의 역할은 궁중이나 사대부나 일반민에 있어서 모두 동질의 것으로서 그 권한은 매우 큰 것이었다. 임금의 어머니(대비)가 왕위계승에 발언권이 강하였던 것은 일반 가정에 있어서의 후사문제나 상속 혼인관계에 어머니가 가지는 권한과 같은 것이었다. 피상적으로 보면 남존여비가 되지만 깊게 보면 남녀의 역할이 달랐던 시대적 산물로서의 사회규범이다. 남녀의 구별이 모

호하여 지고 사회변화와 서구문물의 도입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물론 동학운동 지도자들과 같이 몸소 구제도를 타파하려고 과부와 결혼하며 노비신분을 해방시켜준 본보기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사 자체내에서의 근대화과정이지 결코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선비들은 또한 절개가 있고 진리에 용감하였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각도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고려말의 정 몽주, 吉再, 조선초기의 成三問등 사육신, 조선말기의 閔泳煥과 같은 이는 신념에 살고 의리에 죽은 사람들이며 이들은 모두가 지식인들이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끝까지 충실한 사람들에 모든 국민이 존경을 보냈다

이런 절개는 조국 방위에 목숨을 바친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지성을 행동으로 표시한데서 나왔다. 이들의 행동은 감상적이 아니라 지적판단에 의한 것이며 불의에 대하여 비굴하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용기있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결단이 훈련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지성의 소산임을 알 것이다.

양반계급이 노동을 천시하였기 때문에 지식인들의 경제관이 그릇되어 빈곤을 면치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유학자들도 이미 16세기부터 경제문제, 민생문제가 정치에 으뜸간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 율곡은 민생문제가 교육문제보다도 앞서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아무리 영양가가 좋은 음식(덕)이라도 위장(민)이 약하면 소화가 안된다고 비유하였고 자기도 해주에 있을 때 손수 풀무질을 하여 호미를 만들어 팔았다. 이것은 당시의 양반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개척적 태도라 할것이다.

그 후 실학의 대가인 유형원, 이익 등이 나와 17, 18세기의

경제학을 이끌었으니 양반계급들도 경제에 눈이 뜨고 택리지와 같은 지리책은 양반층이 상업가능지역을 모색하는데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저술한 것이다.

洪 湛軒은 양반들이 도사리고만 앉아 있는 버릇을 비난하고 아무것도 아니하고 무위도식하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정에 쓰이지 않는 자는 노동일을 시키라고 하였다. 그는 正心誠意가 学과 行의 体요 開物成務(律暦, 算数, 銭穀, 軍事)는 学과 行의 用이라 하여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구분하고 다같이 중히 여겨야 하며 학문에는 의리, 경제, 문학의 세가지가 언제나 상호공존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朴 齊家(750~1850)는 당시에 많은 선비들이 과거에 응시하여 때로는 수만명에 이르니 그 혼잡함이 이를데 없고 시험관도 반나절에 이를 끝내고나니 시험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요행히 합격이 되면 그날부터 공부는 중단하는 형편이라고 이들에게 농사를 시킴으로서 수적으로 늘어난 양반층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丁若鏞같은 이는 수리 전제의 개혁에서 부터 양계, 과수, 소채, 약초의 재배법까지도 연구하여 농사기술에 양반층의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경제이론도 영리추구에만 전념하는 유럽인의 생활방식과는 달랐다. 人倫을 소홀히 하고는 산업을 다스릴 수 없고 산업이 없이는 인륜을 닦을수 없다는 전제가 따랐다. 人倫은 마치 남편과 같은 것이요 산업은 마치 아내와 같은 것이니 人倫만 소중히 하고 산업은 다스리지 않는 것은 홀아비와 같고 산업만 다스릴 줄 알고 인륜을 소홀히 하는 것은 과부와 같다. 인륜이 하늘과 해를 본받은 것이라면 산업은 땅과 달을 본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륜과 산업의 묘를 밝힌 연후에라야 우주의 궁극적인 이치도 알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므로서 경제와 윤리의 불가분의 상호관계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1884년의 갑신정변과 10년후의 동학혁명은 근대적 민권운동의 출발점이었다. 유학에서의 "民"은 民惟邦本의 개념으로서 지도자들은 邦本이 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은 "民"이 군주를 위한 생산도구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갑신정변에서 보여준 주장은 문벌의 폐지, 사민평등, 세법개혁등의 평등사상이다. 여기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외국에 의하여 얻어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나간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많은 반대세력과 민중의 호응이 적어 갑신개혁은 실패하였으나 10년후의 동학혁명은 민권의식의 진전이라고 할만하다. 그들의 기치에는 輔國安民이라 쓰여져 있고 포고문의 서두에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다. 근본이 쇠약하면 국가는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외래사상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본사상을 재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후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자유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한말의 민권운동의 중심체였다고 할 수 있는 독립협회는 한국의 전통을 참작하여 종래 강조되어 오던 주장을 실현시키면서 민중속으로 파고 들어 가려했다. 군주정치를 부정하지 않았던 이들의 주장은 시대적 산물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중산계급이나 자본주의에의 투신도 아니고 지식층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의 성격이 강하게 풍기는 것으로 보아 이 운동이 서구의 근대화를 위한 참혹한 전쟁과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한말의 민권운동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려는 자주적인 태세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여 한국인의 지성은 인본주의적인 것이었다. 정치 경제, 과학, 문화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어떠한 발전도 있을 수 없다. 원효, 의천, 사명당으로 연결되는 불교의 고승이나 설총, 최충, 정도전, 이황 ------ 으로 이어오는 유교의 선비나 근대에 와서 큰 영향을 미친 그리스도교를 막론하고 정치이념이나 가정에서의 人和의 강조가 다를 바 없는 인간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경제학에 있어서조차 윤리가 앞서는 사상적 체계는 역사전체를 통하여 지식인 사이에 흐르고 있는 저류라고 할 것이다.

2. 교수 방법

우리 문화의 특색을 인본주의에다 두는 데는 별로 이론이 없을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지적인 것보다는 인간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仁, 義, 礼, 知, 孝, 情, 忠, 信, 모두가 인간관계에 기저를 두고 있다. 이것이 유교적인 입장에서 해석되어 버린 조선시대를 제외하고는 별로 종적이고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강조한 것은 아니다.

형이상학이 발달되지 않고 사회와 도의에 더 역점을 두었지만 물질에 기반을 둔 형이하를 존중하지도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는 평등과 자유를 찾음에 있어 하늘아래 평등을 찾고자 출발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이상적인 교류방법을 구하려 했고 그 기반을 가족에도 두었다. 가족안에는 재물이나 재산을 초월하는 정신적 사회적 유대가 있는 것이고 이를 확대시킨 것이 민족이요 국가라고 생각했다.

개성을 존중하고 남녀가 평등하며 경제적 풍요를 찾고 정치적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의 지성인들은 인간임을 잊지 않았다. 자유는 구체적인 데서만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 사실을 체험함에 있어서 정치현상이나 경제현상을 독립적이나 고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간과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보았기때문에 항상 조용한 변화가 거듭되었을 뿐이다. 어떤사람은 이것을 정체적이고 후진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후진성은 서양이 인간주의를 떠나 식민정책과 산업혁명으로 부강만을 좇은 결과 경제역량의 차이가 생겨날 것이며 18세기까지만 하여도 우리는 고도의 정신문화를 누리고 있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근래에 와서 우리에게도 서양의 경제제일주의의 물결이 들어와 인간성의 상실과 경제만능주의의 인생관이 대두하기 시작하여 전통적인 지성이 동요하게 되었다. 한국인이 인본주의를 버리고 경제만을 찾으려 할 때 일어나는 비한국적인 결과에 대하여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예술에 따라다니는 한국적인 이데오르기는 언제나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용감하게, 현실에 맞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는 진리를 전제로 하려는데 원칙을 두고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서양인들이 목적을 달성하여 놓고 뒤에 합리화시키는 절차와 우리의 그것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서양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은 경제적 우선에 대한 것과 우리 문화에 대한 무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때 한국의 정신사는 앞으로 더 개척되어야 할 여지가 많음을 느낀다.

3. 참고 문헌

朴鍾鴻. 韓國의 思想的方向 博英社

錢穆. 文化学概論 乙酉文化社 1962.

金淑子. 旧韓末民权運動 1970.

李洪九. 民族的自由主義 (創作과 批評 5巻1号) 1970

朴正熙. 韓國의 底力 光明出版社 1971

李仁榮. 우리 民族史의 性格 국사요론 1950.

韓沽劤. 富와 貴의 價置觀과 族譜의 思想 사상계 1959. 8

金斗鍾. 世宗大王의 濟生偉業과 의약의 자주적 발전 서울대 논문집, 인문사회과학5, 1957.

高柄翊. 茶山의 進歩觀 趙明基紀念 佛教史学論叢 1956.

洪以燮. 丁若鏞의 政治經濟思想 研究 1959.

李乙浩. 茶山 經濟思想研究 1966.

洪以燮. 甲午更張과 基督教 사상계 1955. 1

趙芝薰. 한국민족운동사 한국문화사대계 1, 1964.

Ⅲ 社會的規範과 人間関係

1. 내용 개요

평등한 인간관계를 봉건사회는 부정하였고 이조사회 또한 다를바 없었다. 삼강오륜이나 칠거지악은 그 본래의 의미에서 떠나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수직적 대인관계나 남성위주의 해석을 내린것이다.

조선시대의 사회규범을 설명하기에 앞서 역사적 고찰을 위하여 신라의 세속5계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事君以忠 2. 事親以孝 3. 交友以信 4. 臨戰無退 5. 殺生有擇의 정신은 忠, 孝, 信, 勇, 仁의 다섯가지 개념으로 풀이 할수 있다.

도덕적 기준은 불교도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유교이념이 지배하기 전의 전통적 가치의 집결이라고 하여도 좋은 것이다. 특히 화랑들에게 주어진 교훈이라면 교육적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안에는 가정윤리가 기본이 되는 유학의 성격과는 달리 국가의식, 사회의식, 종교의식이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다. 이런 화랑정신은 고려에도 계승되어 강 감찬, 윤 관, 삼별초에 이르기까지 전승되었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남 이, 이 순신, 사 명당등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다고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五倫이 나타나 1) 君臣有義 2) 父子有親 3) 夫婦有別 4) 長幼有序 5) 朋友有信의 다섯 덕목을 내세웠다. 義, 親, 別, 序, 信은 후세에 와서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풀이되었지만 그 본질은 복종을 강요하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다.

사랑(親), 옳은 원(義), 책임수행과 직분(別), 배우고 가르침(序), 믿음(信)의 의미는 결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횡적인 인간관계임이 틀림없다

신라때의 세속오계와 비교하면 가족윤리가 강조되어 범위가 좁아진 듯하며 국가나 민족 또 인류생활과 같은 넓은 세계관이 가족이라는 범주로 오무라진듯 보이는 것은 유교의 교리가 가정이 확대된 국가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세분한 것이 이 원구(1800경)의 九道라고 할것이다. 父道慈, 子道孝, 兄道友, 弟道恭, 友道信, 婦道順, 夫道和, 臣道忠, 君道仁의 아홉가지는 인륜의 기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중 "어버이를 예로 들어 본다고 하면 자식을 양육하되 보답하기를 기대하지 않음이 자연의 정상이오 수고하였지만 사랑하지 않음도 자연의 현상이오 가르칠때 두렵게 하여 정을 상하게 함은 정상이 아니오 훈계하되 愛지않는 원이 없음은 하늘이 만물을 응답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세가지 (세속오계, 삼강오륜, 구도) 인간관계의 교훈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지식의 배경도 불교, 유교, 그리고 평민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해도 좋다. 이 세가지의 공통점은 사회도덕의 기본을 직접적인 인간관계에 두고 명랑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길은 정치도 경제도 아니오 인간사이의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인간관계가 구체화하기위하여 어떤 형식(예절)을 갖추게 마련이다. 관, 혼, 상, 제는 이런 인간관계의 중시와 조상숭배 사상이 곁드려서 세워진것이다. 송 시볼일파에서 비롯된 예학은 지나치게 형식을 고집하는 폐단을 낳기까지에 이르렀지만 대중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그만큼 시대의 요청에 응답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중의 관례는 매우 간소화되었지만 혼인, 장례, 제사는 아직것 우리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다. 하나의 인간과 그 인간이 속해있는 가족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역할가지도 맡고 있는 셈이다. 이 예학중에서 가장 발달한 것이 조상숭배의 사상에서 번역된 상하의 질서이다. 이른바 예절이라는 것이 윗사람을 대하는 아래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여기서 부터 횡적관계보다는 종적인 인간관계를 더 역설하기 시작했다. 예절의 존중은 또한 세대사이의 갈력대립을 조절하고 계급사이의 충돌을 통제하는 작용을 맡아왔다. 사회적 신분을 불평의 실마리로 삼기 보다는 예절과 의리로서 조절하는 것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다. 조선시대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때 비판을 받을 국면도 있으나 당시의 사회규범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했다

개인의 입장을 내 세우기 보다는 가족이 모든 결정을 위한 기본 단위였고 단독가족은 대가족제도의 울타리 (공동체) 의 일부에 불과하였다. 공동체 (대가족제) 안에서 부당성을 지적당한다는 것은 법률적인 판결보다도 준엄하고 두려운것이다. 그러기에 남이 어떻게 비판할것인가를 전제로 하는 행동양식이 습성화되고 말았다.

어느 학자는 이를 서양의 죄의문화에 비한 동양의 수치문화라고 규정하였다 그만큼 한국의 사회적 규범은 대가족안에서 시종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상호부조정신은 대가족제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적 유산이다. 가족성원은 공동체의식으로 단결하고 그 연장이 민족의식으로 발전하므로서 한국인의 동족의식은 다른나라에 비하여 강하며 질수 밖에 없다. 개성의 상실이라는 희생뒤에는 강한 민족의식을 선사받는데 있다 일찍부터 발달된 것으로서는 契

를 들 수 있다. 혈연사회였던 상고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사상, 감정, 취미, 연령, 생산, 소비등, 생활양식의 공통된 분야에서 서로 의견이 맞으면 언제나 조직할수 있었으며 유희, 오락, 제사, 회식등의 행사로 계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유지했다. 시원적인 형태에서 화랑제에도 영향을 주고 차차 경제성을 띄우면서 동갑계, 동족계등으로 발전하고 사회사업으로까지 번져갔으나 그 본분은 이익사회로 전환되기 이전에 공동사회의 특성을 살린 인간관계의 유지수단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동계 이중계 자치계등 지역단체안에서 인적유대를 주로하는 것과 상공업단체의 특수목적을 위한 계와 상호부조정신을 주로하는 계(관혼상제)로 성격이 분화하였다. 계가 경제적 행위를 매개로 하지만 그것이 목적하는 것은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인간관계를 위한 상호부조적 활동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화 및 상호협조를 위한 鄕約도 인간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이다. 조선후기에 널리 시행되었는데 그 모체를 이룬것이 중국의 여씨향약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향약은 이 성계가 자기의 고향에 향헌 41조를 제정하고 이를 실시한 일에서 비롯된다. 그후 조 광조의 정책으로 다분히 일반화되어 갔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1. 德業相勸 2. 過失相規 3. 禮俗相交 4. 患難相恤이었다. 이 황, 이 이의 두학자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향약을 만들었고 부락마다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살려 동리의 지식인의 기안으로 여기 저기 향약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이 이가 만들었다는 해주 향약이 실제 지방사정에 잘 맞추었다는 점으로 완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조선말기에 들어와서 향약이 관리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라하여 그 성장을 억제하는 풍조가 생기더니 지방세력의 비대하여 짐을 염려하는 지배층에 의하

여 차차 소멸되어갔다. 향약은 유교적 사회규범과 지방자치정신을 북돋아주는데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 재평가를 받을만 하다.

문화면에 있어서 전통 문화가 특수 양반측에 한정된 문화라고는 하지만 사회규범이라는 것은 결코 양반의 독점물은 아니었다. 지금도 전해오는 우리의 생활풍습은 모두가 양반문화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서민들은 지역사회의 지식층이며 부유층인 양반에게서 교화를 받아가며 인생관과 생활양식을 구축하여 나갔다. 각 지방에는 향청이라는 것이 있어 지방에서 덕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풍속의 정과 악덕관리의 규탄 민의상달등의 역할을 맡아보았다. 관리 (수령) 가 타지방에서 부임해 오더라도 그 지방출신의 덕망있는 자가 관여한다는 것은 일종의 지방자치정신이었다.

조선시대의 이러한 제도는 봉쇄된 공동체안에서도 양반문화를 대중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의 사회적 규범은 우리가 보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예절존중, 조상숭배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 인간관계를 중시하였다. 통치수단에 이용하고자 또는 기성세대를 위하여 복종의 미덕으로 전환시키는 경향도 많았으나 그 기본은 가정윤리에서 지역공동체로 확대되는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직접적인 인간관계는 계급투쟁과 같은 극한사항을 배제하고 상하관계와 계층간의 융화를 도모하는데 공헌하였다. 시민사회의 성립이 늦어진 것은 시민의식의 각성을 촉구하는 자아의식의 노출이 둔화된 것에 원인이 있었으나 반대로 봉건사회질서속에서도 계층간의 질서가 서양사회와 같이 신체적 예속을 강요하는 농노적 대우를 하지 않았는데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농민들이 서양의 봉건영주의 농노사이의 인간관계가 성립되었더라면 중세와 근세의 선을 긋는 프랑스혁명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다

고 해서 우리나라에 민권의식이 늦게 나타난것도 아니다. 일단세력이 밀려와서 구질서를 파괴하려 들때 그들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민권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간관계를 중핵으로 하는 사회규범은 공동체의식의 바탕위에 성립되었음을 방증하여 주는 것이다

지나친 예절이 새시대의 물결에 부디쳐 위기에 봉착하였다 하여도 구시대에 공헌하였던 점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서 바라는 예절을 창조하여야 할 단계에 있음을 자각하여야겠다.

2. 교수방법

한국적인 인간관계는 서양의 경우 처럼 피라밑형의 주종관계나 원대원의 동등관계의 양극을 왕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기대하는 역할관계가 다르다. 시대를 관통하는 일관된 관념은 국가 이웃, 가족과 나라의 관계를 규정지어주는 "한국인의 사유형태가 있다. 그것이 한자로 忠, 孝, 和, 親등으로 표시되었지만 이것은 중국사람이나 일본사람들이 느끼는것과도 다르다.

오늘날에 와서도 떨어진 도의를 바로잡는데 예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른한테 무엇이고 복종하는 것이 예절도 아니고 존경하지도 않는 연장자에게 공손하기를 강요해도 소용이 없다. 도덕이나 예절은 시대와 민족에 따라 창조 변화하기 마련이다. 세속오계, 삼강오륜, 九道六事하는 식으로 예절의 표본도 바뀌어 간다.

현재 우리가 고민하는 세대갈등은 예절의 새로운 거책을 못해놓고 과거의 예절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신구세대에서

대화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쌍방이 서로 다른 인간관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서로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때문이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자기들 끼리의 세계와 기성세대와의 세계가 다르다고 의식하기 때문에 두가지 태도를 가지게된다. 과연 이와같은 이중적 부담이 젊은 세대에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는 옛날과 다른 어른과 아이들과의 관계를 탄생시키지 않고서는 안된다.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는 전통적인 사회규범과 위배되지 않아야만 생명력이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고정된것이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님을 증명하여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과거의 도덕률을 찬양하면 봉건적인 보수주의자가 되고 새로운 도덕을 주장하면 방종 나태하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신과 구사이를 왕래하다가 그치고 말게 될것이다. 가정 직장안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서 새로 꾸며져 나갈때 우리의 사회규범도 근대화될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우리들은 人間關係의 수직적 면만을 생각할 때가 많다. 친구사이의 예절같은 것은 배우려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면 될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버리는데서 일어나는 혼란도 많다. 공과 사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가족윤리가 논리적인 것보다 감성적이라는 단점에서 벗어나서 보다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인 창조를 거듭하여야 할 것이다.

새 시대의 요청에 맞도록 거듭하여야 할것이다.

3. 참고 문헌

李 仁 榮, 우리 民族史의 性格, 국사요론, 1950.

朴 克 采, 조선 봉건 사회의 정체적 본질, 이조사회경제사. 1946.

金 三 守, 契의 研究, 대구대 논문집 3, 1960.

金 三 守. 契의 諸学說의 吟味와 그 단계개념에 관한 史的 研究, 아세아여성연구 1, 1962.

黃 元 九, 李朝 礼学의 形成過程 東方学志 6, 1963.

제3장 한국전통이 본 공산주의

한국의 전통이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들어보고자 한다

1. 정치의식의 점차적인 확대
2. 한국인 철학과 사상
3. 유물사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사

정치의식이 완전히 귀족에게 독점되었던 서양에 있어서는 제급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어 혁명이 일어나고 통치자는 신뢰를 받으려 하기보다 힘에 의한 굴복을 강요하였다. 한국은 정치참여의 기회가 신라의 골품, 고려의 문벌귀족, 이조의 양반사회 개화기의 민권운동의 단계적 확대로서 역사의 진전이 체제의 혁명없이도 민주적방향으로 옮겨왔던 것이다. 이것은 가족윤리가 국가의식과 동일시되어 충과 효의 개념이 일치하였으므로 통치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권력자이기 보다는 철인 또는 현인이었다는 정치철학에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反正은 자주 있어도 혁명이 적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인의 철학과 사상도 또한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의 바탕과 융합될 수 없다. 한국인의 사상을 "하느님" 이라는 형이상학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 원시종교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이원론적 입장에서의 초월적 한울 인식하였고 불교도 인간은 누구나 불타가 될 수 있다는 인간 평등사상에다가 불타의 서식처를 하늘에 두었으며 민심이 천심이라는 유학이나 사람은 곧 하늘이라는 동학, 그리고 인격화시킨 기독교의 하나님을 받아 들이게된 것도 이런데 연유한다. 더구나 한국인의 가치관이 물질주의와 절연된 상태에서 형성되어 온것이 반공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한국사는 서양사회의 발전단계와 같이 원시공산제 노예제 농노제 자본제의 유형을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한가지도 한국에서는 성립되지 않았다. 이것을 서양학자들이 미숙한 상태니 정체성이라고 말하였지만 한국은 고유한 정치와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자라났다. 계급투쟁은 종교의 힘으로 둔화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있어도 푸로레타리아트의 식은 일어나지 않았다. 인간의 의리를 존중하는 사상이나 원차공동사회적 성격이 계급을 초월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17세기 이래 상공업도 발달되고 자본도 축적되어 갔으나 해외식민의 부족으로 서양의 선진국과 같이 착취시장이 없었을 뿐이다. 소련의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제국주의) 획득에 희생이 되어가는 신생국가들은 이러한 역사적 전통이 희박한데서 오는 결과라 할 것이다.

Ⅰ 韓國人의 政治意識의 擴大

1. 내 용 개 요

통치자와 피치자를 막론하고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어떤 정치를 원하느냐는 것은 민족이나 시대에 따라 다르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조선시대까지 정치에 직접 참여하였던 것은 양반층이다. 그러나 양반의 수효가 늘어나고 그 질적 요소에도 변화가 오면 그 안에서 다시 분화과정이 일어나고 그러한 역사적 과정에서는 간간히 양반층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표현으로는 충분치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직 통치자는 군주 한사람뿐이고 나머지는 그 틀에서 맡은바 역할에 충실하면 자연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소극적인 사고가 지배적이라는 보해가 타당할지도 모른다.

먼저 우리 역사속에서 국민의 정치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찾아 보기로 한다. 서양의 고대사회에서는 그리이스나 로오마의 자유민들만이 정치에 참여하였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가축정도의 대우밖에는 받지 못하는 두 계층으로 나누어졌으나 한국은 고대사회서 부터 왕족, 귀족, 평민, 그리고 전쟁포로나 죄인이 노예대우를 받은 천민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삼국시대의 왕족과 귀족은 이른바 골품제도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특수층을 구성하고 있었다. 다만 그들의 수효가 전 국민에 비하여 어느 정도였는지를 추측할수 없다. 고대귀족이 씨족사회의 족장출신이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많은 수효가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고대사회는 골품귀족 (족장출신) 만이 정치에 참여하였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골품제는 무너지고 문벌귀족들이 주로 정치에

참여하였다. 문벌이 좋은 집안에서도 왕실과의 혼인관계로 인하여 더 강한 권력을 지닌 귀족도 나타났지만 정치의 중심은 많은 재산(토지)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귀족(18파)과 승려들이었다.
이들은 비록 관직이 없드라도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록을 받을 수 있었고 정치참여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었다. 또한 과거제도에 의하여 평민층에서도 관료에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나 신라시대에 비하여 참여의 문이 더 넓어진 셈이다. 과거제도는 재주가 있어도 등용이 안되었던 신라의 최 치원 일파가 고려왕조에 강력히 점유하였다는 점으로 보아도 정치참여의 기회는 확대된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양반의 전성기를 이룬다. 문무의 구별이었던 양반이 귀족신분을 가르치는 용어로 바뀌고 세습된 신분에 따라 정치참여가 가능했다. 고려시대의 문벌귀족에 비하여 양반의 수효는 날로 늘어났다. 학식있는 사람은 과거에 급제하여 신분이 달라지고 천민도 재주를 인정받으면 속량하여 신분이 올라간다. 서자를 푸대접하고 개가를 금하여 양반의 수효를 제한하여 보았으나 별로 성과는 없었다. 이조말기에 이르러 양반의 수효가 50퍼센트로 늘어난 것은 이런 이유 이외에 상공업발달로 인한 상업자본가들이 양반의 신분을 돈주고 사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천은 한국사에서 정치참여의 인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서양에서는 고대보다 중세는 더 암흑시대였고 정치는 종교의 시녀로서 신앞에 굴복하는 것과 같이 권력에 복종하기를 강요당했기 때문에 인간성의 발전을 고대의 모방으로 되찾자는 르네상스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한국인의 정치의식이 원래 왕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다가 정치참여의 기

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정치적이고 무기력한것같이 보이지만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긴다는 신의가 강하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다른 또 하나의 특색은 忠과 孝의 사상이 일치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가족윤리의 확대로 왕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는 어버이로서의 왕이었다. 고려 중기에 왕을 네사람이나 교체시켰던 실력자 최 충헌도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던 것은 최 충헌의 개인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굴복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반대로 진취적인 기상을 보여 과감하게 역성혁명을 이르켰던 이 성계도 형식상으로는 세번이나 사양하는 예를 잊지 않았고 고려왕실에게서 직접 선양받은 의식을 갖추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유학으로 정치이념을 바꾸고 개경에서 한양으로 근거지를 옮기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도 민심의 향배와 역사의 추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파란 많은 역사를 되풀이 하면서도 역성혁명을 일어나지 않았고 반정이란 이름의 조용한 혁명이 몇번 있었을 뿐이며 심한 당쟁에서도 왕의 위치를 동요시키지 않으려 노력했다. 역성혁명을 죄악시하는 보수적 경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만일 정치의식에 굶주려 있었다면 동학혁명과 같은것이 더 일찍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정치인들에게 맡겨준 결과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시기에 도달했을 때 동학혁명과 같은 서민층으로 부터의 반항이 나타나지만 이들도 자기들이 권력을 잡겠다는 구호를 내세우지 않고 정치인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말기의 관료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역사상 유례없이 인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착오가 외세를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고만 것이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혁명에서 그들이 내걸은 강령은 1. 不殺生 2. 忠孝雙全 濟世安民 3. 逐滅洋倭 澄淸聖道 4. 驅兵入京 滅盡權貴 의 네가지였다. 이 정신은 첫째가 평화주의요, 둘째가 어진정치이념을 되찾자는 것이요 셋째가 자주독립의 수호이며 넷째가 부정관리의 축출에 있다. 관료들은 이미 여러차례 민란에서 백성의 소리를 들었을 터인데 조금도 개혁이 안보이자 현명한 어진정치에 대한 전통적 기대가 무너졌음을 느껴고 궐기한 의사표시였다.

동학이 저지른 근대화에의 불길은 계급타파, 개가허락, 인재등용, 세법개정 등 갑오경장에서 이룩할 수 있었던 제반개혁의 실마리가 되었다. 역사의 불행은 시대의 변화와 여론에 어두운 관리들이 일본의 압력으로 비로소 개혁을 실시하였다는 것은 어질고 현명하지만 전문적 지식이 없는 정치인들의 무능을 노정시킨 것이다.

19세기 후반기는 우리나라가 이미 민권운동의 싹이 트던 시대이다. 갑신정변, 동학혁명, 갑오경장, 독립협회운동, 교회활동 등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1945년의 세계제2차대전이 끝나는 선물로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온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역사적 사실들이다.

이씨조선 말기에 약 반수를 차지하였던 양반이외에 모든 국민이 정치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누릴 근대사회를 건설하자는 외침은 외국과의 문화교류, 기독교의 전래등에 자극받아 외세에 대한 자주독립사상과 함께 일어났던 것이다. 서재필, 이승만, 장지연, 안창호와 같은 선구자들은 언론의 창달 근대식 학교의 설립 등으로 인재를 기르고 대중을 계몽시켰다. 이러한 민주화 과정을 왕권에 대한 반항으로 오인하는 무능관리들과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였음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한국의 정치의식은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발달되어 갔다. 공산주

의를 채택한 소련은 유럽의 후진국으로서 정치의식에 대한 굶주림과 서방세계의 발전에 반비례하여 위축되어 들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을 유럽 세계각국이 1차 세계대전에 정신을 쏟고 있는 시기를 이용하여 공산독재정권을 성립하였다. 그들은 전체주의 정책으로 모든 힘을 국가의 부강에 집중하고 인민의 생활을 가능한 한 최저로 동결시킴으로서 서방에 대항하려는 것이었다. 정치참여에 기회가 거의 없고 정치의식이 발달되지 않은 러시아인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에 이끌려갔으나 서구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은 국민의 정치의식이 발달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남한에서는 한국의 신탁통치안을 맹렬히 반대하고 나섰으며 강대국들도 이 여론에 꺾이었다. 이것은 한국인의 정치의식이 오랜역사를 통하여 훈련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일제가 오래동안 지배하였어도 민족의식이 조금도 시들지 않고 곧 자주적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역사적 흐름에서 본 정치의식 발달과 관계가 있다. 아시아의 여러 식민지들이 우리나라 보다도 더 단순한 환경에 있으면서 속히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독립된 다음에도 분단된 한국보다 더 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들의 역사속에서 정치의식이 성숙해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통일이 되는 날 공산지배에 고생하던 북한동포들도 아무리 그들의 세뇌와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천년을 내려오는 역사적 전통이 조속한 시일내 되살아나며 한국사의 기형아가 정상적인 역사의 흐름속으로 쉬여 들어오게 될 것을 믿을 수 있다.

한국의 정치의식은 스스로 자기가 정치권력을 잡는 것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풍토는 정치인에게 필요이상의 동경을 보내고 있지 않다. 공산독재가 아무리 프로레타

리아의 독재라는 구호로 유혹하여도 동학의 후손들은 평화주의와 濟世安民이라는 높은 이상에 젖고 실현성 없는 구체적 욕심을 내지 않는다.

한국사가 본 공산주의는 소련세력이 물러가기만 하면 역사의 흐름 그대로 19세기부터 쌓아 올리려던 민주사회를 건설하는데 참여하는 한국의 후손으로 북한동포들이 찾아 올 것이 틀림없다.

2. 교 수 방 법

서양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의식은 정적이었다. 그리고 정치참여의 기회도 시대가 흐름에 따라 확대되어 갔음을 볼 수 있다. 일제시대에 정치참여를 일체 봉쇄당하고 있던 36년간을 제외하면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은 골품, 문벌귀족, 양반층, 민권운동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공산주의 이론이 침투될 수가 없다.

서양에서는 전제적인 색채가 더 강하였기 때문에 그 반발로 프랑스혁명이 일어났고 영국의 헌정사는 이를 위하여 여러번 피를 흘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덕치주의를 내걸고 그것에 민중이 귀의하는 정치도의가 발달되어 있어 비정상적인 정치풍토가 일어나는 연산조나 철종조와 같은 사태를 제외하고는 민중의 반항이 일어나지 않았다.

근대에 들어와서 외세의 영향과 대중의 각성으로 민주적 의식이 싹트고 근대화의 봉화를 든 것은 우리나라 역사진전이 점진적이었던 것과 같이 자연발생적인 새 시대로의 전환이었다. 다만 이것이 일제에 의하여 좌절되고 전례없이 식민지로 떨어져 악독한 전제정치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한국사를 통하여 전통적인 정치제도 속에서 정치참여의 확대라는 과제는 위정자들에게 일관된 정치철학이었으므로 국왕이 숨은 인재를 찾아 다닌 일화나 미담이 많이 전한다.

폭력을 통치의 수단으로 하는 혁명주의 사상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사회는 정치적 교양이 미개한 상태이거나 정치참여의 기회가 너무나 봉쇄된 사회이다. 러시아의 후진성과 유럽의 발달이 좋은 대조가 되었지만 한국이나 동양에서 자연발생적인 좌익혁명은 별로 찾아 볼 수 없다. 민란이나 동학혁명에서도 평화주의를 내걸었고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혁명적 구호는 없었다. 이러한 전통은 우리의 정치이념이나 체제가 공산주의와 성격을 달리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며 북한의 공산주의는 전적으로 강요된 것으로 전통과 조화될 수 없는 체제임을 알 수 있다.

3. 참고 문헌

閔斗基, 民族性論의 方向, 新思潮, 1963. 5

李基白, 韓國民族性의 長短點 論議 1963. 4

金哲埈, 新羅貴族勢力의 基盤, 인문과학 7, 1962

吳知泳, 東學史 1940

李敦燾, 東学敎門과 그 發生의 諸導因, 국사상의 문제 6. 1960.

金龍德, 東學思想 硏究 中央大論文集 9、 1964.

高其陽. 李朝後期의 政治支配關係 역사학 연구 1949.

閔泰瑗. 甲申政變과 金玉均 1947

任鍾基. 甲申政變에 관한 일 고찰, 성균대 논문집 7. 1962.

韓㳓劤. 東学乱起因에 관한 硏究 아세아 연구 7~3.4, 1964.

金庠基. 東学과 東学乱 1947.

金昌坤. 갑오경장 추진기구의 성립과정. 史叢 4, 1959.

천관우. 갑오경장과 근대화 사상계 1954, 12.

홍이섭. 갑오경장과 기독교 사상계 1955. 1

최남선. 조선독립운동사 1946.

金東仁. 춘원연구. 1956.

Ⅱ 韓國思想으로 본 共產主義

1. 내용 개요

고유한 한국철학의 체계는 아직 정돈되지 않아 한국인의 사유형식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인의 체질속에 흐르고 있는 사상적 기반은 자연종교 불교, 유교, 동학등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주제에서는 한국의 이와같은 사상이 공산주의와 융합될 수 없는 점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둔다.

자연종교라는 하나의 원시종교를 주로 무속신앙 또 샤마니즘이라고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샤마니즘의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오늘날 한국의 고유사상이 샤마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속단이다. 한국인의 자연종교의 특색은 숭천(하느님)사상과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샤마니즘은 그 위에다 주술, 치료, 예언이 첨가된 원시종교로서 금기, 토템, 아니미즘 등의 사고방식이 바탕이 된 여러가지 형태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이래로 한국인은 "하느님"을 숭상해 왔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것도 신을 한국식으로 표현한 말이다. 따라서 하느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구별되어야 할것이다. 이미 단군신화에서 천강설을 내세워 역사의 시작과 하늘과는 인연을 갖기 시작하였다.

부족국가시대의 하느님은 농업사회에서 하늘을 지배하는 태양신을 가르킨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풀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원시사회에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풍습이 다채로웠기 때문이다. 朴씨의 붉이나 天婁의 붉이나 화랑의 風流가 모두 붉이라는 광명과 태양 즉 숭천사상에서 나온것이다. 불교가 세력을 누리던 통일신라와

고려조에도 자연종교는 조금도 시들지 않고 오히려 그와 융합하여 지금도 절에는 산신당이 높은 봉우리에 수호신과 같이 아담하게 세워져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불교는 쇠퇴하였지만 하느님의 관념은 줄어들지 않고 초인간적인 하느님의 능력을 믿었다. 유교가 현실적이고 도덕적이어서 초월적인 힘에 대한 신앙이 없던 점을 자연종교가 보충하는 역할을 맡아 본 셈이다. 모든 맹세는 하느님을 향하여 이루어지고 가뭄이 들면 임금 스스로 나아가 하늘에 기우제를 지냈다.

하늘은 언제나 정의의 편이고 인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도 나왔다. 임금은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으로 하느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한국인의 사유형태는 이러한 면에서는 다신론적 일신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불교, 유교, 기독교를 모두 받아 들이면서 그와 더불어 하느님의 사상을 결합시키고 있다. 각시대의 특색은 다르지만 이와 같은 하느님의 초월적인 신의 관념은 불교의 帝釋天을 흡수하고 도교의 옥황상제와 화합하고 유교의 천명사상을 받아 들이고 기독교의 하나님과 상통하며 동학의 人乃天에서 새로운 종교인 천도교에 까지 도달하였다. 한국민족의 생명과 함께 영원히 지속하여 온 하느님 관념은 우리민족이 원래 유물론과 유심론의 이원적 사유가 아니라 유신론으로 일관된 기본태도를 가지고 사회와 경제의 현실을 풀이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거쳐 들어 왔으나 한국의 불교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우렸다. 불교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원리에 입각하므로 그 자체가 만민평등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삼국시대의 초기 불교는 호국신앙, 인과보은 空觀의 圓融和諍思想이라는 특색을 지니게 되었다.

정치와 결합되고 국가주의, 현실주의, 조화주의로 흐른 신라의 불교는 원효와 같은 한국의 명승이 나타남으로서 독자적 위치를 확립했다. 고려시대에는 현실주의와 공리주의적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재래의 사상과 혼합절충하여 풍수설이나 샤마니즘과 조화되어 더욱 발전과 세력을 이루었다. 조선시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서민들의 정신생활에 자주 역할을 맡아 주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불교는 유불선의 三敎가 형식상은 나뉘어져 있지만 혼미에서 깨어나 진리를 찾는데는 세가지가 같은것이라고 불교에서는 函三爲一의 사상을 내세웠다.

불교가 한국고유의 사상과 합치되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가 기독교와 같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실물이라는데 있다. 불교에서는 자아를 벗어나서 절대세계(열반)와의 합일이 개념의 중심을 이룬다. 이것은 곧 자연과의 합일이기도 하여 자아부정에 의한 수용과 적응으로 달성하려 한다. 어떤 면에서는 고유한 사고유형을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결과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한국의 불교는 자연종교가 유물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는것과 같이 계급투쟁의 개념을 발생시킬 수 없는 특색이 있다. 현실과 이상과의 합일을 내다보는 한국불교는 정치권력과 결합 또는 대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이나 평민을 가리지 않고 유행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의 유학은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도덕적인 것이 앞선다. 한·당에서 유행하던 훈고학은 문학과 동조했고 송대의 성리학에서는 四学을 중심으로 중용철학을 내세우고 格物, 致知, 誠意, 正心이 목표이다. 성리학의 우주관은 理一元論이고 理는 性이며 性의 도덕적인것이 誠이다. 誠이 具體的으로 나타나면 仁義礼智의 德이 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유독 성리학을 받아 들이게 된 이유는 송학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 유교의 이론적 혁신을 시도한 것이므로 신라불교의 전통을 지닌 한국에서 수용도가 높았다고 풀이하는 학자도 있다. 불교에서 원효가 도달하였던 眞俗一如, 大乘과 小乘의 止揚은 유학에서 이 율곡이 퇴계와 화담을 지양 통일하여 발전시켰다고 보는 이도 있다. 율곡은 유학을 형이상학과 실천윤리에 도달시키고 그의 수양론이나 부국경장론은 공리공론에 기우러지려는 조선유학에 새 기원을 이룩하였다. 그는 九思와 九容으로 개인수양을 내세우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이르기 위하여 경제입국을 주장하여 관리의 기풍, 소비절약, 지방행정, 세제개혁, 국방강화를 내세웠다. 비록 정책화된 것은 적었지만 율곡의 사상과 같은 방향으로 조선의 유학의 흐름을 유도하였고 실학사상이 움트는 자극제가 되었다.

실천적인 실학은 급격하게 형이하학으로 전환되는 것 같지만 실학에서도 인도주의 복고주의가 바탕이된 학풍이었다. 실학자들은 청의 고증학과 서양의 과학발달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개혁을 주장하고 시도하였으나 실학사상 역시 인본주의의 바탕을 벗어나지 않았다. 경세목민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지만 유학의 천제(天帝)나 태극사상은 다신론적 일신교의 성격이 기본이었다. 유교에는 신도 원죄의식도 없고 불교의 인생부정이나 내세사상도 없어 다분히 현실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물질적 능력에 전적인 기대를 걸기에는 거리가 멀다. 성선설은 낙천주의 인생관을 이루어 윤리적인 악성의 보상은 내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얻으려 하였다. 이러한 경향도 한국불교의 현실주의 공리주의적인 성격과 상통하는 점으로서 불교와 유교를 일관하는 한국사상의 현실적이면서도 정신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다 할 것이다.

19세기의 혼란한 사회상을 바로 잡아보려고 일어난 최 제우는 동학사상을 내세워 한국의 사상을 독창적으로 이룩하였다. 애초에 그는 기성종교에서 사회혁신과 제세안민의 길을 찾으려고 유교, 불교는 물론 천주교에 까지 접근하여 보았다. 그가 깨달은 경험을 포덕문에서 보면 "두려워 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한울님이라 이르거늘 너는 한울님을 모르느냐. 내 또한 공이 없었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서 이 법을 가르치고저 하노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지어다"라는 하느님과의 일문일답이 있다. 종래의 하느님에게 인격을 부여한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고 인내천의 사상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하느님 사상의 연속이다.

재래종교가 귀족층과 결탁한데 비하여 천도교는 무지한 대중속에 파고 들었다. 마치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들어갈때와 같으나 천도교는 시천주의 지시대로 행동할 뿐 지상천국을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교의 삼강오륜, 불교의 수생극심, 도교의 무위자연의 사상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러한 混合주의 절충주의는 우리들의 고유사상이 외래사상을 받아들일 때 한결같이 작용하였던 민족적 태도였다.

人格化된 종교관은 인간의 자각 개성의 발견이 싹트고 농민대중도 양반과 다름없는 하느님만의 인격으로 인식되었다. 서양의 르네쌍스에서의 현실 긍정이나 개성의 활약이 가능하였던 것은 신의 노예에서의 해방이었지만 동학사상은 정치와 사회로 부터 하느님 힘에 따라 그를 따르는 개인의 가치를 자각한 것이다.

한국인의 사유는 긍정적인데서 새로운 이념이 창조되고 서양을 부정적 태도가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근대적인 인간해방의 한국적 성격이 나타나 새로운 국가의식과 가치관이 나왔다. 천도교는 이러한 가치체계로서 보국안민을 찾으며 동시에 외세를 몰

아 내고자 하였다. 계급타파 적서차별반대 노예제폐지 과거제도 폐지등은 천도교가 근대사회를 의식하였기 때문이오 그 원동력은 가성 가치의 종합과 하느님에 대한 긍정에서 나온 것이다.

민족적 종교로 대중이 받아들인 천도교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자연종교 불교, 유교, 도교의 연장과 새로운 시대감각에 의한 독창적인 능력에서 생겨났다. 역사의 산물인 천도교는 한국민족이 공산주의로 뻗어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민주주의로 흐르는 쪽을 취하였으니 그 가장 큰 이유가 개성의 발전이다. 전체주의를 싫어하는 기풍은 이미 불교와 유교에도 있었지만 천도교가 으뜸이다. 이러한 개성은 하느님의 관념과 결부된 고대신앙과 직결된다. 불교에서 주장한 평등사상과 혼합주의 그리고 유교에서 닦은 윤리관, 우주관은 한국민이 물질주의, 유물론적, 인생관으로 흐르지 않는 의식구조를 형성하였다.

일제 36년간의 전체주의적 식민지 통치에 고통을 받다가 해방이 되자 38선 이북에는 공산주의가 강제로 밀려왔다. 이남의 민주정치는 조선말기의 한국인의 근대화과정과 연결되는 것이기에 500만을 헤아리는 이북동포는 죽음을 무릅쓰고 남쪽으로 넘어왔던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 가치가 반공적이였음을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서 이보다 더 적절한 증거는 없을 것이다.

2. 교수 방법

전통적 가치가 보는 공산주의라는 제목은 얼핏보기에 잘 성립되지 않는 듯 하나 한국인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사상적 체계로 보아 공산주의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찾아 보자는 것이

다. 그 결과 공산주의에 말려들어가는 사람은 한국적인 사유형태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주제에서는 주로 종교적 사유형태를 중심으로한 한국의 사상적 특성을 살펴 보았다. 한국인은 형이상학적이 아니고 사회규범이나 도덕적 질서를 중시한다고 전제하는 학자들이 많았으나 그것은 주자학 전성시대만의 현상이고 고대의 원시종교부터 선교, 불교, 도교를 지내오는 사이에 하늘을 상징으로 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인식하여온 역사가 있다.

범신론적인데서 부터 점차 일신교로 변하면서도 신의 개념은 항상 현실긍정이라는 바탕에서 떠나지 않았다. 유교가 끝내 하느님 관념(천명사상)과 더불어 존재하고 불교가 현세에 관심을 둔 결과 천도교의 독창적인 종교를 탄생시키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받아들여 한국화시키는 바탕이 되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이유가 여기 있고 또 민주주의가 저항없이 급진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반면에 한국인의 낙천주의와 복고주의는 이질적인 문화도입에 매우 비판적이다. 가족제도나 주택양식을 보더라도 보수적경향이 강하며 효도와 예절은 좀처럼 서구화될 가능성이 없다. 한국식으로 개조되어 나갈망정 전통을 바꾸려들지 않는 가치와 태도는 외래문화선택에 매우 신중하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두가지 조류에서 우리는 미국의 영향때문에 민주진영에 선것은 아니다. 우리의 전통적 사상이 공산을 배척하고 민주를 받아들인것은 한국전통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남북의 교통이 열린다면 대부분의 동포들이 줄이어 남으로 피해올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태도 원인이 있으나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선천적으로 공산주의와 맞는 데가 없기 때문이다. 가족제도를 무시하고 사유재산을 인정치 않으며 필요에 의하여 분배한다는 이유 밑에서 무제한 노동을 착취하는 일당독재는 이씨조선중에서 가장 살기 어려웠던 19세기 초에도 맛보지 못한 가렴주구이다. 공산사회와 같은 공포정치는 한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들 사관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직언을 미덕으로 삼고, 덕으로 정치의 근본을 삼았던 인간관계가 앞서는 사회에 익숙한 한국인에게는 달콤한 미래를 예언하여도 공산사회를 전통적 가치관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한국의 사상을 체계있게 정돈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상치되는 한국사상임을 증명하여 줄만한 근거는 아직도 많이 있을 것이다.

경제에 우선하는 윤리관이나 경제적단위와 인간의 행복이 정비례하지 않는 생활양식을 아무리 물질만능주의가 강력히 뒤고 들어와도 한국인의 체질을 바꾸어 놓지는 못할것이다.

3. 참고문헌

박 종 홍, 한국인의 사상적 방향

Ⅲ 唯物史觀과 韓國史

1. 내용 개요

민족의 생활사이며 현재를 이룩한 모체로서의 역사인식은 개인적 사회적인 가치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러한 시간적 물리적인 관점보다는 본질적으로 민족사가 어떻게 주체적인 발전을 하여 왔는가를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원래 동양에 있어서의 역사 서술은 정치인이나 통치자를 위하여 후세에 교훈적 기록을 남기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특수층을 중심으로 기록되는 폐단도 있었으나 그 역사는 준엄하고 비판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서술하였던 것이다.

역사를 한국통치에 잘 이용한 것이 일본이다. 20세기 초에 일본은 많은 역사학자들을 군대의 진주 바로 뒤에 파견하였고 총독부에는 "조선사 편수회"라는 기관을 만들어 "한국이 왜 멸망하지 않을 수 없었느냐" 또는 "일본통치하에 드는 것이 더 발전에 유리하다"라는 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역사를 바꾸어 쓰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예를들면 삼국과 신라의 문화는 비교적 있는 그대로 두었으나 조선시대의 역사는 암흑시대로 묘사하였고 구한말에 불가피하게 멸망하였다는 것을 애써 나타내기 위하여 약점의 부분만으로 역사를 꾸며 놓았다. 이 식민사관은 무의식중에 해방후에도 역사속에 남아 있어 후세들이 조상들에 대한 존경보다는 혐오감을 갖고 한국에 관한 것 보다는 외국것을 더 동경하는 학문적 풍조를 만들었다.

조선시대의 정치사는 무력불비 사대주의 허약정치 당쟁의 연속으로 묘사했고 경제사는 토지제도의 문란, 양반의 가렴주구, 경제적 후진성으로 일관한 듯이 기록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조선시대에는 암흑기였다고 인식시켰던 것이다.

일제의 어용학자들에 의한 정책에 대항하는 세력이 민족사관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적인 역사관이라고 들고 나온 유물사관이다. 민족사관은 주체적인 역사를 찾자는데 목적이 있고 유물사관은 경제라는 하층구조위에 성립하는 사회구조가 곧 역사이며 이것은 바로 계급투쟁의 전개이므로 역사는 필연적으로 원시공산사회 —— 노예사회—— 봉건사회 ———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고 그 모순이 지양되면 사회주의 시대로 들어가서 무정부상태가 온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사적 유물론에서 말하는 사회구조는

① 생산력 (생산도구, 생산력)

②. 생산관계 (생산 노동, 교환, 분배, 생산수단의 소유관계)

③ 정치, 법률적 제 관계와 예술, 문화 등

④ 이념 (교리)

의 단계를 거친다고 말한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이다.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소유하였던 형태여하가 노예사회냐 봉건사회냐, 자본주의 사회를 규정짓고 그안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적 발전은 전쟁에 의한 노예의 대량공급도 없었고 영웅들의 코로니정책도 성립되지 않았다. 봉건사회에 있어서도 다분히 중앙권력이 지배하였으며 지방에 토지귀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단위를 형성할 정도로 비대하지는 않았다. 17, 8 세기에 상공업이 발달하여 상업자본이 형성되어 갔으나 서구

의 식민지 정책과 같은 비인도적 경제진출이 없었던 까닭에 대기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한국사의 현상은 유물사관의 공식법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양사를 설명하는데 이론적인 허점이 들어났다. 더구나 소련의 혁명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의 자기모순에 의한 필연적인 붕괴가 아니었던 관계로 마르크스의 예언과 레닌의 주장에 균열을 막기위하여 합리화시켜야 할 필요가 생겼으며 아시아로의 침투를 위하여서는 유물사관의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었다. 여기서 나타난 이론이 이른바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 나왔다.

1925년 이래 중국에 혁명의 기운이 보이자 마르크스가 1859년 경제학 비판의 서두에서 말한 "대범하게 보면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및 근대적 부르조아적 생산양식으로 경제적 사회구성의 계기적인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끄집어 내어 아시아의 사회구성을 고대 —— 봉건 —— 근대 이외의 것으로 하느냐 또는 고대에 선행하는 것으로 하느냐가 문제시 되었다. 이러한 자기들 끼리의 논쟁은 유물사관이 동양사회의 발전을 무시하고 생겨난 中央유럽사 중심의 경제이론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사의 일반법칙이 될수 없다는 것은 마르크스가 죽은지 40년, 레닌이 죽자마자 문제꺼리가 되었다. 그들의 고민꺼리도 동양사회의 특성으로 ① 토지사유의 결여 ② 인공 관개시설의 필요한 대규모조직의 필요성 ③ 촌락공동체의 오랜 지속 ④ 전제적 국가형태등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곧 유물사관이 한국사 내지 동양사에 적용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이유의 하나가 된것이다.

동양과 서양의 역사발전상의 차이를 논함에 있어서 공산주의자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아야

겠다.

몽테스큐는 동방의 루이 14세라고 불리우던 청나라 강희제를 극구 찬양하던 제스이트교 선교사들을 비난하면서 아시아를 "전제주의가 풍토화된 지역"이라 하여 쇄정론을 내세웠고 아담 스미드 국부론에서 중국의 산업자본 결여와 이를 방해하는 관료계급과 고리대금업자의 세력등이 정체상태에 머므르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헤겔은 정신의 본질이 자유에 있다고 보고 자기의 자유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으로서의 역사관을 수립하였다. 그는 세계사가 자유의 발전사이고 발전의 첫단계(직접적)에 1인의 자유로서의 동양적사회를 두고 다음에 그리이스사회, 게르만적 그리스트교 세계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막스 웨버는 헤겔과 같이 동양과 서양의 어느쪽이 높은 단계에 있다는 것과 같은 문제해결방식을 취하지 않고 역사의 구체적 사실은 객관적인 세계사의 질서속에서 통일코자 하였다. 그는 푸로테스탄트의 윤리를 자본주의의 선구라고 보는 동시에 자본주의와 그에 고유한 정신은 근세 유럽의 독특한 산물이라고 단정하였다. 유럽의 자본주의 정신은 모든 전통적 생활에서 자기를 끊어버리려는 것이므로 외계에 순응하려는 생활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인에게는 자기의식이 결여되고 엄격한 도덕주의에 의해 도시와 시민계급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원인은 동양사회가 관개치수에 의한 거형적인 관료정치가 일찍 발달하였고 강인한 씨족공동체의 오랜 존속이라는 두가지 점이라고 했다.

위트포겔도 동양사회는 관개치수가 필요한 동양의 독특한 집권체제 즉 전제정치를 성립시켜 집약적 농업이 발달하였고 대량의 노예의 필요성도 적었다. 서양의 분권국가 발생도 큰 하천이 없었기 때문이

며 따라서 순조로운 봉건체제로의 이행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동양이 정체성을 갖게된 이유가 관계농업의 발달이 있다고 하므로서 중세(봉건)론의 발전을 부정하는 이론을 성립시켰다.

이들의 이론은 유물사관을 포함하여 모두가 서양중심으로 동양을 보려고 한 공통점이 있으나 그들의 관점은 정치, 경제, 윤리, 철학 환경풍토 등 서로 다른데 두었음은 주목할만 하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세계사의 이해를 어느 한가지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편견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점과 역사의 인식은 전체와 개체 즉 세계사와 민족사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민족사의 이해가 세계사의 질서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민족사 자체의 주체적 발전과정에도 해석을 가할수 있는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역사를 보는 눈이 계급투쟁이나 생산관계에서만 생겨날 때 일어나는 편견은 민족사를 있는 그대로 보지않고 공식에 맞추려는 경향이 일어나게 된다.

마르크스는 계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봉건귀족, 유산계급, 소 부르조아계급, 소농계급, (자유권 소유농민과 봉건소작인) 무산계급, 농노계급등인데 이것은 당시(1850년경) 독일이나 중앙 유럽의 현실과는 일치되는 것이다.

레닌은 이 계급을 다시 해명하여 "계급이란 역사적으로 일정한 생산제도안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 생산수단에 대한 관계, 사회의 노동조직안에서의 역할등을 비롯하여 사회적 부의 몫을 차지하는 차원과 방법등을 각각 달리하는 인민의 큰 집단이다. 그 집단의 하나는 그들이 특정한 사회경제 체제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集团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일회적인 해석을 내릴 수 밖에 없는것이 현금의 역사적 태도이지만 근래에 와서는 그리이스, 로오마문화를 이어 받은 민족들이 몰락과정에 있고 다른 문화권이 더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이도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나 기술문명이 정신문화의 몰락을 초래하여 자본도 기술도 소멸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유물사관에서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온다고 한 예측은 소련이나 중공자신에 의하여 이미 무너졌으며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민족들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수정한 이상사회를 건설하여 가고 있음을 볼때 유물사관에 의한 역사의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증거를 들어 해명하여 주어야 한다.

한편 한국사의 연구가 아직도 미시적 입장에 선 실증사학에만 치중하는 나머지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개념화시키는 작업이 부진한 정도 였다. 한국사가 모든 방면에 인용되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역사를 보는 눈이 없이 아전인수적으로 이용된다면 이것 또한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 의식은 역사적 사실 하나 하나를 민족적 시야 또는 세계사적 시야에서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길러주도록 가르치고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습성을 갖도록 해야 할것이다.

3. 참고 문헌

森谷克己 "아시아적 生産方式論" 1937.

國民倫理硏究會 "勝共論" 1970.

이 기 백,　　한국사 신론.
위트 포겔,　　東洋社会의 理論
헤　겔,　　歴史哲学序説
막스 웨버,　　푸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
경제사학회,　　"한국사 시대구분론."

제 2 부

민 주 주 의

제1장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민주주의는 하나의 믿음으로 출발한다. 그 믿음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 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기본적인 가치를 토대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모든 하위가치, 개념, 이론들이 성립되고 있다.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에서 도출된 것이며, "자유"와 "평등"도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며, 입헌정치, 대의정치, 선거제도 등의 정치제도도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든 통치체제인 것이다.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과 제도는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인 이념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본 장의 주제들에서는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기본 이념과 가치를 이해하는 문제들을 취급할 것이며, 첫째 주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에서는 인간을 모든 것의 우위에 두는 기본 가치, 인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념, 개성존중, 최선아실현(最善我實現)을 위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등이 논의될 것이며, 둘째 주제 "인간의 기본권리와 자유"에서는 제일 주제에서 논의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또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권리와 자유를 규명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권리와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하겠지만 극단적인 개인의 자유는 사회를 혼란케 하는 무정부적 상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을 가출수 없게 될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개인은 자기의 최선의 실현을 위해 권리와 자유를 법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본장의 마지막 주제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서 취급하게 될 것이다.

I.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

1. 내용 개요

민주주의의 이념적 본질은 인간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믿는 신념에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며 이 기본적 가치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모든 하위 가치, 개념, 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정치학적, 경제학적, 심리학적 관점의 종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치체제, 법률, 경제체제 등은 결국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그리고 다음 주제에서 취급할 기본권리 등을 보장하고 더욱 신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주제의 강의 내용으로 우리가 신봉하는 헌법에 반영된 인간의 존엄성을 예로 들어도 좋을 것이다. 민주주의 신념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고전적인 대문헌인 미국독립선언서의 내용의 인용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났다. 그들은 창조주로 부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그 권리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정부를 조직하고 정부는 피통치자들의 승락하에 그들의 정당한 힘을 부여 받았다 . . . . "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폭 넓게 그리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의 개념으로, 혹은 인간의 기본권리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개성의 존중, 인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주제에서 인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의 개념은 따로

취급될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중복은 불가피 할 것이나 뒤에 취급된 것은 약하고 가장 핵심적인 요지만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개인의 존재가치를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 하고 개인의 복지를 최고 목표로 여기는 점이라 할 것이다.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설명하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 났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며 그 권리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의 인종, 문화배경, 소속하는 사회계층, 경제적 지위, 용모, 성별, 성격, 능력, 흥미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평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신념이며 각 개인의 본분대로 또는 원하는 대로 최대한의 자기 실현을 성취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그가 속하는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독특한 방법과 능력으로 공헌하고 참여하는데 기쁨을 느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신념인 것이다. 이러한 신념은 평등의 개념에 반영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이라 하겠다.

인간존중의 개념을 심리학적인 관점으로도 중요시 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행동에 관한 현대과학은 인간존중이 한 개인의 성장에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주는 것이며, 그것이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 개인은 창의적 성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며 이러한 가능성의 최대한의 발달은 외부로 부터의 구속이 가해지지 않을 때 가능한 것으로 믿는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인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민주교육의 기본 이념이기도 한 것이다.

창의적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개인이 그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자아실현의 과정에 필요한 여건은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여건인 것이다. 인간 유기체의 생리적 욕구가 그 유기체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정서적, 지적, 사회적, 성장 발달을 위해서 심리적 사회적 욕구의 충족도 필요한 것이다. 심리적 사회적 욕구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애정, 타인으로 부터의 인정감, 존경감, 성취감, 공포로 부터의 자유등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좌절에 부딛치게 된다면 인간이 지니는 성장가능성의 건전한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최대한의 자기 실현을 위한 인간의 기본욕구의 적절한 충족과 표현, 그리고 그 충족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어떠한 방해나 억압으로 부터도 자유로워야 할 인간의 권리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권위도 그것을 억압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것으로 믿는 신념이 민주주의의 기본 신념의 본질인 것이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자기 실현의 기회를 억압하거나 박탈하는 전제주의 사회나 독재주의 사회는 개인의 발달가능성을 억압하는 것이며 결국 그 사회 전체의 약화 내지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와 권리를 묵살하고 침해하고 억압한 사회나 국가의 운명이 길지 못했고 개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억압한 전제적 군주로서 끝끝내 영광스러운 승리와 존경을 받은자 없음을 역사적 사실을 들어 그 실증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사상이 발달되지 못한 시대의 사회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물건 값 만큼도 여기지 않았다.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못살게 굴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마구 부려 먹었고,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돈으로 팔고 사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무시하는 일은 비단 옛날만의 일은 아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에서의 개인은 국가라는 큰 기계에 따라 마지못해 돌아가는 부분품에 지나지 않으며 당이나 독재자의 내키는 생각에 따라 죽고 사는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기본 차이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신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에는 인간을 목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반면 공산주의는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 인간이 목적으로 대접을 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소중히 여긴다는 뜻은 인간을 신주 처럼 단상에 모시고 무슨 보물처럼 창고나 금고속에 잘 간수하여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밖으로 부터의 무리한 구속이나 억압, 제재를 받음이 없이 개인이 가진바 능력을 그리고 성장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그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생활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풍토와 기회를 제공하여 각자 자기의 자아실현을 가능하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생활과 활동은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사람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사용되는 수단으로 취급되는 한,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소수 당의 혹은 독재자의 목적달성을 위해 시민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흔

히 내세우는 목적은 국가적 전체적 이익이지만 그것은 내세우는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그 국가적 이익 내지 전체적 이익이란 집권파 소수의 이익이며 그 이익을 목적으로 전 국민을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국민 개인은 집권자나 소수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종의 구실만을 담당하는 것이며 인간 개인이 주인으로서의 대접과 존경을 받기를 원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 가치에 따른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부여 받기를 원하지 못할 것임을 이 강의에서 강조해야 할 것이다.

2. 교수방법

본 주제에 관한 강의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고, 개인의 존재가치를 존중하는 태도와 신념을 갖게 하여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신념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순서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본 주제의 초점은 공산주의와 비교하여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개념의 설명이나 민주주의 본질을 분석함에 있어서 공산나라의 실예를 제시함은 좋을 것이나 항상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제를 비교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자유, 평등, 권리, 책임 등의 개념과 결부시켜 설명함이 좋을 것이다. 권리와 자유 그리고 책임에 관한 것은 다음 주제들에서 다루어질 개념들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도 좋으나 설명의 편의상 뒤에 취급될 개념을 여기

서 간략히 언급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개념은 보다 추상적인 개념이고 권리와 책임은 보다 구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인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개념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설명함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주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평등이라는 개념과 결부시켜 설명함에 초점을 두고 헌법이나 미국독립선언서등에 반영된 기본정신을 본문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개념의 철학적인 해석과 아울러 심리학적인 의의를 규명하는 것도 쉬운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내용개요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창의적 성장가능성과 개성의 신장, 자아실현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가치관적인 신념과 또 실제 개인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이 허용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외부로 부터의 무리한 구속과 억압을 받게되면 건전한 개인의 발달, 저해되는 실예를 제시함은 좋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을 비교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신념을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로 삼고 있음에 반하여 공산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강조할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인간 개인을 목적으로 삼고 공산주의는 인간 개인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실예를 제시하면서 공산주의의 모순과 민주주의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대조적 실예를 현실에 중점을 두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예로 제시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역사적 혹은 현실적 문제를 취급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신념을 확대 혹은 축소시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요점은

언제나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신념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

(1)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목적으로서의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제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2) 모든 인간은 공적복지를 저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점.

(3) 모든 인간은 독립된 개인으로서 인정되고 개성이 존중되고 그들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4)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동등한 대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

(5)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

(6) 개인 내지 집단의 활동은 공적 복지와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 여서는 안된다는 점.

3. 참고문헌

(1) 오천석 민주주의의 참된 모습, 서울: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1968.
(第 "민주주의의 바탕되는 이념" pp. 67~88)

(2) 이극찬(역) 시민정부론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0.

(3) 차기벽, 제3장 "민주주의의 확립" 박종홍 유달영(편) 국민 윤리, 서울: 삼화출판사, 1970, pp. 125~140.

(4) Becker, Carl L. Moder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 press, 1942.

(5) Cohen, Carl (ed.),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The Theoretical Found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2.

(6) Dewey, John, A Common Fait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34.

(7) Ebenstein, W. et. al., American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1967 (chapter 1" democracy as a system of values" pp. 3~33)

(8) Laslltt, P. (ed.),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Oxfaird, 1956

(9) Mayo, H. B, An Introduction to Democratic Theor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0 (Two" the problem of difining democracy", pp. 21-34)

(10) Poper, Karl R. The Open Society and its Economics, 3rd. ed.) 2 vols., London: Routle-dge and Kegon paul, 1957.

(11) Rejai, M. Democracy: The contenporary Theories, New York: Atherton Press, 1967.

Ⅱ. 인간의 기본권리와 자유

1. 내용개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믿고 소중히 여기는 신념에 있다면 이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내지 생활원리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고 권장하는 것에 있다. 본장의 제일 주제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한말로 규정한 것이라면 본주제의 "인간의 기본권리와 자유"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주제의 강의 내용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이들 개념의 이해는 물론 실제 생활상태에서 구현되는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는 일에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구현하고 최선아 실현을 가능케함에 필요한 기본권리 중의 하나이다. 밖으로 부터의 부당한 구속이나 제재를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개인이 원하는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일치하는 생활원리인 것이다.

인간이 자기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자기에게 바람직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건강, 교육, 경제적 안정등도 필요할 것이나 그 중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이다. 자유없는 생활은 노예나 짐승과 같다. 자유없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도 없고 최선아

실현 (最善的實現)도 불가능 하다. 다시 말하면 자유없이 민주주의 기본 이념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자유란 개인의 사고, 의사표시, 행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상위자, 법률, 정부, 단체등 어떠한 외부로 부터의 통제로 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자유란 외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항거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제한의 자유, 즉 개인이 원하는 무엇이나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무제한의 자유는 실상 남의 자유를 구속하는 무질서한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유의 제한과 개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는 다음주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문제는 뒤에 취급하되 자유의 개념을 설명할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자유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도 문제되는 것은 행동의 자유이다. 즉 개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유이다. 그러나 개인이 행하는 행동에는 타인과 무관한 순전히 개인적인 사생활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행동도 있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사회 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행동도 있다.

사회와는 관계없는 사적인 행동, 즉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행동은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될 것이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 행동은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로 삼으려는 것은 사회적 의미를 갖는 행동의 자유 문제이다.

사회적 의미를 갖는 행동의 자유에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 진다. 즉 인간의 자격으로 누리는 시민적 자유, (자유개인 : The Free individual) 국가 성원으로 누리는

정치적 자유 (자유정부 : *The free government*), 그리고 생활을 하는 경제적 인간의 자격으로 누리는 경제적 자유 (자유경제 : *The free economy*) 로 나누어 진다. 이중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다음 장의 주제에서 취급될 것이기 때문에 약하고 여기서는 모든 자유의 기본적 자유인 시민적 자유의 문제만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 한다.

시민적 자유는 자유의 주체로서 개인이 누리는 기본권적 자유이며 이 기본권적 자유에는 인간의 생명, 건강 및 거주와 이동에 대한 위협이나 구속으로 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신체적 자유와, 양심, 신앙, 사상,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의미하는 정신적 자유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체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 중 타인과는 무관한 사적 그리고 내면적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나 이러한 내면적 자유가 외부로 표명되고 조직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때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정신적 자유는 결국 그 것이 외부로 표명되고 조직되는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의 문제에 집중된다. 그러나 자유라는 개념에서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는 개인 자신의 최선을 이룩할 수 있는 자유 즉 자유로이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러한 의미의 자유는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자유의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행동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도 있고 의식하는 행동도 있다. 의식하지 못하는 자유로운 행동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행동과 같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행동을 말한다. 목이말라 물을 마시는 행동은 자유로운 행동이기는 하나 이것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자유의 결정에 따라 행하는 행동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

유는 자기가 행하는 행동을 의식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개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가장 좋고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부로 부터의 구속이나 억압을 받음이 없이 의식적으로 자유를 행사할 때 자아의 최선의 생활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참된 자유의 가치를 구현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아의 최선의 생활과 성장의 자유를 실제 사회적인 상황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의사표시의 자유, 거주의 자유, 신상의 자유등 신체적, 정신적 자유가 요망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적 생활과정과 정치과정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모든 시민 개인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

언론 자유의 근본적인 신념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의견 중에서 가장 좋은 의견은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장려될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참된 의견은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살아 남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결사의 자유는 사회 성원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사회 내지 정부에 반영시키기 위한 수단의 구실을 한다. 이 때 결사란 일정한 공동 목적과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의사는 사회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같은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사회적 방법인 것이다.

민주국가의 법이 보호하고 장려하는 자유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누리는 기본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유로운 사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앙을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3)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출판을 할 수 있는 권리
4) 평화로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집회와 결사의 자유)
5) 부당한 압박에 대한 호소를 할 수 있는 권리
6) 범법자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권리
7)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
8)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9) 자유선거와 비밀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0)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11) 노사간에 정당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12) 자유경쟁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13) 계약을 자유로히 체결할 수 있는 권리
14) 정부로 부터 정당한 보호와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5)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 교 수 방 법

본 주제는 첫번째의 주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번째의 주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 에서 취급된 내용을 상기시켜 그 요지를 다시 명시한 다음 본 주제의 요지를 지적하며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최고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과 개인의 최선아실현 (最善我實現) 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생활원리를 본 주제에서 문제삼고 있음을 사전에 주지시킬 것이 요망

된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실현 없이 민주주의의 최고 이념인 최선아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며, 자유, 평등, 인권은 이 최선아실현이라는 최고 이념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자유, 평등, 인권은 민주주의의 최고 이념의 실현을 위한 수단 내지 조건, 혹은 생활원리인 것임을 강조해두어야 할 것이다. 흔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문제로서 자유와 평등을 민주주의의 근본적 이념으로 생각하는 오해를 풀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내지 최고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과 최선아실현이며 이 이념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 내지 생활원리로서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개념을 정의지우는 문제를 취급하기에 앞서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함에 있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중요성과 그 의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의 구현과 최선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가 보장되고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같은 대우를 받는 평등이 보장되고 각자가 갖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의의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 자유, 평등, 그리고 인권등의 개념을 풀어 설명해주는 순서로 본 주제의 내용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두 개념은 서로 상충(相衝)하는 면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만약 자유를 절대화하여 무제한의 자유를 추구한다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질서한 약육강식의 경쟁적 혼란으로 이끌것이고 이러한 곳에 평등은 있을 수 없게 되며, 반면에 평등을 절대화하여 만인을 강제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려면

개인차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자유와 평등은 서로 상충되는 면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상충적 현상은 그 것을 각기 절대시할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유와 평등을 민주주의의 절대적 최고 이념으로 여기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최선아실현이 라는 최고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조건이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 인권은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의 생활원리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관해서는 내용개요에서 간략히 언급하였으나 강사나름의 예를 들어 깊은 이해를 촉구함이 좋을 것이다.

시간이 허용되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신분적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봉건사회의 주종적 인간관계를 타파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개관하고 독재적 공산국가에 있어서의 자유탄압의 실정을 예를 들어 비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유의 개념을 설명한 다음 내용개요의 마지막 부분에 요약 제시한 인간의 기본 권리를 하나 하나 풀어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극히 간략히 요약된 내용이기는 하나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기본 권리는 실 생활에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장점과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공산국가의 국민생활과를 비교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생활모형 (生活模型) 을 토의의 형식으로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참고문헌

(1) Barker, E, principles of Soci l and political theory, London, Oxford univ press, 1967.

(2) Coker, Francis W (ed) Democracy, Liberty and Property, New York: The MacMillan, 1942.

(3) Hayek, F. A.,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0

(4) Hook, S, Political Power and Personal Freedom, New York: Criterion Books, 1959

(5) Pounds, R. L, & J. R. Bryner; The School in American society, New York: The Macmillan, 1959. pp. 424-427.

Ⅲ.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적책임

1. 내용개요

자유와 평등, 그리고 권리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며 생활원리임을 두번째 주제에서 취급했다. 또한 두번째 주제의 내용에서 무제한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한바도 있다.

본 주제에서는 주로 자유의 제한과 그 의의를 규명하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건전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관계에서 지켜야할 사회적 태도의 형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극단적이고 무제한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파괴하는 결과가 되고 무질서한 무정부적인 혼란한 사회를 야기하는 결과가 된다. 극단적인 자유는 다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개인은 누구나 같은 정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생활원리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무제한의 자유와 권리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에게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공동생활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타인과 어울려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특정 개인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나아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하여 자유는 제한되며 통제된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자유의 제한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국민 개인에게 같은 정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이며 결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억압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하는 자유의 제한은 이미 지적한바 있듯이 타인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 행동에 국한된다. 따라서 타인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한 사적 행동은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된다. 사회적 의미를 갖는 행동에 한해서만 제한과 통제를 가하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통제의 원칙이다.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통제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로 흔히 논의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제, 결사의 자유에 대한 통제, 그리고 경제적 활동에 대한 통제등을 들수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건임은 전 주제에서 밝힌바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지나쳐 타인의 존엄성을 손상한다든가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파괴한다든가, 사회의 미풍을 더럽힌다든가, 또는 민주주의적 이념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민주주의적 사회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만인의 자유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 내지 통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사의 자유에 대한 통제도 어떤 결과 내지 단체가 조직된 힘으로 개인이나 다른 단체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민주적 질서를 교란 내지 부인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가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제적 자유 역시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 이외에

만인이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물질적 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에 의한 통제는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으나 통제하는 정도의 방법에는 어려운 문제가 수반된다. 어느 정도의 자유의 허용과 어느 정도의 통제가 개인의 존엄성을 손상함이 없이 만인을 위한 보호조치로 규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설정이 크게 문제 된다.

통제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국민을 억압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러한 악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여 자유를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통제 방법인 것이다.

정부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로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는 법적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법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이나 집단에 가하는 법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집회나 출판의 허가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부로 부터 받게하는 조치는 첫번째의 방법에 속하는 통제방법이며 법의 제한을 위반한 언행에 대해서 벌을 가하는 것은 두번째 방법에 속하는 통제방법이다. 사전통제 방법과 사후처벌 방법중 전자의 방법이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해석하여 정부에 그 통제의 한계를 엄격히 규정해 주도록 조치하고 있다.

사전에 언론, 출판, 결사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 의사의 자유는 전혀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되며 허가를 해 줄 담당관의 해석 여하

에 따라 부당하게 그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게될 우려가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사후 처벌의 방법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위법성을 판가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편견에 의한 부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게 된다.

본 주제에서 언론, 출판, 결사, 그리고 정치적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도 없고 또 고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 구체적인 문제는 법률의 문제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법률이 규정하는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소개할 수도 있는것이나 이러한 문제는 본 주제의 범위에 넘어서는 것으로 제외 된다. 다만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자유와 인권의 보호에 있는 것이나 사회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과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만인이 같은 정도의 자유와 권리를 부여 받고 있으며 또한 동등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사회와 정부가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개인의 언행을 통제하는 것이다.

개인은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과 동시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행동에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인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1)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적성아 실현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2) 사회의 도의와 규범에 벗어나는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3) 개인이 지닌 잠재능력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그 개인의 행복한 생활을 추구함은 물론 그의 모든 재능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4) 개인은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의 질서와 복지를 손상함이 없고 또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5) 국가의 비상시에 국가의 안전을 위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함에 적극 노력 해야 한다.

6)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에 있어 개인간 혹은 집단간에 협동과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나 정당한 방법에 의한 선의의 경쟁을 택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7) 사회사정에 정통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공헌할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2. 교수방법

본 주제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지워 주고 개인이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인식케 하여 최선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물론 사회의 질서와 복지,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봉사와 협동의 정신을 육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적 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의 태도를 육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두번째의 주제에서 취급된 내용을 간략히 상기시켜 민주주

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유와 권리의 보장과 신장의 중요성을 지적하되 민주주의는 무질서한 자유방임주의나 무정부상태의 사회나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본 주제를 취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제로 당면하는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자유와 통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면서 사회의 질서와 복지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그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며 완성된 기성품(旣成品)을 얻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남에게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그 것은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항상 돌보고 가꾸어야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한 시대 한 사회의 여러 여건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정도의 차이를 갖는다.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서도 완성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는 없다.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비민주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그들도 수세기에 걸쳐 여러가지 여건을 개선하면서 이룩한 노력의 결과 그 정도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실정을 이해케 할 필요도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신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기본적 조건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질서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에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본 주제의 내용에서 지적한바 있다.

자유와 통제를 조화시키는 문제는 국가의 사회적 실정과 크게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의 선진 민주국가의 예를 기

준으로 자유와 통제의 조화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실정에서 초래하는 자유와 통제의 조화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이념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그 이념구현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자유와 통제의 조화문제를 사회여건과 관련하여 논의됨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본 주제의 내용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그 하나는 사회의 질서와 복지,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에 통제를 가하는 경우이다.

사회의 질서와 복지,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개인 내지 집단의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본문에서도 충분히 설명한바 있고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경제활동에 통제를 가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다소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 자유는 개인적, 지역적 빈부의 격차를 크게 조장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빈부의 차이를 순전히 개인의 책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사회문제여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보호와 간섭을 요청하는 소리가 높아져 종전의 "국가로 부터의 자유" 에서 "국가에 의한 자유"를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에 의한 자유" 라고 해서 국가가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되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위한 참정권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은 아니며 국가는 다만 전통적인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최선아실현을 위한

물질적 경제적 제 조건을 보장한다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다.

자유 국가에 있어서도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관여와 기능을 확대시켜 국가는 경제계획을 통한 기본적인 경제 정책과 생산 및 유통면만이 아니라 소득과 분배면에 까지 관여하여 경제적 자유에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적 자유의 국가에 의한 통제로 인하여 확대되고 있는 국가의 권력이 경제적 자유 이외의 기본적인 자유마저 침해하게 될 우려를 예상할 수 있으나 국민에게 주어진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인 참정권으로 정부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독재로의 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 할 문제는 국민 개인이 민주시민으로서 져야 할 의무와 책임문제인 것이다.

질서있고 안정된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에 제한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져야 할 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할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의무와 책임의 예를 본 주제의 내용개요의 끝 부분에 소개한바 있다. 그 밖에도 보다 구체적인 언행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참고문헌

(1) Becker, Carl, *Freedom and Responsibility in the American Way of Life*, New York : Knopf., 1945.

(2) N.E.A., _The Education of Free Men in a Democracy_, Washington: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941;

第2章 民主的制度와過程

민주주의의 정치 및 경제 제도는 전장에서 논의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실제적 통치체제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믿는 신념과 그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통치 제도의 양측면에 의해서 규정된다. 민주주의는 이념을 중요시할 뿐 아니라 이에 못지 않게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또한 중요시 하는 것이다.

이념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과 과정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면 민주주의의 뜻은 상실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제1장에서 취급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그리고 그 실현과정등의 문제를 취급하게 된다. 첫째 주제 "정치적 신념과 정치제도"에서도 먼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일치되고 정치제도를 도출케한 기본적인 정치적 신념인 "개인의 자치적 능력에 대한 신념," "주권재민에 대한 신념," "법에 의한 통치"등을 규명하고, 이러한 신념을 토대로한 제도로서 입헌정치, 삼권분립, 대의정치등의 내용이 논의될 것이다. 둘째 주제 "개인의 정치에의 참여와 정치과정"에서는 제도의 운영과정과 개인 및 단체의 정치과정에의 참여의 의의를 규명하게 될 것이다.

이 주제에서 다루어질 문제는 선거, 정당, 다수결 원리, 여론형성과정과 토의과정등이며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의 역할등이 분석될 것이다.

행사하는 방식을 규정해 주는 것이다. 이 민주적 정치방식은 전 국민의 의사가 가능한 한 잘 반영되도록 하려는 제도로 구체화 된다. 입헌(立憲)제도, 삼권(三權)분립제도,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등이 그것이다.

민주국가의 정치제도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은 민주적 정치제도의 기본 요건인 것이다. 헌법에 따른 통치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입헌정치이며 이 입헌정치제도가 민주주의의 정치제도의 본질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말은 입헌정치는 종전의 소수 특수층의 "인간에 의한 정부"에 "법에 의한 정부"를 대치함으로써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 인간적 자의(恣意)의 남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치 제도의 필요소건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뜻이다. 입헌주의를 민주주의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공산국가인 소련도 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입헌주의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의 존재 여부로 민주적 혹은 비민주적 국가를 판가름할 수 없고 문제는 헌법의 내용인 것이다. 민주적인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고 헌법에 규정된바에 따라 그 제도가 유효하게 운용될 때 입헌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입헌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가 표명되고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필요로 한다.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근대 민주국가가 택하고 있는 정치제도는 정부를 운용할 사람 代表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간접 민주정치 내지 대의정치(代議政治)의 방식인 것이다.

대의 정치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그들의 대표기관을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 내지 국가의 의사를 결정、집행하게하는 정치

제도라 할 수 있다. 대의 정치의 중핵은 국회(國会)인 것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입법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입법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의미에서 국회가 대의정치의 중핵을 이루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행정부의 수반도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이기 때문에 행정부도 대의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제도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의의도 바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삼권분립론을 완성시킨 몽테스키우(Montesquieu)는 권력을 장악한 자는 그것을 남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의 셋으로 분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국가의 권력을 삼권으로 분리시켜 서로 견제하고 또는 서로 보완하는 기능을 갖게 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정치제도는 소수의 인간의 자의(恣意)에 따른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입헌제도, 국민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대의제도,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표에게 주어진 권력을 서로 견제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삼권분립제도 등을 갖는 것이다. 이들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는 다음의 주제에서 취급될 것이기 때문에 본 주제에서는 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정치적 신념과 정치제도에 관해서만 개관한 셈이다.

2. 교수 방법

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여러가지 요소 중에 민주적 정치

제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흔히들 민주주의를 민주적 정치제도와 동일시 하려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나 정치제도의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 까닭은 정치제도에 의해서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운동시합의 목적이 무엇이던 간에 그 운동시합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 시합의 운영방법이 크게 문제가 된다. 그 운영방법 여하에 따라 운동시합의 원래의 목적이 잘 실현될 수도 있고 전혀 목적한바와 다른 방향으로 시합이 운영될 수도 있게 된다.

운동시합의 운영방법이 마치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치제도에 해당된다. 아무리 좋은 이념이라 하더라도 그 실현을 위한 방법과 도구인 정치제도가 잘못되는 경우 그 이념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제도는 어디까지나 방법이기 때문에 제도를 이해하기에 앞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이념에 투철해야 하고 또한 이 기본적인 이념에서 도출된 정치적 신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주제의 처음에 민주주의의 정치적 신념을 규명하려 한 것이다. 여기에 제시한 기본적인 신념의 요지를 여러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자치 능력에 대한 신념, 국민에 의한 정치사상, 자연법, 사회 계약론에 대한 이론등 여러 학자에 의하여 제시된 이론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이론을 구현하기 위한 역사적 과정을 실예를 들어 설명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과정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의 당위성 여부에서 보다 그

실제적 구현 방법에 관해서 논박이 많았고 투쟁도 많았던 사실을 들어 민주주의 이념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의 확립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며 현재 민주국가에서 택하고 있는 제도는 현존하는 제도 중 최선의 것임을 다른 독재주의 국가의 것과 비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제주의나 독재주의와는 대조적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방법과 절차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정치제도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요시 여기는 것이며 제도와 그 제도의 운영여하는 민주주의 사활적(死活的) 문제가 결정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누구에게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스스로 가꾸어 가는 것임을 명시하게 하고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케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 주제에 계속 취급될 것이다.

3. 참고 문헌

1) 오병헌(역), 20세기의 정부와 정치, 사상계사, 1962

2) 차기벽. 제2절 "민주주의의 제도와 실제" 박종홍·유달영(편) 국민윤리, 삼화출판사,

1970, P.P. 140~154

(1) Appley, Paul. Policy and Administration, university, Alabama: Univ, of Alabama press, 1949

(2) Backer, E. Reflections on Govenment, London: Oxford Univ, press, 1953

(3) Ebenstein, W. et al, American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1967.

(4) Holcombe, Arthur N. The Constitutional System, chicago: scott, Foresman, 1964

(5) Hyneman, C. S. Bureaucracy in a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1950

(6) Mayo, H. B. An Introduction to Democratic Theor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0.

(7) Pounds, R. L. and J. R. Bryner, The sclool in American society, New York: The Macmillan, 1959, pp. 424-42

(8) Pritchett C. H. The American Constitution, New York: McGraw-Hill, 1959

(9) Stein, Harold (ed)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 Brace & would, 1952.

Ⅲ. 개인의 정치참여와 정치과정

1. 내용 개요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지향하는 이념도 중요하지만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전 주제에서 지적한바 있다. 민주정치의 성패는 민주주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그 제도의 운영과정 여하에 달려 있다.

제도에 관해서는 전 주제에서 논의했고 그 제도의 운영과정과 개인 및 집단의 참정문제를 취급할 본 주제에서는 선거, 국민의사를 형성하는 여론, 정당, 다수결의 원리, 이익단체등의 참정과정과 개인 및 집단의 참정에의 책임등에 관해서 논의 할 것이다.

민주정치의 기본 신념은 국민 개인의 자치적 능력을 믿는데 있으며 외부로 부터 주어진 혹은 소수인에 의하여 완성된 좋은 정치 보다 미완성된 자치적 정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또한 국민에 의한 정치가 민주정치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점등을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근대 민주국가가 택하고 있는 방법은 국민의 직접적 참여가 아니라 대표에, 그리고 국민에 의한 권력의 직접적 행사가 아니라 권력을 대표에 위임하는 대의정치제도인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자치적 권리를 대표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성패는 정부의 대의성에 달려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입법부의 의원이나 행정부의 수반이 어느정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또한 국민의 의사를 어느정도 반영시키느냐가 민주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나 권력을 위임하게 될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이 선거인 것이다. 선거제도는 그 존재 유무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집약 표시하여 대표를 선출하느냐의 선거과정이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국민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정부에 반영시킬 수 없고 국민의 의사가 조직화될 때 가장 효과있게 정부에 반영된다. 국민의 의사를 조직화하여 정부에 반영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가 정당인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통합하고 이를 정부에 반영케하는 역할은 정당이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은 대의정치제도의 실제 운영과정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의사는 다양하고 또 그 다양성을 권장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선거 때 국민의 선택 범위가 넓을 수 있어야 하며, 이러기 위하여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복수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복수정당제도는 민주정치의 필요 조건으로 요구되는 까닭은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의 선택의 범위를 확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산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일당제 국가의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한 대의적 성격을 가지기 보다 정부의 독재성을 은폐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통합하고 이를 정부에 반영케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사회와 국가, 국민과 정부의 사이를 이어주는 조정자 내지 중재자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당는 주체적으로 국가정책이 의거해야 할 기본강령과 이를 수행할 의무들을 유권자에게 제공한다.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대의제도는 국민의 의사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복수정당과 국민이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맞는 정당의 강령과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리고 국민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이 정부를 통제 내지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대의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정부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국민에게 대해서 지는 정부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정부가 어느정도 잘 수행하느냐를 국민이 지켜보고 통제 내지 견제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선거를 통해 정권의 교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에게 보유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산국가와 같은 일당체 국가의 선거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권교체의 권한이 국민에게 실제로 주어져 있지 않는다.

민주국가의 대의정치를 운영하는 기본원리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의 권리를 대행할 대표를 선출하는 대표의 원리와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통합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다수결의 원리이다. 대표의 원리란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통합하여 국가의사로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수결의 원리도 다양하고 상이한 국민의 의사와 주장을 통합하여 국가의사로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원리는 국민의 의사를 통합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민이 갖는 의사나 주장은 다양하고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국가의사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과 주장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된다. 다수의 의견과 주장에 따라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수의 의견과 주장은 부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소수의 의견보다 질적으로 탁월하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소수의 의견이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 각자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토론을 통한 여론의 조성이 필요한 과정인 것이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서로의 상이한 의견과 주장을 교환하고 설득과 타협, 이해와 양해, 그리고 협동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토론을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또 남의 의견을 경청하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며 이렇게 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은 민주적 정치과정에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것이며 중요한 교육적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토론은 국민 스스로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적 과정인 동시에 이를 통하여 다수의 의견을 형성해가는 민주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다수의 의견은 질적 우위성이 지배하는 새로운 의미의 의사로서 존중하여져야 하는 것이다.

토론은 다수결의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과정이며 토론 과정의 성격에 따라 다수결은 민주적일 수도 있고 비민주적일 수도 있게 된다.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곳에 있어서의 다수결은 도리어 독재나 소수 지배를 위장하는 절차에 불과하게 된다.

공산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수결은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당제의 공산당의 독재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집약하여 국가 의사로서 정부의 시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다수 정당이 민주 국가에서 허용되고 장려되지만 정당만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대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민주 국가에서는 다양한 이익단체들이 생기게 된다.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규합하고 정부의 정책에 그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정당과 정치적 이익단체는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부에 반영하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나 정당은 대표자의 선출에 주된 관심을 갖는 반면 이익단체는 정책에 주된 관심을 갖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 국가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조직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욱 신장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그들의 주장을 반영하도록 집단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그들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다른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과 토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공산 국가에서도 다양한 이익단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이 담당하는 역할에 있어 민주 국가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민주 국가의 이익단체는 국민의 의사와 주장을 정부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반하여 독재 국가에서의 이익단체는 정부의 시책을 국민에게 주입케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하면 독재 국가의 이익단체는 독재자 내지 정부의 피리노릇을 하는 것이며 국민의 편에서 있기 보다 정부의 편에 서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양한 이익단체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노동조합, 부인회, 종교단체,

각종 자원단체, 의사회, 약사회, 예술인 단체등 각종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단체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주로 직종별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하여 정부에 대해서 압력과 통제를 가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익단체를 흔히 압력단체라고도 불리어진다.

이미 시사한바 지만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정치적 과정을 원활히 이수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지 집단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중요해진다. 본 주제의 마지막 문제로 개인 내지 집단이 민주적인 정치적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할 책임 문제를 간결히 구명해 보기로 한다.

첫째, 국민 각자는 사회적 문제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해지는 정책등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계속 노력해야할 책임을 갖는다 국민이 사회문제와 그 문제해결을 위해 취해지는 공적조치에 전혀 무관심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정보에 의한 이해의 기반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정치과정의 운영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사회문제에 관한 국민의 의사가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문제에관한 정확한 정보에 처한 의사라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의 원리인 "국민에 의한 정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느냐의 문제에 앞서 그 의사가 어느정도 정확하고 정당한 것이냐가 문제된다.

앞서 지적한바 있듯이,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의 소수인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주주의는 허울만의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국민 스스로가 가꾸고 만들어 나가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라면 민주정치를 어떻게 가꾸고 만들어 나가느냐는 어느 특정인에 책임이 있기 보다 국민 각자에 그 책임이 있게되는 것이다.

둘째, 국민 각자는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정당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 의견들을 집약하여 국민의 권리를 위임한 대표들에게 전달하고, 그들 대표들을 통하여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첫번째의 문제는 의견을 제시하기 이전의 문제라면, 이 둘째번의 문제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사를 반영케 하는 것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세째,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집단적인 의사를 집약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토의의 과정을 중요시 여기며 합의된 다수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책임을 개인 및 집단은 져야 한다.

네째, 정치적 권력을 위임할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적극 참여할 책임을 국민 각자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섯째, 국가적인 비상시에는 정부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지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할 책임을 국민 개인은 져야 한다. 국가적인 비상시라 함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야기된 시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앞서 국가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바에 의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우선적으로 중요시 해야 하며, 정부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여섯째, 법에 순응하고 불의(不義)를 교정할 때라도 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할 책임을 개인 및 집단은 져야 한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의사와 행동을 존중하되 부당한 행동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인 및 집단의 행위의 부당성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규탄되게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특징이다.

2. 교수 방법

본 주제에서 강조되어야 할 요지는 민주주의 제도의 실제적인 운용과정의 중요성과 제도의 운영 과정에 개인 및 집단이 참여하여 담당하는 역할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개인 및 집단이 져야 할 책임등을 규명하는데 있다.

본 주제의 내용개요에서 먼저 정치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대 민주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 했다.

즉 선거, 정당, 여론 형성과 토론, 다수결, 이익단체의 역할과 기능등에 관하여 극히 개략적인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에 따라 내용에서 제시한 개념의 설명에 보충되어야 할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강조되어야 할 요지는 제도의 운용과정의 중요성이며, 나아가 민주국가의 정치제도와 공산국가의 정치제도와의 비교도 전 주제에서 취급되었을 것이나 제도 자체의 비교 보다 그 제도의 운영과정의 비교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공산국가에서 택하고 있는 정치제도는 민주국가의 것과 유사한 점도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차이는 그 제도의 운용과정에 있음을

명백히 해야할 것이다

제도의 운영과정 여하에 따라 제도의 민주성과 비민주성이 결정된다는 점과 민주국가에서는 이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그 제도의 운용과정을 동일하게 중요시하는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강의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점은 제도의 실제 운용과정에 참여하는 개인 및 집단의 책임 문제이다. 내용개요의 마지막 부분에 개인 및 집단의 책임을 예시하긴 했으나 그것만으로 국한된 성질의 것은 아니며 내용개요에 소개된 전과정에서도 개인 및 집단의 역할을 시사할 수도 있을 것이며, 보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제도의 실제 운용 과정의 효율화를 위해 져야할 책임의 문제를 부각시켜 충분한 이해와 의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강의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3. 참고문헌

(1) Berman, D. In Congress Assembled :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Government, New York : Macmillan, 1964.

(2) Davies, A. C. Human Nature in politics, New York : Wiley, 1963

(3) Duverger M. political parties : Their Organization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New York ; Wiley, 1956

(4) Key V. O. Jr. The Responsible Electorate, Can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1966

(5) ———, Politics, Parties and pressure Groups. New York: Crowell, 1964

(6) Lane, R. E. Political Life, New York: Free-press, 1959.

(7) Lazarsfield, paul F. and others,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48.

(8) MiLbrath, L. W. Political participation Chicago: Rand Mcxlally, 1965.

(9) Schramm, W. process a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s, Urbana, Ill : Univ. of Illinois press, 1965.

(10) Truman, D. The Govermental Process, New York : Knopl, 1951

(11) Zeigler, H. Interest Groups in American Society, Englewood ceiffs, N. J. : prentice Hall, 1964.

Ⅲ. 자유경제 체제

1. 내용 개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는 따로 분리될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나 그 분량과 중요성에 비추어 경제체제를 따로 한 독립된 주제로 취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의 경제체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등과 연관시켜야 할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본 주제의 내용은 주로 경제체제에만 국한시킬 것이며, 또한 본 주제에서는 경제체제의 제반에 걸친 문제를 다 취급하지 못하며 다만 그 기본적인 원리에만 국한되고 있음을 미리 지적해 둔다.

민주국가의 경제체제를 흔히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알려져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 원리는 자유 경제에 두고 있다. 자유 경제의 기본 정신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개인의 "행복추구(The pursuit of happiness)"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권장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최선의 실현"과 일치되는 경제적 활동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정치제도의 기본 원리도 개인의 자치적 능력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 체제의 기본원리에 있어서도 개인이 자기 행복추구를 위한 능력과 노력을 믿고 이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권장하게 되면 개인의 복지향상은 물론 국가적 수준에서의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

라는 기본 가정을 민주주의는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가정이 입증되고 있는 실례를 현재 민주국가들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여건을 가진 서전 (Switzerland) 이나 노르웨이 (Norway) 같은 나라는 자유와 법에 기초한 민주적 경제체제에 의하여 높은 수준의 경제생활을 발전시킨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민주적 정치제도나 경제체제는 개인의 복지향상과 경제성장을 위한 여건을 제공하기는 하나 보장하지는 못한다. 경제성장은 다른 많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 보장만으로 경제성장을 보장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인구의 증가, 종교, 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교육등이 경제성장에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경제체제나 민주적 정치체제만으로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를 가진 인도의 경제성장이 보잘것 없게된 까닭은 정치적 제도나 경제체제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구, 종교, 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민주적 정치제도와 자유경제 체제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좋은 예는 이차대전 후의 서독과 일본이다. 그들의 역사에 있어 과거에 있었던 전체주의적 정치체제에서 보다 대전후 택한 민주적 정치제도와 자유경제체제하에 그들의 경제성장은 크게 촉진된 것이다. 흔히 이들 두나라의 경제성장을 "경제적 기적"이라고들 하지만 우연한 기적은 아니며 그들의 경제적 기적은 오직 민주적 정치제도와 자유 경제의 기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남북으로 양단된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 경제체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전 주제에서 지적한바 있듯이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기본적 자유는 크게 분류하여, 시민적 자유, 정치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의 셋으로 나누어 진다. 이들 자유는 영역에 있어서 분류된 것이며 기본적인 이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 임을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서 설명한바와 같다.

다만 여기서 좀더 설명해 둘 것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발달된다.

그러나 하나의 자유가 다른 자유를 결정하는 그러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는 단정지을 수도 없지만 민주국가들의 발달과정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강화 보완하게 하고 또한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강화 보안하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양 측면의 자유가 육성되어 온 것이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고 결과라는 그러한 관계를 성립시킬 수는 없지만 두 자유는 같은 이념과 가치, 그리고 태도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상보적 관계를 가지면서 발달되는 것이다. 그 같은 기반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과 최선의 실현에 대한 신념인 것이다.

이를 다시 경제적인 의미로 풀이하면, 개인은 자기의 행복추구를 위해 무엇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능력과 노력을 믿는 것이 자유 경제의 기본 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대한 법의 규정도 이러한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파생되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란 모든 개인이 자기의 원에 따라 일하고 일해서 얻

은 재산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소유하고, 그 재산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자기가 노력하여 얻게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해주고, 이에대한 저축, 교환 및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할 때, 그 개인은 일에대한 보람과 행복추구에 대한 보람을 갖게되고 안정된 생활의 기반위에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최선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개인 재산권 내지 사유재산권의 보장은 영리 추구의 자유에 기반한 경제활동의 기본 원리가 되어, 자본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정당한 법적 절차없이 개인의 사유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 범죄에 대한 처벌의 경우 이외에 개인을 강제노동 시킬 수 없다
- 정당한 보상없이 개인의 재산을 공유로 사용할 수 없다
- 국민의 합의 (국회의원 대다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없이 세금을 가할 수 없다

사유 재산권

- 개인은 토지, 가옥, 재산, 화폐를 자유로히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 개인은 자연자원과 생산수단을 자유로히 소유할 수 있다.
- 개인이 자기의 재산을 그가 자유로히 택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개인은 공중위생, 안전, 질서, 공익등 공공복지를 침해하는 일에 그의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의 특권

- 개인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또한 자유로히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 개인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지시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다.
- 개인은 자기의 자의로운 선택에 의하여 저축하고, 소비하고, 또한 투자할 수 있다.
- 개인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개인은 자기의 생각이나 발명에 대하여 특허 및 출판권의 보장에 의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개인 노동의 특권

- 개인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직업을 가지고 노동할 수 있다
- 개인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가졌던 직업을 포기할 수 있다
- 개인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경제적 조직과 단체의 권한과 책임

- 사용주나 노동자는 자유로운 방법에 의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을 형성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이나 기업협회는 그들의 단체 운영을 위해 기금을 모을 수 있다.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대표를 통하여 사용주와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흥정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쟁의 또는 파업할 수 있다.
- 사용주나 노동자는 그들의 조직된 권력으로 매매를 구속할 수 없다.
- 사용주나 노동자는 국가의 안전, 질서를 문란케하는 일에 그들의 조직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2. 교수방법

본 주제의 강의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민주국가에서 허용하고 장려하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공산국가에서의 경제활동의 통제를 비교하는데 있다.

그러나 본 주제의 내용에서는 공산주의의 경제체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주로 민주주의의 자유 경제체제의 기본적인 요지만을 요약 제시한 것이다.

공산주의의 경제체제에 관해서는 다른 주제에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주제에서는 약했으나 실제 강의에서는 민주국가의 경제와 공산국가의 것과 비교하여 민주주의의 자유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이

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체제에 있어서 양 진영간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지는 안했으나 자유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통제하의 경제성장과 자유 경제하의 성장을 몇 나라의 실제를 예시하였다. 물론 자유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의 경제 현상을 전문적인 경제 이론의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나 양진영 국가의 경제 성장의 현실을 분석 제시하는 편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강사의 전문적인 식견에 따라서는 이론적인 비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제를 달리하여 본시 에서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요약 제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 경제체제의 기본적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 기본 이념과 자유 경제의 기본 원리와를 연결시켜 이해시키는 일는 중요하다. 이러한 설명을 위해 본 주제의 내용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경제 활동의 기본 원리에 관해서 간략히 언급했으나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실례를 제시하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주제의 내용 개요의 마지막 부분에 요약 제시한 경제 활동의 자유에 관해서도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주제의 강의에서 주의를 기우려야 할 점은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와의 비교와 그리고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경제활동의 통제에 관한 것이다.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와의 관계를 어느 하나가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라는 인과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없으나 상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발달 과정을 밟고 있음을 내용 개요에서 지적한바 있다.

개인의 자치적 능력을 믿는 정치적 신념에서 출발한 정치제도나 개인의 복지추구를 위한 능력을 믿고 이를 최대한으로 허용하고 장려하는 경제적 신념과 제도는 모두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최선아 실현의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도 앞서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초기단계에는 국민의 관심은 주로 국가의 간섭을 배격하기 위한 정치적 자유의 추구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치적 자유의 쟁취와 더불어 개인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요구하게 된 것이 서구 민주국가의 발달 과정이였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은 종전의 "국가에의 자유"에서 "국가에 의한 자유"를 추구하기에 이르고 있다.

경제적 자유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으로 간주되는 삼대 자유의 하나이다.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최선아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나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게 되는 필요성과 그 통제의 한계등에 관해서 전 주제에서 논의한바 있다.

최근 민주국가에서 취하는 자유의 통제 중에도 경제활동의 통제를 중요시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가능한 한 많은 자유를 부여해야 하지만, 자유방임의 상태에서는 만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없고 또한 자유의 외적 조건으로서의 기본적인 경제적 여건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통제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성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허용하게 된 결과 자본주의적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게는 되었지만 빈부의 차이를 크게 초래하게 되었다. 경제적 자유에 통제를 가해야할 필요성에 이론적 근거를 정립한 토마스 힐 그린 은 만인이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도모하게 하기 위한 외적 조건으로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국가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보호와 간섭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는 국가권력이 개인 생활에 간섭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면서 개인의 기본적 인권(시민적 자유)과 참정권(정치적 자유)은 민주주의의 이념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로서 확보하고, 국가는 다만 전통적인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여 개인의 최선의 실현을 위한 물질적인 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간섭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가 점차 확대되어 오늘날 민주국가들은 경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그의 추진을 위해 경제적 자유에 대한 통제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제 활동의 통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최선의 실현을 위한 외적 조건의 보장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것이며 국가권력의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의 제한과 통제의 의미와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민주국가의 경제 계획 및 정책과 경제 성장, 그리고 저 소득층에 대한 시책,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 등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의의와 실제를 분석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3. 참고문헌

1) Anderson, J. E. Politics and the Economy, Boston : Little, Brown, 1966

2) Arnold, T. W The Folklore of Capitalism, New Haven : Yale Univ press. 1937

3) Beard, C. A. The Economic Basis of politics, New York : Knopf, 1922

4) Bernstein, P. L. The price of prosperity. Garden City, N. Y. : Doubleday. 1962

5) Friedman, M. Capitalism ed Freedom,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2

6) Schemseter, J.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 Harper & Row, 1942

7) Shonfield, A. modern Capitalism : The changing Balance of public and private power,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65

제 3 장 민주적 생활양식

민주주의는 정치형태나 경제체제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나 경제가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논할 때 흔히 정치양식과 경제양식에 결부시켜 그 뜻을 밝혀려 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나 경제는 사회생활의 일부에 지나지 않은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정치 형태나 경제체제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부분만을 보는 결과가 된다.

민주주의는 생활 원리이며 이 원리가 모든 생활양식에 구체화됨으로서 민주주의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민주사회의 성격을 규명하고 다음에 개인적 차원에서 민주적 인성과 태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갈등의 소재와 그 해결과정에 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본 장의 첫째 주제

"민주사회의 성격"에서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성격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둘째 주제인 "민주적 인성과 태도"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개인의 자질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장의 마지막 주제인 "갈등의 건설적 해결"에서는 문제의 소재와 그 해결과정등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I.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1. 내용 개요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나 경제체제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만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정치생활이나 경제생활은 사회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를 갖춤으로써 만이 참된 민주주의 사회를 성립시킬 수 없다.

앞 주제들에서 지적한바 있는 정치 및 경제 제도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통치체제인 것이나 이들 제도는 국민 개개인이 민주적 생활원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만일 국민 개개인이 민주적 생활원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체제나 제도가 아무리 민주적인 것이라 해도 허울만의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실을 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사회체제는 사람이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된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며 가정에 따라 사람이 실제로 행동하게 될 때 그 체제는 명실공히 산 체제가 된다.

형식적인 정치체제나 제도는 민주적이면서 실제 생활양식은 극히 비민주적인 나라가 있다.

공화국이라는 이름과 민주적 이념을 담은 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재정치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를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민주적 생활양식이 지배적인 나라인 영국, 미국, 네델란드등은 각기 다른 형태의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정치제도면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규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형식적 제도보다 생활양식이 민주주의의 사활(진경)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민주적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게하는 처지이나 그 자체가 민주적 사회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다.

민주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민주적 사고와 행동을 하고 민주주의 이념이 국민의 전체 생활양식에 반영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민주 사회가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뜻이 정치제도에 국한되어 해석되지 않고 범위를 넓혀 국민의 생활양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이념이 국민의 생활 전체를 이끄는 원리가 되고 신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생활 원리가 개인의 사고 행동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는 생활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과 최선아실현에 있음을 처음의 주제에서 지적한바 있다.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관점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인간관계 원리인 것이다.

사람이 남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사회의 생활은 달라진다. 사람은 누구나 귀중한 것이며 사람의 가치는 어떠한 다른 가치와도 바

꿀 수 없는 지상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사람에 대한 태도나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면 누구나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는 동등한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사회계층이 낮다고 사람을 천시하거나 여자라고 무시하거나 어린이를 어른의 부속물로 생각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업신여기거나 하면, 이러한 곳에 인권의 존중이라든가, 사람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곳에 민주 사회가 이룩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민주 사회는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유와 평등을 기둥으로 하는 사회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민주 사회의 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 특성을 몇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능력을 믿는 사회

(2)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3) 다원 (多元) 사회

(4) 자율적 활동이 존중되는 사회

(5) 지성 우위의 사회

(6) 과학적 실험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존중하는 사회

(7) 협의와 협동의 사회

(8) 다수와 소수가 다 같이 존중되는 사회

(9) 공공의 복지를 위하는 사회

(10) 공개사회

(11) 법이 다스리는 사회

(12) 진보적인 사회

여기에서 지적한 민주 사회의 특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기본적인 믿음으로 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바 있다. 그 믿음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념으로 개인의 최선아실현을 위한 능력, 개인의 자치적 능력,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능력을 민주주의는 믿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위에 민주 사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여기에 유의해야 할 점은 인간, 사람, 개인등으로 표현된 개념의 해석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사람은 특수한 몇몇 개인을 일컫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특수한 개인의 능력 만을 믿고 그 사람에게 만인의 운명을 마껴 그 사람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집단이나 사회는 민주적일 수 없다. 사회적인 신분 여하를 묻지 않고 개인을 누구나 같은 사람으로 존중하고 개개인이 갖는 능력을 존중하고 믿는 사회가 민주 사회의 특성이기 때문에 민주 사회는 또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개성(個性)을 존중하게 된다.

독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기를 바란다. 독재자는 그의 개인적인 이념이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모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며 또 강요하게 된다.

개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면 독재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독재사회에서 개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단(異端)으로 취급되며 그러한 사회에서 개성이 존중되지 않을 뿐아니라 도리어 크게 벌을 받게 된다.

민주 사회에서 개성이 존중되는 까닭은 사람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며 개인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점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는 데서 진보가 있을 수 있다는 생활원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일치되는 생각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개성을 존중히 여길 뿐아니라 개성을 장려한다. 각 개인이 갖는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 성장에 필요한 자극을 줌으로써 개인은 그가 지닌바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여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사회는 이와 같은 개인의 노력의 총화로 진보 발전될 수 있다는 신념을 민주 사회는 믿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는 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다양성을 허용하고 장려한다. 사고와 행동의 획일성을 강요하는 독재사회에 비해 개인 마다 다를 수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다양성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이 민주 사회의 특성이다.

개성의 존중은 사람의 존엄성을 소중히 하는 사회에 있어 당연한 일이며,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도 개인의 최선아실현을 믿고 장려하는 사회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다.

독재자의 명령에 맹목적인 복종만을 필요로 하는 독재사회에 있어서는 개성의 존중, 개인의 자율성, 사회적 다양성은 위험한 특성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민주 사회에 있어서는 이들 특성을 찬양하고 장려

된다.

또한 독재 사회에서 위험시 하는 것은 개인의 지성이다. 국민 개개인의 지성과 이성은 독재자의 권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재 사회에서는 개인의 지성적 활동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독재 국가는 특수한 개인의 독재적 힘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사회라면 민주 사회는 국민의 지성에 의하여 다스려 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민주 사회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지성의 활동과 탐구에 의하여 개인의 생활을 복되게 할 뿐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바른 길이며, 또한 사회가 발전하고 풍유해지는 수단임을 굳게 믿고 있다. 지성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알게되며 의심을 해소하게 되고 다른 의견을 토의하여 의견의 종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특성이다.

따라서 과학적 사고를 존중히 여긴다. 문제를 힘이나 감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지성을 동원하는 과학적 사고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과학적 사고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민주 사회는 믿고 개인의 지성과 과학적 사고를 장려하는 것이다.

민주사회는 어느 특정인의 의견이나 능력을 믿기 보다 만인의 의견과 능력을 다 같이 존중하고 믿는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허용하고 장려 한다.

독재 사회에서는 한 의견만이 존중되고 강요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만인의 의견이 다 같이 존중된다. 민주 국가에서는 한사람이나 몇몇 개인의 의견이 곧 법이나 명령이 되지 못하며 어느 의견이나 공중의 여론에 의하여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시말하면 개인의 의견은 토의와 협의에 의하여 옳고 그름이 가

펴지고 옳은 의견만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게되며 이러한 옳은 의견이 국민의 의사로서 집약되어 정책적으로 받아 드리게 된다.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을 정치적 과정에서 설명한바 있다. 개인의 의견은 물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협의와 토의를 거쳐 집약된 다수의 의견에 따라 국가의 정책으로 혹은 법으로 규정되며, 이렇게 규정된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민주 사회의 특성인 것이다. 여기서 민주 사회는 법이 다스리는 사회 공공의 복지를 위하는 사회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법은 만민의 의견의 종화이며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민주 사회의 최종의 목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의 복지를 최대한으로 증진 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의 의견에 따르기 보다 만민의 의견에 쫓차 생활원리를 규정하게 된다.

개인의 행복이 무엇이냐를 개인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행복이 무엇이냐도 국민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민주 사회는 믿는다. 이러한 국민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의 종화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법치국가의 특성이며 법은 공공의 복지와 사회적 질서 및 안전을 도모하며 개인의 최선의 실현을 가능케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독재 국가는 독재자 개인의 의견이 곧 법이요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고 만인의 의견의 종화로 이루어 지는 법이 필요 없다. 독재 국가는 특수 개인의 사람에 의하여 다스려 지는 사회이나 민주 국가는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사회이며 법은 만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인의 의견의 종화로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독재국가의 특성이 폐쇄적이고 고정적이라면 민주 국가의 특성은 공개적이고 개방적이며 진보적이다. 민주 국가에 있어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혹은 정부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 사회에서 혹은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좋고 나쁜 모든 것을 국민이 알고 있음으로서 올바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는 만인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광장에서 모든일을 수행하고 또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 이해시키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민주 사회는 믿고 있다.

민주 사회의 특성으로 공개적이고 개방적이고 또한 유동적이고 진보적이라는 의미는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사회 내지 국가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만민이 보고 알수 있게 문이 열려져 있다는 의미와 국민의 여러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 진다는 의미의 것이 공개적이란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개적이란 의미에는 유동적이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한 단체에서 다른 단체로 혹은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인의 취미와 능력과 이상에 따라 자유로히 옮겨 갈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도 공개적 혹은 개방적이다로 뜻에 포함된다. 또한 민주주의는 사람의 능력을 믿고 그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 역시 계속 발전 진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믿고 노력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상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믿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많은 모순과 결점, 그리고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실망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며 서로 협동하여 노력하면 사회는 발전하고 진보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이념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2. 교수방법

본 주제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뜻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 정치 양식만으로 민주주의를 규정할 수 없는 실례를 들어 그 뜻을 설명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선진 민주 국가들이 갖는 정치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해도 좋을 것이고, 또한 통제 국가들이 갖는 정치형태와 실제적인 사회생활 양식을 비교, 검토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양식 보다 생활양식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결정된다는 요지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제도나 경제체제의 중요성이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의 특성을 몇개로 분류하여 먼저 제시하고 그 특성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했으나 이것 만으로 불충분하다. 내용개요에서 지적한 민주사회의 특성에 더 첨가될 것도 있을 것이고 그 특성 하나 하나에 대한 설명도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이 모든 특성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점이며, 설명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결부시켜 그 타당성 여부를 밝혀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또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민주 사회에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공산 국가나 독재 국가의 특성과 비교하여 민주 사회의 특성을 설명하고 공산 국가나 독재 국가의 특성과 비교하여 민주 사회의 특성의 장점에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내용개요에서도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 독재 국가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려면 좀더 자세한 비교 설명이 첨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 제시하는 생활원리와 실제 우리의 혹은 개인의 생활양식과를 비교하여 반성의 기회와 토의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뜻은 실제 생활 장면을 비판함으로써 더욱 뚜렷해 질 수 있을 것이며, 개인으로 하여금 민주적 생활원리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본 주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과거의 생활양식을 비판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3. 참고문헌

1) 오천석, 민주주의의 참된모습, 서울 :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1968 (Ⅳ, "민주사회의 성격" pp 89~112)

1) Alexander, F. Our Age of Unreason, philadelphia : Lippincott, 1942

2. Barbu. Z Democracy and Dictatorship, New York : Grove press, 1956

3) Ebenstein, W. Today's Isms: Communism, Fascism, capitalism; Socialism, SeCed. Euglewood cliffs, N.Y.: Prentice-Hall, 1967

4) Pennock, J. R. Liberal Democracy: Its Merits and prospect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50

5) Perkins, D. the American Way Cornell Univ press, 1957

6) Yang, C. F. Chinese Communist Society, Cambridge, Mass.: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 1965.

Ⅱ. 민주적 인성과 태도

1. 내용개요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물건이나 제도와 같은 형식적인 허울만의 체제가 아니며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원리라고 하는 점을 전 주제에서 논한바 있다.

전 주제에서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민주적 생활원리를 논했다면 본 주제에서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민주적 생활원리를 논하게 되는 셈이다.

민주주의의 이론에 밝은 사람이 민주적 제도를 가춘 조직에서 사람을 대하여 행동할 때 극히 비 민주적인 태도로 행동하게 되는 예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된다. 이러한 예는 제도의 운영이나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이 갖는 인성과 태도 여하가 그 민주성 여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존엄성과 능력을 믿는 정신적 터전 위에 서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 여하는 개인의 인성 (*personality*) 특성에 의존되는 바 크다. 개인이 자기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타인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존중되며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의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게 될 때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은 시작되는 것이다. 개인이 자기의 존재가치나 능력을 믿지않고 타인에 의존하려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기의 능력만을 과신하여 타인을 무시하고 지배하려 한다면 민주적 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개인에 의해서 운영

되는 민주적 체제 제도는 형틀만의 것으로 민주적 생활원리가 지배되는 제도는 못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완성된 물건이 아니며 개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가꾸어 가는 생활원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의 정도는 결국 개인의 민주적 인성 발달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개인의 인성특성이 차지 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다음 개인이 육성시켜야 할 민주적 인성특성을 분석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인의 인성특성이 다양하고 그들 특성에 관한 개념이 다양하기 때문에 분류하기에 따라 수 많은 특성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나 흔히 지적되는 중요한 특성만을 요약 제시하기로 한다.

(1) 독립성
(2) 자율적 태도
(3) 타인에 대한 존경심
(4) 이견(異見)에 대한 존중
(5) 타협과 협동심
(6) 실험적 태도
(7) 개방성
(8) 집단지(集団知)에 대한 신념
(9) 적극적 사회참여 태도
(10) 사회적 책임감

민주적 인성특성 중 가장 중요한 특성은 독립성과 자율성이다. 개인이 자신의 존재 가치와 능력을 믿지 못하고 타인에 의존하여 그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면 개인의 존엄성과 능력에 대한

신념의 토대위에 세워지는 민주주의는 그 의의를 잃게 될 것이다. 개인이 자기의 존재가치를 인식하고 자력으로 운명을 결정하려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의식을 상실하고 있다면 그러한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몇몇 소수인의 권위가 지배하는 독재사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독립심과 자율적 태도를 다른 유사한 개념으로 풀어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자존심 (self-respect), 자신감,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자치 (self-governing)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 태도등은 모두 독립심과 자율적 태도와 유사한 개념들이다. 이들 개념들이 갖는 공통적인 의의는 개인이 자기에게 의의있는 일을 스스로 찾고 그 일을 자력으로 해결하려 하며 스스로 결정하려는 의욕과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양한 방법과 예로 이들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나 중요한 것은 민주적 인성과 권위주의적 인성 내지 독재적 인성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를 포함하는 독재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개인의 자율적 행동은 그들의 독재성을 해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 대중은 무지 무능하며 몇몇 독재자의 지도없이는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독재자는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국민을 우중이라 보며,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중지 (衆知) 라고 한다.

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이 자기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외부에서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보장과 장려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스스로 자율적 행동을 거절한다면 그는 결코 민주적 인성자질을 육성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 사회의 육성과 발전에 공헌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자기 스스로 자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사회나 국가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개인 역시 스스로 자율성을 육성시켜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민주주의는 육성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개인은 자기자신의 존재가치와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믿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특정인의 존재가치와 능력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같은 의의를 갖고 사는 귀중한 존재로 여기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 사회의 특징이다.

따라서 남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의견이 비록 자기의 의견과 다른 이견(異見)이라 할지라도 존중히 여겨야 하며, 이견을 이해하고 타협하여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동하는 태도가 민주 사회에서 요청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민주 사회에서도 의견의 다양성을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에서 새로운 창의적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발전과 진보가 있을 수 있다고 민주주의는 믿는 것이다.

진리(眞理)라는 것은 잠정적이며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신봉하는 진리관이다. 이러한 진리관을 신봉하는 민주주의는 언제나 새로운 그리고 보다 나은 생활양식을 찾고 개선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진리관과 생활관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혜와 실험적 태도이다.

기존의 진리와 이념,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 등에 의문을 가지고 비판하고, 이성과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검토하고 실험하여 생활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태도를 민주주의는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독재자는 개인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비판적 실험적 태도에 대한 신념을 거부한다. 그 까닭은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는 요지부동한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들이 신봉하는 진리는 불변하는 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의문을 품거나 비판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들이 신봉하는 진리만을 국민에게 강요하게된다. 이러한 곳에 개인의 이성과 실험적 태도가 허용될 수 없고 맹목적인 추종만이 높이 평가 된다.

개방적 사회는 민주 사회의 특성 중의 하나임을 전 주제에서 지적한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수준에서의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의 인성적 특성으로서의 개방성을 민주주의는 요구한다. 하나의 독단적인 진리에만 집착되고 다른 진리에는 눈을 감는 폐쇄적인 마음가짐이나, 자기의 주장만이 옳은 것이고 남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는 폐쇄적인 태도는 개선과 진보, 그리고 타협과 협동을 높이 평가하는 민주 사회의 건설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도 계속 검토하고 수정하려는 아량이 필요하며 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또한 검토하고 보다 나은 것의 창조를 위해 타협과 협동하는 마음가짐을 민주주의는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형성되고 집단지(集團知)를 일단은 받아들이는 태도(계속 검토되고 수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서)가 중요하다.

국민 대중이 갖는 지식과 여론을 독재국가에서는 무시하거나 억압

한다. 그들은 개인의 이성을 무시할 뿐아니라 대중의 생각도 어리석은 것으로 일축한다. 그들은 대중을 우중(愚衆)이라 보고 무시 하지만 민주 사회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히 여길 뿐 아니라 개인들이 타협하여 형성된 여론을 더욱 중요시 여기며 이를 중지(衆知)라고 하여 높이 평가 한다.

민주 사회는 개개인의 의사는 존중히 여기며 이들 의견이 모든 사회과정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반영케 하려해도 개인이 적극적인 태도로 의사를 제공하고 모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에 게으르다면 참된 민주사회는 건설될 수 없게 된다.

민주 사회의 진보와 발달은 결국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회적 활동에 적극성을 갖는 태도가 개인에게 요청되며, 이러한 요청은 개인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 참여하는 태도는 개인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의 하나이다. 개인은 자기의 요구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노력에 필요한 활동을 자유로히 행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같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민주 사회에서 개인에게 허용하는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한된다.

누구나 같은 정도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은 져야하며, 사회복지를 향상시킬 책임과 민주주의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책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을 위한 개인의 책임은 민주 사회에서 중요시 여긴다.

민주사회에서 최대한의 자유와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여 받은 자유와 권리의 수행에 따른 책임도 결국 개인이 져야 하는 것이다.

2. 교수방법.

본 주제에서는 민주주의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고 개인의 인성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파악하여 개인이 민주사회에서 요청되는 인성적 특성을 육성하게 하려는 점에 강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강의에서 먼저 취급되어야 할 점은 개인의 민주적 인성특성의 중요성이다. 이를 위하여 본 주제의 내용개요의 첫 부분에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개인의 민주적 인성특성과의 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언급한바 있다 극히 개관적인 언급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용과 실예가 더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명되어야 할 중요한 요지는 인성특성의 형성과 발달과정이다. 정치적, 혹은 사회적, 국가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며 오랜 역사를 통한 노력의 결과로 형성된 바와 같이 개인의 수준에서의 민주적 인성과 태도도 성장과 과정에서 학습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생득적으로 혹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개인에게 민주적 인성특성이 형성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지적 정서적인 성숙과 함께 학습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민주적 인성특성이 육성되고 발달되는 것이다. 그 노력은 개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개인경제가 있게 되는 온갖 사회적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인성특성을 육성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 가정, 학교의 역할등을 예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혹은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있음직한 민주적 인간관계를 모형으로 역할놀이 (Role play)를 하게 하는 방법도 민주적 인간관계 양식과 개인의 민주적 인성 및 태도를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참고문헌

1) 윤태림, 한국인의 성격,

2) Adorno, T. W., and others,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 Haper & Row, 1950

3) Cantril, H, Human Nature and political systems, New Brunswick, N. Y. : Rutgers Univ. press, 1961

4) Davies. James C, Human Nature in Polities, New York: wiley, 1963

5) Lasswell, Harold D. Power and personality, New York : Norton, 1948

(6) Stauton, Alfred H., and S. E. Perry (eds.)
Personality and political Crisis,
New York: Free press, 1951

(7) Wallas, G. Human Nature in politics
London: Constable, 1908.

Ⅲ. 갈등의 건설적 해결

1. 내용개요

민주주의는 완전무결하게 만들어진 기성품이 아니며 가꾸어 가는 미래 완성적인 이념임을 앞서 여러 차례 지적한바 있다.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없기를 기대할 수 없다.

사회나 국가가 민주화 해갈수록 도리혀 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짐작된다. 민주 사회에서는 문제를 엄폐하지 않고 도리혀 문제를 찾아 밝히고 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욱 가치있는 일로 생각한다.

문제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소재를 밝히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민주 국가들 중에도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마다 특수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 해결 과정에 사용되는 방법도 특수한 것일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문제들을 총망나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일이다. 그러나 민주 사회이기 때문에 갖는 공통된 문제와 갈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개성의 존중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데서 생기는 문제와 갈등이다. 사람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의견과 주장을 갖게 된다.

민주 사회에서는 개성을 존중하고 개성의 신장을 더욱 장려하며 개인의 의사와 행동의 다양성을 권장한다. 이러한 개성의 존중과 개

인 의사와 행동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일치하는 생활원리인 것은 앞 주제들에서 여러번 지적한바 있다.
개인의 의사와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간에 혹은 집단간에 마찰과 갈등이 있게되며 그들 갈등의 해소과정에 때로는 언쟁과 극단적인 투쟁도 있게 된다.

따라서 민주 사회는 개성과 개인의 사견과 주장을 허용하지 않고 획일적인 통제를 가하는 전체주의 사회보다 더 많은 문제와 갈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민주 사회에서는 개성의 신장과 다양한 개인의 의사와 주장을 보장함으로서 야기되는 문제때문에 그 해결과정에 다소의 혼란과 마찰이 있을 것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들 혼란과 마찰은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게 되는 활력소로 간주한다.

물론 이들 문제들이 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낙관을 민주 사회에서는 갖지 않는다. 문제의 건설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권장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가치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개인간 혹은 집단간에 생기는 갈등과 마찰은 결국 개인 내지 집단들의 노력에 의하여 건설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고 문제의 건설적인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개인의 의사와 주장이 사회적 혼란과 마찰을 야기시키는 것이라 우려하여 이를 억압하는 독재 국가에서 보다 혼란과 마찰을 무릅쓰고 라도 개인의 의사와 주장을 권장하는 민주 국가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으로 더 큰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입증하고 있듯이 이 같은 모험이 실패하지 않고 발전과 진보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밖에 민주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로서는 자유와

민주 사회에서 야기될수 있는 문제와 갈등의 소재를 구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민주 사회에서 야기될수 있는 공통된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내용 개요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생활원리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와 갈등의 소재를 구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내용개요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민주 사회가 당면하는 공통된 문제와 갈등을 예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 사회라 할지라도 문화적 배경의 특수성에 따라 문제와 갈등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민주 사회가 당면하는 공통된 문제를 설명하면서 문화적 배경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특수한 문제를 갖는 나라의 예를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며, 더욱히 우리나라가 당면하는 문제의 성격을 구명하는 일에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하는 문제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을 것이나 민주 사회의 건설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유익할 것이다.

민주 사회는 문제와 갈등을 진보와 발전을 위한 활력소로 알고 회피하려 하지 않으며 도리어 문제의 발굴을 장려한다. 그러나 문제가 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며 모든 지성과 과학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적극 장려한다.

민주 사회는 문제에 임하는 태도와 그 해결과정을 중요시 한다. 민주사회에서 권장하는 문제에 임하는 태도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하며 문제는 진보와 발전을 위한 자극적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고정된 공식을 적용하거나

권위자에 의한 해결을 민주 사회는 높이 평가하지 않으며 공개된 토론을 통하여 검토하고 합의에 의한 해결을 존중하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실험을 거쳐 창의적인 해결을 권장한다.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방법이 허용될 수 있다.

공동으로 문제를 모색하게 하고 그 문제에 대한 개인들의 의견과 구상을 표명하도록하여 자유로운 의사교환과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에 도달하게 하는 집단 토의의 방법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결론을 얻게하는 방법, 혹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엄격한 의미의 과학적 실험을 하게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한 방법을 택하던 간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의 기술적인 면을 먼저 제시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3. 참고 문헌

1) Anderson, W. A. The Nation and the states; Rivals or Parters?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55

2) Berlin, I. Two Concepts of Libert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59

3) Chase, Harold W. Security and Liberty: The Problem of Native Communist, 1947-1955. New York: Doubleday, 1955.

4) Dollard, John and others,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Yale Univ Press, 1939

(5) De Grazia, A. (ed.) Grass Roots Private Welfare,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57

(6) Heilbroner, R.L, The Limits of American Capitalism. New York: Harper & Row, 1966

(7) phelps, Edmund s, (ed.), private Wants and Public Needs, New York: Norton, 1962

(8) Roche, John P. The Quest for the Dream, New York: Macmillan, 1963

(9) Seligman, Ben B. (ed.) Poverty as a public Issue, New York: Free press, 1965

(10) Strausz-Hupe, R. and others, protracted conflict, New York: Harper & Row, 1963

제 3 부

공 산 주 의

제 1 장

공산주의 발생의 역사적 배경과 기본 이론

공산주의 발생의 역사적 배경은 그것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성장의 시대적 배경과 그들의 성장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상체계를 형성하였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 첩경일 것이다.

그들이 성장한 19세기에 있어서 근대문화의 담당자는 영국, 불란서, 독일의 세나라였다. 영국은 18세기 60, 70년대에 산업혁명을 겪쳐 경제면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였고, 불란서는 자유, 평등, 박애의 구호밑에 정치혁명을 일으켜 대중의 정치참여를 실현한 나라였다. 독일은 사색의 세계에서 사상혁명을 이룩하였다.

이같이 구라파의 3대 선진국의 사회적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던 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들의 사상체계를 형성하였다.
즉, 철학은 독일의 고전철학 특히 헤겔좌파의 철학, 정치와 사회사상은 불란서에서, 경제학은 영국의 정통파 경제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들의 사상체계는 세계관 일반으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 노동가치설과 잉여가치설을 두 지주로하는 자본주의 몰락론, 계급국가론과 사회주의 실현방법으로서의 폭력혁명론과 푸롤레타리아 독재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늘날의 공산주의를 형성한 자로서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및 스탈린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 마르크스, 엥겔스 및 레닌은

중산계급 이상의 가정환경과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계급에 속하는 자들이며, 모든 것을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푸롤레타리아 위주의 사상을 형성 하였다는 것은 자가 모순적인 일이다. 또한 그들 개개인의 생애와 개성에 따라 공산주의 내용도 다소 변질 되었다.

I. 공산주의 발생의 사회적 배경

1. 내용 개요

19세기에 있어서의 근대문화의 담당자는 영국, 불란서, 독일의 세나라의 국민이었다. 그러므로 이 세나라의 사상문화를 체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정신적 양식으로 한 자는 세기의 정화로서 사상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 세나라의사상은 더 높은 통일체로써 종합하는 것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 형성의 발단을 구성한다.

영국은 19세기 초반에 있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자본주의를 발달 시켰다.

18세기 6.70년대 증기기관의 출현은 산업혁명의 시발을 고한 것이였으며 산업자본은 먼저 영국에 있어서 급속히 발달되어 차차 유럽대륙 그리고 미국으로 번진 것이다.

그런데 영국의 초기 자본주의의 현실은 전대미문의 번영으로 으리으리한 물질 문명을 건설하였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자유방임의 원칙하에서 각 기업은 상호간에 격렬한 경쟁을 전개하여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멸망하고마는 비극을 되풀이 하였다. 더욱이 노동자 계급은 낮은 임금과 나쁜 노동조건, 잔인한 벌칙으로 동물처럼 혹사당하였다. 청소년 부녀자도 중노동에 불리우는 것은 예사였다. 따라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상태는 말못할 참상에서 신음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에 대하여 모든 인도주의자들은 소리를 높여 자본주의의 철폐 내지는 개혁을 외쳤던 것이다. 당국은 입법적인 조처와 개혁의 방안을 채택하였다. 최초의 아동노동법이 1802년에 영국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두번째 공장법이 1819년에 로바트 오웬(1771-1858)의 배후에서의 노력에 의하여 통과 되었다.

영국은 당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서 노동자 계급이 수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성장 하였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계급투쟁은 영국에서 일찌기 연구할 수 있었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학도 이 나라가 제일 성황이었다.
아담 스미스, 마르사스, 리카드등의 정통파 경제학이 이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불란서에 있어서는 사정이 좀 달랐다. 이나라는 경제적으로 영국보다 뒤떨어져 있었다. 사회상의 중요세력으로 서는 소자본가와 지식계급이 민중을 지도하였다. 특히 파리시민은 항상 반항적이어서 불란서 대혁명 전에도 수차 무장폭동을 일으켜 정부로부터 여러가지 특권을 탈취하였다. 불란서 혁명은 빠리의 소시민과 노동자가 전 불란서를 지배하고 전 구라파에 대항하였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파멸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자유주의적인 부르좌계급에 의하여 지도된 민중의 요구와 국권에 보호된 귀족 및 승려계급의 요구사이에 잠재가는 대립관계는 사상적으로 모든것을 극단적으로 부인하게 하였다. 모든 인습적인 권위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유물주의와 무신론은 불란서의 신흥계급의 가장 용감한 개혁론자의 사고방식이 되였다.
계급대립 및 계급투쟁의 경제적 요인은 영국에 있어서 현저하였지만 계급투쟁은 정치투쟁이란 사실은 혁명의 불란서에 있어서 가장 선명하게 인정되였다. 19 세기 초반에 있어서 영국은 경제사상, 불란서는 정치사상이 가장 발전하고 있었다. 영국이 타협사상으로 지배되었다면 불란서는 파격사상으로 지배되고 있었다. 영국에서 점진적인 조직적 건설이 번영하였다고 하면 불란서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혁명적 열정이 불타고 있었다.
당시 독일은 불란서 보다도 더 봉건적 소시민적인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앙집권이 없는 나라였다. 그것은 많은 소연방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소 연방주의와 소 도시주의는 소시민계급을 편협하고, 무기력하며 비굴하게 하였다.
봉건정치의 붕괴도 내부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로 부터의 침략에 의하여 완성되였다. 독일의 봉건주의는 독일 자본가 계급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불란서 군에 의하여 소탕되었다. 독일에서는 현실세계로 부터는 위안을 찾지못하였으며 순 사색의 세계든지 예술 세계에서는 위대한 일을 하였다. 사색은 위대한 독일인의 근성하는 일이 되였다. 관념은 그들에게 세계의 지배자로 변하였으며, 사상의 혁명은 세계혁명의 수단이 되였다.
영국인이 그의 확대든지 공업의 승리를 위하여, 불란서인이 그의 군대든지 반도의 승리를 위하여 최량의 방법을 안출하는 사이에,

독일인은 사상과 연구의 최량방법을 인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결함을 수반하였다. 그들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즉 현실로 부터의 도피는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관념 과중의 폐단을 산출하였다. 독일의 철학은 깊이가 있었으며 독일의 과학은 근본적이었다. 또한 독일의 이상주의는 열광적이였다. 영국인이 보수주의에, 불란서인이 과격한 주의에 기울어지고 있을 때, 독일인은 실천없는 이상주의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공업의 발달은 이 무력한 이상주의를 제한하였으며, 불란서혁명 후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반작용을 받었다.

독일의 위대한 사상가 하이네(Heinrich Heine)든지 랏사레(Ferdinand Lassalle) 같은 자는 불란서의 혁명사상과 독일의 철학적 방법의 혼합의 산물이며, 여기에 영국의 경제적 지식으로 풍부하게 되면 그 사상은 유력한 것이 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은 이 성과의 선물인 것이다.

구라파의 3대 선진국의 사회적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던 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들의 사상을 형성하였다. 공업화와 기업제도의 이로움은 후에 이루어지지만 그 초기에는 여러가지 긴장과 분열, 비합리 때문에 혁명과 계급간의 마찰 및 대립 투쟁이 일어났으며 나아가서 정치적 대중 행동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었다.

영국의 오웬이나, 불란서의 생, 시몬, 푸리에 등의 유토피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도 인간의 성격이 이상적인 사회환경에서 자라면 고쳐질 수 있다는 학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인 오웬이 한 것과 같은 실험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현존하는 정부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개혁을 할려는 여러가지 단계의 계획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반대로 마르크스는 전세기 중엽에 한창이던 산업혁명이 정치적 혁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불란서의 공산적 사회주의자들처럼 사유재산 제도는 착취적 사회관계의 근본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그 제도를 없애려고 하였다.

후년에 그들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화란, 영국, 미국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사회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초기에는 역시 폭력적 사회혁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이같은 두가지 견해로 인하여 민주적 사회주의자들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으며, 오늘날 허다한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이 분열되어 다른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가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정통적인 계승자라고 주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초기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과 그 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들의 계획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구라파의 공업국가들은 자본주의의 병폐를 개혁함에 있어서 노동입법, 사회보장법등 사회복지를 위해 민주적으로 발전된 계획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부정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다. 거기에따라 새로운 산업제도 즉, 자본과 경영의 분리등으로 인하여, 그것을 운영하기 위하여 숙련된 기술자들을 필요로 하게되었다.

이들은 중류계급을 형성하며, 많은 중류계급의 출현으로 인하여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충동에 의한 혁명의 가망성도 희미하게 된 것이다.

2. 교수 방법

이 강의는 무엇 보다, 마르크스로 하여금 사회와 정치에 대한 그의 견해를 어떻게하여 체득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그 사회적 배경내지 원천이 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특히 19세기 초기의 중요한 사상가들 중 영, 불, 독의 세 나라의 대표적 인물들이 보급한 사상들을 언급함으로써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독창적인 정치적 사상가라기보다는 하나의 종합자였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대체로 강의는 사상과 사건들을 연관시킬 필요도 생기겠지만, 지적인 역사면에 중점을 두어 다루어 나가야 한다. 강의는 동일한 주제 즉, 한개의 정치 철학으로서 "사회주의"는 여러가지 서로 다른 면을 가지고 여러가지 근원을 가진다는 주제를 시정해야 한다.

나폴레온 전쟁에 뒤이어 계몽주의 사상의 몇가지와 불란서 혁명에 대하여 반동이 일기 시작하였다. 많은 지성인들과 정치지도자들이 보수주의에 기울어졌지만 다른사람들은 사회 및 사회세력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알게 하는 이상과 원칙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탐구는 샤토브리안과 같은 인물 주위에 모인 낭만주의 운동속에서 볼 수도 있었다. 독일의 낭만주의는 특히 강했고, 따라서 주요 독일 철학자들은 세계질서를 확립하는데 합리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런 인물로 칸트, 피히테, 쉘링 및 헤겔이 있었다. 물론 헤겔은 마르크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서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사회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더 현실적인 면에서 다룰려고 하였다.

이런 사상의 실지 제도적 배경을 강조할려면, 산업의 발전,

대도시의 성장, 농민과 농촌산업의 문제, 그리고 신생중류계급의 발전등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본래의 계급 차이는 흐려지고 즉 1815년 비엔나 회의로부터 1848년 "공산당 선언"의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서구에 있어서 가장 큰 사회적 혼란 분열 요동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성인들과 사상가들은 큰 속도를 가지고 움직여간 것이다.

예를 들면 칼. 마르크스 자신이 독일 도시의 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나 파리로 정치적 망명을 하였으며, 거기에서 사회주의자들과 접촉하여 많은 사상적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19세기 초기의 불란서에 있어서는 파리와 사회주의자들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였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시스몬디와 생, 시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강사는 마르크스에게 사상적 영향을 미친 그들의 주요 사상을 몇 가지를 골라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 예로서 시스몬디의 노동자 착취에 관한 해석을 들 수 있다. 그는 말하길 '기업가의 이윤은 때로 노동자를 약탈해서 얻은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때가 있다' 고 하였다. 모든 사회는 두개의 계급으로 나누인다는 이론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덧붙여 강조할 것은 '옛날의 봉건적, 군사적, 지배적 제도로 부터 산업적, 평화적, 관리적 제도로 진보 한다'는 생, 시몽의 이론 종래의 자유방임 주의자가 주장한 것 같은 무정부적 자유사회가 아니라 사회적 생활을 증대하는 것 같은 능력에 따라 계층적 질서에 해당하는 계획국가가 아니면 안된다는 이론등이다. 또한 '각자는 능력에 따라 벌고 노동에 따라 받는 사회를 주장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말해주어야 할 것이다.

루이 브랑의 1839년 책자 "작업의 편성"에서 국가의 권력은

프롤레타리아 해방의 임무를 다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강사는 거기에 많은 이론들이 있다는 것과,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마르크스가 이른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을 강조 해야 한다.

다음에 강사는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끼친 초기의 중요한 영국의 사상가들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데빗드. 리카아드, 윌리암, 톰슨 및 토마스, 혼지스킨, 그리고 특히 로버트, 오웬등이다. 앞의 세 사람은 다같이 노동가치설을 발전시키고 지지하였으나 또 마르크스가 유등한 개념 즉 불로소득의 비윤리성을 강조하였다. 영어로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란 말을 사용한 로버트. 오웬은 노동조합 조직이론과 사회주의적 입법론과 이상사회 계획에 몰두한 공장 경영자이며 활동가였다.

1964년 마르크스가 주도적 역할을 한 제1 인터내셔널은 초기사회주의 사상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직은 많은 종류의 사회주의자들의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그들의 이념에는 서로 차이가 많았다. 바쿠닌 같은 무정부주의자, 푸르동 주의자,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다같이 현존하는 사회제도가 원래 사악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서로 같은 분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곧 깨닫게 되었다. 후년에 무정부주의자들이 남부 유럽에서 너무나 폭력적인 운동을 벌려서 마르크스와 의견 충돌을 일으켜 인터내셔널은 분열되었다.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윤리적 입장에서 폭력의 사용을 배척하였지만 한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폭력혁명을 시인하였다.

마르크스가 그 중의 한 사람으로 끼어있는 가지각색의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사회환경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색채가 다른

사회주의자들임을 언급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강사는 웹프부처, 버나드, 쇼 등이 창시자의 한 사람이 되어있는 영국 페비언 협회의 현실적인 활동을 독일의 사회 민주주의자(베른슈타인 이전)들과 러시아의 나로드니키스트 및 사회혁명주의자들의 보다 교조적이고 혁명적인 방법과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도 좋겠다.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의 철학적인 요소와 그것이 실천적 정치지도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현실적인 활동에로의 발전과를 비교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이론적인 개혁자들의 마음 속에 있을 때의 사회개혁의 철학과 그것이 존속할 수 있는 정치적운동으로 실천 될 때까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주제는 후에 다른 강의 시간에 더 발전시킬 것이지만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들과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자들 간의 그리고 평화적 사회주의자들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간의 차이는 강의의 주제 즉 사회주의 운동, 내의 여러가지 논쟁과 성장이란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언급해 두어야 한다.

3. 참고 문헌

1. 국토통일원 번역간행 ;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국토통일원 발행.
   (Democracy Confronts Communism In World affairs)
2. Friedrich Engels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
   Part I ;
3. Henri Comte de Saint-Simon, "Selected Writings:"
4. Robert Owen, "The Book of the new World"
5. R.N Carew Hu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Baltimore; Penguin Book, 1963. pp.123-140.
6 金斗烈著. 마르크스, 레닌 主義의 崩壞, pp.10-21 新文化社刊
7. M. Beer, The General History of Socialism and Social Struggle, 2 Valo,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57) P. 442
(그대로부터 존재해온 이상사회와 사회운동의 전반적인 역사를 기술한 것임)
8. Martin Buber, Paths in Utopia (New York; Macmillan Co, 1949). P.152
(19세기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주요사조의 대변자로서 푸르돈과 마르크스와의 논쟁을 검토한 것이다)
9. G.D.H Cole, A History of Socialist Thought, Vol.I; The Forerunners, 1780-1580 (New York; St Martin's press, 1953) P.346.
10. Sidney Hook, Marx and Marxists (Princeton, N, J; Van Nostrand, and Anvil paperback Original, 1959) P.254
(발췌문도 첨부하여 마르크스와 그의 해석자들에 대한 분석을 한 것임)
11. Sidney Hook, From Hegel to Marx; (New York; Humanities press, 1958) P.335
(미국의 지도적인 한 철학자가 칼, 마르크스에 영향을 준 철학과 사상을 분석한 것임)
12. Leopold Labedz (ed)., Revisionism; Essays on the History of Marxist Ideas (New York; Fredrick

A, preger, 1962) 404 pp.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마르크스주의 해석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3. Karl R.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3rd ed, 2 vol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7) pp 322 ~ 391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주요한 비판이 이 저술한 논문의 제 2 권에 들어 있음)

Ⅱ 공산주의의 이론적 근거

1. 내용 개요

공산주의는 역사적 변천을 걸쳐 오늘날에 이르렀으므로, 그 이론이 대단히 복잡하고 심원하여 한마디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와 그들이 내 놓은 강령을 이해하고 분석할려면 공산주의의 이념적 근거를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인용하며 또 그들자신이 연구하는 기본 문헌들을 우리들도 읽어 보고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르크스주의는 하나의 사상체계로 볼때, 철학, 역사관 경제이론, 정치이론, 전략전술에 이르기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용어도 독특하여 어렵다. 그러나 그들은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통일을 주장하며

그 이론이 아무리 희미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항상 "행동의 철학" 으로 된다. 따라서 그들의 이론을 우리도 규명하여 명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르크스는 그의 이론을 구성함에 있어서 다음의 3가지 유산을 상속한 것으로 되어있다.

첫째는 그가 젊었을때 연구한 헤겔좌파의 철학이다. 그는 가르침을 그대로 좇는 것이 아니라 헤겔의 관념 변증법을 전수하여 소위 유물변증법으로 재 구성한 것이다. 유물변증법 구성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유물론자들의 사상이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포이엘바하의 철학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또 계급투쟁이론은 블랑, 디이에리, 기조같은 역사가들의 이론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마르크스는 그것을 채택한 것이다.

둘째로 그는 영국의 고전경제학을 망명한 런던에서 중상주의자로부터 시작하여 아담, 스미스, 마르샤스, 리카아도 등의 경제학을 철저히 연구하고 이것을 통하여 그의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을 중핵으로 하는 경제이론을 완성하였다.

노동자 빈곤설은 로드베르트스에게서 유래한다. 자본집중의 이론은 푸리에, 블랑등이 주장한 것이다.

셋째로 생, 시몬, 푸리에, 블랑, 무르델 등으로 부터 근대경제의 과학적 조직문제, 노동자계급의 문제와 푸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미래의 문제, 인간의 미래에 있어서의 제조건 실현에 관한 문제들을 배웠다. 즉,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자호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배운 것이다. 이처럼 마르크스, 엥겔스는 선진국의 선구자들의 사상을 종합, 집대성하여 마르크스주의라고 불리우는 사상체계를 구성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공산당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찬, 하나의 역사 이론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내용에 있어서 신비주의적 위장된 과학인 것이다.

공산주의는 또한 그것을 하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의 대용이가 되는 것이다.

즉, ① 그것은 신을 믿지않는 사람들의 생활에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② 인류에 무한한 분쟁과 비참을 가져온 악으로서의 사유재산을 힐난한다.

이러하여 그 철학적인 장식과 과학적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경험이 오늘날 세계의 혁명적인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되어왔다. 따라서 마르크스, 레닌의 주장은 지적으로 소박하고 낡은 학설이며; 굳어버린 교리 문답서인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세계의 모든 대종교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진리와 개인적 가치를 부정하는 그릇된 학설인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인류는 국제적, 국내적으로 대부분이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있다.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서도 결합하고 있는 이때에 공산주의자들은 낡은 편견으로서, 자동조작, 우주탐험 및 인공두뇌화의 시대의 복잡한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듯이 케케묵은 옛날의 계급투쟁 슬로건을 반복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하나의 절대주의적인 것으로서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 즉, 예술, 과학, 문학, 스포츠, 및 가족관계에 대하여서까지 설명과 지침을 주려고 하는점에 있어서 거의 중세기적인 암흑사회를 연상시킨다.

마르크스는 그의 가설을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시키고 이것을 통하여 그는 인간관계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발전 전부를 설명하려고 나섰다.

마르크스는 사회연구의 변증법적 방법을 헤겔의 변증법적 기본법칙으로부터 채택하였다. 헤겔은 변화가 서로 상반되는 관념의 결합과 종합으로부터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제시 하였다.
헤겔의 변증법적 과정은 정립, 반정립 및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립은 한 명제를 긍정하며, 반정립은 그것을 부정하며, 거기에서 결과하는 종합은 그 양자의 유력한 요소를 흡수하여, 따라서 진리에도 일보 더 가까이 나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종합이 다시 결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 변증법적 과정은 다시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종합은 새로운 정립이 되며, 그 내재적인 부정은 새로운 반정립이 되며, 그리하여 이 양자의 진리적인 요소로부터 새로운 종합이 형성되는 것이다. 헤겔은 주장하기를 모든 관념은 변증법적 과정을 통하여서만 발전할 수 있다고 하며, 또 동시에 외부적 물질세계는 오직 관념세계의 구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렇게하여 변증법적 과정의 보편적인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물질을 모든 존재와 현실의 유일한 기본 존재로서 보고있다.
이 철학에 의하면 물질은 창조할 수 없고, 파괴할 수 없고, 영원히 변하며, 객관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즉, 마음과는 독립되어 있으며, 감각속에 반영 모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철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힘은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고 한다.

이 헤겔식의 변증법 을 자기의 것으로 채택함에 있어서 마르크스는 그것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즉, 그는 관념세계에 대하여 물질세계를 대치시켜놓고, 전자로 하여금 모든 현실의 근거로 삼아버렸다. 유물론의 개념은 이리하여 헤겔이 주장한 관념론을 뒤엎고,

따라서 마르크스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나의 변증법적 방법은 헤겔의 그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정반대의 것이다. 헤겔에 있어서는, 사고 과정은 현실세계의 창조자이며 따라서, 현실세계는 관념의 외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반대로 나에게 있어서는, 관념이란, 인간정신에 의하여 반영되는 사상으로 변화된 물질세계에 불과하다" 고 하였다. 마르크스는 관념을 근본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관념을 물질세계를 반영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은 사회의 변천을 설명하는 한 방편으로서 변증법을 인간의 역사에 적용시킨 것이다.
경제제도는, 다시 말하면 생산 양식은 변증법적 과정의 주제로서의 헤겔의 관념에 대신하였다. 역사적 유물론의 개념이, 정치제도와 사회를 그것들이 입각하여 있는 경제적 힘의 반영으로 본데 대하여, 마르크스는 거기에다 변증법적 과정은 시대적으로 계속하는 사회의 경제적인 기초에 있어서의 모든 변혁을 설명해 준다는 관념을 덧붙였다. 한 주어진 경제제도(정립)가 그 내재적인 모순(반정립)을 낳듯이 이 양자의 좋은 요소들은 한 새로운 개선된 양상(종합)을 산출한다. 이와같이 하여 유럽 역사를 검토하면서 마르크스는 많은 연속적인 경제제도의 점차적인 발전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보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원시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사회주의사회의 다섯단계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몇가지 제도를 따로 분리시켜주는 명백한 특색은 두가지 구성요소 "생산력"(재료 동력 및 기술) 및 "생산관계"(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성립하는 "재생산 양식"이다. "생산관계"의 결정적인 요소는 각 역사적 기간에 있어서 인간사회를 서로

다른 계급, 즉 자본주의 하의 푸롤레타리아와 부르좌 계급으로 나누는 생산수단의 소유권인 것이다. 이러하여, 마르크스는 물질적인 기초가 사회구조 뿐만 아니라, 기타 인간사회의 모든 면을 결정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것은 철학, 예술, 법, 정부 및 종교는 가장 중요한 물질적 기초의 반영에 불과한 "상부구조"를 구성함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의 변증법의 보편적인 타당성을 주장하였지만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아시아의 대제국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2. 교수 방법

이 강의로 부터 이 교과 과정은 가장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다. 학생들은 그들에게 아주 새로운 많은 용어와 개념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단어의 정의와 설명을 명백히 하기위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강사는 일단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철학 체계가 받아들여진 다음에는 그 말들이 그 체계속에 있어서는 아주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의의학(意義学)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은 혼돈시킬수 있다는 근본 이유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강사는 여러 갈래로 벌어져 나간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조속히 또는 용이하게 이해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야 한다. 처음에는 마르크스의 사상과 공산주의 이론 및 실제

에 있어서 변증법적 유물론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강조해야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변증법은 마르크스주의의 골격이다.
유물론적 변증법의 연구는 과학자와 정치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발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하여 사회생활에 의식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공산주의자들이 변증법을 그들의 이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 세 가지 기본법칙 즉 양은 질로 변할 수 있고 또 질은 양으로 변할 수 있다는 법칙, 상반되는 것에의 결합법칙 및 부정의 부정법칙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야 하며, 또 그 비과학적 성격을 설명해야 한다.
인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그의 분석에 있어서 경제적 요소에 대한 마르크스의 지나친 강조를, 역사철학에 대한 근본적으로 그릇된 거도로 설명해야 한다. 경제적 관계가 모든 인간사상과 행동의 결정적인 결정요소가 된다는 그들의 주장을 인간 관계에 대해 위험할 정도로 소박한 견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3. 참고 문헌

1. F. Engels ; Herrn Eugen Dührings Umwälzung der Wissenschaft, 1878.
2. F. Engels ;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 part II"
3. F. Engels ; Feuerbach u. der Ausgang d. Klassischen Deutschen Philosophie, 1888.

4. R.N Carew Hu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 pp, 39-93.
5. Henry B, Mayo, Introduction to marxist Theory; pp. 29-62.
6. 金막烈 著, 마르크스, 레닌 主義崩壞, pp 119 ~ 228.
7. Joseph M, Bochenski and Gerhart Niemeyer(eds), Handbook on Communism, P.686
(마르크스 사상을 실지로 적용함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양상을 취급한 의의있는 소론들을 모아 놓은 것. 저자들은 모두 권위있는 학자들임)
8. R.N. Carew Hunt, a Guide to Communist Targon, P. 169
(소홀히 되던 제목을 공산주의 문제 연구권위자가 취급한 중요한 논문임)
9. G.D.H Cole, A History of Socialist Thought, vol, II. marxism and Anarchism, 1850 - 1890. P. 481
10. Sidney Hook, Reason, social myths and Dialectic P.302
(이 저서는 "변증법적" 및 "변증법적 사고"의 개념을 철저히 비판한 것이다)
11. J. Edgar Hoover, A study of Communism. 212p.
(이 책의 제3장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기본적인 공산주의 개념을 설명 소개하고 있다)
12. Gordon Leff, The Tyranny of concepts; a Critique of Marxism (London; Merlin press, 1961) 203pp
(마르크스주의의 밑을 흐르고 있는 철학적 가설이 실제세계

와는 별로 관계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3. Alfred G. Meyer, Marxism; The Unity of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P.181
(마르크스 체계에 대한 철저한 문헌적 해설서, 제2부는 제1차 대전까지의 마르크스 주의를 취급하고 있다)
14. John Plamenatz, German Maxism and Russian Communism (London and New York; Longmans, Green, 1954) P.356
(마르크스 사상의 비판적분석, 제2부는 소련정치이론의 마르크스 주의적 근거를 평가하고 있다)
15. Robert C. Tucker, Philosophy and Myth in Karl Marx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1) P.263
(마르크스 철학에 대한 상세한 비판이며 재해석이다)
16. United States Congress, House of Representatives --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Facts on Communism Vol I; The Communist Ideology, 86th Cong, 2nd Ses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9) P.139
(동분과 위원회를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한 권위자인 게르하르트 니이마이어가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한 책이다)
17. Gustav A Wetter, Dialectical Materialism; A Historical and Systematical Survey of

Philosophy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Freedrick A, praeger, 1958) P 609.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학자적 연구이며, 현재 있는것중 가장 우수한 책의 하나이다)

18. Walter Theimer, Der Marxismus, Original Swiss edition published by Francke Verlage.
(이 책의 저자는 서구적인 사회민주주의 입장에서 평이하게 마르크스주의를 해설한 것이다)

19. Henri Lefebure; Le Marxisme, Original Copyright by Presses Univeritaires de France.
(이 책은 불란서의 국제주문고의 하나로서 아주 알기쉽게 쓴 불란서적 마르크주의자의 저서이다)

Ⅲ 공산주의 주창자의 생애

1. 내용 개요

오늘날의 공산주의를 형성한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상부상조 하여 일생동안의 친우로서 지냈고 마르크스주의를 형성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창시한 자다.
두 사람중에서 비중은 마르크스가 좀 높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마르크스 생애를 중심으로 설명키로 한다.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 라인강변의 트리엘시에서 유태인 변호사의 아들로 출생 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일생을 통하여 불란서 계몽사상과 자유주의 신봉자였으나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말미암아 1824년에는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가정은 유족한 중산 계급에 속했고 교양도 높았으나 혁명가의 집안은 아니였다. 공산주의자들의 말로 표현하면 그는 사회적 성분으로 보아 부르좌·인테리겐차의 출신이었던 것이다. 학교는 트리에르에서 고등학교를 마친후 본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다가 다음해 가을에는 백림대학으로 옮겨갔다. 이곳은 당시의 프로이센 학문 정치의 아성이었으나 한편 관료적 전제주의에 불만을 품고 반항하는 급진적 지식인들이 운집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의 긴장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자극과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서도 법학을 계속 공부하는 한편 역사와 철학 특히 헤겔좌파의 철학연구에 몰두 하였다.
그리고 좌파-(청년 헤겔파) 는 반정부적인 진적 사상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1814년 학업을 마치고 "라인신문"의

주필이 되었다. 이 신문이 탄압을 받게되자 신부 이에나와 더불어 바리에 망명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프로이센 정부의 요구에 따라 불란서 정부의 추방령을 받고 부류셀에 이전 하였다. 1848년 부터 49년의 혁명의 해에 그는 독일에 귀국하여 퀼른에서 "신라인신문"을 발행 하였다. 그러나 혁명이 실패하자 그는 바리를 거쳐서 런던에가서 영주하였다. 마르크스는 정치적으로 퍽 적극적이어서, 1864년 국제노동자협회(제1인터내셔널)을 그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창설 하였다. 그러나 이 협회도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 바쿠니파의 내부투쟁으로 인하여 1872년에 와해되었다.

마르크스의 사람됨은 민중을 사랑하기 보담 압제자를 증오하는 성품이었다. 가정에서는 어진 남편이며 자녀에 대해서는 자애깊은 어버이였지만, 그의 적에 대해서는 신랄, 악독, 증오하는 면이 퍽 대조적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적고 미워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인물이었다. 그는 고집이 세고 정의든지 관용정신이 결핍된자였다. 좀발트는 마르크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즉 "학문적 노력이, 격정적 지배욕, 정치능력의 결핍, 부정적 성격 및 증오와 질투심이 강한 자"라고. 그는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독서인이기도 하였다. 그의 일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가정생활은 평생 빈곤에 허덕였으며, 엥겔스에게 돈을 대달라는 편지로서 조른 생활의 계속이었다. 그가 발행하는 신문은 연차 폐간되었으며, 그의 생애의 유일한 사업이었던 제1인터"도 몇해 지나지 않아 종국을 고하였다. 최후의 희망을 건 "자본론"도 그 영향을 못본채 서거하였다. 그러면서도 자부심은 강하여 실패의 책임을 자기의 능력부족에 돌리지 않고 언제든지 환경에 돌렸다.

마르크스 한평생의 친우 엥겔스는 1820년 11월 28일 바르멘시에서 방직공장주의 아들로서 태어났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다른 길을 걸어서 사적유물론에 도달하였다. 즉 마르크스는 법학 윤리학을 걸쳐서였지만 엥겔스는 경제학, 경제사, 인류학, 자연과학을 걸쳐서 거기에 도달 하였다. 두사람이 서로 의기투합한 것은 혁명과 사회주의에 있어서였다. 엥겔스는 시사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적용에 있어서 그것은 평이하게 선전함에 있어서, 또한 철학적 방면의 설명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하였다. 두 사람의 학문적 태도를 비교하면 마르크스는 엄격, 집요하며, 깊이 파고드는 사색가였다. 반면에 엥겔스는 명쾌, 민첩하며, 술 잘마시고 노름에 소질이 있었으며 어학도 유럽각국어에 능통하였다. "펜을 들면 그 자리에서 명문을 만들어 내는 재사며 퍽 대담한 사상가였다. 마르크스는 추상력에 있어서 엥겔스는 결합적 능력이 특출 하였다. 또 마르크스는 비판적 자질을 엥겔스는 높은 견식을 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마르크스주의는 이들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다음에 오늘날 소위 볼셰비즘, 레닌주의 또는 마르크스·레닌 주의로 불리우는 동구 공산주의의 창시자 레닌의 생애에 대하여 설명키로 한다. 레닌은 1870년 4월 22일 볼가강변 신빌스크 현재 우리야노프스크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리야·니코라에빗치의 세째번 아들로서 태어났다. 부친은 수학, 물리학의 교사, 교장 시학을 역임하고 귀족이된 인물이였다. 모친 마리아·알렉산드로부나, 부랑크는 독일계의 귀주자 의사의 딸이였다. 마리아의 교양은 독일적이었으며 6명의 자녀교육에 일생을 바친 현모였다. 네살 연상의 형 알렉산더는 레닌과는 체질 기질에 있어서 정반대였지만 레닌이 가장 존경하고 동경하는 형이 였다. 두형제는 학교에서 특출한 성적을

차지 하였다. 형은 페테르스부르그 대학에서 나로드니키 혁명운동에 참가하고 알렉산드 3세 암살 음모사건 때문에 1887년 5월 20일 이른 아침 교수대 위에서 21세의 짧은 생애를 마쳤다. 레닌에게 이 형의 처형은 큰 충격이었으며 그를 혁명가로서 반쯔아의 의지를 더욱 굳건이 하였다. 그해 8월 레닌은 카잔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12월에 혁명적 학생운동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퇴학 당하였다. 그후 페테루쓰부르크 대학의 법과를 졸업, 검정시험에 합격하고 92년 부터 당분간은 변호사로서 활동하였다. 93년 8월 다시 페테르스부르크에 나타나 혁명운동에 전념하였다.

95년 레닌은 스위스에서 플레하노프등과 만나고 귀국하여 "노동자계급 해방투쟁동맹"을 결정하였지만 얼마 안되어 95년말에 체포되었다. 97년 부터 시베리아에 유형되어 거우 1900년 1월 형을 끝마치자 마르크스주의 신문의 창간을 준비하고 7월에 망명하여 동년 12월에 이스크라 제1호를 발간하였다.

이스크라는 경제주의, 합법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하여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정당을 조직하기 위한 중심기관이었다. 그는 1903년의 러시아 민주사회노동당 제2차 대회의 분열에 재하여 볼세비키파를 지도하여 패권을 장악하였다. 1905년의 혁명때 한때 귀국한 외에는 2월혁명후 4월에 페테스부르크에 돌아올때까지 망명 생활을 계속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는 혁명적 반전주의의 입장을 일관하고 친메르왈드 및 키엔탈에서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창설을 공작하였다.

17년의 2월혁명이 성공하자 봉한열차로 독일군에 의하여 4월에 송환되었다 10월에는 페트로그라드의 무장봉기를 지휘하여 소비에트정권을 수립하고 수상이 되었다. 22년 5월 첫번째

뇌일혈을 일으켜 쓰러졌지만 가을에 일시 회복 하였다. 그러나 년말에 재차 뇌출혈로 쓰러져 재기불능 24년 1월 21일 사망시 까지 병상에 누워 있었다.
브레스트리도우스크의 강화, 코민테른 창설, 신경제정책, 계획경제의 도입등 중요정책은 모두 레닌의 지도하에 이루어 졌다

다음에 레닌이 마르크스주의에 첨가 또는 왜곡한 이론은 무엇인가를 요약 설명키로 한다.

첫째는 프롤레타리아와 농민과의 동맹에 의한 혁명적 민주독재란 사고 방식이다.

둘째로 소수 정예의 직업혁명가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당조직논이다.

셋째로 제국주의론이다. 제국주의를 사멸하는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라고 규정짓고 자본주의 제국의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이 불균등하게 행하여지며, 선진 자본주의국과 후진 자본주의국과의 제국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상과 같이 레닌주의는 능구적이고 러시아사회의 특질에 알맞는 혁명이론이다.

다음은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스탈린에 대하여 설명키로 한다. 1922년 12월에 레닌이 두번째 뇌일혈으로 쓰러져 정부로 부터 떠난이래 1953년 3월 자기가 졸도하여 사망할때까지 스탈린은 실로 30년에 걸쳐서 소련을 1인 통치하였다. 그는 레닌의 충실한 제자로 자칭하였다. 그는 사망후 흐루시초프 및 미코양등의 옛부하로 부터 한때 맹렬한 비난을 받았지만 그의 발자취를 떠나서는 현대공산주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요시프, 스탈린은 1879년 12월 21일 카프카즈의 시골 고오리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비싸리온 쥬가시빌리로서, 제정러시아의 피압박민족인 느사인의 화공이며, 모친 예카체리이나는 신앙심이 강한 요셉도인이었다. 8세에 고오리의 교구학교에 입학하였고, 그것을 졸업한 후 찌프리스의 신학교에 다니다가 15세때 혁명운동에 참가하였다.

17세때에는 학생운동의 선두에 서서 활약하였으며, 19세때 당시 결성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 입당, 1899년 5월 정치적 위험인물로서 퇴교 처분을 받았다. 1901년 구루지아에 있어서의 사회민주당의 비합법 기관지 "프롤레타리아와 투쟁"을 편집, 동당 찌프리스 위원에 선출되었다. 1902년 바쯤의 공장노동자의 파업을 지도하다가 체포되어 유형, 그후 유형지를 탈출하여 1904년에는 바꾸 노동자의 대파업을 지도 하였다. 그는 10월 혁명까지 피체 8회, 유형 7회에 이르렀지만 언제던지 탈출에 성공하였으며, 한번도 국외로 망명하지 않았다. 이처럼 스탈린은 집권할때까지 지하운동을 하다가는 체포되어 유형 및 탈출의 연속과정을 계속하였다. 여기서 다른 점은 그가 한번도 국외로 망명하지 않았으며, 그에게는 사생활이란것이 태반이 없었다는 점 등이다.

또한 그가 몇번이고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한 체력과 의지력의 소유자이며 쯔아리즘의 경찰제도는 비능률적이었다는 점이다.

1924년 레닌의 사망후 당의 원로급 인사들 즉 노토츠키,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부하린, 루이꼬프등을 권력투쟁을 통하여 모조리 숙청하였다. 따라서 1928년 경에는 소련1인 독재자로 군림하였다. 1928년부터 5개년 계획을 추진,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업의 집단화를 그의 주도하에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강행하였다. 코민테른을 소련의 제 5열기관으로서 활용한 것도 스탈린 이었다.

소비에트 정권은 1924년 부터 꼭 20년간 자본주의 열강의 포위하에 고립화되어 있었다. 이 현실이야말로 스탈린 단계의 공산주의의 여러 특징을 낳은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다음에 그 특징을 열거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러시아의 후진성에 대한 러시아인의 열등감이다. 모스크바를 제3 로마로 간주하고 러시아를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범슬라브주의등이 결부되어 철저한 소비에트 중심주의를 형성 하였다. 스탈린의 소련중심주의는 해와 더불어 강화되어 드디어는 무조건 소련을 수호하는 자들만이 참다운 국제주의자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소련중심주의가 되었다. 이리하여 전세계의 공산당은 소수의 유력한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소련의 제 5열적 존재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둘째로는 소련의 고립이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된다면 소련 일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트로츠키는 러시아혁명은 부르조아 민주혁명이며, 후진국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이 불가능하며, 고도자본주의국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독일의 자본과 기술로서 러시아의 공업화를 추진 사회주의혁명 러시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그의 영구혁명론의 요지이다. 여기에 대하여 스탈린은 1924년 말 러시아 1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고 강인하게 이것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소련 국내에는 사회주의의 객관적 조건 즉 고도의 기술, 생산력, 민주주의등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스탈린 지도하에 실현된 일국사회주의는 종래의 고전적 사회주의와는 인연이 먼 것이었다. 사회주의는 단지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착취없는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의 명목하에 실현한 것은 위로 부터의

산업혁명 즉 공업화이며 준엄 무자비한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었으므로, 노동자 농민의 생활수준은 혁명 전 이하로 저하되고 극심한 착취가 행하여지게 되었다. 이같은 착취를 강행하기 위하여 스탈린은 비밀 경찰을 활용하였던 것이다.

셋째로 위로부터의 산업혁명을 강행하게 되면 국가권력은 사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국가권력은 국내의 반혁명을 억압하고 외적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 외에 경제적 조직적 기능과 문화적 교육적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스탈린의 국가론이 나온다. 1939년 3월 제18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전개된 스탈린의 국가이론은 레닌의 국가사멸론에서 보면 퍽 수정 변화된 것이다. 스탈린의 국가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권력의 전능론이다.

스탈린의 국가전능론은 공산당의 일당독재 즉 당내분파의 금압에 의한 1인 독재 전제 지배와 결부되었으며, 스탈린 개인숭배 우상화를 수반 하였다. 따라서 스탈린시대의 해독은 인권유린, 강제노동 법의 무시등의 제 현상으로 나타났다.

2. 교수 방법

이 강의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공산주의를 창시, 형성한 자로서,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네사람을 선정하여 그들의 생애와 공산주의 이론에 첨가한점을 요약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다.

우선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공통점은 가정환경이 중류 이상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까지의 고등교육을 다 받은자들이란 점을 강조하여

야 할 것이다. 즉 공산주의는 프로레타리아계급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계급 위주의 이론이지만 이들은 중류이상 부르좌계급에 속한다는 것은 퍽 아이러닉한 현상이란 점이다.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은 인생의 중요시기를 망명생활로 보내고 빈곤과 고난의 나날을 보낸 점이 또한 그들로 하여금 반사회적 반역아로서의 인격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들은 인간 아니 인류를 사랑하다기보담 적대세력을 증오한다는 심정으로 가득차 있는 인물들이다.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강철같은 기율이라든가 무자비한 투쟁이란 술어는 이것을 반증하는 말들이다. 우리가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로 부터 받는 인상은 얼음장같이 냉냉한 모습, 즉 눈물도 웃음도 따뜻한 정감을 느낄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스탈린같은 자의 생애는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정립되었다. 즉 세계관 일반으로서의 유물변증법, 반영 모사설, 유물사관이 그리고 경제이론에서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을 두 주축으로 자본집중, 집적론, 중산계급 몰락론 노동자 빈곤화론, 대경영우월론, 산업예비군설, 상품과잉론, 및 대공황론등이다. 또한 정치이론으로서 계급국가관, 국가소멸론, 폭력혁명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중에서 후년에 논쟁이 벌어지고 정통파 이단파, 수정주의, 교조주의등으로 분열이 생겨서 여러 분파가 생긴 것은, 사회주의 실천방법으로써의 폭력혁명주의냐, 평화적 방법이냐에 따라서 많은 분파가 생겼다.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저서에는 이 양파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글이 다같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생존시 혁명이론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천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지만 그들의 운동은 모두 실패에 돌아갔다. 반면에 레닌은 러시

아란 후진농업국에서 혁명을 일으켜 사상처음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른다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곳에서만 사회주의혁명이 자연 필연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국민의 87 % 를 점유하는 러시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다는것은 마르크스의 이론의 부당성과 레닌의 새주장을 낳게 하는 것이다.

즉, 노동동맹론이든지, 당조직에 있어서의 소수 정예의 직업혁명가로서 구성한다든가 자본주의 발전 불균등으로 인한 자본주의 국가 지간에 제국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등이 그것이다. 또한 스탈린 단계에 이르러서는 후진농업국에서 위로부터의 산업혁명을 강행함으로써 일국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든가 . 소비에트 국가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의 파도기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로 부터 공산주의에의 파도기에 재하여서도 국가는 존속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이 마르크스나 레닌의 국가소멸론은 전면적으로 수정 되었다.. 스탈린은 자본가 계급이 소멸한 후에도 1인 일당 전제독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대파와 피비린내나는 권력투쟁을 하였으며, 수천만명에 달하는 인민을 숙청하였다.

이처럼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창시한 이론이 변질되어 가고 있고 공산독재자의 자이에 의하여 왜곡 변조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3. 참고 문헌

1. F. mehring ; Karl Marx, Geschichte seines Lebens, 3 Aufl, Leipzig, 1920.
(이 전기는 마르크스에 대한 가장 상세한것으로 정통적인 전기로 되어있다)

2. H. Laski ; Karl Marx, an Essay, London, 1921
(영국의 진보적 정치학자인 래스키의 마르크스 해석은 영국적이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3. Werner Sombart; Der proletarische Sozialismus, 1924.
(마르크스를 비판적으로 보며 그의 성격묘사로 부터 잘 분석한 대표적인 책이다)

4. E. H Carr ; Karl Marx - A study in Fanaticism
(영국의 외교관 출신의 정치학자의 마르크스의 전기로서 그는 비판적이면서도 생애의 구석구석을 냉정한 눈으로서 인간 마르크스를 묘사하고 있다)

5. Lenin, W, I ; Karl Marx, Eine Einführung in den Marxismus, 1914
(볼셰비키의 입장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6. Georg Lukács, Zur philosophischen Entwicklung des jungen Marx (184-1844)
(서구공산주의자로서 날카로운 이론가인 루카치의 이 젊은 마르크스 연구는, 그 당시의 인간 사회역사를 추구한 수준높은 연구서이다)

7. Lefebure, H; pour Connaitre la pensée de Karl-Marx, paris, 1947.

(프랑스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자의 간결한 연구서임)

8. Wilhelm Liebknecht; "Karl Marx zum Gedächtniss," 1896.

(마르크스 엥겔스 생존중에 사사한 리이브크네히드가 교사, 학자, 어버이로서의 마르크스를 잘 묘사한 것이다)

9. F, Engels ; Karl Marx; Karl Heinrich Marx;

(1878년에 Volkscalender와, 1892 콘랏드의 국가학 사전 제1판에 쓴것으로 가장 권위있는 고전으로 열거할 수 있다)

10. David Shub, Lenin (new york; Doubleday & co, 1948, p.438)

(레닌의 정치개념들의 발전과 또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권을 장악하려는 그의 투쟁에 관한 간명한 연구서다)

11. Louis Fischer, The Life of Lenin (new york; Harper & Row, 1964) P.703

(뉴요크 포스트지의 기고가로서 14년간 러시아에 거주하면서 연구한 것이며, 직접 경험과 러시아 최고 지도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얻은 재료가 풍부하며, 특히 레닌 생애에 있어서 1917년 후기로 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2. Alfred G, meyer, Leninism (new York; Frederik A prager, 1962)

(광범위한 연구에 입각하여 레닌사상을 철저하게 검토한 것인데, 세계 공산주의에 대한 레닌의 공헌과 기타 공산지도자들의 그것과를 구별하였으며, 여기에서 레닌의 역할을 확정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13. Robert payne; The Life and Death of Lenin;
Simon and schuster, new york, 1964.
(본서는 레닌의 생전부터 사후까지 그의 생활의 온갖면에 걸쳐 혁명가의 인상을 대하 소설의 구성과 필치로서 묘사하고 있다)

14. maxim Gorky; Days with Lenin; (London Merchin Lolence,)
(레닌의 생전에 친구로서 러시아의 문호인 고르키의 레닌에 대한 소감을 쓴 것임.)

15. Bertram D, Walf; Three who Made a Revolution, new york Dial press, 1948)
(공산주의에 대한 권위자가 볼셰비즘의 발생과 발전을 레닌, 트롯츠키, 스탈린의 세사람의 전기를 통하여 서술한 것이다)

16. Leon Trotsky; Lenin; 1960
(혁명의 원로이자 레닌의 한팔 역할을 한 트롯츠키가 쓴 것임)

17. Krupskaya; Memoirs of Lenin;
(레닌의 아내로서 그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본 남편의 면모를 그린것임)

18. James Maxton; Lenin; (London peter Davis, 1932)

19. Iseac Deutscher, Stalin; a political Biogra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University Press, 1949. P.600)
(트롯츠키 주의자인 저자는 그의 입장에서 스탈린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

20. Leon Trotsky, Stalin ; An Appraisal of the Man and His Influence,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6,) P. 516.
(스탈린의 최대경쟁자가 쓴 비판적으로 우수한 연구서적임)

21. Bertram D. Wolfe, Khrushchev and Stalins Ghost (New York; Fredrick A. Praeger, 1957) P. 322
(스탈린과 개인숭배를 배격한 후르시쵸프의 유명한 「비밀보고」에 내재한 의미와 모순을 세밀하게 폭로한 것임)

22. Bernard Hutton ; The Private Life of Josif Stalin; 1961.
(20세기 시대의 전제독재자인 스탈린의 면모를 여지없이 폭로한 전기다, 목적을 위해서는 스승도 친구도 처까지 살해한 이상생활을 그리고 있다)

23. Yaroslovsky ; Landmarks in the Life of Stalin.

24. J. T. Murply ; Stalin (1879-1944)

25. I. D. Levine ; Stalin.

26. 猪木正道著, 共產主義의 系譜, 角川書店
(마르크스주의, 포이엘박하, 랏사아레, 레닌, 트롯츠키, 스탈린등의 사상및 생애에 대하여 간결하게 조개함)

제 2장. 공산주의 이론의 변천과 모순.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현존자본주의 사회는 발달하면 할 수록 극소수의 자본계급과 다대수의 노동자계급의 2대계급으로 분열과 대립이 격화되어 무릎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 자본주의 사회는 자연필연적으로 붕괴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가장 뒤떨어진 농업국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공산당 일당독재를 실천한 것은 확실히 모순이며, 이것을 변명하기 위하여 레닌은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 이론과,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2대 진영의 대립의 고리중에서 가장 약한데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내세워 러시아 혁명을 이론화 할려고 하였다.

그러나 후진국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실천은 불가능하다는 트롯츠키의 영구혁명론이 나왔으며, 여기에 대하여 스탈린의 일국에서 사회주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주장하에 노동자, 농민을 혹사, 착취하여 위로부터의 강제 공업건설이 강행 되었다.

혁명직후 근 3년간 시도된 전시공산주의,

그 참담한 실패후 자본주의에의 후퇴를 시도한 신경제정책,

그후 출현한 부르조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택된

농업집단화정책, 그리고 공업에 있어서 5개년 건설계획의 개시,

그것도 여의치 않아 오늘날 이윤율 도입정책등 어느 것이나

시행착오의 반복이 아닌 것이 없다.

이처럼 경제이론이나 건설에 있어서 모순과 결함을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들의 계급국가론도 계급이 소멸되면 국가는 자연히 소멸하여 무정부 상태가 도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오늘날의 공산국가는 자본계급이 없으면서도 가장강력한 국가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은 자가 모순이다.
아니 공산국가는 국가만능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그들의 이론이 가장 비과학적이며 모순된 점이다.
따라서 스탈린이나 모택동은 마르크스나 엥겔스, 레닌의 국가 소멸론을 부인 내지 수정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I. 공산주의의 변천

1. 내용 개요

공산주의 이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 있어서는 자연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 사회는 붕괴하고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마르크스의 예언이다.
즉 자본은 소수 대자본가의 수중에 집중되고 대공업화는 기계가 노동자를 배제함으로써 대실업자군, 다시말하면 산업예비군이 생기고 일방에는 팔리지 않는 상품이 산적됨으로 대공황이 일어나서 노동자계급은 단결된 힘으로 폭력혁명을 일으켜 자본가는 멸망하고 사회주의 사회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그릇된 예측은 20세기에 들어와 곧 명백해졌다. 혁명은 선진 공업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장 뒤떨어진 농업국인 러시아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닌은 마르크스 교리의 타당성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제국주의론과 혁명이론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즉 마르크스주의 정통사상에 대한 레닌적 해석과 변조로서 그후 전세계의 공산주의 혁명 활동의 지도이론이 된 것이다. 후진 러시아에서 즉 선진자본국가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다 마르크스의 교리를 억지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의 본래의 개념을 몇가지 근본적으로 왜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

레닌은 공업화의 초기 단계에 있었던 제정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마르크스의 교리와 보수적인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혁명의 출현과 자본주의 최후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시대, 혁명에 있어서의 "당의" 역활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세계혁명의 개념과 노동계급의 전위로서 구성된 당의 전술상의 역활등등이다.
레닌은 마르크스 교리와 현실 사이의 명백한 상이점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후 최고 단계의 자본주의"를 묘사하고 있다. 즉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싼 원료를 얻기위해서 "제국주의적" 식민지 개척에 애쓸 것이라고 하였다, 독점 기업이 발전될 것이며, 금융자본이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할 것이며, 또 자유경쟁은 기업 연합화될 것이라 하였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곧 그들에게 매달린 식민지들에 의해서 맹렬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며, 또 파괴적인 세계전쟁이 나중에 폭발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은 약화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혁명은 "자본주의 계열의 가장 약한 연결점"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920 년에는 레닌은 식민지에 있어서의 반제국주의 투쟁이 두가지 단계로 일어나리라고 예측하였다.
첫째로 많은 집단이 제국주의 권력을 축출하기 위해서 단결하는 민족주의적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다음에는 사회주의 단계로서, 여기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부르죠와 기타 압박계급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혁명의 조직적 및 실용주의적인면에 대해서 많이 유의하기는 했지만, 경제적 발전의 필요한 조건들에 의해서만 프롤레타리아 혁명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오직 중앙집권화 되고 훈련된 직업혁명가로 구성된

프롤레타리아 당만이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고히 믿었다. 당 자체도 군대식으로 즉 권력에의 완전한 중앙집권화, 엄격한 훈련, 강철같은 규율, 민주적 중앙 집중주의 원칙에 따른 완전한 복종등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레닌은 이런 식으로 볼셰비키당을 조직하였고 또 이것을 통하여 러시아 혁명을 완전히 지배할 수 가 있었다. 이처럼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볼셰비키당 독재가 되었으며, 나아가서 공산당 일당 독재가 된 것이다.

레닌은 세계혁명의 전략과 전술로서, 이같이 고도로 훈련되고 중앙집권화된 당들을 가지고 최후 목표인 세계혁명, 즉 권력의 장악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혁명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중"과의 접촉은 여러가지 대중의 조직과 노동조직, 그리고 노동조합에 침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고, 기타의 그룹들을 혁명 목표에 이끌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할 것이며 , 순진한 무리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일선조직을 형성해야 할 것이며, 또 노동계급의 동정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여하한 경쟁적인 운동도 무자비하게 강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들이 따로 당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며" 또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형성하여, 조직케 할 그들 자신의 원칙을 당파적으로 따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볼셰비키 혁명을 보호하며, 발전시키려는 레닌은 전에 없던 가장 당파적이고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당을 형성케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레닌의 견해는 1919년에 모스코바에 국제공산당(코민테른)이 형성 됨으로서, 세계 모든 가입 공산당들을

레닌의 모랄적인 원칙에 얽매어 놓았으며, 나아가서 민족적인 지령과 모랄적인 혁명의 실천에 예속시킨 것이 되는 것이다.

1920년 제 2차 코멘테른 대회에서 소위 21개 가입조건이 확립되었다. 이 조건의 대표적인 것은, 사민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할것, 노동조합 속에 공산당 세포를 조직할 것,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를 고수할 것, 최후의 혁명에서 집권하기 위하여 의회주의가 존재하는 곳에서도 비밀 지하조직을 만들기로 한 것 등이다.

이와같이 하여, 레닌은 하나의 중심에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를 각화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각 국의 공산당은 스탈린 후 해빙기에 이르기까지 코멘테른 후에 생긴 코민포름 (코멘테른은 2차대전중 연합국과의 협력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1943년에 표면상 폐지 되었다) 하에서도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여러가지를 추종하였다. 스탈린 사망후 해빙기에 코민포름은 "개인숭배"를 배척 한다는 이유에서 해산되었다. 그후 전 세계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소련 공산당의 권위는 실추되어 가고있다.

레닌은 정권을 잡은 후 마르크스의 교리를 혁명후의 러시아 현실에 적용시키려하니 공언한 이론과 실제 행동 사이의 명백한 간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마르크스의 교리를 더욱 변형케 했다.

1924년 1월의 레닌의 죽음은 볼셰비키로 부터 그들의 지도자를 빼앗고 또 소련내에 있어서의 권력 투쟁을 야기케 했다.

레닌의 지도권을 계승할 주요한 후보자들 중에서 트로츠키와 스탈린은 몇가지 이념적 및 전술적 문제에있어서 완전히 결렬되었다.

그들의 가장 심각한 의견대립은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에서 발달된 것이다. 트로츠키는 경제적으로 미 개발지역인 러시아 사회가 주위의 자본주의 세력을 대항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없으니까

오직 전 세계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만이 러시아에 있어서 볼셰비키 정권의 영원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정했다.
스탈린은 이에 대하여 국제공산주의의 최후의 성공을 소련의 경제적 정치적 및 군사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그의 주장에 입각하여, 그의 "일국사회주의" 원칙을 가지고 맞섰다. 스탈린에 의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러시아의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만 발전될 수 있고 또 러시아의 힘의 세계혁명 기지는 나중에는 전 세계를 통한 공산주의 승리를 보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탈린의 이 견해는 그가 레닌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또 소련의 경쟁할 수 없는 독재자로서 자신을 확고히 하자 공적인 교리가 되고 말았다.
스탈린에게 있어서도 "일국사회주의"가 그렇다고 해서 혁명을 수출하려는 노력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2. 교수 방법

이 강의에서는 마르크스 교리에 있어서 자연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몰락한다는 이론이 현실과 틀린다는 결과 레닌에 의하여 그것이 왜곡된 점을 역설해야 한다. 선진 공업국가들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혁명이 일어난다는 마르크스의 견해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레닌은 그 이론에 중요한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계급 투쟁의 강렬화와 혁명에 관한 마르크스 예언의 실패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하의 노동자계급의 역사를 뚜렷이 보여 주면서, 공업화된 서구 사회에 있어서의 실제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요약해 말해주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 자본주의 세계

는 확실히 노동임법이든지 사회보장법을 만들고 모순된점을 시정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피해나갈 수가 있었다. 프로레타리아의 빈곤증대든지, 부르좌지의 점차적인 감소, 노동계급의 혁명에 대한 열성등. 마르크스가 예언한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상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강의는 계급투쟁의 개념을 좀더 취급해야 할 것이다. 계급투쟁을 변증법적 발전의 테두리아에 맞추어 넣기 위해서 마르크스는 현대의 공업화된 사회의 복잡한 사회구조를 두가지 계급 즉 부르좌 착취자들과 짓밟힌 프롤레타리아의 두계급으로 나누었다. 그는 서구사회에 있어서 그의 예측밖에 있던 많은 구조적인 경제 및 사회변천을 명백히 감지하지 못하였다. 확실히 계급적 차이와 분열은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증대하여 가는 생산력과 소비, 사회적 이동, 줄어가기 보다 더 인상되어 가는 임금등이 계급간의 긴장을 덜어주고 사회적 안정에 이바지함에 따라, 계급투쟁은 그 중요성이 줄어진 것이다. 마르크스 이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계급투쟁보다 역사적으로 더 큰 중요성을 띤 투쟁이 있었던 것이다. 예를들면 국가적, 민족적 및 종교적 투쟁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레닌도 제1차 대전의 전야에서는 민족주의가 계급투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 하였다.

강사는 레닌주의 공헌은 러시아에 있어서의 혁명운동과 연관지어져야 한다. 그의 제국주의 이론도 제1차 대전에 선행하는 모든 조건들과의 관련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홉스온과 힐, 파딩의 학설들을 이용하여 제국주의 이론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특히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황하는 반 식민주의 및 반 제국주의 감정의 합리화로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강사는 마르크스의 예견이 그릇되었던 것처럼 제국주의 종말에 대한 레닌의 예언도 그릇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후 식민지를 상실한 영국, 프랑스, 벨지엄 제국등의 노동자들의 생활을 더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레닌의 집착성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
헌신적인 직업혁명가로서 구성된 준군대식 볼셰비키 당의 조직이론 및 작용에 관하여 레닌의 지도자연한 설은 위와같은 관계에서만 알 수가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선봉"으로서 또 필요한 혁명의식을 프롤레타리아 대중에게 불어넣을 작용자로서의 당은, 혁명에로의 레닌의 수단이었다、 레닌의 당조직 원칙을 특히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의 의의와 중요성을 잘 설명하여 공산주의 운동의 중요한 원칙의 몇가지를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실로 이것이 마르크스 주의에 대한 레닌의 주요한 수정인 것이다、 인민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될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하여 레닌은 인민에 대한 공산당의 독재를 대치시켰으며 그리하여 전폭적인 전체주의에로의 길을 마련한 것이다.
공산주의 운동의 실지 지휘를 위한 개념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조직을 모조리 이용해야 한다는 레닌의 충고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 개념의 발전을 1920년대의 소련의 국내적 및 국제적 위치의 관계에서 개설할 필요가 있다.
강의는 "일국 사회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세계 공산혁명의 명제로부터 이탈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추구함을 의미한 것이다、 스탈린은 공산주의 승리의 혁명적 불가피성을 비난도 하지 않았고 부정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강력한 소비에트러시아가

혁명적 노력을 추진하고 또 지휘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의 도래를 약간 역설했을 뿐이다. 스탈린의 견해는 러시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혁명과 성공이 세계혁명의 즉시 추구와 승리에 달려있다는 트로츠키의 견해와 반대입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3. 참고 문헌

1. V. I Lenin, "Impé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new york; Random House, 1962) pp 148-164

2. K. Marx and F Engels, "Manifests of the Communist party, pp. 89-110.

3. H. B. acton, The Illusion The Epock; Marxism leninism as a philosophical Creed (Baston; Beacon press, 1957) P.278

(레닌의 사상을 취급한 우수한 저서인데 마르크스의 기본개념을 레닌이 어떻게 타락시켰는가를 강조하고 또 그 개념들을 엄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4. M, Bober, Karl Marx's Interpretation of History, rev.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8) p.445

(사회경제 학설로서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표준적이며 철저한 비판 및 해설서이며, 특히 마르크스의 역사관의 유토피아적인 면을 폭로 하곳이 우수함)

5. Max Eastman, Reflections on the Failure of Socialism (New York; Devin-Adair 1955) P.122.

(사회주의와 마르크스 주의를 왜곡한 레닌과 스탈린을 비판한 논문집인데, 마르크스자신까지 비판하고 있다)

6. Martin Ebon, World Communism Today (New York; Graw Hill, 1948) P.506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보급된 세계 공산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7. Harold H Fisher, The Communist Revolution; an antline of Strategy and Tactics (Stanford, Calif;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55) P. 89.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저명한 학자중 한사람이 공산주의 혁명 전략에 대한 간단한 통찰을 보이고 있다)

8. R, N, Carew Hunt, Marxism, Past and present New York; the Macmillan Co, 1954) P.180,

(마르크스 주의가 러시아에 넘어감으로써 이루어진 이론적 변화를 학자적으로 취급한 것인데 레닌, 스탈린의 교리와 본래의 마르크스 사상과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다)

9. Alfred G, Meyer, Leninism (New York; Frederick A Prager, 1962) P.342.

(광범위한 연구에 입각하여 레닌사상을 철저하게 검토한 것인데 세계공산주의에 대한 레닌의 공헌과 기타 공산 지도자들의 그것과를 구별하였으며, 여기에서 레닌의 역할을 확정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10. Gunther Nallan, International Communism and World Revolution; History and ethod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P. 357.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인데, 그 이론적 및 방법론적 배경을 논하고 있다)

11. Joseph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New York; Harper Torch Books, 1962) P.431.
(서방의 대경제 학자이며, 사회역사가가 쓴 이 고전의 처음 네장은 사회이론 및 경제이론으로서의 마르크스 주의에 대한 자신있는 비판을 싣고 있다)

Ⅲ. 공산주의 국가 및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1. 내용개요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마르크스·레닌의 이론은 공산주의의 이념과 오늘날의 공산사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 이론은 세가지 면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모든 비 공산주의 사회 및 국가를 저주할 때의 이론적 근거로서이며, 공산주의 통치 특유의 정부형태를 정당화할 때에 사용할 이론으로서, 그리고 또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지침으로서 다시 말한다면 폭력혁명으로서 권력을 장악할 때에 사용할 전략, 전술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 같다.

마르크스는 "국가라는 것은 한 계급에의한 다른 계급의 억압기관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고 이것은 민주공화제에 있어서나 군주제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다" 라고 함으로서 국가를 본질적으로 악으로 보았다. 또한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이 사회의 정치적면도 역시 지배하며, 또 이런 지배를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가 국가인 것으로 된다. 경제적인 요소가 모든 정치적인 발전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의 정치적면은 단지 경제적 지배 기구를 피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마르크스는 주장하기를 자본주의 하에서는 국가는 부르좌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며 따라서 국가는 그것이 어떠한 제도적 정치형태를 취했든 간에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이 지배적인 경제계급의 독재를 영구화하는 데 이바지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리하여 자본주의 국가는 근본적으로 기성 경제질서를 지켜주는 후견자이며, 또 그 모든 강제적인 도구(군대, 경찰, 법제도) 는 근본적으로 이런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권력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하여 조직된 권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사적유물론에 의할 것 같으면 부르좌에 의한 프롤레타리아의 억압은 자본주의가 일단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나면 오래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부르좌지를 제거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공산주의 유토피아에로의 제일보라고 말하였으며, 이 최후의 "좋은 사회" 의 근본적인 특색은 계급이 없고 따라서 폭력도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계급간의 투쟁이 제거되고 착취가 없게 되면, 국가의 필요성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엥겔스에 의하면 이 계급없는 사회가 확립되게 되면, 국가는 "자연히 소멸하여 버린다" 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급적 지배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강제적인 기구가 전혀 비강제적인 사회로서 출현함에 따라, "모든 공적인 작용은 그 정치적 성격을 상실하여, 오직 진정한 사회복지를 위하는 순전히 행정적인 작용으로 변형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는 생활의 물질적인 면을 더욱더 지배하게 되며, 또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기만 원하는, 점점 죽어 가는 제도가 아니라, 점점 성장해 가는 제도가 되고 말 것이다. 이리하여 "인간의 통치" 에 대신하는 "사물의 관리" 가 마르크스 주의자들의 근본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혁명후의 프롤레타리아 사회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나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그들의 유토피아가 도래할 시기를 명백히 예언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 직후의 시기 즉,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라고 말한 과도적 시기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성공적으로 끝난 혁명과 유토피아적인 공산사회의 출현사이의 과도기를 통하여 마르크스는 모든 강압적인 수단을 완전히 지배하는 강압적인 계급이 프롤레타리아가 되지 않는 한, 강압적인 수단으로서의 국가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리라고 예상했다. 국가는 한 편으로 인간 발전의 최후의 단계인 공산주의에 대한 선결 조건으로서의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이외의 모든 계급들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멸망시키는데에 사용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 독재 단계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의 중요한 임무는 자본주의의 경제제도와 계급적 원수인 부르좌지를 복멸하는 일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단계에 있어서는 사유재산 제도는 철폐된 것이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급적 차별이나 착취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사회주의와 중앙에서의 모든 계획 수립은 인간의 성질을 사회주의화하고 또 국가에 대한 필요성을 없애기 위한 강압적인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경제생활을 완전히 변형시키게 될 것이다.

레닌, 스탈린은 마르크스주의 국가 개념을 러시아의 사회적 조건 및 전통과를 융합시키기 위해서 여러 면에서 수차 수정하였다. 자본주의 국가는 폭력적인 혁명에 의해서 분쇄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부르좌 국가는 "부르좌지를 진압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의 특별한 압력에 의해서" 전복될 것이라고 하였다. 레닌은 또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아무런 법적 구속을 받음이 없이 행동하며, 테러 행위는 통치의 제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독재정체가 입각하는 근거라고 정의했다. 즉 폭력의 예찬인 것이다.

스탈린에 의하여 마르크스, 레닌의 국가교리는 특히 국가 소멸론은 변질되였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공산당에 의한 완전한 독재로 굳어졌으며 국가는 이제 불가피한 악이 아니고 소련 전체주의의 영광스러운 상징이 되었고, 표면적으로는 사회전체를 자본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공산주의 최고 단계"에로의 안내자가 된 것이다. 국가의 권력은 최고도로 발전되었고 또 그것은 소련사회에 있어서 보편적인 지배력이 된 것이다.

전능적인 국가에 있어서의 정치 권력의 완전한 집중은 소련사회의 경제 및 사회부문의 완전한 변형을 뒤따르게했다. 모든 경제를 국가의 보호와 통제하에 완전히 집중화하는 것을 정당화시켰다. 국가의 통제는 문화적, 종교적, 및 지적 활동의 모든 분야에 미치게 되고 사회전체가 적응을 강요 당하였다.

국가의 권력은 공산당과 스탈린으로 하여금 생활의 모든 면을 완전히 통제케 하면서 소련을 발전시키려는 거대한 노력에 있어서 최고도로 이용되었다. 권력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는 유일한 요소가 되었으며, 또 이념은 표면적으로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이바지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때 그때에 편리한 대로 수정되었다 그때 그때의 변화와 더불어 교리에 대한 모든 반대는 무자비하게 탄압되고 또 강철 같은 규율과 무자비한 테러의 지배가 중요한 통치도구가 되었다. 스탈린시대는 진정으로 전체주의 국가의 창설을 가져왔다. 스탈린은 테러, 비밀경찰 및 노예노동을 이용하여 그의 통치 기간의 본질적인 요소로 발전 시켰다.

모든 제도와 이념이 계급지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그들의 관념과 국가관을 생각할 때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 정부의 기본

관념을 멸시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의 법에 입각한 통치는 그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법은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력의 반영에 불과하며 또, 그것을 영구화하려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에트의 법률이란 말도 있지만 그 이론적 근거는 "사회주의" 국가의 방위에 있고, 또 소위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선천적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에서는 개인의 권리는 국가의 의지에 예속된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간을 통하여 지배하는 공산당의 견지에 따라서 해석되는 것이다.

그들은 강압과 폭력에 입각한 독재적 정권을 통해서 사회는 자본주의에서 받은 악의 유산을 씻어버리고, 따라서, "각자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받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유토피아의 출현을 위하여 준비할 수가 있다고 한다.

이 모든 어리석은 견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건 "지상에서 분쟁없는 천국" 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까지 매력을 가지게 하는 것을 이해함이 중요하다.
이 목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들로 하여금 여하한 수단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이 보인다.
게다가 공산주의 자들은 여하한 방법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단과 그 최후의 목표와를 연결시켰던 것이다. 마르크스가 혁명적인 폭력이 공산주의 사회를 위한 투쟁에 필요한 일부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추종자들도 역시 기간이야 아무리 오래 걸리든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전 기간을 통하여 모든종류의 폭력의 계속적인 사용을 정당화 시켰다.

2. 교 수 방 법.

이 강의는 자연히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의 국가와 그 역할의 개념을 묘사하고, 분석한 다음에 평가하는 일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국가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또 인간발전의 여러가지 단계에 있어서 국가의 역사적인 역할에 대해서 그가 분석한 바를 면밀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국가는 계급적 억압의 도구"라는 정의에 대하여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사회속에 비경제이며 또 비강제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 못했다는 것이 큰 이론적 결함임이 여기에서 가장 용이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소멸하여 버린다"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예언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들에 있어서의 국가의 실지 역할과 대조해 보면 흥미있는 문제다. 마르크스는 확실히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간을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그렸다. 소련에 있어서의 공산당 통치가 50여년간 경과하였지만 국가 없는 사회를 산출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 전능의 사회를 만들어 냈다. 또한 국가없는 사회에로의 아무런 발전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은 그렇게 놀랄 일은 못된다. 왜냐하면 사실상 마르크스나 레닌은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 그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급차별과 노동자의 착취를 제거하기 . 커녕, 새로운 계급의 소수 독재정치가 창설되었고 따라서 피착취계급인 노동자는 그의 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지배력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오히려 소련국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국가는 노동자들의 독재로서 발전하기는 커녕, 개인을 국가의

필요에 따라 예속시키는 무자비한 관료주의가 되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이다. 압박의 도구로서의 국가는 국민에게 대하여 여태까지 사용한 일이 없던 테러적인 경찰의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을 발전시킨 공산주의자들 밑에서 관료, 전세, 독재의 도구로서 세련 되게 되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특색과 그 의의에 대한 마르크스와 레닌의 서로 다른 개념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러시아 혁명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의 견해에 의하면 독재 기간중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국가 인구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본질적으로 다수의 통치가 된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권력을 잡은 볼셰비키당은 그 인구의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러시아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러시아의 농촌 대중에 대해서 소수인 볼셰비키당이 행한 철의 강권통치가 된 것이다. 정치적 권력의 박탈 및 모든 종류의 자유의 제한이 통치 법칙이 된 볼셰비 전제주의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레닌이 만들었음. 그의 프롤레타리아 국가 개념은 훈련된 소수의 전위대, 즉 직업혁명가에 대한 그의 편애로 형성되었다

볼셰비키 정부에 대한 레닌의 개념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그의 저서 "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변절자 카우츠키" 일 것이다. 레닌주의의 반 민주적인 성격은 그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은 " 여하한 법률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며, 또 같은 글속에서 독재는 사실상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라고 말한 가운데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레닌은 단일당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국가는 사회계급을 폐지시킬 수 있고, 또 단결된 국민 대중이

조화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윤리적 수준이 높은 사회적으로 평등한 그런 사회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날 공산사회의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먼 사회로 변질되었다.

이 강의는 국가가 언젠가는 소멸한다는 마르크스-레닌의 관념을 설명하고 비판하는 것으로서 그쳐야 한다. 그들은 다같이 아무런 강제없이 국가가 최후에는 소멸하고, 국가없는 사회가 도래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러시아의 볼셰비키 정권의 영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강제적인 면이 그 극도까지 발전된 하나의 과거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냈다.
국가없는 사회에 대한 비판은 모든 역사적인 경험과 심리학적인 연구가 그 같은 분쟁없는 사회의 개념을 부인하며, 또 분쟁은 오르지 계급적 상이의 형태로서만 일어 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암시를 신정치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스탈린은 러시아의 경제적 및 군사적 발전이 급속도로 진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압도적으로 강력한 국가기구가 이 임무를 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그이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국가 이론은 완전히 변혁해 버린것이다. 이 강의에서 스탈린시대가 전체주의적 국가 개념에 입각하여 어떻게 발전했으며, 어떻게 통치되어 나갔는가를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러시아의 공산당은 이 전능적인 국가내에서 유일한 지배요소가 되었으며, 또 그 지배기관들은 곧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서기국 독재로 되었다"고 한 트로츠키의 말대로 당 자체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장악했다. 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효과적으로 조종된 사회는 이제 스탈린이 소비에트 러시아를 급속한 공업화를 통하여 건설하려고 나섬에 따라 완전한 경제적 및 사회적 변혁을 겪게 되었다.

3. 참 고 문 헌

1. Fr. Engels;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moscow, 1948.

2. Engels; Herrn Eugen Dührings Umwälzung der Wissenschaft, 1878.

3. V.I. Lenin; State and Revolution; Carl Cohen (New York; Random House, 1962) PP.176-178.

4. 金斗烈著, 마르크스레닌 주의의 崩壞, 新文化社刊 PP318-332 PP.354-382

5. Hans Kelsen, The political Theory of Bolshevism. a critical analy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8) P.60

(스탈린시대의 공산주의의 이론과 그적용과의 모순을 분석적으로 평가한 것).

6. Zbigniew K, Brezinski, The permanent purge; Politics in Soviet Totalitarian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p.256

(소련 제도에 있어서의 테러와 숙청의 필요한 역할을 자극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7. Robert Conquest, Common Sense about Russia (new york; The macmillan Co, 1960) P.175.

(소련 국가에 대한 간단하고 비판적인 소개.
V, VII, X 및 XIII 장은 이때에 적절한 내용이다)

8. George Lichtheim, Marxism — an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New york; Frederick A, Braeger, 1961) P.412

(P

(마르크스 주의와 현재의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철저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

9. alfred G, meyer, Communism, 2nd ed, revised and enlarged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2) p.218 .

(공산주의 교리에 대한 연구인데 특히 국가와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해서 적절히 썼다)

10. Donald W, Treadgold, Lenin and His Rivals ; The struggle for Russia's Future, 1898 – 1906.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55) P.291 .

(볼세비키 교리에 대한 레닌의 초기의 공헌에 대한 권위있는 연구이며, 러시아 혁명운동에 있어서의 초기 투쟁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기록임)

Ⅲ. 공산주의 이론 비판

1. 내용 개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교리가 과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의 사회주의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호칭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어느모로 보든지 그 반대이다. 어떠한 이론이 과학적이라고 불리우기에는 최소한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로 경험에 입각시켜야 하며, 둘째로 이론적이고 일관성이 있게 제시되어야 하며, 셋째로 자유로이 비판될 수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되든지 부정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경험에 입각하지 않고 선험적인 독단설의 일종으로 제의 되었으며, 또한 이론적으로 조직되지도 않았다.
그것은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 자체를 영원불변이라고 믿는다.

내세론(來世論)에 관한 한, 공산주의는 명백히 과학이 아니고, 희망적 생각에서 나온 사회적 신화이다. 과학은 절대로 이러한 이상을 그 목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어떻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다, 따라서 절대로 꼭 "어떻게 된다"고 말할 수 없다. 공산주의 철학은 그 보다도 더 나쁘다.
그것은 한 번도 입증되거나 시험된 적이 없이 다만 마르크스, 엥겔스 및 레닌의 저술에 근거를 두고 그 권위로서 용납된 성첩적인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의 대부분은 순수한 형이상학이고 과학의 영역 밖에 있다. 과학은 하기와 같은 주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실제 자연이 근원적이며, 물질은 객관적 실재물이다. 사회는 더 좋은 단계로 발전한다. 모든 요소는 활동중에 명시되며 물질 그 자체에도 이해 될 수 있다는등, 이같은 종류의 철학은 과학적으로 무의미한 말로 가득 차 있으며, 따라서 과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무의미하다.

그 밖에도 이 체계는 일관성이 없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형성되어 있다. 끝으로 그들의 방법론이 비과학적 성격을 드러낸 것은 공산주의자가 희구하는 목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방법론이 한 번도 입증하지 못하였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들의 교리는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산주의 이외의 다른 사회주의 교리들을 전파할 수 없다. 심지어 공산주의 그 자체의 해석까지도 자유로이 할 수 없으며, 당이 아닌 일인 독재자가 이 해석을 엄격히 조정한다.

결론으로 공산주의가 그 본질에 대한 많은 거짓을 전파한다면 이것은 과학적인 교리라고 하는 주장이 아마 거짓중에서도 제일 큰 거짓일 것이다.

고전적 공산주의적 정의에 의하면 종교란 환상적인 것, 즉 허구에 불과한 것인데 첫째 인간의 머리속에 박혀 있는 자연력에 대한, 둘째는 사회적 힘에대한 환상적이며 허구적인 관념이라 한다. 인간은 이 두가지 힘에 대하여 무력감을 느낀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종교를 부정하고 이와 투쟁하는 데에는 상이한 두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바,

첫째는 그것이 단순히 허황된 학설이라는 것과 둘째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해로운 이념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종교는 본질에 있어서

비난할 대상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 주의의 지침에서 볼때, 종교가 순수하면 할 수록 더 나쁘고 위험 하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종교이론은 가장 유치한 논법으로 사물의 진상을 전적으로 오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실은 그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모든 종교는 허위라는 독단적 설명은 여하한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아무도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없었으며, 아무도 즉 모든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유물론의 진리성을 논증해 내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러한 부정은 단순히 신념의 표현으로만 이해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그것은 공산주의적 교리에 유리하도록 다른 모든 신념을 부정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

피착취자에 대한 위안물로서의 종교의 중요성이라는 말은 몹시 시련을 당한 사람이 보다 더 쉽게 종교에로 전향하는 한에 있어서만 정당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이 착취뿐만 아니라 질병, 편파된 사랑, 실패, 그리고 죽음등도 당하는 것을 잊고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상적인 소위 실존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들에 대하여 전혀 맹목적이며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자에게는 죽음이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모양이다.
종교란 원칙적으로 또한 본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인 것이다. 누구든 이러한 종교를 단지 착취할 경우의 위안으로서만 생각하는 사람이면 사실을 기만하는 것이다.
종교가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부과된 이 지상에서의 의무로부터 이탈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못지 않게 인간은 흔히 종교에 의하여 이러한 의무

이해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카톨릭 및 불교사원이 경제 및 문화에 있어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 가운데서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종교가 위대한 혁명세력까지도 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스탈린식으로 착취를 당했던 폴란드의 포즈난의 노동자들은 1956년에 성가를 부르면서 경찰서까지 행진해 갔으며, 항가리와 폴란드의 혁명운동은 교회지도자들의 석방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공산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과 결함을 지적한 점에서 하나의 매력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붕괴의 역사적 필연성은 실현되고 있지않다. 그 이론의 중추가 되는 노동가치설이든지, 잉여가치설, 중산계급 몰락이론, 노동자 빈곤화론, 산업예비조절, 상품과잉설, 공황할 이윤율 평균화론 등 많은 이론들은 오늘날 태반이 그릇된 이론으로서 증명되었으며, 뒤떨어진 이론으로 되고 말았다. 그 예로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 수록 노동자가 빈곤화된다는 이론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의 노동자와 후진자본주의국의 노동자들의 생활상태를 비교하여 보면 세살먹은 아이들도 그것이 그릇됨을 이제 알게된 것이다. 즉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의 노동자가 훨씬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중산계급 몰락론도 오늘날 독일 일본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중산층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요컨대 상기의 이론은 오늘날 경제학에서는 이미 뒤떨어진 이론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론에는 어떻게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간생활을 자유; 그리고 풍부하게 하는가의 건설적 강령이 이론중에 없다. 그러므로 러시아에서 혁명이 성공하고 공산당일당 독재정부가 수립되었지만 그 순간부터 이론적 근거가 없어서 암중모색

의 시행착오를 하게 된 것이다. 공산주의는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파괴이론은 있어도 그후의 건설이론은 없다. 소련은 바로 건설방면에서는 첫 걸음부터 시행 착오의 반복이었다. 혁명직후 근 3년간 시도된 전시공산주의, 그 참담한 실패후, 자본주의에의 후퇴를 시도한 신 경제정책, 그후 출현한 부르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택된 농업집단화정책, 그리고 공업에 있어서 5개년건설계획의 개시, 이윤율 도입정책등 어느 것이나 시행착오의 반복이 아닌 것이 없다. 이처럼 경제이론이나 경제건설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모순과 결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경제 건설에 있어서 시행착오와 실패의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그것은 노동자 농민을

강제 노동시킨것을 당이 착취하여, 중공업이나 군비 강화에 이바지한 강대국가 건설이론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공산주의는 전체주의 교리와 제도들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존재인것이 증명 되었다. 공산주의가 인간제도의 기초가 되게 되면 그때에는 결정자들은 인간의 모든 국면을 통제하려 들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질상 통제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회의 모든 부분은 교리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취급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로 하여금 이미 권력을 잡은 곳에서는 사회의 전체를 통제하게 하며, 또 기타 어디서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영원한 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논리가 있는 것이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독단설의 진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위협이 되며 따라서 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신조의 예언자들이 신봉하던 높은 이상과 그들이 일단 권력을 잡은 후의 행동과는 현저한 차이가 생기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목표와 그들이 세계의 각처에서 확립한

전체주의적 통치의 현실이 그와같이 다른것은 대체로 그 근본가치설이 엄격한 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또 실제 기록된 역사와는 어긋나는 단일교조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현실을 관찰하며, 모든 진리를 결정하려고 하는 데서 결과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절대주의는 그들의 전술적 조정 능력과 효과적인 강압방법, 또 20 세기 폭군들이 사용할수 있는 사찰제도 때문에 더 오래 계속해 왔다.
노동자 계급에 의한 통치를 의미했던 "무산계급 독재" 레닌은 강력히 조직된 독단적인 혁명주의자들의 당으로 고쳐 놓았다.
불란서 혁명이 그 난폭한 단계에 들어가기 훨씬전에 에드먼드 버크는 광신자들이 정치제도의 기초로서 절대성을 내세우는, 모든 사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 했다.
"냉정한 심정과 흐린 이해력의 소산이며, 또 확고한 지혜나 취미나 우아성을 결한 이러한 야만적인 철학에 입각한 법률은 폭력을 가지고서만 유지될 수 있으며, 또 각 개인이 그 법률속에서 발견하는 개인적 이해관계로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들의 학원, 조망속에서는 한 풍경이 끝나면 곧 교수대를 보게 되는 것이다. 국가측에서 볼 때에는 우리의 애정을 끄는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이러한 기계적인 철학 원칙위에서는 우리의 제도는 인간속에 구현될 수 없고 따라서 우리마음속에 사랑과 존경과 찬관과 애정의 감정을 일으킬수 없는 것이다." 라고 버크의 이와같은 묘사는 소련이나 중공이나 기타 공산제국에 해당하는 말이다.

2. 교수 방법

이 강의는 공산주의의 과학적 방법, 종교, 경제질서, 정치질서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그 주장이 그릇됨을 이해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사는 우선 과학자체가 공산주의로서는 정립되지 않음을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이 믿고있는 과학적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자연필연적 붕괴로서 실현된다면, 그것이 꼭 월식의 출현이 자연 과학적으로 측식이 가능한 것처럼 과학적으로 가능한다면,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장 하려고 조합을 만들고 운동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넌센스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설사 자본주의 붕괴의 필연성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인식되어도 그것은 자본 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이 적당한가 부적당한가의 [illegible] 가치 [illegible] 문제다. 자신의 [illegible]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의거하는 원리 여하에 당부(當否)를 결정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없으면 안된다. 사회과학적 인식과 사회정책적 인식과는 그 근거를 달리한다는 것을 이미 맑스 웨버는 논파하였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마르크스의 격언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종교관의 지주가 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언제나 모든 현대적 종교와 교회 및 모든 종교적 기관의 착취를 변호하고 노동계급을 마취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부르조와적 반동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종교관 전혀 이와는 다른 것이다. 한가지 예만 이용해보면, 젊은 왕자인 가우타마가 붓다가 되려고 [illegible] 재물, 사회적지위 더우기 사랑하는 처자까지도 버리

고, 황야로 들어갈때, 그 왕자가 이런 행동으로 자기자신을 위하여 기생충적 생존을 위한 안이한 구실을 추구했다고 누가 감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종교의 역사에는 이러한 행위로 가득차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가치의 실체는 생산 소비된 노동이며 그 양은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양이며, 일정의 조건하에 있어서 그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비근한 예를 들기로 한다.
즉, 깊은 바다밑에 들어가 캐어내는 진주는 비싼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가치는 반드시 잠수노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일까? 진주와 같은 것을 깊은 바다밑에서 같은 곤란으로서 채취된 것은 쓸것 못쓸것 아름다운 그렇지 않은것 아무거나 모다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어떤 사람도 그렇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즉 사람은 이와같이 쓸모 없는 아름답지 않은 물건을 채취하기 위하여 잠수의 노고를 감히 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치가 노동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 자체에 있으므로 사람은 그것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는 노동을 투입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치의 유무 대소는 물건이 인간에게 쓸모있느냐 없느냐, 욕망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의 근본지주인 노동가치설은 성립되지 않으며 그것으로부터 연유하는 잉여가치설도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가지 이론에 근거를 둔 자본주의 승리론도 성립되지 않게 된다. 다음에 오늘날 공산국가의 경제건설이 자지부진한 점을 강사는 강조하여야 한다.

다음에 강사는 "전체주의"에 기초를 둔 그들의 정치질서에 대한 비판을 함에있어서, 우선 "전체주의"라는 용어 설명을 먼저 해야 한다, 소수인의 손에 모든 권력이 집중적으로 장악되어있고, 뿐만 아니라 그 통신과 사회의 전 통제력이 모두 장악되어 있는 현대의 전체주의는 강제노동 수용소가 있던 스탈린의 러시아의 공포와 그리고 "인민공사"를 가진 모택동의 중국 등과 관련시켜 말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때문에 전체주의 통치하에서 살아본 사람들의 직접 경험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가끔 필요하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전체주의 국가에서 보다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행동이 훨씬 더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지적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상의 통제, 개인의 깨어있는 시간에 대한 지배 및 그의 반응을 조절하려는 체계적인 노력등이 다른 어떤 전체주의 국가에 있어서 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것이다.

강사는 또한 공포, 경찰력, 이념상의 선전 및 곳곳에 침투되어 있는 조직, 등이 공산국가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도구가 되어있는가를 지적해야 한다. 강사는 모든인간 제도를 한개의 주의의 테두리 안에 끌어 넣으려는 노력이 결국 국내적으로는 강압과 대외적으로는 적개심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한편 나치즘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신조가 그 추종자를 얻을 수 있는 몇가지 근거, 즉 어떻게 능률을 주장하며 편견과 이상을 이용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점에 주의하면서 강사는 헌법적 민주주의의 방법과 공산전체주의의 방법과의 대조를 사회복지 추구의 방식에 의하여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하나 주의할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교리를 조작하면서 명백히 모순된 것을 정당화 하려고 사용하는 수법을 설명하는 일이다.

3. 참고 문헌

1. 金斗烈 著, 마르크스·레닌 主義의 崩壞 1968年刊 新文化社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철학, 경제, 정치, 전략, 전술, 국제 공산주의의 운동등, 체계적으로 전반에 걸쳐 설명, 비판한 서적으로 공산주의 연구 전문 서적임)

2. Eduard Bernstein; 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 1899
(마르크스의 수제자로서 마르크스주의를 마르크스의 이름으로 수정을 제창한 것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전반에 걸쳐서 비판한 것임. 현대 민주사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며, 고전적 인 양서임)

3. Joseph M. Bochenski and Gerhart Niemeyer (eds), Handbook of Communism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p.686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실지로 적용함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양상을 취급한 의의있는 소론들을 모아 놓은것. 저자들은 모두 권위있는 학자들이다)

4. Walter Theimer; Der Marxismus, 1957
(독일의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비판한 책임)

5. Hans Kelsen, The political theory of Bolshevism; A critical analy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8) p.60

(스탈린 시대의 공산주의 이론과 그 적용과의 모순을 분석적으로 평가 한 것)

6、 Milovan Djilas, The new class (New York ; Fredrick A, praeger, 1957) P.214

(전체주의와 또 공산주의 내에 일어난 "새로운 계급"에 실망한 공산주의자가 쓴 공산주의 비판서적 이다)

7、 Imre Nagy ; Imre nagyon Communism, 1958.

(헝가리 혁명의 주역을 맡았던 전 수상의 유서로서 공산주의 결함에 대하여 삐아픈 비판서적 임)

8、 Robert Guillain ; "600 millions de chinoissous le drapeau rouge" 1956.

(루몬드 불란서신 기자의 중공 기행문인데 중공의 내부모순을 잘 관찰한 서적임)

9. 周鯨文著 風暴十年 時事通信社刊 P424

(인민정부의 요인으로서 8년간의 체험과 서민적인 감각으로서 보고 들은것을 실례를 들어 중공 내부를 쉬운 글로 파헤친 것임)

10. 佐藤槇一郎著, 人民会社 鋼書店 刊

(모든 자료를 중공에서 얻은 것으로 인민공사의 내부를 가장 잘 파헤친 책임)

11. 林語堂著 ソヒ"エ人 革命 人間性 1958 創元社 刊

(The secret name)

(소련 혁명후 40년간에 걸친 사실을 토대로 소련을 철저히 비판 하고 있음)

12. 小泉信三著, 共産主義批判の常識 新潮社 刊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자로서 경제학에 조예가 깊은 학자의 공산주의 전반에 걸친 비판서로서 알기쉽게 적절하게 쓴책임)

13. 河合栄治郎 著 ″マルクス″とは何か?″ 社会思想 刊
(일본의 자유주의 사상가가 마르크스 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해설서 임 간략하게 잘 쓴 책임)

14. 猪木正道著, 共産主義の系譜 角川書店
(공산 주의의 계보에 대하여 요령있게 서술한 것으로 공산주의를 이해하기에 알맞은 책임)

15. 高田保馬著, マルクス批判 弘文堂
(일본의 이론 경제학의 권위인 학자가 마르크스주의를 예리하게 비판한 것임)

제 3 장. 공산국가의 현실

공산국가의 종주국이며, 대표적인 나라는 소련이다.
오늘날의 소련의 현실은 노동자나 농민의 천국도 낙원도 아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개성과 권리를 유린한 나라다.
공산당 일당 전제 독재하에서 획일성, 인권유린, 강제노동, 법 무시의 새로운 계급 사회다.

동구에서의 소련 제국주의는 군사력과 위협을 무자비하게 사용함으로서 루마니아 폴란드는 영토의 대부분을 소련에 이양 시켰으며, 그의 팽창주의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각시켰다.
소련은 위성국가를 추종케 하는 마지막 수법은 언제든지 무력으로서 제압한다는 것을 이해 하여야 한다.

한국에서의 8.15 해방전 공산주의 운동은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서 출발 하였다.
한국의 공산당은 처음부터 대중적 기반을 갖지 못하고 상층부에서의 주도권 다툼으로 시종 하였다.

8. 15 해방후 소련의 점령 정책은 시종일관 괴뢰 위성국화에 있었다.
김일성은 이같은 의도를 가진 소련의 지원하에 괴뢰로서 현재의 지위를 얻은데 불과 하다.
그의 노선는 공산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토지개혁, 선거제도, 중요 사업 국유화등 허울좋은 제 법령을 제정 공포하였지만, 그것은 김일성 일인 전제 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

였다.

북괴는 공산제국중에서 가장 호전적이며, 무자비한 투쟁주의자들의 집단이며, 소 스탈린을 자처하는 김일성 우상화를 도모하는 무리들이다.

북괴 사회의 현실은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란 명목하에 노동당에 귀속 되었다.

그리고 직업의 선택도, 자녀의 교육도, 주거지 이용의 자유도 없으며, 꼭 형무소 생활을 연상하면 되는 사회다.

또한 의, 식, 주 생활을 비롯한 온갖 정신 문화생활에서 까지 엄격한 새로운 계층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다.

그들은 무력지상, 폭력지상주의를 신조로 남한에 무력적화 통일을 호시 탐탐 노리고 있는 집단이다.

I. 소련의 권력 체제

1. 내용 개요

혁명전의 러시아 사회에 있어서 혁명의 성격을 가장 결정적으로 형성한 배경 중에는 "짜아리"의 독재적인 전제정치, 부르죠 혁명의 낙후성과 그로 인한 불완전성, 아시아의 문화형태와 서방의 문화형태 사이의 갈등,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로 보는 신비로운 신념에서 러시아 팽창주의의 강렬성 등이 포함 되어있다. 이런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옛 제도는 제 1차 대전중 러시아의 국가적 재난이 가져온 거대한 압력 아래에서 와해되는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오늘날의 러시아를 이해하려는 데는 이 세력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 소개는 자세히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제 1차 대전 동안에 독일제국 군대 손에서 참혹한 군사적 패배를 겪은 결과로, 러시아는 1917년 초에 거의 붕괴의 상태에 빠졌다. 경제는 사실상 마비 파탄 되었고, 사회질서는 와해되고, 지배계급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패전의 굴욕감, 군과 경찰의 사기는 떨어져 불안과 불만이 그들에게 까지 미쳤다. 1917년 3월에는 모스크바와 상트 피터스 버어그에서의 시위는 옛 정체를 전도하고 말았고 또 그후 2, 3일 내에 짜아리는 폐위되고 말았다. 커렌스키 밑에 확립된 임시 민주정부는 무질서 붕괴후 6.7개월 동안에 계속 악화하는 정세를 바로 잡지 못하였다. 임시정부는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권력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소비에트 노동자, 군인, 농민들 (이들은 볼셰비키 장악하에 있었음) 과 정면으로 충돌 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하에서 독일 막료들에 의해 러시아에 파견된 레닌은 그의 동료들과 모의하여, 전 러시아 국민이 평화에 대한 갈구와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욕망을 교묘히 이용함으로서 1917년 11월 혁명에서 정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다.

소련 공산당은 소련에 있어서 권력을 절대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이 프롤레타리아의 전위대를 자칭하는 혁명적 음모가들의 조그만 단체로부터 발전하여 고도로 조직되고 훈련된 지배 엘리트로서 소련의 2억3천만의 국민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소련 공산당은 소련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허가된 정당이며, 또 그러한 정당으로서 그것은 소련사회에서 모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와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 그것은 자유적인 민주 제도의 의미에 있어서는 정당이 아닌 것이다. 거대한 인구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통제조직을 소련 지도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전체주의적 기관이다. 당은 시종일관 정부기관의 모든 계층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 직업적인 당 실권들, 특히 조직상의 비서들은 국가내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독하며 통솔한다.
실지 소련국가를 통솔하는 소수의 지도자들이 소련내의 행정 피라밑의 정점을 형성하는 세개의 간부회의 의원을 겸하고 있다. 즉 각료회의, 최고 소비에트 및 소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이다.

당 규칙에는 당은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며 역원들은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다"고 되어 있으며, 모든 결정이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토의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즉 중요한 정책 결정은 당 간부들에 의하여 마음대로 내려지며, 때로는 당의 최고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내려지기도 한다. 여러가지 당 직위의 계승은 법률이나

관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 내의 권력투쟁에서 오는 것이며 이 권력투쟁의 결과는 많은 당원들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권력과 특권에 관해서 말한다면, 당원들은 짜아리황제하에서 옛 귀족이 차지하였던 것과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특권계급을 그들은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혁명적인 당 지도자들은 레닌 시대의 혁명가라기보다 관료주의자들이요 지배인들이다.

소련에 있어서는 주권은 공산당에 있고 주요한 결정은 당 최고회의 간부회의 또는 그 간부회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국가행정 구조와 그에 관련된 관료들은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당 지도자들의 정치도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

소비에트사회는 각 부문에 당원이 침투된 정부의 통제와 감독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이다. 즉 소련 공산당에 의하여 선출되고 감독을 받는 최고층의 행정관들, 과학자들, 기술자들, 군대 및 보안청의 장교들, 언론인들 등으로 구성되는 권력 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이것은 민주적인 선거민들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자유민주세계의 엘리트와는 다른 것이다. 그들은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최고 당 엘리트 당원에게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는 엘리트가 해결하는 것이다. 당 엘리트들 만이 모든 분야의 공적일에 대하여 표준을 세워주며 또 그와같은 활동에 대한 규칙을 규정할 수 있다. 공적인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이 당내의 주권 싸움을 반영하고 있을때만 지지를 받는다. 이 권력 독점에 대한 도전은 무자비 하게 탄압당하며 반대사상은 진압되고 또 사회 자체가 외부세력의 영향으로

부터 효과적으로 고립화 되어 있다.

당과 정치에 의한 감독은 종교활동으로부터 체육에 이르기 까지 모든 활동 분야에 이르고 있다. 문화, 미술, 음악과 같은 지적, 또는 예술적 연구는 당 지도 계급의 취미와 목표에 따르게 되어 있다. 모든 매스콤은 당과 정부기관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는데 이 당과 정부 기관의 권위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뿐만이 아니라 출판사 및 서점에 까지 뻗고 있다.

교육은 전체주의 국가의 이념상 또는 기술상의 목표에 알맞도록 꾸며져 있고 또 청년들에 대한 감독은 "공산주의 청년동맹" (Komsomol) 을 통하여, 성인은 정부가 감독지배하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과 목표를 지키게 한다. 이처럼 공산주의 지배계급은 국민들을 " 요람으로 부터 무덤에 이르기 까지 " 지배할 수 있다.

소련 사회의 변천은 소위 레닌 시대, 스탈린 시대, 흐루시초프시대의 세 시기로 나뉘어 지는데, 많이 변화한 것만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강제는 소련 사회에서 생활의 근본적인 사실이며, 또 오늘날의 해빙은 내일에도 곧 결빙될 수 있는 것이다.

공산 전체주의 독재가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지만, 사회는 계속 상당히 빠른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간격은 좁아지는 것 보다 오히려 넓어졌다.

아마 가장 의의 있는 변화는, 라디오 텔레비존을 소유하게 되고, 소비에트 지배계급의 많은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비에트 중앙 집권주의에 의한 공업화가 오늘날 매우 적당치 못하였다는 것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체주의 독재정치의 기술 및 경제적 발전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다음에 소비에트의 팽창주의 즉 신판 적색제국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련은 제 2차 대전 바로 직전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의 강점과 함께 동구에 대한 침범은 시작 되었다. 이 적은 나라들로부터 스탈린의 주구들은 수천 수만의 애국자들을 추방시켰으며, 그 많은 수효가 후에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죽고 말았다. 이러한 행동들에 뒤따라 나치독일과 소비에트의 불가침조약을 맺은후 1939년 폴란드의 군사적 영토의 장점, 루마니아의 벳사라비아 편입을 감행했으며, 동부 유럽과 중부 유럽에 제 2차 대전때 소련군이 진주함으로써 소비에트의 팽창은 계속되어 나간 것이다. 러시아는 제 2차 세계대전 때에 구축한 선의를 이용함으로써, 또 힛틀러에 의해서 파괴 되었던 동부유럽 국가들을 재수립하기 위한 민주적인 원칙에 동의할 것을 가장함으로써, 동구에서 소련 팽창주의를 막으려는 서방의 노력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제국주의적 기술이 사용 되었다. 루마니아에 있어서는 그것은 노골적인 최후 통첩을 이용하여 공산당에게 권력을 이양시켰다. 불가리아의 공산주의자들은 루마니아의 위협적인 교훈을 이용하였다. 폴란드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모스코바에서 창설하고 훈련한 꼭두각시 루블린정부를 수립하고 그후 모든 민주세력들을 숙청하였거나 폴란드 제일지도자 미콜라이치크의 경우처럼 국외로 추방하고 말았다. 항가리에서는 패배 당한 국가의 점령국으로서의 소련은 점령과 통제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산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체코슬라비아는 그중 가장 어려운 케이스였다.
왜냐하면 체코가 국부적으로는 서방에 의해서 해방되었었고 또

안정되고 현대적인 국가의 강열한 민주세력이 여기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공산주의 수법들이 사용되었다. 소비에트 제국주의의 무자비성은 아마도 러시아가 종말으로 별개의 꼭두각시 정부를 수립한 동유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새로 수립된 위성국가들에 있어서는 민족적 자주성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은 숙청되고, 소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과오없는" 스탈린을 표어로 하는 개인숭배가 이루어졌다.

제2차 대전 동안에 소련은 앞으로 있을 점령할 나라들의 접수에 대비하여 동구에서 온 공산주의자들을 훈련하였다.
그들은 소비에트의 이념과 사회제도에 충성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위성국가들 내에 복잡한 통제 조직을 형성하였다. 그 첫째의 유대방안은 블럭의 당 지도자들과 소련의 지도자들 사이의 직접 상담이었다. 둘째는, 이러한 국가들에 있어서 소련 대사관을 통한 정부 전복이었다. 셋째는 소련의 군사 및 경제고문관들을 임명하는 일이었다. 또 하나의 권력과 통제의 제도로서, 특히 중요한 정부기관 (경찰, 군대, 내무부, 또는 법무)이 소련의 통제를 받는 역군들에 의해 직접 침투되어졌다. 예를 들면 소련의 비밀 경찰은 그러한 제도와 대리 기관에 침투했다. 또하나 중요한것은 세계의 여러 공산 국가들은 각기 분리시키고 각자로 서로 분리되게 하는 일이었다.
이 모든 통제권은 소련군의 힘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다.

7. 교수 방법

이 강의에서 강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소련 공산당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민주적인 당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예속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법률을 제정하며 혁명과 세계지배에 헌신하고 있다. 그것은 활동에 있어서 헌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당의 엘리트 핵심체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지 국민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생산수단의 소유권은 오직 국가에게 있으므로 국가를 운영하는 최상층에 있는 소수 지도계급이 본질적으로 소유자인 것이다. 모든 권위와 지배권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당원들의 중요성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급을 형성하고 있다는 질라스의 말은 옳바른 말이다.

다음에 강사는 소련 헌법에 있어서의 법률은 유일한 공산당 권력에 위신을 주기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 해야 한다. 그리고 단일 당의 지배로 기인되는 개인 자유에 대한 억제가 너무 심하다는 점이다. 생활의 모든 면, 즉 문화, 교육, 종교, 경제 및 보도가 정부 당과 그 교조에 독점되어 있다.

강조해야 할 점은 당의 핵심은 모든 러시아 시민들의 생활을 지배, 지휘, 감독할 뿐만 아니라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방향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당의 내부적인 권력 독점과 그 국제적인 음모활동과를 분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강사는 학생들에게 노동자 대중에 의하여 지배되는 정부에 관한 마르크스 예언과는 달리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철저한 독재주의로 만들어 버린 것은 레닌의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원칙하에 운영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케 해야한다.

소련사회와 통치에 관한 강의에서는 위선 사회의 병동을 분석하여

야 할 것이다. 이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 물질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소련 사회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당의 집중적인 선전 노력에 얽매어 있고 또 외부 세계와 사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배자들이 선언한 정책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 소련의 당 관료들은 계급적 차별이 없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 오히려 계급적 구별은 엄격히 되어있고, 여러 계급들 사이의 차이는 러시아의 과거 어느때보다 못지않게 현저하다.

세계 평화의 장래는 소련이 변화할 의사가 있는가 또는 그 능력이 있는가에 달려 있는 동시에, 세계 평화는 전체주의가 강력하게 남아있는 한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과 그들이 신봉하는 공산제도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구에서의 소련제국의 강의에 있어서 강조할 중요점은 소련이 동구에서 공산화를 강제한 그 제국주의적 수법인 것이다. 스탈린은 "사회주의를 향하는 정확한 길"에 관한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려 들지않고 군사력과 위협을 무자비하게 사용하므로서 루마니아와 폴란드 영토의 대부분을 소련에 이양시켰으며, 그의 팽창주의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각시켰다. 이 관계에 있어서 스탈린의 수법을 그 시대의 서방 사람들이 의식치 못하므로써 스탈린은 야욕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소련은 위성국가로부터 추종을 받도록 여러가지 수법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무력으로서 제압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즉 1953년 동베르린 봉기와 1956년

항가리 자유혁명, 1968년의 체코의 침공등에서 처럼 노골적인 군사적 제압을 감행 하였다. 이처럼 하여 소련에 대한 위성국들의 극단적인 충성의 고백을 강요한다는 것을 주의 해야 한다.

3. 참고 문헌

1. Merle Fainsod, How Russia is Rul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p. 3-30.
2. Georg Von Rauch, A History of Soviet Russia, Tanslated by peter and Annette Jacobsoh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7) pp. 3-33.
3.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New York; Frederich A praeger, 1961) p.346.
   (현대의 전체주의 정부들을 비교 연구한 것인데 소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Anatole G, Mazour, Russia Tzarist and Communist (New York and London; D. Van Nostrand, 1962) 995 pp.
   (러시아의 포괄적인 역사인데 소비에트와 짜르 두시대의 연속성을 강조 하였다)
5. Warren B, Walsh, Russia and the Soviet Union; A Modern Histo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8) p.640.
   (일류 미국 러시아 역사가가 초기부터 1957년 까지의 역사를 논함)

6. Karl A. Witfogel, Oriental Despotism ;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3rd ed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59) P. 556

(보통 독서가에게는 어렵겠으나 이 고전은 어느 저작자보다 제도적인 독재주의의 참뜻을 설명해 준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공산주의 자들이 그들의 이론에 맞게 역사를 새로 쓰는 방법을 예로 든 것이다.)

7. Bertram D. Wolfe, Three Who Made A Revolution (Boston ; Beacon Press, 1948,) P. 661.

(제 1장은 전통 볼세비키 주의가 일어날 때의 역사적 배경을 잘 그렸으며 그 점이 퍽 유용하다)

8. John S. Reshetor, Jr, A Concise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0) PP. 253-281.

9. Kenneth R. Whiting, The Soviet Union Today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2), PP. 121-169

10. Robert Conquest, Power and Policy in the USSR ; The Study of Soviet Dynastics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61) P. 485.

(소련에 관한 유명한 저자가 소비에트 정치를 연구한 독창성 있는 책임)

11. Merle Fainsod, How Russia is Ruled, rev. ed.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 684.

(진지한 학자가 쓴 소비에트 정치와 사회를 분석한 것)

12. Nathan C. Leites, A study of Bolshevism (Glencoe, Ⅲ; Free press, 1953) p.639.
(볼셰비즘과 볼셰비키의 성격에 대한 상세하고 또 심리학적인 연구로서 저작자의 결론은 비판적이다.)

13. Barrington moore, Jr. Soviet politics, the Dilemma of power; The Role of Ideas in social change (Cambidg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p.563.
(소비에트 제도에 있어서의 이념의 역할을 분석하고 이론과 현실을 가끔 대조하여 명확하게 설명한 것)

14. Leonard Schapiro,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Ramdom House 1960) p.631.
(널리 알려진 학자가 소련 공산당의 역사를 최초로 포괄적으로 하천에 기록한 것으로서 우수한 조사이며 분석이다)

15. Klaus mehnert, Soviet man and His Worl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pp.1-25.

16. John A, Armstrong, Ideology, politics and Government in the soviet Union; an Introduction (New york; Fredesick A, praeger, 1962) p.160
(소비에트 정치 및 사회에 대한 간단하나 예리한 연구)

17. Abrabam Brumbery, ed, Russia Under khrushcheu (New york; Frederich A, praeger, 1963) p.660.
(공산주의의 문제에서 발취한 논문들을 모은 것인데 현재의 러시아의 여러가지 면을 망라하고 있다.)

18. Robert, U, Daniels, The Nature of Communism (New york; Ramdom House, 1962) p.398

(현대세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여러가지 면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

19. Merle Fainsod, How Russia is Ruled, rev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684

(소비에트 정부를 취급한 고전으로서 개정 판임)

20. alex Inkeles, public Opinion in Soviet Russi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p. 379.

(러시아 인민의 의견을 통제하고 재형성하기 위한 소비에트의 조직적 및 이념적 방면에 대하여 철저하게 취급하였다)

21. W. W, Kulski The soviet Regime ; Communism in practic (Syracuse, N. Y. Syracuse Unversity press ; 1963 4 the edition) p. 444

(그 개정판에서 소비에트 정치의 스탈린의 시대와 스탈린후의 시대와의 차이를 강조한 수준높은 교재이며 참고서)

22. Walfgang Leonhard, The Kremlins since Stalin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2) p. 403.

(소비에트 정치 및 정책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시한 권위있는 연구서)

23. Kenneth R, Whiting, The soviet Union Today ; A Concise Hand book (New, York ; Fredrick A praeges, 1962) p.405

(소비에트 사회의 여러가지 면에 대한 상세하고 새로운 묘사)

24. Zbigniew K, Brzezinski The soviet Bloc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pp. 3-18, 67-97, 111~124.

25. Ernst C, Halmreick (ed), Hungary (New York ; Fredick A, praeger, 1957) p.466

(제 2차 세계대전후의 헝가리에 대한 철저한 연구이며, 1956년 혁명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고 있다)

26. Joseph Korbel, Communist Subversion in Czechoslovakia, 1938~1948; The Failure of Coexist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p.258.
(공산주의 전복기술을 통한 체코민주주의 최식에 관하여 전 체코 외교관이 쓴 저서임)

27. Oscar Halecki, (ed), Poland (New York; Fredrick A. Praeger, 1957) p.601
(공산치하 폴란드에 대한 재료를 모은 우수한 저서)

28. Joseph Korbel, Poland Between East and West; Soviet and German Diplomacy Toward Poland, 1919-1933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321 pp.
(폴란드의 외교사에 대한 학자적인 연구이며, 공산주의 접수 이후 소련에 대한 폴란드 관계에 관한 중요한 역사적 요인들을 밝혀주었다.)

29. J.M. Mackintosh, Strategy and Tactics of Soviet Foreign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p.332
(소비에트 제국주의의 전관계에 있어서 동구에서의 러시아의 행적을 취급한 책이며, 많은 환영을 받음)

30. Stefan T. Possony, A Century of Conflict; Communist Techniques of World Revolution (Chicago; Regnery, 1953) p.439
(권력을 잡고 공산주의 권력기지를 확장하기 위한 공산주의 전술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것임)

31. Henry L, Roberts, Rumania; political problems of an agrarian st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1) p.441
(루마니아 정치와 소비에트 접수에 관한 중요한 묘사)

32. Hugh Seton-Watso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6) 422 pp.
(동구 위성국가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또 그 접수와 소비에트화에 관한 유일한 권위있는 연구서이다)

33. People (Baton Ruo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2,) p.300. .
(공산주의자들의 의지와 소비에트 정책에 대해서 폴란드 국민들을 예속케 하는데 사용된 전체주의적 방법에 관한 상세한 묘사이다)

34.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problem of Hungary,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1957.
(모든 입수할 수 있는 기록들에 대한 상세한 회견과 검토에 입각한 결정적인 문헌이며, 1956년 항가리 반란을 진압하는데 있어서의 소비에트의 불성실과 무자비성에 관한 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35. J, K Zaivodny, Death in the Forest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2) p.235.
(폴란드를 공산화 하는데 사용된 제국주의 적수단의 폭로로서 폴란드의 장교 엘리트들을 전멸시킨데 대한 소련의 책임을 폭로한 철저한 연구서)

36. paul E, Zinners, Communist strategy and Factics in Czchoslovakia, 1918-1948 (New york; Fredrich A; praeger, 1963)
(원래의 문헌에 입각한 체코공산당의 결정적인 역사서)

Ⅱ 북괴 공산정권의 수립

1. 내 용 개 요

우리나라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운동의 시초는 주로 해외에서 항일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한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공산주의 실현 목적보다도 조국의 독립을 지행하여 일어났던 것이다. 그것은 레닌의 공산정권이 세계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유혹의 손을 뻗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1918년에 민족자결권을 선언했고,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을 반대한다고 주장한데 기인한다. 러시아 공산 정권의 속과 겉이 다른 선언에 대하여 한국의 일부 독립운동가들이 관심을 가진 데에는 윌슨 민족자결 선언과 빠리 강화조약에 대한 불신에도 원인이 있다.

이후 한국의 독립운동은 무력투쟁을 논외로 한다면 대체로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일제하의 약자로서 대한중국에 기대하면서, 문화적, 경제적 실력을 배양하여 독립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측과, 코민테른의 지원을 얻어 독립을 쟁취함과 더불어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하려는 공산주의 신봉집단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운동자들은 처음부터 러시아 공산정권으로부터 배신당했다. 만주에서 반일 한인무장부대가 청산리전투 후 전열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베리아로 부터 넘어갔다. 1921년 2월에 소비에트정권은 한국독립군의 군비양성을 지원한다는 협약을 맺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년 6월에 흑룡강 자유시에 있은 대한독립군을 무장 해제 하려고 함으로서 충돌하여 한국독립군은 큰 피해를 입고 도로 만주로 철수한 사건이 있다. 흑하사건 또는 자유시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10월혁명은 그것이 선언한 반제, 반식민지운동이란 이데올로기이적 측면에 의하여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에 일정한 자극을 준 것은 그 당시로서는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다른 식민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항일독립운동에 있어서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구별이 투명치못한 때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8. 15 해방 직후의 과도기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운동에서 혼선을 이루었으며, 구 공산주의자가 민족, 민주진영으로, 구민족주의자가 공산주의진영으로 넘어가고 넘어오고 또는 그 중간에서 좌왕우왕 하는 난맥상을 노정시켰던 것이다.

8、15 해방전에는 1919년 6월 이동휘등이 주동이 되어 한인사회당이 조직되었으며, 그후 고려공산당으로 개명한 것으로 되어있다. 1918년 일크츠크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한인들이 일크츠크 공산당 한인지부를 설립, 1919년 3월에는 전로한인공산당으로 개편 하였다. 이들은 명실공히 러시아 볼세비키당에 예속되고 있었다.

요컨대 이 두파는 헤게모니 싸움을 하다보니 양파는 모스크바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결국 1945년 4월 조선 공산당이 창립되기 까지는 구듭끼리의 분파운동밖에 없었다. 국내의 공산주의 운동은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것도 화요계니, M, L 계니, 상해파니 하여 4분 5열되어 분파 투쟁을 벌였을 뿐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대중적 기반을 갖지 못하고 상층부에서의 주도권 다툼으로 시종하였다. 그것은 한 민족의 지상과제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민족해방이 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운동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의 네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민족독립운동의 전략으로서 신성

러시아의 볼셰비키정권과 제휴한 시기, ② 마르크스주의 사상단체들의 세포활동시기, ③ 프롤레타리아 전위대의 조직운동시기, ④ 8.15 해방 후 북한에 공산주의 제도를 수립한 시기이다.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여 정식으로 소련군 사령부를 설치한 것은 1945년 8월 25일, 사령관은 치스차코브 대장이었다. 진주한 그들의 만행에 대하여는 북한주민은 누구나 아연실색하였다. 살인 강도, 강도, 약탈, 폭행 무전취식 등 온갖 행패를 자행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련을 조국으로 삼는 공산주의자들 까지도 실망케 하였다.

소련이 북한에 진주하여 위성공산국화하는 방법은 2차 대전후 동구에서 쓴 수법과 큰 차이가 없지만, 양단된 국토의 남쪽에 자유민주주의 깃발을 앞세운 미군이 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수법은 더욱 자교롭고 교활했다. 다음에 그 점령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치, 경제, 문화등 모든 것을 한국인에게 인계한다는 미명하에 소련 2세 한국인 공산당원에게 넘겨 주었다는 것

② 소련군 소좌며 소련공산당원인 김일성(본명은 김성주)을 북한 괴로집단의 괴수로 등장시키기 위하여 영웅화 시킨것

③ 북한을 점차적으로 공산화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민족주의자, 민주주의자들을 포섭하는 형식으로 연립 민주정치를 가장하여 인민정치 위원회를 구성한것.

④ 기간산업, 철도운수, 은행등 주요경제기관을 국유화란 구실하에 공산당이 점유케 하였다는 것.

⑤ 군, 경찰, 통신, 사법계통의 요직에는 소련 직계 공산당원을 보직케 했다는 것

⑥ 북한을 공산혁명 기지로 삼고 무력 남침통일을 위한 괴뢰군

양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군사력 축적에 주력한 것

⑦ 김일성으로 하여금 공산당과 정권의 수반을 겸임케 하여, 개인 숭배 우상화를 도모하여 스탈린식 일인독재를 가능케 하였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을 소련의 괴뢰 위성국으로 조작 하였던 것이다.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은 공산당 노선에 관한 정책보고 연설에서 "북한을 분리하여 먼저 공산화하고, 이어 남한에 까지도 적화할 수 있는 이른바 북조선 민주기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밀을 담은 민주기지론을 내놓았다. 이 민주기지라는 것은 실은 공산기지로선을 의미하며 오늘날 까지 그들의 기본로선인 것이다.

김일성은 소련군의 무력을 배경으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창설한 지 불과 반년 남짓한 사이에 소위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의 각종 법령과 정강 및 결정서들을 날치기식으로 연이어 공포하였다. 실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공산제도에의 맹진이라 아니할 수 없을 만큼 성급한 개혁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그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시켰는가 하면, 소련군이 진주하여 있는 동안에 그 무력의 뒷받침을 얻기 위하여서다. 말하자면, 소련 적색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매국공산도배들의 합작으로 공산개혁을 실시하여, 분할 예속화 내지 분할 공산화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김일성은 1946년 3월 23일에 20개 정강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북괴의 기본정책인 동시에 그들의 전략적인 방향제시기도 하다. 이 20개정강을 가리켜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민주주의 노선위에 구현되는 것이며, 장차 조선인민이 나아갈 민주주의적 노선을 명시한 것이다" 라고

선전하였지만, 그실은 공산당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공산주의 노선이었으며 김일성 일파만이 나아갈 일당 독재노선이었던 것이다. 즉 제1개조의 일제 잔재의 철저한 숙청은 그런대로 넘기더라도 제2개조 국내에서는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적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팟쇼 및 반민주주의적 정당, 단체, 개인들의 활동을 절대 금지할 것, 이라는 조항은 공산당 및 그 추종자외는 전부 피의 숙청이나 탄압을 하여 일체 활동을 못하도록 한다는 가장 비민주적이며, 공산당 일당독재를 지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개조 이하는 자유보장이니, 민주주의니, 행복 증진이니 따위의 허위 기만에 찬 미사여구를 늘어 놓고 있지만, 그들의 수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살필 필요조차 없는 일들이다.

북괴가 제일먼저 착수한 일이 토지개혁이다. 김일성은 일본인, 민족반역자, 5정보 이상 소유지주 및 부재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분배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실은 주택, 대지, 가축, 농기구 까지도 몰수하는 악랄한 수법을 썼다. 농민에게 토지를 무상분배한 후 소작농보다 더 과중한 현물세를 받아 감으로서 공산당에 동조하던 농민들은 일제히 불평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무상분배한 토지도 농업협동화라는 구실하여 1958년 8월을 기해 완전히 공산당의 소유로 만들어 버리고, 농민들은 품을 파는 농업노동자가 되고 말았다.

선거법령은 공산당의 지령에 의하여 지명된 단일후보에 흑백함에 가부를 묻는 협작선거를 규명한 것이였다.

노동법령은 전문 26개조로 허울좋은 말로 늘어놓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공문화하고 말았다. 천리마운동이니 하는 시간제한 없는 경제운동이 그 실례로 들 수 있다. 이 법령은 노동자 사무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 사무원을 직업동맹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킴으로서, 그들을 얽매어 놓고 조종함으로써 노력 착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녀평등권법, 중요산업 국유화법, 개인기업의 창발력 지시등도 공산당이 인민들을 수탈하는 방법을 은폐하려는 감언이설에 불과하였다.

북괴 김일성도당의 상기의 정강이나 노선들은 그 자신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코민테른에서 식민지를 공산화할때 쓰는 수법을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과 김일성이 약간 수정하여 만든 것이다.

2. 교 수 방 법

이 강의에서 우선 강조할 점은 8, 15 해방전. 한국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은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서 출발한 사실을 들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시베리아로 넘어간 독립군들은 러시아의 볼세비키들이 볼 때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 이용할려고 하였다, 첫째 백군(러시아 반혁명군) 및 그것을 지원키 위해 출병했던 일본군과의 싸움에 이용하고, 둘째로 한국인들을 공산주의자로 이용할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같은 이용가치가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저버렸든 것이다.

1919년 3월 모스크바에 코민테른이 창립된 후 부터는 각국의 공산당은 소련공산당의 압력과 통제를 받아야 했다. 당시 코민테른의 주도권을 쥐고있던 소련은 서구 열강의 위협, 혹은 러시아내 반혁명의 위험으로부터 방위하는 것이 각국 공산당 및 공산주의자들의

제1차적 임무로 요구하였다. 따라서 조국의 독립운동에 제1차적 목적을 둔 한국인을 불신하였다. 그들은 러시아 내에서 훈련되고 볼세비키화된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에게 주도권을 맡기려고 하였으며 또한 북한에 진주하여 그렇게 실행하였던 것이다. 1930, 40년대에 김일성이가 한만국경 산악지대에서 일본측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또한 몇 차례의 게릴라전을 통하여 소란을 피운 일은 있었으나 그가 한국혁명 운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 일도 주도권을 쥔 일도 없었다. 그가 오늘날 혁명은 혼자 한 것처럼 큰 소리치고 있지만 그것은 허위기만에 가득차 있는 것이다. 8, 15해방후 소련군의 지원하에 괴뢰로서 현재의 지위를 얻은데 불과하다.

다음에 소련의 점령정책은 시종일관 괴뢰 위성국화에 혈안이 되었으며 그런점에서는 동구위성국가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괴뢰로 만들었다. 또한 남한의 자유민주국을 적화하기 위하여 북한을 혁명기지로 공고히 만들었으며, 무력침공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든 것이다. 6, 25 남침을 위하여 소련은 전력증강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김일성 일당은 북한에 남아있은 민족 민족주의자들은 물론 같은 공산주의자라도, 국내파, 남로당파, 소련파, 연안파의 순서로 모조리 숙청하여 버렸으며, 김일성 개인 심복으로서만 당 간부를 구성하고 있다.

공산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토지개혁, 선거제도, 노동법개정, 남여평등, 중요산업 국유화등 허울좋은 제 법령을 재정 공포하였지만 그것들은 공산당 일당독재 나아가서 김일성 일인 전제독재를 공고히 하기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다.

오늘날 공산제국중에서 가장 호전적이며, 무자비한 투쟁주의자이며

소스탈린을 자처하는 김일성의 정체를 해부하여 학생들에게 깊이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3. 참고 문헌

1. 北韓年鑑刊行委員会編, 北韓總合鑑 1968 년 発行
   (가장 종합적으로 북괴의 실정을 쓰고 있음)
2. 金俊燁, 金昌順共著, 韓國共産主義運動史, 上, 下 高大出版部.
3. Robert A, Scalapino ; North Korea Today, 1963.
   (스카라삐노 박사의 편집으로 9명의 학자가 오늘날의 북괴를 간략하게 묘사한 것임)
4. 柳憲著, 北韓二十年 大韓反共教育院 発行 1966 年
5. 現代史와 共産主義 第一輯
   韓國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1968 年 공보부 발행.
6. 韓載德著, 韓國의 共産主義와 北韓의 歷史 內外文化社 刊
7. 方仁厚著 北韓「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発展 高大出版部刊
8. 梁好民著,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仝上
9. 朴原甫著 北韓統治機構論 高大出版部 刊
10. 徐南源著 北韓의 경제정책과 생산관리 仝上

Ⅲ. 북괴사회의 현실

1. 내용 개요

김일성 집단의 사회 정책을 가장 잘 표현한 기본 구호의 하나는 1956년 4월 제 3차 당대회 이후부터 부르짖기 시작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것이다. 이 구호에서 말하는 "하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 주민 하나하나를 뜻하는 것이고, 전체는 사회 전체를 의미하는 듯하면서, 사실은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북괴에서는 괴수 김일성 1신에 귀속된다. 즉 이 기관은 괴수 김일성 일인 독재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구호의 진의는 모든 북한 주민은 김일성 괴수를 위하여 복무하라는 뜻이며 구호는 하나의 장식물에 불과하다. 이와같은 견해는 사회를 제멋대로 개조할 수 있다는 공산주의자들의 독선적인 사고에서 연유하며, 김일성의 안가한 영웅주의와 편협성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북괴 사회의 기본적 특성을 다음 네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괴치하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58년까지 사이의 상공업의 폐지, 농업의 협동화 등으로 모든 생산 수단과 영리 수단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노동자, 농민 어민, 상공인 할 것 없이 모조리 임금 노동자로 전락시켜 놓았다. 이리하여 일체의 생산수단은 협동화란 명목하에 노동당(북괴 공산당)에 귀속되고 개개인의 소유를 인정치 않게 되었다. 이것이 경제 사회적 특징의 하나다.

둘째, 북괴 주민들은 집단주의 체제하에 꽁꽁 묶여 있으므로, 직업의 선택도, 자녀의 교육도, 주거지 이동의 자유도 없으며, 따라서 개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없도록 각종 조직에 의하여 외매에 있어서 일반적 맹종을 강요당하고 있다, 꼭 형무소 생활을 연상하게 된다.

세째, 북괴는 불평등분배의 계급사회를 고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평등을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있을 뿐 실은 의, 식, 주생활을 비롯한 온갖, 정신문화생활면에서 까지 엄격한 새로운 계층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다, 즉 상층부에 속하는 새로운 계급들은 .호의호식을 하며, 하층에 속하는 일반대중은 기아선상에서 헤매게 하고 있다. 그들은 이같이 불공평하고 모순된 사실을 "사회주의 분배원칙이란 결코 무원칙한 평등은 아니다" 라는 애매한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넷째, 북괴는 북한땅에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확립하고, 당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할 것 없이 모든 부분을 한 손에 틀어쥐고 있다. 이른바 최고주권기관도, 최고집행기관도, 그리고 사법, 검찰, 군사, 보안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그 앞에 책임을 지며 복종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괴사회는 공산당의 투망식 조직과 조종하여 제도, 풍습, 생활양식, 인간관계 등이 사로잡혀, 개인의 기본인권 무시, 공포와 광란성을 내포한 폐쇄사회이며, 허위, 기만, 면종복배 및 음모로 가득찬 사회다.

오늘날 북괴는 평화를 가장한 전쟁준비와 전시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완전한 통제경제 하에서 전국민 총동원을 하기위한 경제조치을 강화하고 있다. 북괴는 1961년 7월에 소련 및 중공과 체결한 군사 동맹조약 (중공과는 무기한, 피침시 즉각 참전,

소련과는 10년 기한, 그후 이의없을때 5년 자동 연장 미침시 즉각 참전) 에 의하여 자신의 안전 보장과 균형잡힌 군사준비 태세를 확립하고, 예상되는 전면 전쟁 또는 국지전을 담당할 군비의 유지강화, 그리고 필요시 소위 인민혁명 전쟁으로 적화 수행을 가능케 하는 제반 준비를 강행하고 있다.

북괴는 군사 정책의 적극 강화를 위하여 1962년 12월 노동당 4기 5차 전원 회의에서, 군사정책으로서 "군의 간부화, 군의 현대화, 전, 인민 무장화, 전 지역 요새화"의 4대 군사 노선을 결정하고, 철저히 집행하는 전쟁준비 강화에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이 4대 군사 노선에 따라 중공업 확충에 의한 병기 산업의 발전책, 김일성 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 정신무장 강화, 전쟁 공포증 제거를 위한 대중 운동의 조직화, 당과 김일성의 명령지시 수행의 근위대 결사대 운동, 그리고 인적, 물적 동원체제 확립등으로 전쟁 잠재력 강화에 의한 군사 태세 완성을 서두르고 있다.

이리하여 괴수 김일성은 69년 9월 7일 연설에서 대남 폭력 투쟁을 재삼 역설하고 "남한 인민들이 지원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나아가서 통일 위업을 달성할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다" 고 호언 장담함으로서 호기 도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처럼 북괴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군국 주의화 된 집단이다.

괴수 김일성은 제5차 당대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총을 쏠 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또한 우리는 온 나라의 모든 지역이 철옹성 같은 방위시설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 까지도 다 요새화 하였다" 고 호언하고 있다, 또한 "산악전과 야간전투,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정규전과 유격전" 을 강화하여, 정규, 비정규전을 계속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괴는 과거나 현재나 다름없이 무력적화 통일로선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 폭력혁명과 일당독재의 대원칙을 확신하고 남한에 대한 침투 파괴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

다음에 김일성 우상화 정책에 대하여 설명키로 한다. 북괴에서는 괴수 김일성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만듬으로서 북한 전체 주민을 그의 명령과 정책에 맹종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다. 꼭 일제시대 천황을 현신식으로 일본 군국주의 자들이 모시다시피 오늘날 시대에 역행하는 우민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8. 15 해방후 소련군 소좌로 뒷꽁문에 부터 북한에 들어온 김성주가 소련군의 훈계에 의하여 김일성으로 개칭하여, 그를 애국자로 분장시킴으로서 그에 대한 우상화 정책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괴뢰들은 김일성 우상화를 위하여 철저한 교육과 그에 대한 갖가지 날조된 사실을 각본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첫째로 김일성의 가정을 혁명의 활동을 계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조상들을 영웅화한 것이다. 날조의 실례로서 김일성의 조부 김보현이 셔만호 사건때 민중의 선두에 서서 지휘했다느니, 그의 부친 김형직이 3. 1 운동을 지휘하였고, 1917년 3월 23일 "조선 국민회"를 조직한 불요불굴의 혁명 투사라고 자칭했으며, 그의 모친인 강반석은 아들을 혁명가로 양육한 "조선의 어머니" 라고 하면서 "강반석 여사를 따라 배우자" 라는 구호아래 전체 여성을 독려하는 심볼로 삼고 있다.

둘째로 김일성이 일곱살 때 부터 군중을 이끌고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20세 때부터는 실제로 무기를 들고 항일 빨치산 투쟁을 전개함으로서 8. 15 해방을 가져온 것처럼 날조된 그의 투쟁 기록을 만들었다.

셋째로는 김일성이 그의 혁명 투쟁과 정책 수행을 통하여 북한 현실에 적응하는 "유일사상"을 창제하였는데 이 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입각한 독창적인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스탈린주의를 본딴것에 불과하다.

요컨대 김일성을 우상화하여 놓고 북한 전체 주민들로 하여금 유사시에 대비하여 동원 체제를 확립하고 강제노동에 더욱 얽매이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김일성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그의 권위를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주력한 것이다.

오늘날 북괴 사회주의에서 공산당의 비호속에 있는 주민은 약 3분의 1, 즉 당원과 그 가족들이고, 나머지 3분지 1은 완전히 이단시되고, 나머지 3분지 1의 중간세력은 색안시 되는 가운데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괴가 이단시 하는 계층은 이미 산간벽지에 거주 제한 되었거나 강제노동 직장에 고착되어 있으며, 온갖 학대와 고욕을 다하면서 생지옥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북괴는 허울좋은 헌법에 규정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등 인간의 기본권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지만 그 누구하나의 항거에 부딪히지 않고 있다. 이것 역시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당원이 있고, 당원들의 횡포 하에 당의 전제가 쉽사리 실천될 수 있는 중앙집권체제가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에서는 당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으로 불의를 정의라고 우겨댈 수 있고, 겸양을 불손이라고 때려잡는 억지를 쓰고도 통한다. 이와 같이 공산당의 한마디, 아니 그 보다도 노동계급의 독재를 일인일당 독재화 하는데 성공한 김일성의 한 마디는 곧 법령이 되고 명령이 되며, 그 자의 마음대로 자우지 되는 이질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괴 김일성 도당은 소련과 중공의 대역으로 소위 인민 게릴라 전과 테러행위 분자들을 세계 40여개 국으로부터 데려다가 양성, 한국, 월남, 멕시코, 실론, 루마니아등 전세계 각국에 밀파하여 파괴공작을 함으로써, 세계적화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것처럼 과대망상증에 걸려 날뛰고 있는 형편이다.

2. 교 수 방 법

이 강의에서 강조할 점은 어느공산사회에서나 마찬가지로 모든 권한을 공산당의 극소수의 간부들이 장악하고 전재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생산수단은 공산당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당은 역사상 가장 큰 권한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다음에 강조할 점은 북한 주민들은 집단주의 체제하에 각종조직에 꽁꽁 묶여 있으므로 형무소 안에 갖힌 죄수 생활과 다름없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사회는 "그 능력에 따라 벌고 노동량에 따라 받는 평등사회를 지향 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즉 노동자, 농민등 근로자 중심의 공산주의 본연의 계급사회가 아니라 특권층과 일반서민층과의 계급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쯤은 비길수 없을만큼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생활의 기본요건인 의, 식, 주 에서부터 철저한 계급정책을 쓰고 있다. 식량배급제도에 있어서 중앙공급대상과 노동공급대상의 차별 대우만 하더라도 큰 차가 있다. 의류배급제도에 있어서 급수별 복장 차이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당성내지 출세도를 판정하리만큼 뚜렷이 나타나있다.
그리고 주택생활에 있어서도 집단수용생활과 개별거주 생활의 차는

더욱 계급 냄새를 짙게 한다.

요컨데 북괴 치하의 사회는 그들이 선전하는 노동자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의 이름을 팔아먹는 일부 특권층 위주의 사회라고 보는 것이 현명하다. 북괴의 노동자들은 천리마 작업반운동이니 청산리방법 대안체제등 교묘한 수법에 의하여 노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다음에 북괴들이 근로자, 농민들에게 갖가지 경쟁운동을 전개하면서 주민의 혼혈을 착취하는 것을 열거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벌이는 운동은, 빈 손 퇴치운동, 열두가지 바닥따기운동, 천삽뜨기운동, 허리 산 떠기운동, 풀베기운동, 한 짐 더지기 운동 등이다.

다음에 공장, 기업소에서 벌이는 운동 중에는 나의 기대운동 국 안먹기 운동, 붉은 주머니 차기운동, 별따기운동, 한번 더 보기 운동, 손빨리기운동, 1인 4세운동,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 생산 체육경기, 돌격대와 전투 건설 경기대회 등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북괴사회는 김일성 우상화와 사실을 날조하여 주민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을 일 삼고 있다. 그리고 가진 기만수법으로서 전체주민을 강제노동시켜 그 노력을 착취하는 집단임을 똑바로 이해 시켜야 한다.

3. 참 고 문 헌

1. 共產圏問題研究所 編 北韓總鑑, 1968 年 刊
(1945년 부터 68년 까지의 북괴의 역정과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음)

2. 韓載德 著 韓国의 共產主義와 北韓의 歷史 內外文化社

(8, 15 해방후 20 년간의 북괴의 역사를 다루었음)

3. 康仁德 編著 國民勝共思想大系 新現実社 刊
(최신의 실정까지 광범위하게 묘사한 것임)

4. 공보부 編 현대사와 공산주의 公報部 発行

제 4 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제1장 민주·공산대결의 기원 및 양상

공산주의는 레닌이래 자유진영에 대한 도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레닌은 사회주의 공화국과 자본주의 국가와의 공존은 장기간에 걸쳐 생각할 수 없다. 그러한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어느 하나는 승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인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소련은 세계 제2차 대전의 전후 처리문제를 중심으로 노골적으로 도전하여 온 것이 그 첫 시도라 하겠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은 공산주의자의 도전을 이해치 못한 나머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치 못하고 동구의 공산화를 방관한 상태로 지나치게 되었었다 이에 자극받은 미국과 자유진영은 1946년경 당시 미국무장관 「버네스」를 통하여 유럽의 방위를 위한 미국의 책임을 확인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민주진영 대 공산진영의 대결은 그 막이 오르게 된 것이다

그후 소련은 50년경에 이르러서는 이미 동부 유럽과 중부 유럽을 거의 장악하고 서부 유럽을 위협하는 한편 극동에서의 중국을 공산화 하였고 그 영향은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었으니 그것은 곧 6.25 사변인 것이다. 이에 대처하여 미국은 유럽에 대한 마샬플랜을 적용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는 한편 구주 방위조약 기구인 나토를 조직하였다. 이같은 도전에 대응한 조치가 완벽해지자 소련은 그들의 전략을 바꾸어 「평화공존」이란 기만적 세계적화정책을 시도하였고 아울러 게릴라전과 정치전을 전개하였으나 이러한 전술은 대부분 후진국가에서 적용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화를 위한 중소의 전략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차이는 중·소 분쟁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소련의 냉전 전략은 일종의 정치전으로서 자유진영의 교란과 자유진영에 대한 증오심 배양에 큰 역점을 두어 왔었다.

이에 대처하여 미국은 극동에서의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위시해서 구주방위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였으나 그간 무리한 대응전략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공산진영의 팽창은 자유진영의 강력한 대응조치로 약국현상을 유지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그동안 공산국가간의 내분은 도전의 강화와 더불어 야기되게 되었으며 "흔들릴 수 없는 신화"도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즉 동구에서의 자유화운동, 독자노선의 선언, 중·소 분쟁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러한 공산진의 분산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대국에의 꿈을 안고 계속 군사력을 증강하고 민족해방전쟁이란 전략을 통해 주변국가와 신생독립국에 침투하고 있으니 이는 모든 공산국가가 버리지 못하는 세계적화의 한 수단이라 보아야 할 것인 바 우리는 이러한 공산주의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러내는 전략을 항상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I 민주·공산대결의 이론적근거 및 시초

가. 내용 개요

냉전의 기원은 1945년 중반으로 부터 1947년 중엽에 이르기 까지 터어키, 동부유럽, 그리고 독일에서의 평화기구 조직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되었던 미·소의 견해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미국이 소련지도층에 대한 명백한 경계를 하면서 소련에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평화기구조직에 관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소련과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은 사실상 대치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듯 냉전의 기원을 1947년도라고 보지만 그러나 사실상에 있어서 냉전의 기원은 훨씬 그 이전부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냉전의 발단은 소련의 공산주의 이념 즉 공산주의의 세계적화전략으로 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혹자가 냉전은 실질적으로 레닌과 그의 군대가 처음 러시아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세계적화혁명을 지도할 수 있는 전략기지를 설치할 때 부터 시작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비록 러시아의 볼세비키당이 냉전이란 용어를 구사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냉전이란 의미를 내포한 개념을 창출해 내고 있었던 것만은 누구도 부인키 어려울 것 같다. 이는 1차대전의 말기 「레닌」에 의하여 발표되었던 1919년 제8차 소련공산당대회 중앙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역력히 찾아볼 수 있다.

" 우리 인민들은 단순한 1개국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국가의 연합체속에서도 살 수 없다.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제

국주의 국가들과의 공존은 장기간에 걸쳐 생각할 수 없다. 그러한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어느 하나는 승리를 하여야한다. 그러한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사회주의 공화국과 부르죠아 국가간에는 가공할 만한 충돌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또 1920년의 레닌의 성명에서도 대결의 불가피성이 시사된 바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가 없고 종말에는 어느 하나가 승리할 것이다."

이상의 두 성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련지도자들은 일찍부터 대결의 불가피성을 전제해 놓고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항구적인 적대감정을 고정시키려하고 있었다. 이 같이 세계적화혁명의 이념을 가진 소련지도자들은 소련맹방이 아닌 모든 국가는 그들의 적이라는 사실을 공식화시켜 '적성'집단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모든 전쟁이란 비공산주의 국가의 최후 파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도전의 이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은 세계 제2차대전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소련의 냉전전략을 터득치 못한 상태이었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소련의 냉전전략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중 소련의 비타협적 태도가 번번히 나타나면서 부터이다. 즉 2차대전중 서방측에 대한 소련의 근본적인 불신임과 의심은 소련에 당시 주재하였던 미국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명백히 인식되어졌다. 예컨대 당시 소련주재 미국의 군사담당 총책임자이었던 「디네」소장이 1944년 12월 2일 「마샬」장군에게 보낸 다음의 서신을 보면 소련의 서방사회에 대한 불신태도를 엿볼 수 있다. "소련은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과 될 수 있는

한 관계하기를 원치않고 있다 ----------"

소련의 냉전적 태도는 1945년이래 더욱 명백해지기 시작하였다. 즉 제2차대전 말기 소련은 그들 서부 점령지역의 정부를 정복하거나 접수, 자유우방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정치적활동을 계속함으로써 비롯되었고, 이러한 전략수행에 있어 소련의 무자비성은 소련군대가 1944년 여름 바르샤바를 점령할 때부터 더욱 강화되었다. 그 후 소련은 1945년 2월 얄타협정을 통해 조인한 민주적 요소를 통한 정부수립원칙을 불과 1주만에 불식시키고 항가리 공산화를 획책하였던 것이다.

이에 크게 충격을 받은 미국은 소련이 얄타협정을 위반한지 15개월 후에야 미국무장관 「버네스」(Byrnes)를 통해 유럽의 방위를 위한 미국의 책임을 확인하기에 이르렀고 유럽에 있어서의 미·소의 대결은 거의 완전 대치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은 1945년 부터 46년 7월까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소련의 얄타협정 위반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강화하였고 미국은 미국자체로서의 대응전략을 펴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의 상원의원이었던 존·에프 「덜래스」의 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응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이어 1945년 9월 런던에서 첫 외상회의가 열렸다. 나는 「버네스」 국무장관과 함께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만한 결의를 하였다. 우리는 테헤란과 얄타협정에서와 같이 소련지도자들과 타협이나 협정을 하기 위해서 양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나는 이런 결심은 꼭 필요한 것이요 또 숙명적인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중 중요한 것의 하나는 집단방위가 점점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련지도자들은 이미 강점에 의한 전략으로 이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우애를 구실로 삼고 아주 냉전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냉전의 역할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자주 강조하듯이 소련군이 대서양까지 진격해야 한다는 위협인 것이다."
(미국의회 회의록 1948년 7월 8일자, P. 9275)

이를 통해 볼 때, 소련의 냉전은 우애를 가장한 점령이며, 이에 대응키 위하여는 집단방위체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유주방위기구 설치의 기초가 된 것이기도 하다. 소련의 냉전전략은 소련의 폴란드 점령 경위를 보면 그들의 냉전양상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1944년 소련군대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점령할 때, 소련 지휘관들은 바르샤바 지하당(독일로 부터의 해방독립군)에게 소련의 지원약속을 하면서 나치점령군을 몰아치도록 해 놓고, 지원을 위해 입성한 소련군들은 역으로 나치점령군으로 하여금 반나치 지하당을 섬멸토록 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배신행위는 종전 후 소련에서 훈련받은 폴란드 공산지도자와 대치시키기 위한 비공산주의자들의 제거인 것이다. 이같은 소련의 냉전수법은 동부유럽의 여러 나라를 비롯한 세계도처에서 자행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냉전의 대응책으로서 미국은 유럽에 대한 경제원조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즉 트르만 대통령은 그리스와 터키에 대해 군사원조를 제공키로 하였는 바 이는 그리스 북경지방의 공산게릴라 공격을 억제하고 터키의 동부지방과 그리스 해협기지에서의 소련의 영토확장 시도를 막기위한 것이었다. 극동에서의 중국이나 한국에 대한 군원도

이상의 논리에 입각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소련의 팽창주의가 그 내부구조의 변화에 따라 좌절되어 갈 것이라는 명백한 희망을 가지고 공산권의 진출견제를 위해 지금까지의 노력을 계속 견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강의 방법

본 강의에서는 다음 3가지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첫째 냉전에 대한 소련의 근본적 책임과 둘째 소련의 혁명목적과 전략에서 오는 광범위한 전선에서의 냉전의 필연성, 셋째로 미국이 서방측에서의 지도역할을 하나의 결과로 받아들였던 인내와 결심등이다.

여기에 덧붙여 설명할 것은 8.15 해방후 한반도에 소련의 진주와 북괴 공산정권의 수립과정을 사례로 들어 냉전에 대한 이해를 갖게하여야 한다.

또 이 강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소련이 모든 다른 사회와 같이 전혀 변할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을 피하면서, 교사는 학생에게 소련의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적대감정과 냉전의 전개를 설명함으로써 최후 승리의 목표를 그들의 이념과 전략에 부합시키려고 하는 소련지도자들의 계략을 파악케 하여야 한다.

특히 본 강의를 실시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동등한 복합범죄"라는 학생의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즉 일반국민들은 종종 소련의 적대적 태도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다시말하면 미국은 그들의 군대와 기지로써 소련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의 적대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같은 오해를 학생들로 하여금 불식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교사는

스탈린이 미국 및 영국과 함께 협의한 내용을 얼마만큼 위배하였는가를 충분히 이해시키어야 하고 그리고 서방세력이 평화유지를 위해 거듭했던 양보 그리고 유엔에서의 소련에 의해 거부되었던 자유우방의 제 제안들을 자례를 들어 설명함이 필요하다.

교사는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의 호전성, 절대적, 투쟁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닌」과 「스탈린」의 설명에 관한 자료를 구득 설명함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체코와 항가리사태를 이야기 함으로서도 소련의 호전성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의 6.25 동란을 전후한 소련의 개입문제도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참고 문헌

1. John W. Spanier,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New York : Frederick A. Prager, 1960) pp. 14~33.

2. Edmund Stillman and Williampfaff, The new Politics, : America and End of the Post-War (New York : Coward McCann, Inc., 1961) pp. 19~43.

3. American Bar Association, peaceful Coexistence: A Communist Blueprint for Victory, A study

by Richard V. Allen for the Standing Committee on Education Against Communism American Bar Association. July 1964. p. 123.

4. James Barnham, Conteinment or Liberation : The Struggle for the World (New York: John Day Company, 1953), p.256.

5. James F. Byrness, Speaking Frankl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7), p.324.

6. Winston S. Churchill, Triumph and Tragedy (New York : Bantam Books, 1953), p.800

7. Bertram D. Wolfe, "Communist Idealogy and Soviet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October, 1962.

8. Herbert Feis, Between War and Peace (Princeton :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p.367.

9. Walter Lippman, The Cold War (New York : Harper and Brothers, 1947), p.62

10. R.G. Boyd, Communist China's Foreign Policy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2), pp. 20~34, 53~64, 84~105.

11 A Doak Barnett, Communist China and Asia (New York : Harper & Brothers, 1960), p. 575.

12. Chandrasekhar, Communist China Today (London: Asia publishing House, 1961), p. 199.

13. Chow Ching-Wen, Ten Years of Storm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p. 323.

14. Alice Langley Hsieh, Communist China's Stategy in the Nuclear Era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2) p. 204

15. Werner Levi, Modern China's Floreign policy (Minneapolice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53), p. 399.

16. Herbert passion, Chinas Cultural Diplomacy (N.Y.: Frederick A. Praeger, 1963) p. 133.

Ⅱ 민주·공산대결의 양상

가. 내용 개요

영구적 냉전투쟁에 직면하여 온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은 40년대 이래 계속되는 대결의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7년부터 50년까지 소련은 동부와 중부유럽의 장악을 거의 공고히 하고 나아가 서부유럽의 장악을 위협하였었다. 이러한 계획은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화 성공으로 더욱 굳혀졌고 그러한 상태에서도 서부유럽은 공산침략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 더우기 서부유우럽은 전후 경제적으로 혼란한 데다 군사력유지마저 힘든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위협은 한층 더 심각하기만 하였다. 이를 감안한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위한 「마샬플랜」을 마련하였고 1948년 부터 51년까지 4년간에 걸치 경제원조를 단행한 바, 유럽은 경제적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이 같은 소련에 대한 역전략의 결과는 프랑스와 이탤리의 공산당의 약화를 가져왔고 1948년 서부유럽 연합의 비준에 이어 1949년에는 북대서양동맹이 채결 서부유럽의 방위가 공고해 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대해 소련은 유럽에서의 주도권장악이 어려움을 깨닫고 「베르린」봉쇄를 통한 주도권 회복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공수작전으로 이것마저 실패로 끝맺게 됨에 따라 소련은 유럽에 대한 전략면에서 봉쇄를 당하고 있음을 자인, 바르샤바 조약군 창설에 급급하게 되었다. 또한 1949년 중국 본토에 대한 공산화 성공에 다소 용기를 얻은 소련은 다시 아시아에의 침투를 노린 나머지 1950년 6월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남침을 지원하였으나 역시 미국의 즉각적인 반격에 의해 좌절되었다.

스탈린의 사후 소련은 그들의 냉전자세를 바꾸었다. 즉 흐루시쵸프는 "평화공존"이라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평화공존은 브르죠아 단계를 경유, 비폭력에 비공산주의 국가를 전복하는 수단으로써 평화를 가장한 침략전술이며 이는 일찌기 레닌에 의하여 정의되었었다.

아시아에 있어서는 평화공존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었다. 첫째, 형태는 약체 중립국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블럭은 중립주의 국가의 독립과 국내사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믿게하기 위한 기만적 노력이고, 둘째 형태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로 하여금 반제국주의를 불러 일으키는 전략이며, 셋째 형태는 미국이 자유세계의 지도자가 되었고 공산주의 국가의 제일의 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행동을 과거 유럽 식민주주의나 일본식 제국주의와 결부시켜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공격하는 형태이다. 끝으로, 공업국가를 갈망하고 유럽의 상품시장으로 부터의 탈피를 갈구하는 신생독립국가들의 지도자에게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소련의 성장하는 산업과 군사력을 이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소련의 전략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융통성있고 교묘하게 이용되어 아직도 적지 않은 도전이 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의 역전략은 소련의 도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그저 단편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한국전 형태의 제한전쟁의 재발가능성에 대비, 중공과 소련 연변의 동남아시아와 중동국가에 한한 일련의 군사원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쳐 왔다. 아울러 경제발전지원계획도 실시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요컨데 공산블럭은 항상 도전적이라면 민주블럭은 항상 방어적 입장에서 대결의 양상을 전개해 왔을 뿐이다.

더우기 공산블럭은 전후 기간중 일찌기 중국 공산정권 수립의 표

본에 맞추어 권력장악을 위한 위협적인 게릴라전을 기도하였다.

1954년 호지명이 북부 월명을 장악한 예가 그 본보기인 것이다. 그러나 말레지아와 필리핀에서는 실패로 끝났다. 그러자 공산주의자들은 새로운 도전책으로 민족주의자들의 게릴라전의 지도자들을 장악하려 하였던 것이다.

중·소분쟁이후 게릴라전과 평화공존에 대한 소련의 후원은 다소 모호하여 졌다. 중·소간의 게릴라전과 평화공존에 관한 차이점을 든다면 중공은 군사력의 사용 특히 게릴라전이나 민족해방전쟁(자본주의 정권의 전복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전쟁)과 같이 극단적인 호전성을 강조하면서 외국에서의 공산주의 행동의 독단적 순수성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소련은 자본주의 전복수단을 강조하지 않는 대신 평화공존의 가면하에 더욱 교묘한 전략을 통한 승리의 추구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어떻든간에 소련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성장한 군사력을 이용 교묘한 방법으로 자유진영에 도전하면서 냉전활동을 계속한다. 1950년대 수소폭탄과 대륙간도탄을 개발한 이후, 유럽에 대한 냉전전략을 변경하였으니 그 예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냉전의 효과를 얻으려 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소련은 미사일 우위성과 방사능 낙진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악랄한 위협을 통해 나토의 단결과 유럽국가의 결속을 약화시키려고 군축제안을 공공연히 내놓았다.

그후 미국이 수소폭탄의 우위를 회복하고 군사적으로 우위에 서게되자 다시 소련전략은 수정되는 듯이 보였다. 이처럼 소련은 내심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으며 냉전에 있어서 공산주의 전략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면서 일관되어 왔다.

첫째. 새로운 형태의 행동에 대응함에 있어서 서방측의 제안을

역이용하기 위해서 압력수단을 변경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 팽창주의를 세계의 어느 한지역에서 또다른 지역으로 옮김으로써 방어세력의 집중을 회피하는 것 등인데 이는 서방측의 대응에 대한 차질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것이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신생국가에 있어서 일부 서방국가에 대해 강력히 뿌리박힌 증오심을 최대로 역이용하는데 노력하여 왔었다는 점을 간과할수 없다.

소련은 많은 경우에 그들의 전략이 철회되기도 하고 후퇴되기도 하였지만 냉전의 발단이래, 냉전을 지휘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군사적 역량이나 공산지배 지역은 상당한 발전과 확장을 시도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든 형태의 공산주의자의 군사적 위협에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은 적절한 대응책으로써 방어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지역을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었다. 냉전의 가장 어려운 도전은 세계의 미개발지역에 대한 공산화 전복기도이다. 이러한 지역은 공산주의의 성공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사회적 제배경이 자유우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되기 어렵고 자유우방의 그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산진영의 냉전에 대처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자의 정치전 양상과 정치전이 전개되어지기 쉬운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이해력의 향상이라 하겠다.

공산주의의 정치전이란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나 정당세력을 그 도구로 이용하려하는데 그 특색이 있다. 즉 비공산국가들을 포섭하고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중립화를 시도함으로써 중공이나 소련의 침략목적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전의 양상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자유진영의 약소국들에 적용되는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이나 유럽의 제강국 그리고 호주、일본등에 적용되는 형태이다.

두가지 형태의 모든 정치전은 일종의 오열전술이라 할 수 있다 이 오열전술은 나치즘시대에도 퍽 발달된 편이었으나 현재의 공산체재하에서는 거의 완벽한 상태로 발전되었다. 더우기 공산주의 하의 정치전은 공산주의의 목적과 수단에 거의 일치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그 이념이 자본주의 사회의 궁극적 파괴와 모든 계급간의 계속적인 전쟁의 도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공산주의 정치전은 초민족적이며 그에 추종자들을 편의에 따라서는 교묘히 그들 자신의 국가에 대해서도 반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조국에 대하여도 언제나 음모나 파괴에 가입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색인 것이다.

이같이 무서운 정치전은 방대한 조직을 활용한다. 첫째 의회정치제도를 이용한 정치전 활동 : 이는 의회정치체제를 자청하면서 공개적인 당으로서 활동하거나 파괴를 일삼는 지하당을 이용한다.

둘째는 비밀경찰을 이용하는 정치전 활동 : 해외공작, 정보수집, 정부요인-타도, 목표국가의 정치부에 공산주의 기관설치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끝으로 모스코바의 조정을 받아 활동하는 전위단체의 활동등이 정치전 전개의 대체적인 조직인 것이다.

정치전 활동을 위한 임무를 띄고 있는 각 정치전 요원들은 대부분 모스코바나 혹은 다른 공산국가에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치전 훈련을 받은 후 출신국가 지방에 파견되어 요직을 받고 그 직책에 따라 암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되어 있다、 북괴가 게릴라를

양식 멕시코와 실론에 파견한 사실은 그의 일환이다.

끝으로 정치전 전개양상은 정치전 요원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두가지 기교를 사용케 하고 있다. 첫째는 조직세력을 장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상을 전적으로 뒤바꿔 놓는 것이다. 이 두가지 양상은 차례로 행사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동시에 이용되기도 한다. 활동전개 대상은 주로 정치적 사회적 단체 (예컨대 교육단체, 무역단체 기타 여론을 주도하는 단체)들로서 노동쟁의를 촉진한다든가 대상국가의 국가적 위신, 단합력 내지 국력을 손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이간이나 불화를 조성한다.

오늘날 양극화 현상이 비록 완화되고 화해 무드가 조성되더라도 공산주의의 세계적화를 위한 이념이 완전 불식되었다는 보장이 없는 한, 도전에 대처하는 국민적 결의는 항상 뒷따라야 할 것이다.

2. 강의 방법

본 강의는 도전의 이론을 각 학생에게 회상시킨후 도전의 양상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수업을 전개한다. 아울러 자유진영은 공산진영의 도전에 따라 이에 대처하는 형식을 취해 왔고 앞으로는 도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수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이 유럽에 대한 도전을 자신을 가지고 실시하게된 계기와 그에 대처키 위한 자유진영의 결속 및 북대서양 동맹의 형성절차를 설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에 대처키 위한 공산진영의 바르샤바

조약의 형성으로 더욱 유럽에서의 대결이 현실화되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공산진영의 도전전략이 한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1949년 중공의 공산화에 힘입은 소련은 1950년경에도 극동지역으로 도전의 방향을 옮겨 한국동란을 유발시켰다. 이 한국동란을 통해 공산·민주진영의 대결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한국동란사와 같은 자료가 크게 도움이 될 줄 믿는다.

셋째로 설명할 것은 소련의 냉전자세의 변천이다. 냉전은 스탈린의 사후 후르시쵸프에 의해 '평화공존'으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하고 평화공존의 3가지 형태를 이해시킴으로써 우리 자유진영의 역전략의 방향과 나아가 자유진영이 대처하여야 할 자세를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은 냉전을 통한 도전에 대응키 위하여 광범위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자유진영의 여러국가와 집단안보조약이나 쌍무협정을 체결하였는 바, 1965년 현재 44개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자유진영이 고도로 통합된 군사조직을 구축한 것은 서부유럽에 대한 주공격을 단념케하고 한국등과 같은 공산주변국가에서의 국지전쟁을 사전에 예방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와동시에 강조하여야 할 사항은 자유진영국가들이 상호원조를 통한 공산주의로 부터의 도전에 대응하는 점이다. 즉 미국은 종전후 후진국가에 대하여 무려 25~35억불에 상당하는 대외원조를 제공한 바 있는데 이는 미개발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노리는 신생국가의 침투를 예방하자는 것이며 약체국가들의 즉각적인 정치붕괴를 사전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자유진영의 공산주의 도전에 대한 대응의

사례로서 진영간의 정보교환, 군사적 민간활동, 평화봉사단, 등을 들어 자유진영의 결속을 설명할 수 있을 터인데 이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의 대외정책 설명과 소련의 공산주의 가면목표를 폭로하자는 것이며 상호민간 교류를 통한 이해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본뜻이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진영의 과제도 제시함으로서 피교육자의 의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지금까지의 자유진영의 응전과정에서 실패이유를 분석함으로서 대응에 필요한 우리 자유진영의 사명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공산진영의 정치전을 이해시킴에 있어서는 우선 공산당 노선과, 그 조직을 설명하고 정치전의 변태양상을 각자 분석케 하여 정치전의 전모를 파악토록 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3. 참고 문헌

1. John J. Johnson, (ed.), The Role of the Military in Underdeveloped Countrie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p.427

2. Amos A. Jordan, Foreign Aid and the Defense of Southeast Asi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p.272

3. John D. Montgomery, The politics of Foreign Aid:

American Experience in Southeast Asia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2). p.335

4.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3rd ed., revised (New York : Alfred A. Knopf, 1962). p. 630

5. DeVere E. Pentony, (ed.), The Underdeveloped Lands : A Dilemma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San Francisco : Howard Chandler, 1960) P. 196

6. Richard Crossman (ed.), The God that Failed (New York : Bantam Books, 1959). P. 248

7. Mario Einaudi (ed.), Communism in Western Europe (Ithaca, N.Y. : Cornell University press 1951) p.239

8. Daniel L. Horowitz, The Italian Labor Movemen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356

9. Zbigniew Brzezinski, "Threat and Opportunity in Communist Schism," Foreign affairs (April 1963), pp. 513~25

10 Robert A. Scalapino, "Moscow, Peking and Communist parties of Asia," Foreign affairs (January 1963). pp. 323~343.

Ⅲ 공산세력의 팽창과 분산

가. 내용 개요

1945년 이래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온 것은 공산국가의 종주국인 소련이다. 1919년 레닌은 "전세계적인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결말을 보게 될 세계 공산주의 혁명의 노선을 막을 세력은 이 땅위에 어느곳에도 없다"는 선언을 통해 세계정복의 목표를 선언한 바 있고, 1959년 3월 7일 동독의 라이프치히에서 후르시초프 역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가르치듯이, 전세계규모로 공산주의가 승리를 거둘때 국가간의 경계선은 소멸될 것이다"라는 연설을 통해 공산주의 연방의 세계화를 호언하였다.
이러한 호언과 이상은 종전후 동구의 점령이나 1950년 2월 14일 모스크바에서의 중·소동맹으로 더욱 현실화 된 것으로 착각하였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죽음과 더불어 1948년에 있었던 티토의 독자노선 선언, 50년 폴란드와 헝가리의 반란, 스탈린격하운동 소생하는 민족주의, 1961년의 알바니아의 비난, 중·소분쟁등은 결국 '흔들릴 수 없는 신화' 즉 공산주의의 세계화는 차차 동요의 기운이 일게 되었다. 따라서 공산주의 블럭의 내분에는 공산지배체제에 대한 수동적인 반항이 계속되고 경제원조에 대한 회의 바르샤바조약 자체에 대한 의견차이가 노골화되어 그 내분은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띄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중·소분쟁이다.
중국의 공산화는 공산주의의 가장 큰 노획물로 간주되어 왔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부터 소련의 지시와 지휘하에 중국공산당을 창설하고 1928년에는 모택동과 주덕에 의해 동남지역에 공산기지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1937년에는 모택동이 주석으로 명명되어 공산당을 이끌어 가면서 1937년 일본의 중국의 침략을 계기로 공산지역의 확장을 시도하였었다. 당시 공산당은 일본군과 대항을 하였고 지식인의 지지 획득을 위해 국내문제에 온건책을 베풀었고 국민당정부의 고립책으로 국민 이간책을 개시함으로써 순진한 국민들은 공산주의의 간계를 이해치 못한 나머지 일군과 싸우는 좋은 군대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종전후 소련과 국민당정부간의 합의로 소련군대와 일본주둔군의 무기를 모택동에게 돌려줌으로써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에게 중국공산화계획에 더욱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에 즈음하여 미국은 연립정부수립을 권장함으로써 모택동은 합법성을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고 정전과 정치적 타협을 위한 위싱톤의 압력은 오직 국민당정부에만 영향이 미쳐 공산주의자들은 오히려 전술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일시적인 휴전을 마련하는데 위싱톤의 압력을 이용하려하였다. 이에 곁들여 국민당 정부군은 1948년 만주에서의 치명적인 패퇴로 이듬해 전국토를 공산당에게 넘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정권을 장악한 모택동은 반항중심세력을 숙청을 통해 비제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 일당독재체로 기반을 조성하였고 이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동원은 스탈린 전성시대와 다를 바 없는 공포, 경찰국가적 분위기가 되었다. 이러한 체제를 구축한 모택동은 국민들에게 실패와 굶주림을 주면서까지도 공업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동력을 과학이나 기계로 대처하는 강요를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1958년에 시작한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는 실패, 점점 증대하가는 국민의 불만, 경제적 실패, 소련과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2,000만 공산당원들은 동남아와 모든 미개발 국가의 위협이 되는 무서운 전제주의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

강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이상과 같은 중공의 노력은 서방뿐 아니라 소련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중공은 주변국가를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1950년 티베트 침투, 한국동란에 참전, 1954년에는 월맹혁명 지원, 1962년 라오스 중립화 그리고 북부 인도에 대한 영토권주장 등을 시도하였다. 그외에도 화교가 많은 버마,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계속 공산전위활동을 계속하면서 대만문제에 대한 자체해결이란 구실아래 55년도와 58년에 각각 금문·마조도를 공격하였었다. 이로서 인접국은 항상 공산위협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동란후 중공은 직접적인 전쟁개입을 피하고는 있지만 이는 전쟁의 포기가 아니라 군사력 개발에 역점을 두고 간접적인 대거 개입위협으로서 인접지역에 대한 서방측 접근을 저지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중공은 1964년 10월 16일에 1차 핵폭발실험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후 곧 유도탄개발도 이룩하게 되었다.

중공은 특히 군사력 개입이 어려운 지역; 아프리카와 남미에는 고문단과 기술자를 파견 그들의 전략기지를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이었다. 따라서 인접국은 국방력 강화와 국제협력의 증진이 가일층 요구되어졌던 것이다.

중공의 팽창정책은 중공의 국가이익과 세계공산주의에 대한 하나의 임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이익과 상반되는 안보문제나 영토문제는 항상 완고하게 비타협적이었다. 요컨데 제국주의적 중공의 장기정책은 극동에서 서방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를 세계화하는데 그 1차적 목적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그 목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공의 민족해방전쟁 선동이다. 근래에 일어나고 있

는 탁구외교도 곧 위의 일환인 것이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미국선수의 중공본토에의 초청으로 본격화된 핑퐁외교는 중공의 아시아에 있어서 인민전선정책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민과 정부의 이간획책을 노리는 이중전략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공의 지금까지의 강경노선정책이 불고온 자국의 손실을 계산한 것만은 전 어느 때 보다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더욱 유연성있게 중공의 세계적화의 마수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의 세계적화의 목적은 중·소분쟁으로 그 이미지가 점차 상실되어가고 있음은 전술한 바 있다. 공산내부의 불화와 분열의 원인과 이탈양상을 살펴 봄으로써 민주진영의 대처태도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획일성 강요의 종식은 첫째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공산주의 이념이 차차 自國化하는데서 찾을 수 있고 둘째 소련지도자들이 여러공산국가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벅차다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947년 폴란드에서는 민족전통을 옹호하는 입장이 대두되었고 1948년에는 「티토」가 독자적이고 민족적인 "사회주의에의 길"을 강조함으로써 유고와 스탈린의 결별을 초래케 되었다. 결국 공산국가간의 다양화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에 자극받은 소련지도자들은 위성국지도자 숙청운동과 무력을 단행하는 현상을 자아내었다. 그러나 소련은 불화와 분열이 어떠 막을 수 없는 기정사실로 인식되자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후르시쵸프는 "신노선"을 암시하였다. 이에 중공은 크게 반발, 중·소분쟁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960년에는 전략과 이념면에서 견해차가 더욱 확대되어 다른 공산국가들은 중공과 소련을 택일하지 않으면 안될 기로에 서게 되

었고 1962 년 소련은 알바니아를 결국 이단자로 간주하게에 이르렀다. 1963 년 6월 14일 중공은 25개 항목에 걸친 중소 상위점을 소련공산당에 송부 소련공산당을 비난하는가 하면, 소련은 이를 모략이라 비난하고 1964 년 2월 14일 수슬로프의 선언을 통해 중공의 모택동 우상화를 신랄히 비판함으로써 중·소관계는 더욱 미묘해져 결국 국경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자유진영에 대한 파괴의 목적은 중·소분쟁과 하등관계없이 존속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63 년 12월 주은래의 카이로 연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분열은 있으나 마르크스·레닌주의 신념은 강하며 '제국주의' 진영을 큰 적으로 본다."는 언질은 우리에게 더욱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중·소의 위협의 심각성을 도외시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정치권력은 군사력에서 나온다."는 모택동의 말이 시사한 바와 같이 중공은 계속 군사력을 증강, 자유진영에 대한 위협을 가할 것이고 공산진영이 민주국가는 장기투쟁에서 지탱할 강인성과 인내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한 (중·소전체차 있음) 계속 위협해 올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주국방력의 배양과 자유진영의 결속을 통한 국방력의 강화에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강의 방법

본 강의는 공산주의의 세계혁명의 이론을 제시한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부터 분쟁과 분열의 불가피성을 강사는 설명하고 이에

필요한 제자료를 피교육자들이 수집분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강사는 세계혁명 추구의 공산주의 이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념에 따라 소비에트 팽창과정을 토의하여 위성지역들내에서 반소운동이 일어난 이유를 구명하는 것이 보다 이해를 돕게 될 것이다. 아울러 반소운동을 제압하기 위한 소련의 비인도적 수단을 알아보게 할 필요가 있다.

중공의 성립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중공의 극동에서의 지리적 역사적사실을 분석함이 요구된다. 즉 중공은 동남아시아의 제국에 인접되어 있으므로 인접국에 대한 실력행사가 용이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고 이러한 地理的 여건때문에 古來로 인접국가에 대한 많은 침략의 역사를 갖고 있다.

모택동도 이러한 침략의 근성을 가지고 중공을 건립한 후 레닌·스탈린주의의 순수성을 모방, 많은 국민을 희생시켜 가면서 중공의 군사력 배양에 치중함을 지적하여야 한다. 또 강의의 대부분은 중공의 다음과 같은 전체주의적 성질을 분석함으로써 학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첫째 당은 중앙집권주의적 전제국가, 둘째 당의 이념을 전사회에 주입하는 문제, 셋째 사상을 주입하므로써 교조주의화 하는 문제 넷째 군사력 건설을 위한 인민동원, 다섯째 통신수단의 독점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다. 또 중공의 통치구조의 취약점을 분석하여야 한다. 예컨대 지성인의 불만, 농민들의 소극적인 불만, 대약진운동의 실패, 살인적인 인구증가, 등이다.

중공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모택동 정권의 이념적인 기초와 원리 그리고 세계관을 빼놓을 수 없다. 중공은 전세계를 양대 진영으로 분리시키고, 중립국과 신생국을 자본주의 국가로

부터 떼어내어 자유진영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긴장조성과 완화술책을 병행하면서 연합전선술 및 선전선동을 일삼고 있다

또 중공이 도전하고 있는 지역을 설명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중공의 대외무역과 경제원조의 저의를 폭로 하여야 하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대만, 일본과의 관계를 진술함이 중공의 제국주의 야욕을 이해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따라 미국의 아시아개입도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의 내분을 강의함에 있어서는 먼저 유고와 소련의 결별이유를 설명함으로서 시작함이 좋다. 2차대전 후 폴란드와 유고에서 일어난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소련은 당황하였고 스탈린의 전제주의적 지배가 타격을 받음은 물론 당의 사기도 크게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강의는 스탈린 사후가 중점이 되어야 하며 스탈린의 사망으로 집단지도체제가 완해되고 집단으로 부터의 이탈이 늘어나는가 하면 동구에서의 봉기로 소련에 대한 항거의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공산내분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항거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소련공산당 20차대회에서의 후르시쵸프의 "평화공존" "사회주의에로의 여러갈래의 길" "전쟁은 이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는 등의 연설에 대하여 중공이 취한 반사적 행동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의 단결을 파괴하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적 차이, 대외무역, 경제적 갈등, 군사적 전략, 핵무기 문점, 중립국 정책 등에 걸친 불화는 단시일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와같은 갈등 요인들을 "우애로운 유대" "공고한 단결"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자랑어린 날말들과 비유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허구성

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갈등에 안심은 금물임을 인식시켜야 하고 소련이나 중공은 상호 비판을 하면서도 자본주의의 파괴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방법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

끝으로 핑퐁외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언론동향을 분석하여 그 이점과 허점을 본산 우리의 대비책이나 전망을 토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중·소의 강·취약점을 토의함으로써 적대집단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태도가 얼마나 금물인가도 아울러 터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참고 문헌

1. Norman D. Palmer and Howard C. Perkins, International Relations.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57), 2nd ed., pp. 125~149
2. Robert Strause-Hupe, et al. Protracted Conflict.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9) pp. 29~41.
3. Frederick C. Barghoorn, The Soviet Cultural Offensiv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p. 353.

4. William R. Kinter, . The Front is Everywhere (Norman, Okla :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50) P. 274.

5. Jeane J. Kirkpatrick, (ed), The Strategy of Deception (New York : Farrar, Straus and Company 1963), P. 444.

6. Theodore E. Kruglak, The Two Faces of Tass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62) P.263

7. Edward P. Whitlemore, The Press in Japan Today A.... Case Study (Columbia, S. C.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61). P.91

8. Raymond L. Garthoff.. Soviet Strategy in the Nuclear Era, rev. ed.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2). PP. 130~172.

9. Alice Langley Hsieh, Communist China's Strategy in the Nuclear Era. (Englewood Cliff, N. J. : Prentice-Hall, 1962), PP. 130~172

10. James Daniel and John G. Hubbel, Strike in the West : The Complete Story of the Cuban Crisis,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3). P. 180.

11. Henry A. Kissinger,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7), p.455.

12. Edgar O'Ballance, The Red Army: A Short Histor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4) p.237.

13. Dean G. Acheson, "The Premises of American Policy;" and Arnold Wolfers, "Military of Economic Aid: Questions of Priority," American Strategy for the Nuclear Age, eds. Walter F. Hahn and John C. Neff (New York: Doubleday and Co., 1960), pp.409~421, 375~387.

14. John W. Spanier,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pp.204~257.

15. David J. Dallin, From purge to Coexistence: Henry Regnery and Co., 1964), p.289

제2장 북괴의 도전

김일성을 괴수로 하는 북괴는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줄곧 북한지역을 혁명 기지화하고 그것을 공고히 한 다음 남한 지역까지 병합 적화통일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지하당 조직과 게릴라 남파등 계속적인 대남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제 북괴의 지난 20여년간의 대남공작의 발자취를 살펴보건대 다음의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해방후부터 6.25동란전까지를 대체로 남침 적화통일 준비시기.

② 6.25동란중, 즉 도발에서 휴전까지를 6.25동란시기.

③ 휴전후부터 4.19전 까지를 평화통일공세시기, 4.19후 5.16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소위 혁명역량조성시기임과 동시에 재 남침준비 시기로 불러 이를 구분 설명키로 하였다.

북괴는 해방후 소련군 진주하에 소련의 괴뢰로서 시종일관 움직여왔으며, 소련의 위성국화 정책에 순응 그 프로그램에 따라 공산국화 되었다. 따라서 소련이 동구의 위성국화에서 쓴 수법과 대차없는 방법에 의하여 간교롭고 교활하게 조종되었다.

그들은 해방후부터 6.25이전까지는 북한의 혁명기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남한에서는 지하당을 조직하고 파업, 맹휴, 폭동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건설을 파괴하고 약체화 하는데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분하였다.

6.25에 이르러서는 2주내에 부산까지 진격하여 남한 적화통일을 꿈꾸고 불법 기습남침을 감행 했으나, UN군의 참전과 한국군의 용전분투로 패퇴하고 백수십만의 인명피해와 북한전역의 초토화를

초래하였으며 그들의 야욕은 분쇄되고 말았다.

휴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괴는 사사건건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재 남침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스탈린주의자로서 무력지상, 폭력지상을 신조로 삼고 있으며 공산당 1인 전제독재의 선봉자들이며 타협도 협상도 하지 않는 가장 호전적인 공산주의자임을 알아야 한다.

Ⅰ 6.25 이전의 도전

1. 내용 개요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8일 일본의 항복을 미리 알고 대일 선전포고를 내린후 북한땅에 진주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잠정적 협약에 따라 임시군사분계선으로 선정된 38°선을 가로막고 북한지역에 공산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북한의 평양에서는 순 민간애국단체로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남건준'이 조직되어 중앙정부의 수립을 기다리며 자치활동을 해 왔는데 불과 10일도 못되어 소련군은 '평남건준'의 해제와 인민위원회 구성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민족 민주진영 위주의 평남건준은 해체되고 공산도배 과반수의 평남인민정치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군정을 편 소련 당국자는 정치적인 간계로서 소련에서 미리 훈련시켜놓은 김일성을 괴뢰두목으로서 득세시키기에 갖은 수단을 다하였다. 소련 군정은 양곡 약탈행위를 비롯하여, 가축, 공장, 기계 및 제반시설을 강제 반출하여 경제적인 수탈을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강행시켰다.

소련의 괴뢰인 김일성은 1946년 3월 30일 연안파 신민당과 합당한 공산당을 북조선노동당으로 개칭하고 소위 북조선혁명기지노선을 내세우고 그 실천에 혈안이 되었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세해 오던 김일성은 1948년 9월 9일, 인민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자칭하고 나섰으며 정적숙청을 국내파·남로파·연안파·소련2세파·직계파의 차례로 단계적으로 해치우므로서 1인독재를 강화함과 더불어 괴뢰정권을 한 손에

들어지게 되었다.

김일성은 조작된 소위 인민공화국 간판 밑에서 본격적으로 남한에 대한 침략기지 강화에 혈안이 되었다. 그들은 '국토를 완정한다'라는 구호 밑에서 침략역량을 축적하면서 적화통일이란 허망한 계획을 향해 맹진하였다. 1948년 10월 15일, 소련은 북괴를 승인하고, 동년 12월 26일에는 북한지역으로부터 소련군이 완전 철퇴했다고 공표함으로써 소련군정의 완료조치를 형식적으로 취했다. 그것은 무력적화통일을 하기 위하여 남한에서 미군철퇴를 강요하기 위한 관계에서 나온 수법이었다. 즉 소련군의 철퇴는 한낱 부대이동에 불과하였으며 사복을 갈아 입고 고문이란 명목하에 요소요소에 계속 소련군은 남아 있었다. 그들은 두만강 건너편에 계속 주둔하여 언제든지 북한에 진주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든 것이다.

김일성은 북괴의 괴수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소위 정부정강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이 정강에서 그는 '남한까지의 국토의 완정'이란 것을 내 걸고, 남한까지의 무력적화통일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북한에서의 제반 시책을 남한에서 까지 실시하기 위하여 최대의 투쟁과 백방의 대책을 다할 것이라고 수선을 떨었다. 이 '최대의 투쟁과 백방의 대책'이란 바로 대남한 무력침략을 적극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김일성은 이같은 목적하에 하나의 침략책동으로서 '남조선 인민전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은 말할것도 없고 경제기관, 군경기관에까지 노동당원과 파괴공작원을 집요하게 침투시켜 와해·파괴 공작을 벌이기에 바빴다.

이 때 이 파업을 맡은 것은 바로 남노당이었다. 북괴는 많은 공작금을 보내어 이를 뒷받침했다. 이러한 김일성도당의 끈덕진 침략 책동은 마침내 공장·기업소 내에서의 파업소동을 일으켰다. 즉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한국문제가 U·N에 상정되어 U·N 감시하에 남북총선거에 의하여 한국통일 독립정부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1948년 1월 국련임시한국위원단이 서울에 파견되는 한편 북한에서의 선거실시를 감시하기 위하여 입북 요청까지 하게 되자 이에 당황한 북괴는 소련과 함께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의 총선거 실시까지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남한전역에 걸친 폭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그들의 적화공작을 관철하려고 기도하였다.

즉 그들은 1948년 2월 7일을 기하여 살인·방화·파괴·파업·맹휴 등의 방법으로 남한 일대에 폭동을 일으킬 것을 남노당에 지령하였다.

이것이 공산당이 소위 '2·7구국투쟁'이라고 부르는 폭동사건이었다.

U·N 한국위원단이 입국하여 선거사무 토의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1948년 2월 7일 아침부터 민전과 남노당의 지령하에 전평산하 노조원들의 파업이 개시되어 각 공장을 비롯한 생산기관, 교통,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일부지방에서는 경찰서 습격, 전신전화선의 단절, 전신주의 절단, 파괴행위가 감행되었으며 교통부분에서는 철도기관차 파괴까지 하는 악질적 현상까지 나타났었다.

또한 군대안에 침투한 푸락치와 연결지어 제주도 4·3폭동사건, 여·순 반란사건과 같은 소요를 빚어냈다.

남노당은 2·7구국투쟁을 전국에 파급시켜 폭동을 일으켰으나 여의치 않자 이를 만회하려고 다시 특수한 지리적 조건하에 있는 제주도 폭동사건을 기도하였다. 이 섬은 8.15 해방후의 혼란기를 틈타 공산당 세포조직이 가장 공고히 굳어진 곳이였다.

그들은 5·10총선을 반대하는 구호하에 도민들을 선동하여 선거준비 반대공작을 개시 지하공작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도피분자 및 석방된 분자들은 한라산으로 들어가 폭동 및 게릴라 훈련을 하면서 모비포 주둔 9연대 문상길중위외 수명의 당원을 통해 무기와 탄약을 입수하고 한라산 공비의 모체를 양성하였다.

한라산 공비의 두목 김달삼의 총지휘하에 4월 3일 새벽 2시에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한편 수 많은 애국인사들을 한부로 살상하고 방화, 약탈, 파괴등 갖은 만행을 제멋대로 자행하면서 도내 각지를 횡행 참화를 빚어 냈다. 도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였다.

제주도 폭동이 공비화됨에 따라 사건발생 7개월이 지난 10월에도 완전 진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벌하기 위하여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의 1개대대가 토벌을 위하여 출동명령을 받은 것을 기화로 남노당계열의 사주를 받고 일부 불순분자들이 10월 19일 반란을 일으키고 여수시내에 돌입하여 공산계열분자와 합세하여 각 관공서, 은행, 경찰서등을 습격한 후 많은 애국인사 경찰관 양민을 학살하였다.

20일에는 여수시를 반도들이 거의 석권한 다음, 계속 부화뇌동하는 지방공산분자들에게까지 무장시켜 그들의 상투적인 기만선동과 강요로써 약 2,000명이 순천시에 돌입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리하여 순천에서만도 수일동안에 경찰관이 약 400명이 전투에서 전사했거나 반도에게 잡혀 학살 당했으며 애국인사 및 관공리와 경찰관 가족, 사회유지등 약 500명이 처참하게 살해되었다. 국군은 반란 폭동진압작전에 행동을 개시 약 1개월에 걸쳐 두목 김지회를 위시로 간부공비 전원과 주력을 섬멸하고 완전 진압하였다.

그후 거리에는 적색 테로가 횡행하는가 하면, 산중에는 공산 게릴라가 준동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북괴의 마수는 국회내에까지 뻗쳐 국회의원 노일환, 이문원을 매당케하는 등 포섭공작을 벌여 그들로 하여금 '외군철수 진언서'를 꾸며 U·N 한국위원단에 전달하는 등 파괴공작을 벌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파괴공작외에도 북괴는 경제교란공작을 시도하였다. 1946년 5월 중순경 황해도 연백평야에 대한농업용수의 통수를 틀연 거부하겠다고 통고해왔다. 즉 수원은 이북에서 시작하여 이남 연백평야를 거쳐 서해에 흐르게 되어 있으므로 수문을 막고 물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아래평야부에서는 용수부족으로 실농할 우려조차 있었다.

북괴는 이처럼 시급한 영농거를 악용하여 민심을 교란하여 농민들을 그들의 정치목적에 이용할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1946년 12월 2일경부터 대남 송전 중단을 별안간 통고와 동시에 감전을 하였다. 그후 북괴는 드디어 14일 정오를 기하여 8.15 이후 처음보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악랄한 처사로 북한으로 부터의 송전을 중단하였다

이같은 행위는 정치적 책동에 있는 것으로서 남한의 선량한 국민들을 곤경에 빠트리게 하여 공산당의 지배하에 유도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즉 5.10선거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국가건설에 있어서 산업경제부분에 타격을 주는 한편 경제파탄으로 인한 민심교란을 목적 삼은 것이였다.

북괴는 요인암살 및 테러공작을 수차 시도하였다. 그 예로서 1946년 9월 11일 이승만 박사 저격사건을 필두로 조병옥 경무부장이 46년 10월 16일 미장그릴에서 나오는 것을 향하여

수류탄을 던져 살해하려 한 사건, 그후 재차로 조 경무부장과 장택상 수도경찰총감을 살해하려고 하였다. 또한 김호의 총격 피살사건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많은 반공동지 및 가족들이 공산도배들의 테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 최대의 간첩사건으로서는 성시백의 '무명당 사건'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성시백은 중공에 가입 서안, 중경, 연안등지에서 활약하다가 1946년 12월 말경 해로로 부산에 도착, 서울에서 제반 준비공작을 한 후 월북하여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 전후 5일간 모의한 결과 대남한특수공작 지령을 받고 1947년 5월에 다시 서울로 잠입하였던 남로당 북로당 거물인 것이다. 그는 정치공작에 필요한 자금획득을 위하여 남북교역으로 총액 1억원을 넘는 물자를 반입하였으며 이것으로 공작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중공과의 밀무역으로 총액 3만8천 8백불을 공작비로 충당하였던 것이다.

그는 막대한 공작비로써 약 3년간에 걸쳐 합법, 비합법적 방법으로 광범위한 활동을 한 것이다. 북괴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획책함에 있어서 게릴라전을 전개하는 한편, 한국의 각 기관에 교묘히 침투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무력침공계획을 수립하는 자료로 삼은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2. 교수 방법

이 주제는 8·15해방 직후부터 6·25동란 이전의 북괴의 도전을 강의하는 것이므로 우선 소련군의 진주와 그들의 적

화정책의 프로그램을 설명함이 중요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소련군은 표면상 조선사람에게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넘겨주는 형식을 취하면서 조선인에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에게 그것도 조선인 성명을 가진 볼세비키 (소련공산당) 당원에게 넘겨준다.

② 이러한 중책을 맡을 사람으로 선출된 괴뢰괴수가 바로 소련군 소좌인 김일성, 본명은 김성주였다. 그러므로 그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로서 보다는 소련인의 대리가 될 만한 조선의 민족적 영웅으로 우상화해야 한다.

③ 민족 영웅화시킨 김일성으로 하여금 민족·민주진영 인사들까지도 포섭하여 민주정체를 가장하며 점차적으로 북한을 공산화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게 하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이르러서 완전히 공산독재화해 버린다.

④ 경제면에 있어서는 우선 중요 기간사업, 철도운수, 은행등을 국유화의 명목으로 공산당이 소유하고 전주민의 노동력을 총동원시켜 남침준비에 혹사케 할 것이며, 일반 개인 상공업도 점차로 이것을 사회주의화의 명목으로 당 소유로 해 버린다. 일당전제 독재권과 중요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공산당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

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전한국의 공산예속화는 불가능한 만큼, 우선 북한을 분리하여 이것을 완전히 공산혁명기지로 창설하고 여기에 혁명역량을 축적하여, 그 힘으로 전 한국의 공산화를 기한다. 그 혁명역량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군'의 육성에 둔다.

⑥ 비록 소련군정이라 할지라도 소련인은 되도록 표면에 나서지 말고 가능한 한 모든것을 김일성을 내세워 조선인의 이름으로

시 실행케 한다. 그러기 위하여 그는 북조선공산당 당수가 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북괴정권의 수반이 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전 조선공산당당수가 되어야 하며, 이에 전 조선공산괴뢰정권의 수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은 김일성괴뢰도당만 틀어잡고 있으면 그의 상전으로서 공산조선의 주인노릇을 십분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세계공산화 정책의 일대전진인 것이다.

다음에 강조할 점은 소련의 괴뢰인 김일성은 시종일관 소련의 북한 공산예속화 프로그램을 그들의 지령에 따라 충실히 실행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우선 북한 땅에 공산혁명기지를 구축하고 다음에는 남한에 지하당을 조직하여 대한민국을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파업, 맹휴, 폭동, 게릴라전을 전개할 준비공작을 서둘렀던 것이다. 따라서 북괴의 공산도당은 갖은 방법을 구사하여 남한에 대한 파괴공작을 전개하였다. 그들의 기본목표는 대한민국의 분리와 공산 적화통일에 있다는 것을 명기시켜야 한다.

3. 참고 문헌

1. 현대사와 공산주의 공보부 발행 제1집 한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Ⅱ. 8. 15 解放과 北韓共産党 韓載德 PP. 47~57

Ⅲ. 8. 15 解放과 南朝鮮労動党 吳制道 PP. 160~208.)

(이 두편은 6.25 이전의 북괴의 도전에 대하여 잘 기술하고 있음.)

2. 北韓總鑑 pp.45~68. 共産圈問題硏究所 発行.

(북괴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고도서로 필독 도서임)

3. 陸軍発展史 第一巻 陸本軍史監室発行

(국내의 소요사건에 대하여 군의 입장에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음.)

Ⅱ 6·25 동란

1. 내용 개요

북괴의 괴수 김일성은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남한지역까지 병합 적화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지하당조직과 폭동, 위장평화공세와 게릴라남파등 계속적인 대남공세를 취하여 왔다.

북괴들은 1950년 3월중순부터 38선에서 5키로메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후방에 소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려하며 동지역의 가옥에는 군대와 유격대원들이 점령하였다.

그 목적은 빈틈없는 전쟁준비로서 남한의 정보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전술이었다.

또한 4월 중순경 소련의 원조무기가 대형화물선 7척에 의하여 우라지보스토크에서 북한의 항구 청진, 4진, 기타 여항에 입항하여 각종 소련제 신 장비와 신무기를 도입하였다. 그후 그것은 극비리에 38선 근처의 철원, 연천, 복계, 평강, 숙천 등지에 수송되었다.

전투기도 이와같은 시기에 소련군 조종사가 직접 조정하여 신포, 미림의 각 비행장에 도착 북괴군에 인도되었다

한편 북괴는 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농민조합, 여맹, 민청등으로 조국보위후원회를 조직하여 소위 비행기 전차헌납운동을 전개하여 전비염출의 강권을 발동시켰다. 그밖에도 공장건설이나 관개공사등의 구실하에 15억원에 달하는 공채를 발행 수탈하여 전비에 투입하였다.

그밖에 재봉틀을 비롯하여 무명버선, 도토리등에 이르기까지 강제공출케 하였다. 이려한 공출물자와 무기수송으로 차량은 통제되고 여행도 통제됨으로 북한주민들은 남침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북괴는 '남조선 국방군이 북한에 쳐들어 온다'고

기만선전하고 무지한 주민들에게 연막전술을 사용하여 남침준비를 음폐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무력침공을 준비하는 한편 그들은 침공을 음폐하기 위하여 몇가지 연막전술을 사용하였다. 그 첫째로서는 거짓 조국의 평화통일을 제의하였다. 즉 6월 7일 평양의 소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방송이라 하여 ① 남북통일 최고입법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총선거를 내 8월 5일~8일 사이에 실시할것과 ② 해방5주년기념일에 최고입법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것. 이상에 관한 모든 조건과 절차를 토의 결정키 위하여 남북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대표회의를 6월 15일~17일에 걸쳐 해주 혹은 개성에서 개최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제소가 있었다. 그 의도는 6.25 불법 기습남침을 전제로 기만과 모략을 가장한 평화공세였던 것이다.

둘째로 6월 10일 북괴측에서는 돌연 방송을 통하여 북한에 감금되어 있는 조민당 당수 조만식씨 부자와 남노당 지하공작 책임자로서 이미 경찰에 체포되어 있던 이주하, 김삼용 두 사람과 교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것 역시 6·25남침 직전에 미리 이·김 양인을 남한으로 부터 구출하려는 것과 남침을 음폐하려는 흉계에서 였다.

이러한 기만적수단은 모두 일제가 비겁한 진주만 기습공격을 앞두고 평화교섭을 가장한 고지를 본받은 수작이었다.

북괴가 외군철수를 내세우고 '우리사람끼리의 자주적 해결운운' 한 것은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소위 '축적된 혁명역량'으로서 공산통일이 손쉽게 이루어진다고 타산하였기 때문이다. 더우기 49년 6월에 미군이 철수하고 이어 50년 1월초 '애치슨·라인'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으로 발표되었는가 하면 동년 1월 26일에 체결된 한.미군사방위원조협정에서 미국이 한국측의 광무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등이, 북괴로 하여금 더욱 호기도래의 그림을 가지게 하였으며 또한 박헌영이 남북노동당합당당시 남한에 잔존하는 당원이 50만이라고 과장선전함으로서 정면전쟁을 개시하면 남한각지의 지하당원이 궐기하여 폭동을 야기시키면 전쟁은 2주일이면 결장이 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이러한 시기에 3월에 스탈린을 모스코바에서 비밀리에 만난 김일성은 남침을 강청하여 승인을 얻고 그로부터 본격적인 전쟁준비를 극비리에 진행시키는 한편 평화통일의 선전을 한층 강화하였다.

마침내 6.25일 미명을 기하여 불법 기습남침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6.25동란을 가리켜 '국군 북침'이라고 허위·기만선전을 하지만 6.25를 겪은 남한사람은 한사람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소련공산당의 조종하에 김일성과 그 일당들에 의하여 도발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불의의 야만적침략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국회는 당황하였으며 미국은 적의 침입이 개시되던 25일에 맥아더원수에 대하여 대한무기원조를 전령하는 동시에 U·N총장에게 안보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이미 한국을 유일한 합법국가로 승인한 U·N은 즉시 안보회의를 열고 적에 대하여 전투중지, 38선까지의 철수를 명령하는 결의를 한후 곧 통지를 발하였다. 그러나 북괴는 이를 무시하고 침공을 계속하였다. 이같이 안보결의가 적에게 무시를 당하자 6월 27일 안보는 미국의 제안에 의하여 북괴군에 대한 군사제재를 결의하고 7월 7일에 맥아더원수를 재한 U·N군 총사령관에 임명하고 U·N기를 보내어 한국전선에 사용케하도록 하였다.

리이 U·N 사무총장은 결의에 의하여 7월 14일 U·N가맹 52개국 (이미 군사원조를 보낸 미국, 영국, 호주등과, 이 결의를

반대한 소련, 유고등 공산진영 5개국을 제외한 전가맹국)에 대하여 군사원조의 가부를 조회한 결과 영, 불, 호, 뉴질랜드등의 지상부대 파견신청을 비롯하여 각국은 각종의 원조제공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대한파병 17개국, 원조 40개국에 달하였다.

전투는 초전에 있어서 우세한 적군에 의하여 국군은 낙동강전선까지 후퇴작전을 한후 반격을 개시 인천상륙작전을 전기로 38선이남 작전은 완료, 9월 30일 이북추격작전을 개시 압록강변의 초산에 10월 26일 6사단 7연대가 도달, 미7사단의 일부는 갑산을 지쳐 11월 21일 국경선 혜산진에 도달하였다. 이때 새로운 적 중공오랑캐군이 한국전에 개입 새로운 전쟁이 개시되었다.

이같은 중공군의 한국진 개입에 대하여는 U·N 각국의 중공에 대한 규탄론이 비등하여 1월 20일 미국대표는 드디어 중공을 한국의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U·N 정치위에 제출, 2월 1일 U·N 총회 60개국 정치위원회는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결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전투가 장기화되자 그들은 결코 침사러 공산통일이 이룩되지 않음을 절감하였다. 그들은 패전을 거듭하게 되자 중공군의 지원을 받게 되고 그래도 후퇴하게 되자 소련을 내세워 휴전협상을 제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김일성괴뢰도당은 그들의 남침공격이 오산이였음을 깨달았으며 패전의 쓰나림도 뼈아프게 느꼈을 것이다.

"애치슨·라인"에서 제외된 한국은 U·N이 도와 주었고 그들이 남침시 인민이 호응하리라고 기대하였든 것도 반대로 다대수 인민의 증오와 반대에 부딪치고 말았던 것이다.

전쟁을 도발시킨 김일성은 조선 노동당 당수로서 괴뢰내각의 수상으

로서, 또 최고사령관으로서 당내에 설치한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전체인민을 불러 일으키라'고 외쳤지만, 전체 인민은 국군과 U·N군을 환영 지지하고 패주하는 공산당간부들을 색출추격하는 반대현상이 북한땅에 일어났었다.

이리하여 자기가 선두에 나서서 일으킨 6·25동란의 패전 책임을 그의 '라이벌'인 연안파 김무정, 남로파 박광희, 김열 등에 뒤집어 씌워 처벌, 강등시켰던 것이다. 이같이 공산전제독재자는 모든 공은 자기에게, 모든 과오는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철면피한 자인 것이다. 그 좋은 예가 북괴의 두목 김일성의 소행으로서 실증된다.

개전이래 북괴와 중공군의 사상자는 백수십만에 이르렀다. 그들은 남침개시전에 그러한 희생을 미리 각오한 침공기도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한국 또는 지원자인 미국의 방비가 십분 엄중하였더라면 6·25의 참사는 겪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방비를 확실히 하고 침략을 유인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출 우리의 의무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적당한 침공지대가 있으면 언제 어데서든지 침공한다는 정책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변함이 없다. 여기에 위험이 있는 것이다. 가장 호전적이고 폭력과 무력을 지상으로 생각하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항상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호기도래의 느낌을 주는 것 같은 과오를 범하여서는 안된다.

도발만 안하면 안심이라는 만심이 무엇보다도 금물이다. 진실로 평화가 중요하고 인명이 귀중함을 생각할 때, 눈앞의 안이한 현실에 도취되어 필요한 처치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지금 필요한 처치를 주저함으로써 후일에 큰 화근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6·25의 쓰라린 체험을 깊이 명심하며, 북괴를 모든 면에서 압도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만이 통일의 과업을 완수하는 첩도인 것이다.

2. 교수 방법

이 강의에서 강조할 점은 첫째로 6·25동란은 시종일관 무력 적화통일을 근본시조로 삼는 북괴두목 김일성의 책임하에 이루어 졌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물론 그것을 뒷받침한 자는 소련의 스탈린이였으며 북괴의 모든 무기는 소련에서 직접 지원하였다는 것도 일깨워주어야 한다.

북괴가 불법 기습남침을 한 뚜렷한 증거를 한국군은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1950년 6월 18일 괴뢰군 최고사령부 정보본부 사령관으로 부터 제4사단장에게 내린 정찰명령서 제1호와 50년 6월 22일 괴뢰군 제4보병사단 사령관 이권무의 전투명령서 제1호가 둘째 증거서다. 이것에 의하면 침공에 대한 모든 준비는 6월 22일에 완료되었고 평양에 있는 소련군 고문단은 북괴 민족보위성에 명하여 전투명령 제1호를 전방사단장에게 하달하여 1950년 6월 23일 12:00시까지 그들이 이른바 '이승만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출것을 지시한 것이다.

다음에 강조할 점은 U·N의 결의에 의하여 국제적 기관이 침략자에 대하여 군사제재를 결정하고 그 권력을 발동하게 된것은 유사이래 한국동란이 최초의 사실인 만큼 인류역사상에 큰 의의를 갖고 있으며 또한 큰 빛을 발휘한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자연적 집단력의 발동에 의하여 인류는 정의의 존엄성과 자유의 고

키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지만, 한국동란이 세계사적의의를 갖게된 것은 비단 발발의 경위에서 뿐만아니라 이러한 집단안전보장의 숭고한 정신과 권력을 발동함으로 부터이었다.

다음에 강사가 강조할 점은 북괴의 6·25남침의 오산이 어데에 기인하는가를 설명하여 주는 일이다. 북괴의 무력남침에 박차를 가한 대내외적 여건을 살펴보면

① 소련이 제정러시아시대로 부터의 침략정책을 계승하여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하에 북괴를 사주한 점, 또한 1949년 9월 24일 소련이 원자탄을 보유함을 공포함으로써 냉전태도를 경화시킨것.

② 중공이 본토에서 국부를 몰아내고 1949년 10월 1일 공산정권을 수립하였다는 점.

③ 미군이 1949년 6월 남한에서 철수하였으며 50년 1월초에 발표된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이 제외되었다는 것과 50년 1월에 체결된 한미군사방위원조협정에서 미국측이 한국에서 요구하는 중무기 공급에 불응하였다는 점.

④ 당시의 남한실정이 정치, 경제면에서 불안정하다고 오산한 점.

⑤ 남로계가 남한에 잠재하는 좌파세력을 지나치게 과장하였으며 즉 50만 당원이 남아있다고 선전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을 똑바로 인식시켜 그들의 허위·기만 선전이나 여러가지 전략·전술을 파악하여, 희망적 관측이나 현상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공산주의자들과는 협상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점과 그들

은 세계공산혁명을 궁극목표로 삼고 있으며 철두철미 폭력혁명과 공산당 일당전제독재를 공산주의 실현의 철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3. 참고 문헌

1. 國防部編, 韓國戰乱一年誌 단기 4284年 10月 發行
(韓國動乱誌는 五年誌까지 發行된 방대한 자료집이며 내용도 정확하여 참고가 됨.)

2.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編, 韓國戰爭史 第1, 2, 3卷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刊.
(한국동란에 관한 방대하고 정확한 채자료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전사임.)

3.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I. II.
(이 책은 미육군성의 전사실에서 한국전쟁의 전사편찬에 착수하여 10년만에 드디어 제1권으로 간행된 것으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사실을 공정하게 서술하여 승패를 가리지 않고 다루어 많은 전훈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4. 北韓總鑑 共產圈問題硏究所 刊
(6·25 동란시의 북괴의 대남공작에 대하여 세밀히 분석 평가하고 있음.)

5. 崔錫着, 韓國統一問題에 대한 模索, 新文化社 刊.
(북괴의 대남전략전술을 세밀히 다룬 필독서임.)

Ⅲ 6·25 이후

1. 내용 개요

북괴는 6·25 남침이 실패로 돌아가자 잠시 숨을 돌릴 기회가 필요하게되어 마침내 휴전협정을 제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번 꺾인 남침의 흉계를 어느 때가는 기어이 성취하겠다는 허황된 야심을 버리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휴전이 되자 말자, 곧 전쟁으로 붕괴된 공산혁명기지를 복구·재건·강화하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대남침투·교란·파괴공작 및 선전공세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책동은 휴전이 조인된지 불과 9일만인 1953년 8월 5일에 열린 북괴당 제6차 전원회의의 결정서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동 결정서를 보면 '휴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얻어진 평화기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1분 1초를 아껴가며 북반부에 강력한 요새의 기지를 건설 강화하는 사업에 전당원과 전인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강력한 공산기지의 창설은 조국통일을 한층더 촉진시킬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우스꽝스러운 것은 이 전원회의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허풍을 떨었다는 점과 이 모든 것이 남반부에 기지를 잘 구축해 놓았던 덕분이라고 허세를 피운 점이다.

특히 이 회의는 '전후 인민경제 재복구 발전 3개년계획'을 책정했으며 전화로 시달린 북한 주민들은 미처 숨쉴 사이없이 올려로 몰아넣었다. 이 계획은 북한주민들의 극한에 이른 곤박한 생활을 도와줄 것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토의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무력강화에만 주안을 두었다.

군수공업 특히 병기생산에 광분하여 경제·군사력 강화 경전정책에 노동력을 총동원한 김일성은 어느 정도 병기생산 전망이 밝아지자 다시 무력남침의 야욕이 돋아나 대남공작을 더욱 강화하는 일방, 모든 부분을 전시체제로 바꾸고 정규군외에 노농적위대 등 후비군까지 훈련시키기에 이르렀다.

병기공업에 있어서 65호, 42호 두 군수공장은 현행시설로서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도록 할 것과 26호 공장은 일부 시설을 다소 증강하여 생산능력을 더욱 높임으로써 1953년 초의 생산계획보다 2배 이상을 증산하도록 할 것, 그리고 82호 공장의 기본건설은 1953년 말에 완료하고 1954년부터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괴뢰군의 육군용 저격무기와 박격포등과 그에 소요되는 탄약들을 자급자족할 것에 역점을 두어 광업에 있어서는 군수공업을 보장할 것을 명하고 화학공업에 있어서는 급속한 기간내에 군용·민용 화약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것을 지령하였다.

그 뒤, 중공업 우선정책, 특히 기계공업 [illegible]을 써서 주로 무

기 생산에 힘을 기울였는가 하면, 소련이나 중공등 공산국가로 부터 받아들인 원조도 대부분 주민의 생활을 돌봄이 없이 군수공업에 투입하였다.

그런데 4·19가 터지고 한때 정국이 어수선해지자 김일성 일당은 금시 적화통일이라도 이루어지는 듯, 남한지역을 통괄할 인적구성까지 서둘렀고 평화통일 공세를 강화 연방안까지 제의하는 제스츄어를 썼다. 그러나 5·16 군사혁명이 터지자, 당황한 김일성 도당들은 일체의 평화공세를 거두고, 무력강화에 전력을 기울여 전쟁준비를 다해 왔다. 하지만 월남전 지원의 여유까지 가진 제3공화국의 실력에 제압되었음은 물론, 경제 건설도 고도로 성장되어 가는 한국에 공산주의의 뿌리를 박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는지 1968 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무장공비를 남파시켜 대남 적극공세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1961 년 9월 제4차대회와 1966 년 10월에 개최된 당대표자회의에서는 이른바 '인민경제 7개년계획'의 수립과 종래의 위장전술로서의 '평화통일공세'로 부터 무력적화통일을 위한 대남공작강화를 결정하였다. 그후 62년 12월 군사정책으로서 '군의 간부화, 군의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등을 슬로우건으로 게양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점차 대남 무장공비의 침투를 격화시켰던 것이다. 1966 년 10월에 개최된 당대표자회의에서는 혁명기지를 강화한다는 뜻에서 군사비를 증액하기 위하여 7개년 경제계획을 3년간 연장하고 대남침투를 강화하여 결정적 시기의 혁명적 대사업을 주동적으로 맞이 할것을 호언장담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이같은 노선에 따라 68 년의 1·21 사태를 비롯해서 '푸에블로호' 납북, 울진, 삼척공비침투 사태, 69 년 4월 15일의 EC-121 기의 격

추, 그밖의 갖은 도발과 더불어 무장공비를 무수히 남한에 침투시켜 양민학살과 후방교란을 일삼고 있음은 우리들이 망각할 수 없는 일들이다.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도 경제건설과 국방력증강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을 천명 재확인하고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며 호전적인 공공과 밀착하고 있다. 김일성의 우상화 및 1인독재의 강화로 강경일변도 노선을 지향하고 있으며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 당과 전인민을 전쟁준비에 동원, 공격수단과 방위수단을 다 갖추었다고 호언 장담하고 있다.

군사면에서 볼때 북괴는 현대세계에서 가장 군국주의화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북괴는 과거 10년간 39억弗을 군사비에 투입했고, 현재는 국민총생산고의 약 30억弗의 24%인 7억弗 이상을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다 지금 그들은 재래식전쟁에 필요한 무기는 탱크까지 포함해서 거의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 괴뢰두목은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만들고 '전체인민이 다 총을 쏠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또한 우리는 온 나라의 모든 지역이 철옹성 같은 방위시설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도 다 요새화하였다.' 고 큰 소리 치고 있다. 또한 '산악전과 야간전투,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정기전과 유격전' 훈련을 강화하여 정기·비정기전을 계속 준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괴는 과거나 현재나 다름없이 무력적화통일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그들은 계속 무력지상, 폭력지상의 신조를 버리지 않고 남한에 대한 침투 파괴공작을 추진함과 더불어 재남침을 호시탐탐 노리

고 있는 것이다.

북괴의 휴전협정 위반과 간첩의 만행을 자행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1966년 1월이후 68년 1월까지에 저지른 큰 사건만 추려보더라도 25건이나 된다. 예컨대 동명호, 영풍호, 납북사건, 국군사병납치사건, 식량운반트럭 습격사건 U·N군에 대한 기습살상사건, 복성호 납북사건, 56함피격사건, 중부전선 203초소습격사건, 북괴군 판문점부근 군사분계선 침입사건, 판문점 후방막사 습격사건, 경원선 폭파사건, 임진강변에서 미경비정 피습사건, 동해휴전선남방에서 어로중인 228척의 어선단을 습격, 납치한 사건, 신광호, 대광호 등 어선 7척을 납북한 사건. 해안에서 어로중인 200척을 습격한 사건, 북괴 남파공비 청와대 폭파기도사건, 미함 푸에블로호납북사건. EC. 121기 격추사건, KAL기 납북사건등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만행을 거듭하고 있다.

2. 교수 방법

6·25 이후 오늘날까지의 북괴의 도발을 강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괴의 기본노선 및 그들의 본질을 똑바로 파악시키는데 있다. 북괴는 오늘날 공산제국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이며, 무력지상주의자들의 집단이다. 8·15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본노선은 북한에 혁명기지를 공고히 구축하고 남한에 대한 무력적화통일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음에 변함이 없다. 모든 것을 남침 무력적화통일에 집중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또한 김일성 괴수는 스탈린 숭배자로서 개인숭배 우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일제시대의 일본천황 우상화보다 한층 더한 상태에

그는 놓여 있다.

다음에 강조할 점은 북괴는 항상 주민들에게 전쟁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그들은 한때 표면상으로나마 평화통일을 내세웠던 까닭에 '전쟁은 바라지 않지만 그것이 정의의 전쟁일 경우에는 사서라도 해야 한다'는 식의 전쟁관을 내세워 저희들의 내막적인 전쟁준비를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즉 그들은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해서는 미군과 한국정부를 전복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북한 인민들에게 선전 선동하고 있다.

그리고 6.25 남침을 남한에서의 북침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남한에서 '제2의 북침을 시도하여 전쟁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5.16 군사혁명후 군인들이 집권함으로써 전쟁도발의 가능성이 짙다'는 등 정반대의 억지 선전내용으로 북한주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북괴는 전쟁준비는 애당초 계획에서 조금도 변동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영화, 연극, 음악, 무용, 소설, 시등 각종 문예활동도 6.25를 중심으로 하는 선전, 선동에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잠꼬대처럼 떠벌이던 평화통일의 방책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이제 '혁명에 의한 즉 전쟁에 의한 통일밖에 없다.'고 완전 전쟁일변도 선전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어낸 구호가 바로 「한 손에 총을 들고, 또 다른 손에 망치와 낫을 들고!」인 것이다.

이와같이 북괴는 남침전쟁의 불가피함을 믿고 최후적 발악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희망적 관측이나 그들의 위장평화 선전구호에 현혹되어 판단을 흐르게 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전국민의 올바른 정신자세와 방위태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평화통일이나 협상이나, 중·소등에 평화보장을 기대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사고를 버려야 한다. 소련·중공할 것 없이 근본은 무력혁명 신봉자들이며 세계적화를 꿈꾸고 있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요컨대 공산국가는 어느것 할 것 없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로 개종하기 전에는 우리들의 적이라는 것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참고 문헌

1、北韓總鑑 共產主義問題研究所 刊

(6.25 이후 오늘날에 이르는 북괴의 재남침준비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

2. Robert A. Scalapino North Korea Today. 1963.

(정기원이가 쓴 북조선인민군과 당에 대해 쓴 것이 간결하게 잘 기술되어 있음.)

제3장 민주·공산대결의 전망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의 전망은 크게 나누어 세계적인 측면에서의 대결의 전망과 국내적인 측면에서 대결의 전망을 볼 수 있다. 본장에서는 이상의 양자를 동시에 보았는 바 세계적인 측면에서 대결의 전망은 공산진영의 취약점을 중심으로 공산진영을 관망하였다. 공산진영은 그들의 세계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취약점으로 그들의 적화야욕은 크게 제한받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즉 공산진영은 농업정책 추진능력 부족에 따라 날로 팽창하는 인구에 대비 자유진영의 협조를 받지 않을수 없을 것이며 공산지도자에 대한 인민의 신뢰감 결여나 공산진영의 내부의 긴장 그리고 공산당내부의 불안, 지도자의 공포감은 더욱 공산진영의 정치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며 각종 장기계획의 실패와 공산체제상의 산업의 비능률은 경제력과 국방력 감소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끝으로 공산진영 내부의 젊은 세대들간에 번지고 있는 자유의 물결은 더욱 공산주의에 대한 회의를 자아내고 나아가 공산진영을 탈출하는 현상을 유발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같은 취약점은 곧 공산진영의 약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에 틀림 없으나 이와는 반대로 민주진영은 날이 갈수록 그 모순점을 시정하면서 국민과 정부간의 유대를 기반으로 세계평화를 향하여 일로매진하는 상태에 있어 앞으로 전망은 더욱 희망적이라 보여진다.

국내적인 측면에서 남북간의 도전전망은 역시 상술한 바와 같이 그 취약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북괴는 정치적으로 일당독재를 강화하고 남침을 위한 대비책으로 군수산업을 육성하는가 하면

일당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폐쇄사회를 굳이 강화하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으므로 그 취약점을 먼 장래에 까지도 부복히 커바할 수 있기에는 너무도 빈약한 상태인 것이다. 독재도 유일사상도 강제나 통제도 반드시 한계가 있는 것이며 무한정한 시기까지 존속할 수도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의 역사가 증명한 사실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실현에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모순점을 하나하나 시정하면서 국민적 합의에 터전을 둔 주체역량 배양에 힘쓰고 있으므로 국민을 위한 국가로의 발전이 하나의 기정사실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I 민주진영 대 공산진영

1. 내용 개요

지금까지의 모든 강의는 대부분 본장의 대결의 전망을 파악케 함에 그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 전망함에 있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이며 단정은 아닌 것이다. 미래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양상을 예견하는데는 중·소와 같은 중요 공산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행동과정과 이념이나 현세적인 종교로서의 공산주의가 갖는 미래의 전망을 구별함이 좋을 것이다. 전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즉 공산주의 국가는 앞으로 강화될것인가 아니면 약화될 것이냐는 문제 또 동구 및 아세아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지향추세가 소련의 정치 및 군사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추세가 공산지도력에 어떤 반향을 가져올 것인가가 중요문제인 것이다.

학생들은 세계 공산주의의 취약점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취약점의 이해는 곧 공산진영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재는 무자비하고 비밀이 많으며 통제로 인한 비능률이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하여 민주주의는 때때로 자유가 방만하고 국가목표 결정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책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과 여론으로 정책간의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공산당 체제 내에서는 모든 독재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여론은 인정되지 않으며 당내부의 과오에 정면으로 도전할 언론인은 물론 반대당의 지도자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지도자의 어리석음은 그의 사망이 없는 한 고쳐지기 어려운 실정이 곧 공산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실정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 사회는 발전할 정도 적기 않지만 그 자체의 취약점이 너무 많아 그 영향은 더욱 더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산주의 진영의 취약점을 중심으로 그 미래를 전망해 보기로 하겠다.

공산진영은 :

1). 농업정책 추진능력 부족 ; 소련을 위시한 중공, 쿠바 등 주요 공산국가는 자기 인민을 먹일 수 있는 성공적인 농업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거의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러한 역부족을 보충키 위하여 국영농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그들의 식량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홍콩에서 발간되고 있는 선데이 타임지는 중공의 양곡도입양을 연 1억 7천 5백만톤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중공의 농업정책의 실정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농업정책의 부진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경공업과 중공업에 까지도 그 파급효과는 적지아니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예상된다.

2). 공산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결여 : 스탈린 사후 스탈린 격하운동을 위시한 지도자 상호간의 비난과 폭로행위는 모스코바의 무류성에 대한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신뢰감이 해이해져 가고 있다. 1921년 이래, 소련은 당파형성을 금지하는 당규칙을 마련하고 지도층에 대한 반대파를 조직하려는 당원들의 어떤 시도도 모두 엄격히 규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의 죽음과 더불어 "노도와" 같이 일기 시작한 소련 공산당 지도층 내부의 폭로

행위는 드디어 모든 공산국가에 파급되었다. 그 결과로 소련내부의 인민들은 물론 여타공산국가의 인민들도 공산지도층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게 되었고 중·소분쟁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불식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소련 내부의 긴장 ; 소련연방공화국은 내부적 갈등이 심각하다. 소련연방은 15개의 민족 자치제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민족단위에 따라 자치공화국, 자치주, 민족관구로 구분된 소련연방은 민족을 기전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민족적 분열이 다양하게 전개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고려없이 중앙집권적인 통제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각 공화국간에 암투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특히 우크라이나, 발틱, 조지아 등은 이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소련연방정부는 이에 적지 않은 고심을 하고 있다. 세계도처에서 일고 있는 자유화의 물결은 더욱 민족단위 공화국에 자극제가 되어질 것이 예상된다.

5) 정부계획의 실패 : 경제 계획을 위시한 모택동의 "대약진운동" 후르시쵸프의 "처녀지 개간" 계획등, 대규모적인 정부계획은 그들의 자인대로 실패로 끝났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의 손실은 물론 인민들의 불신감이 확대되고 있다.

6) 당내부의 불안감 고조 :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국민들을 억압하여 왔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스스로 항상 자유의 구가를 희망하고 타에 복종하는 것보다는 타에 협조를 갈구하는 것이 거의 본능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본능을 억압당하는 국민들은 언제라도 본능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공산이 큰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곧 공산사회라면 공산진영의 자유화는 당연한 결과이며 그 결과는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라는 전망은 하나의 상

식으로도 해석된다.

7) 공산지배층의 공포감 팽배 : 공산주의 국가들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숙청이라는 행동을 즐겨 써 왔다. 숙청은 집권층에 대한 반발자 제거행위로써 공산지도층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인민들의 반발을 두려워 하는 당내 사정과 지도계층의 공포 분위기에의 침쌓인 상태는 더욱 공산진영의 내부적 갈등을 조래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8) 공산탈락자의 속출 : 공산체제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이 공산국가를 탈출, 서방자유세계로 넘어오는 사례가 많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이면을 나타내는 한 단면이라 보아 좋을 것이다. 동독에 의해 더욱 굳건히 구축한 이유를 알게 되면 공산체제에 살고 있는 상황상을 짐작케 한다. 자유에의 탈출은 공산내부의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될 것이며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이 절감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9) 공산사회의 비능률의 누적 : 공산주의는 체제유지상 중앙집권화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이같은 현실적 이유는 조직의 방관성과 더 많은 통제 그리고 획일성을 강요치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중앙의 권력과 통제력의 비대와는 달리 일선에서의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타협과 협조를 기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과 중공은 지도자들의 강력한 통제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의 향상을 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능률이 저하되는 경향에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위협을 받게 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공산지도층의 통제들은 더욱 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10) 젊은 세대의 회의도 증대 : 공산국가에서는 교육을 중시

한다. 교육을 공산화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교육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연히 공산주의 정책을 강요한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의 내용과는 달리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의 경향이다. 이에 젊은이들은 더욱 공산주의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공산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아울러 공산주의 이론자체의 모순성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공산주의의 취약점은 혹자가 말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의 모든 취약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취약점이 되기 위하여는 적이 이를 활용할 능력과 의사가 있을 때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주진영이 효과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공산주의의 취약점을 최대로 활용만 할 수 있다면 대결에서의 승리는 하나의 필연적인 사실이 되고 말 것이다. 지난 수년동안 산업화된 사회에서 공산주의의 쇠퇴현상을 본다든가 선진국에서 공산당 활동이 빛을 보지 못 하는 사실은 곧 민주주의의 발전 그 자체로서의 공산주의를 배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산 교훈인 것이다.

나. 강의 방법

본 강의에서는 공산주의는 그저 붕괴하고 자유진영이 승리할 것이라는 강요적인 시사는 금물이다.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많다. 그러므로 본 강의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공산주의의 취약점을 발견토록 하고 그 취약점이 가져올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토의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장래를 예측케 함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줄 믿는다. 이를 위하여 소련과 중공의 제자료를 활용, 내용개요의 순서에 따라 평가함이 기대된다. 이에 곁들여 학생들에게 꼭 이해

되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교수방법은 교육담당자의 현명한 예지에 맡기기로 한다.

첫째, 공산주의 국가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점들이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제 요인이 자유진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산진영의 취약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취약점은 어떻게 진전될 것이며 취약점을 가바하기 위해 자유진영에 어떻게 의존해 올 것인가를 이해시킨다.

셋째 동구 위성국에서의 민족주의와 국가공산주의의 추세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또한 이는 소련의 정치, 군사적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토의한다.

넷째, 중·소분쟁이 공산진영에 미치는 영향과 서방측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케하여 앞으로를 전망케 한다.

다섯째 산업화된 국가와 신생국가에서의 공산주의의 현실을 평가함으로서 공산주의의 현실을 평가함으로서 공산주의의 이념과 현실의 불일치를 터득케 한다.

여섯째 공산도전에 효과적인 대응책은 무엇인가를 토의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취약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끝으로 민주진영이 공산진영의 도전에 대처함에 있어 취약점이 된다고 보는 점을 토의하여 추출하고 이의 개선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참고 문헌

1. President's Commission on National Goals, Goals for Americans, William L. Langer, "The U.S. Role in the World" (New York: Prentice-Hall, Inc, 1960), pp. 299~330.

2. Robert Strausz-Hape, it al, A Forward Strategy for America, Chapter V, "Building the Free World"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1), pp. 45-62.

3. Frank R. Barnett, William C. Mott and John C. Neff (eds.), Peace and War in the Modern Age: Premises, Myehs, and Realities (Garden City, N.Y.: Anchor Books, Doubleday & Co., Inc., 1965), p. 421

4. Zbigniew Brzezinski and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Power: UAR/USSR (New York: Viking Press, 1964), p. 461.

5. Jay H. Cerf and Walter Pozen (eds.), Strategy for the 60'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0), p. 155.

6. James Daniel and John G. Hubbel, Strike in the West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3). P.180

7. Eleanor Lansing Dules and Robert Dickson Garne (eds.), Dentente: Cold War Strategies in Transitio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5). p 307

8. Thomas K, Finletter, Foreign Policy' the Next phase: The 1950'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0). P.235

9. President's Commisssion on National Goals, Goals for America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0). p 372

10. Andrew Shonfield, The Attack on World Poverty (New York: Random House, 1960) P.269.

11. Robert Strausz-Hupe, James E. Dougherty, and William R. Kintner, Building the Atlantic World (New York: Harper and Row, 1963) p.400

12. 石川忠雄, 現代中國の諸問題: 東京 慶應通信株式會社, 1969.

13. 國民倫理教育研究委員會, 勝共論, 서울 良書閣, 1971.

14. W. W. Kulski, Soviet Regime,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63.

Ⅲ 대한민국과 북괴

1. 주제 개요

북한의 김일성 체제는 무엇보다도 괴뢰성을 특질로 하고 있다. 8.15 해방과 더불어 소련군이 끌어 들인 일단의 공산주의 테러리스트 즉 소련에서 훈련받은 이름도 기반도 없는 폭력단들이 소련군정의 확정과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에 항거한 이나라의 민족주의를 비롯하여 민족주의와 협조 할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토착적 공산주의자 까지도 무참하게도 말살함으로써 소련군정의 신임과 지원을 얻게 된것이 김일성 체제의 발단이 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1950년대의 말기 까지도 소련을 「해방자」 「은인」 이라고 공공연히 추앙했던것이며 그것도 미진하여 스탈린의 사주와 중공의 지원을 배경으로 민족상쟁, 골육상잔의 6.25남침을 감행하여 수백만의 무고한 인명을 앗아가고 이 나라를 폐허와 초토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유엔군의 개입으로 위기에 처한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의 가세로 간신히 위급한 고비를 넘긴 다음 휴전이후 북한에서 하향식 「사회주의 혁명」을 강행하여 50년대 말기에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철의 스탈린 체제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은 집단 농장과 강제노동 일색의 감옥 천지가 되고 말았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편승하여 소련의 지원을 확보하고 「전인민 무장화」 「전토 요새화」 「전군 간부화」 「군장비 현대화」를 독려하여 북한 전역을 병영화 하고 중요 군사 시설의 지하 이전 및 후방소개, 전쟁물자의 분산, 비축을 서두르는 한편 모든 경제 기능을 무기와 군수 물자생산에 활용 할수 있는

공업분야 건설에 집중시킴으로써 군사력 강화와 전쟁준비에 광분하였었다 그러한 결과 최근에는 우수한 장비와 강력한 전투능력을 구비한 정규군 외에 140만명이나 되는 「노동적위대」가 북한의 방방 곡곡에 편성되어, 공산주의의 정치교육과 정규전 및 게릴라전에 대비하는 전투훈련에 남녀 노소 할것없이 총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학교교육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맹신하고 김일성체제에 융합되어 충성을 다 할수 있는 공산주의의 인간상을 배양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며 북한 전역의 각급 학교의 남녀학생들은 정규수업을 제처놓고 공산주의의 이념주입, 강제노동, 군사훈련에 철저하게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은 소위 「기본성분」의 자녀에게만 허용되고, 이질적인 신분의 청소년은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 체제의 이러한 교조적(敎條的) 호전성은 저들의 통한 노선에도 여실히 반영되어 60년대 후반기 부터 김일성은 폭력통일 적화통일, 무력통일을 공공연하게 호언 하고 있는 것이다 무력으로라도 남한을 정복함으로써 적화혁명을 완수 하고야 말겠다는 것이 김일성의 망상이오 무서운 집념인 것이다

김일성은 50년대의 중반기 즉 저들의 처지가 무력하며 국제적으로는 대소 추종이 불가피 했던 시기에는 평화공존이니 남북협상이니 평화통일이니 하다가 북한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단 완결되고 전쟁준비가 상당히 진전되면서 부터는 태도를 돌변하여 폭력, 적화통일 일변도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6·25남침을 목전에 두고 침략음모를 은폐하기 위하여 「남북협상」과 「평화 통일」을 들고 나왔던 것은 우리의 기억에 새롭거니와 김일성은 흉계를 은폐하기 위하여 상투적으로 남북협상, 평화통일

론을 활용해 왔으며 최근에 와서는 한반도에서 미국세력을 몰아내고 무력통일을 완수하려는 계의에서 소위 민족자결의 방식과 외군철수론을 고창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 체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흉악한 교조주의적 공산 독재국가인 것이다. 60년대의 후반기에 들어서서 김일성은 「자주노선」이라는 것을 선언하여 마치 그들이 주체성과 민족주의를 추구하는것 같이 떠들어대고 있으나 소련군정과 결탁하여 이나라의 민족주의를 모조리 말살하고 스탈린의 지령으로 6.25 남침을 감행한 김일성이다. 이제와서 주체성, 민족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실로 가증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김일성과 공산주의를 두려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당의 통제와 감시, 그리고 폭력과 숙청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 북괴의 공산체제는 외견상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불치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모든 사람을 공산 광신교도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말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공산주의를 무조건 믿고 김일성의 가르치는데로만 하면 "지상 낙원이 실현 된다"는 광신 교조적인 말을 하고 있으며 그는 또 불과 수년이면 쌀 더미를 쌓아 놓고 제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할수있도록 물자가 풍부한 공산 낙원이 실현 된다고 곧 탄로가 날 거짓말을 늘어 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허풍을 떤 때로부터 1~2년은 고사하고 10여년이 지나 갔으나 지금 북한에서는 입쌀더미를 잔뜩 쌓아 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라거는 고사하고 성인 노동자에게 700g씩 주던 잡곡 위인 식량 배급 조차 오히려 50g씩 줄여서 650g을 주어 세끼죽도 못 쑤어먹

게 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바로 자멸의 날을 재촉하는 자기 광란의 몸부림인 것이다. 정치만 해도 그렇다. 북괴는 공산당 이외에 다른 당이 존재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헌법에는 "정당·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 놓고 이미 조직된 「조민당」과 「청우당」 마저 중앙당 간판과 당수만이 있는 유령 정당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김일성의 말과 같이 북괴치하에서는 노동당이나 비당이나 할것없이 다 같이 충성해야 한다면 도대체 노동당 이외에 다른 정당이 존재 할 가치가 없으며 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이기도 하다. 더욱이 김일성은 자기의 일인 독재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련의 비호하에 해방직후 민족주의자 조만식의 숙청에서 시작하여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등 급기야 자기의 심복마저 불안과 공포에서 숙청하였던 것이다. 김일성이의 숙청방법은 국내파를 숙청할 때에는 국외판인 연안파 소련파를 이용하여 가세케 하고 연안파, 소련파의 숙청에는 자파를 등장시키고 당료파를 숙청 할 때에는 군부의 힘을 빌고 그 뒤를 이어 군부를 숙청한 오늘 김일성 직계는 강동정치학원등 해방후 김일성이 양성한 세력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김일성은 자기의 수족을 다 잘랐으니 결국 자기의 무덤을 판 셈인 것이다.

북한주민들을 하루 15시간 이상의 노동을 시키고도 북괴의 법에 정한 8시간 외의 노동시간에 대한 노임을 주지 않고 있다던가 주민들 자신이 만들어 낸 물품을 대개 사정가격의 5배 이상의 비싼 값으로 구입케 하므로써 결국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가격착취」 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착취경쟁에 허덕이게 한것이라던가 「사회주의 개조」 라는 간판을 내 걸고 농토의 수탈과 마찬가지로 산업 부분에서도 국유화하여 협동화 한다는 구호 밑에 김일성 일당이 모든 산

업을 독점하고 수탈, 착취를 자행하고 있는 것등 북한주민들에게 허황한 전망을 심어주고 하염없는 희망속에 살도록 속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더욱 혹독한 채찍으로 강제노동에 다구치는 김일성식 사회주의 경제를 통하여 주민들을 영원히 의·식·주에 허덕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의 학교교육은 「붉은 인간 개조 교육」이 목적이고 그 내용은 사상교육, 생산교육,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괴뢰당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집단훈련소이자 병영과 같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관리의 책임자는 교장이지만 실권은 당위원회가 장악하고 방학후에는 사회단체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므로써 실제 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은 세 명령체통의 통제와 지도를 감수해야 하는 모순된 교육제도로써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들의 회의와 불만을 이르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예술·창작 활동에서는 소위 민족문화 발전을 내 세우고 있으나 실은 괴뢰당의 시책에 따라 당에서 제시한 계급투쟁내용의 작품을 기일안에 완수하는 생산성, 계획성만이 부과되고 있어 개인의 창작활동의 자유나 창조적 예술성 등은 찾아볼수 없는 예술의 불모지대를 이루고 있다. 더우기 북괴 방송은 괴뢰당의 전략·전술의 어용도구로 화하고 있어서 민간방송의 존재나 개인적 일로써 보도기관을 이용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게 되어 있다. 그밖에도 북괴의 취약점은 북한 사회 각 방면에 걸쳐 허다히 볼수있고 이와 같은 취약점은 날이 갈수록 심각화 되어 가고 있어서 김일성 일당의 자멸이 불가피 한 지경에 까지 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늘날 국제사회는 긴장완화정책을 지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여기에 소련이나 중공까지도 예외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괴 김일성이가 아무리 무력통일을 부르짖고 전쟁준비를 강화하여 긴장을 조성 하므로써 그들이 목표하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달성하려 하지만 공산국가들을 포함한 오늘날 국제사회는 김일성이의 광적인 발버둥을 냉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의 기형아인 북괴는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교조적 본질로 인하여 인류의 발전과정에서 낙오 될것이 틀림없으며 그간에 저들이 건설하였다는 경제구조도 국제경제의 참여와 경쟁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이다.

한국민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우월성 즉 자유, 평화, 인간존중, 민주주의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정당성등 우리가 그간에 성취한 국제적 지위, 북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한 인적자원과 경제발전등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고 더욱 증진 시킴으로써 한국과 북괴의 힘의 격차는 날이갈수록 더 심해 질것이 분명하다. 당면한 북괴의 위협에 대하여 우리는 맹방및 우방과의 유대강화와 협력관계의 증진에 힘쓰는 동시에 경제발전 특히 중화학 공업분야의 비약적 발전을 비롯한 자주방위 태세의 확립 등 안보의 강화로써 대응하면서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국가의 발전과 국력의 증강에 일로 매진해야 할것이다. 교조주의적 공산주의는 오늘날 전반적으로 쇠퇴과정에 있다. 모택동이 사망하면 중공의 교조주의는 와해되거나 근본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중공의 교조주의가 변질되면 그 영향은 필연적으로 북괴에 파급될것이 명백하다.

지금 김일성은 전쟁준비에 광분 하고 있고 북한은 군국주의 일색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한 극단적 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며 언젠가는 우리가 쌓아 올린 도덕적 우월성과 국력의 충실한 배양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

을 달성할 날이 오고야 말것이다.

2. 강의 방법

본 강의는 우리의 현실을 토대로 한 북괴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 근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강의방법은 우리는 실력이 우수하고 저들 북괴는 미약하니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식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효과를 주기 보다, 오히려 강의자에 대한 불신이 싹틀 가능성도 없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본 강의는 강의자 자신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북괴의 취약점을 들추어 냄으로서 학생 스스로가 우리의 승리를 전망토록 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선 강의자는 북괴의 수립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공산당 전위들의 민족 배신행위를 어떻게 전개하였는가를 이해시키어야 한다.

둘째로 6.25 남침의 흉계를 폭로 함으로써 우리 민족에 대한 피해상황은 물론 북괴의 침략성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도발을 위한 각종 흉계가 북괴 대내 대외적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북괴의 취약점을 영역별로 정리하고 이를 하나씩 토의하는 방법도 고려할만 하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피교육자 스스로가 취약점으로 인한 북괴의 전망이 비관적임을 깨닫도록 교사의 방향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 북괴의 취약점의 하나로서의 정치적 측면에 관한 강의 자료로는 국제적 입장에서의 고립, 대내적인 입장에서의 숙청, 전인민의 강요된 생활 등등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계의 화평무드에 적응치 못한 대 중·소관계에서의 고립정치 (소위 자주노선)이라든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숙청에 따른 괴뢰정부 지도자의 불안 그리고 일반국민에 대한 탄압에 따른 국민의 동요 등등이 괴뢰 지도자이자 괴뢰정부의 중요 고민거리인 것이다.

이같은 불안은 북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불만 요인임과 동시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점인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북괴의 불안을 촉진하고 조성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가 학생들로 부터 논의 되도록 교사가 유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교사가 유의할 점으로 민주정치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민주정치는 국민과 정부간에 합의과정을 놓고 많은 토의를 필요로 함으로 때에 따라서는 혼란이 따르는 수도 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듯이 많은 론의는 보다 좋은 제도로의 전진을 위한 것인 만큼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태도의 함양이 중요하다.

둘째 사회적 측면 : 북괴의 모든 사회체제는 폐쇄적으로 움직여 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폐쇄성의 지속불가능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회는 점차 개방사회로의 진전이 하나의 추세라 하면 유독히 북괴만이 폐쇄성이 유지되라는 전망은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는 교수는 토의시간을 활용 폐쇄사회와 개방사회의 장단점을 터득케 하고 북괴체제의 붕괴 불가피성을 전망토록 함이 요구된다.

특히 교사는 세계의 공산진영의 개방사회로의 전환문제나 재일교포의

북송이 북괴사회체제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여 설명하므로써 북괴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경제적 측면에서 ; 북괴의 경제는 극단적인 통제경제체제로서 통제경제체제가 북괴의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학생들로 하여금 예견케 할 필요가 있다.

북괴는 수차에 걸친 경제계획을 실시하였는 바 학생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것이다. 이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이윤추구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의 경제계획의 역효과성을 제시함이 기대된다.

또 북괴의 생활실태나 간첩수기 김일성의 계획실패를 자인하는 어록을 인용함으로서 북괴경제계획의 실패를 납득시키고 그 결과 국민의 생활을 예상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섯째 문화적 측면에서 ; 북괴의 모든 문화활동은 김일성 우상화의 수단으로 독창적 창조성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문화가 개인의 창조활동에서 연유되는 것이라면 창조성을 인정치 않는 북괴의 문화수준을 짐작케 한다. 현재로서는 북괴의 문화수준이 현상유지에는 지장이 없다 손치더라도 창조성을 제한하는 문화정책은 결국 문화적 후진성을 초래하고 말것이다. 일국의 문화 후진성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였던 古錄는 앞으로 북괴의 경우에는 그 예외일수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할것이다.

3. 참고 문헌

1. 공산권 문제 연구소, 북한총감, 서울, 1967.
2. 國民倫理敎育硏究委員會, 勝共論 서울, 良書閣 1970
3. 國土統一院 통일의 길, 서울, 국토통일원 1970.
4. 國土統一院 통일월보 (3~12) 서울, 국토통일원 1970
5. 國土統一院 통일월보 (1~5), 서울, 국토통일원, 1971
6. 國土統一院 통일논총 서울 국토통일원 1970 (I)
7. 國土統一院 통일논총 서울 국토통일원 1971 (II)
8. 國際弘報社 北韓 서울 국제홍보사 1970.
9. 황종연 승공, 서울, 한국반공연맹, 1970.
10. 韓載德, 金日成을 告發한다, 서울, 내외문화사 1965.
11. 國土統一院,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서울, 국토통일원 1970.

제 5 부

통일을 위한 사명

제1장 한국의 분단과 통일성의 요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비극적인 남북의 분단이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요청에 대한 인식이나 심각성은 근래에 와서 차차 현실 생활에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휴전선이 마치 국경과 같은 인상을 갖기 쉽고 이북 동포가 외국인과 같은 소원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통일의 길을 더욱 멀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조국분단의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의 통일요청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볼때 필요불가결한 요소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을 시도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나 분단된 일이 없던 우리민족은 국제무대에 나서게 된 19세기 말에 일본, 청, 러시아의 식민지 각축장이 되면서 한국 분단의 위험성이 생겼다. 그리하여 민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지만 민족의 저항은 치열하여 8.15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극동진출의 야심이 38선을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이북땅에는 괴뢰정권이 서게 되면서 우리 민족은 국토양단의 불행을 갖게 되었다.

국내의 민족진영과 국제연합의 자유진영은 대한민국의 정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민족의 염원을 풀어주려 하였으나 소련은 거부권 행사로 이를 방해하고 6.25 남침으로 이에 응답하였다.

1960년대의 대한민국은 공산세력이 다시 남침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통일에의 요청이 역사적 인도적

개인적 국가적 및 국제적 견지에서 얼마나 강력히 요청되는가를 알아야겠다. 역사적 견지에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단일국가가 되어야할 것이며 인도적이고 개인적인 요청에서는 승공통일이어야만 민족을 불행에서 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가적 국제적인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정치지리적 조건이 자유진영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면 아시아 전역이 공산세력 하에 들어 위험한 상태가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승공통일은 개인, 사회, 국가의 요청이며 동시에 자유를 희구하는 온 인류의 요청이기도 하다.

I. 한국의 분단

1. 내용개요

1910년 일본 제국주의에게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도 우리민족을 분할하려는 음모는 영토 확대 야심이 있던 일본과 부동항을 얻고자 동진하는 러시아 사이에 있었다.

일본의 미우라는 1895년 일본과 러시아의 국교조정을 위하여 우리의 의사를 무시한 채 분할관리를 제의했고 다시 일노 전쟁 직전인 1904년에는 러시아가 분할관리하자고 일본에 제의하였다. 이러한 지난날의 분단음모는 38도 또는 39도선을 남과 북에서 점유하자는 것으로서 38도선 이북에 대한 러시아의 야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싹튼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상 분단된 일이 없던 한국을 분할 점령하려는 러시아는 부동항 정책에 대한 끈덕진 야욕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의 서양 열강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의 식민지 경영으로 많은 물자를 거두어 들이는 시대였고 외국의 정세에 어두웠던 구한국은 자칫하면 서양의 제국주의에 의하여 잠식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1894년의 청일전쟁은 전통적으로 조선과 친교관계가 있던 청과 새로운 세력으로 밀려들어 온 일본사이의 싸움이었다. 이 두나라는 서양문화를 도입하면서 급속도로 근대화하였고 조선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므로서 경제침략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특히 일본은 조선이라는 공업 제품의 소비시장에 일용 잡품인 실, 바늘, 성냥등에 이르기까지 침투시켰고 농촌경제까지 마비시켰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선과 청나라와의 무역관계가 늘어나자 일본은 자기의 시장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이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고 마관조약에서 조선을 자주독립국가로 확인한다는 것이 제1조로 들어있다. 그러나 결과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간섭을 허용하는 정세로 변하였다

이후 약 10년동안 일본은 더 심한 경제적 침략과 정치적 간섭을 자행하기 시작하여 갑오 경장과 같은 근대화 작업에까지 작용하고 을미년의 민비 살해사건을 일으켰다. 온 국민은 독립협회의 자주혁신에 호응하고 일본의 침입에서 벗어나려는 정부는 러시아와 접속도로 가까워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파벌대립은 청、일에 의존하는 사대당과 독립당의 두개로 나누어져 있던 상태에서 다시 러、일의 외세 의존 세력의 대립으로 변하기에 이르렀다

구 한 대한제국의 이씨왕조는 밀려오는 개화사상이나 외국의 군사력을 자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파벌싸움에 끌어들임으로서 급기야는 한국땅을 점거하려는 외국의 싸움을 두번째나 일으키는 원인을 조성하였다.

1904 년에 일본과 러시아가 만주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권을 결정하려는 싸움이였다. 일본은 국가의 흥망이 여기 달려 있었으나 러시아의 목적은 한반도에 세력을 부식하자는 것이였으며 러시아의 국내사정이 달라져서 일본이 승리하였다. 영국이나 미국의 지원을 얻은 일본은 외교적으로도 실효를 거두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더 강화시켰다.

1905 년 전쟁이 끝날 무렵에서부터 , 구한국 정부는 일본에 의해 철도、통신망、군대 수송로를 허용하고 일본인 정치 고문을 초빙하

는등 일방적인 외교 관계로 나가더니 1905년 을사조약에는 보호 정치라는 이름밑에 외교권을 빼앗기고 대외관계는 일본 외무성이 담당하고 통감부를 설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교육내용에도 간섭하여 교과서까지 검열하는 등 일본정책은 1910년에 완전히 국권을 강탈하기까지 예정된 순서를 진행시켜 나간 것이다.

36년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태는 오랫동안 내려오던 중국과의 사대외교와는 전연 성질이 다른 것이었다. 군대를 앞세운 무단정치는 학교 교원에게까지 대검을 차고 교실에 들어가게 하였으니 정치, 경제 및 문화가 완전히 일본에 의하여 이끌리는 것으로서 마치 서양제국이 야만국을 다스리는 것과도 흡사한 강압정치였다. 식민지로 외국의 지배를 받은 일이 없는 한국인이 민족의 이름으로 항거하였던 것은 당연하다.

일·러전쟁이후 민족의 분노가 일기 시작하더니 의병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1907년의 군대해산을 계기로 의병활동은 절정기에 달하였다. 지식인은 언론·학술·계몽사업으로 일제침략을 규탄했고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외교관이 파견되어 순국으로 애국의 지성을 표시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힘에는 힘으로 대항하려는 용감한 애국지사들의 의거도 연달았다. 이러한 민족적 항거속에서도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던 당시의 친일파들이 자손들을 얼마나 큰 불행으로 몰아 넣었는가에 대하여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고루된 관념에 의하여 외세를 당파싸움에 끌어들인 당시의 왕족들이나 정치인들의 과오를 옳게 비판하는 능력이 있어야 현재의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0 년간의 일제 무단정치에 견디다 못해 거족적으로 봉기한 3.1 운동은 우리의 민족의식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일이었으며 그후 국내외의 독립 단체와 문화단체가 민족의 슬기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일제 36 년동안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민족의식이 마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국의 승리가 자동적으로 독립을 안겨다 준 것이 아니라 3.1 운동 이후 줄기찬 민족의 반항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의 감격은 소련의 책동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38 도선 이북에 소련군이 진주함에 따라 국토양단이라는 상태가 빚어진 것이다.

연합군은 일본 군대의 무장해제라는 작전상의 이유를 표방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전통적인 소련의 동방경략의 야심이 작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카이로 얄타회담에서 그들이 전후처리를 의논할 때 한국의 38 선 문제가 의제에 오르던 안 오르던 간에 스탈린의 염두에는 소련 세력의 동쪽 진출문제가 큰 위치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일본이 예상외로 빨리 항복을 결정하였고 소련은 일본의 종전 제의를 묵살하고 오히려 급속도로 대일본 진격을 추진하였다는 일련의 사실은 미국을 당황하게 한 것이 틀림없다. 미국측 변명에 의하면 "소련이 한국 전 지역을 장악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로서 38 도선을 책정하였다는 것이지만 36 년동안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오던 한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이었다.

일본사람들의 국권강탈에 항거하여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무수한

애국지사들 해외로 망명하여 일본의 지배력을 몰아내기에 노력한 인사들, 국내에서 겨레를 이끌고 독립운동을 전개한 선배들, 일본에 징용과 징병으로 잡혀간 청년들, 글씨, 언어, 심지어 성명까지 빼앗기며 일본에 시달려온 민족에게 38도선이 생긴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였다. 작전상의 임시조처라는 점에서 참아보려던 한국민은 38선 이북에 들어온 소련군의 행동에서 나타난 야만성, 무식, 비도덕성 약탈성을 보고 즉각적으로 앞날이 순탄하지 못할 것을 예감하였다.

결국 1945년 12월 27일 모스코바 삼상회의는 한국을 5개년 신탁통치(4개국)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였고 이는 한민족으로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이제는 이 것이 임시적 책정이 아니라 영구화될 위험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연합국의 공동관리이기도 하지만 민족적 모욕이오 나라없는 설움이였다. 이에 민족은 한덩어리로 뭉쳐 공산당까지 포함한 모든 정치사회단체들이 "조선에 신탁통치를 해야 할 하등의 조건이 없다"고 즉각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듬해 1월 2일 모스크바로부터 지령을 받은 남북한 공산당은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신탁통치를 지지하였고 소련군은 반탁운동의 선구자 조만식을 체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소련이 신탁통치 내지는 38도선의 조작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민족진영의 줄기찬 반대로 인하여 신탁통치 논의는 후퇴하였으나 2월에는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소련군 대위 김일성이 위원장에 취임하여 남북 분단 계획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러한 기초공작이 끝난 다음 3월에 가서야 소위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

리고 그 결과는 소련의 트집으로 난항을 거듭할 뿐이었다. 결국 미국이 모스크바 협정의 테두리안에서 한국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게 된 것은 이미 38도선 이북에 동유럽의 위성국가들과 같은 김일성 괴뢰정권이 조작된 뒤였으므로 성공적 외교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마샬 국무장관이 1947년 9월 17일 한국문제 해결을 제2차 유엔총회에서 제기한 것은 소련과의 타협이 이미 끝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국민의 독립에 대한 긴급하고도 정당한 요구를 그이상 지체시킴을 원치 않으므로 ....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국정부를 수립하는 동시에 미·소 양군의 철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다. 소련대표는 남북한대표를 초청할 것과 미소양군이 동시에 철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대 결의안을 제출 하였으나 이것은 부결되고 1947년 11월 14일 미국안이 43대 0으로 채택 되었다.

이 통한결의안에 따라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이 설치되었으나 소련은 예상했던대로 이 위원들이 38선 이북에 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이에 남한에서는 단장인 인도대표 메논과 협의하여 이른바 "가능한 지역의 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여 유엔의 승인을 얻어 역사적인 5. 10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었고 우리 정부는 유엔 결의에 의해서 수립된 정통정부이며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유엔의 승인을 얻은 것이다.

이북에서는 소련 점령군 사령관이 서울의 도. 시. 군. 의 인민대표자 대회에서 날치기로 지배집단을 조직하여 소련군 대위였던 김성주를 김일성으로 개명위조하여 괴뢰정권을 수립 하였다. 행정조직으로

국회의원의 대역을 삼고, 흑백선거로 괴뢰정권을 세우는 절차는 민주주의에의 반역이었다. 6.25 동란을 도발하려는 소련의 사전 계략이 예정대로 연출되는 과정이었다.

소련은 즉각적으로 남한을 침공한다면 쉽게 적화할 수 있으리라는 오산으로 중장비를 갖춘 군대를 조직하여 괴뢰정권을 세운지 일년만에 6.25동란을 도발하였다. 예상대로 대한민국은 군비가 없었고 공산군은 쉽게 수도 서울을 거쳐 남하하였으나 국제연합은 합법절차에 따른 정부를 도와 군대를 파견함으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태는 20년전의 그때와는 달라졌다.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괴뢰의 전술과 전략에 대비하는 군력과 경제적 성장이 이룩되었다. 남어지 과제는 통일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지녀야 할 가치관을 확립하는 길이다.

2. 교수방법

한국의 분단이 역사에의 거역이고 민족적인 슬픔이라는데 대한 심각성이 해가 갈수록 만성화하여 가는 경향이 있다. 우리민족이 타율적으로 부당하게 남과 북이 갈려있다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일제 침략과 한국의 분단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이 나라의 주권을 강탈하지 않았던들 분단은 없었을 것이고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던 민족적 의지가 분단된 조국을 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던 당시의 정세와 민족의 노력이 오늘날의 거울이 된다

승공통일은 일제하의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한편 국제정세에 대한 관찰력과 비판력이 필요하다. 8.15 이전의 연합국측의 결정이 어떤 정세하에서 이루어졌으며 군사적 처리를 미·소양국이 맡았던 사실에 대한 원인과 경과의 구명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를 발견하는 과정과도 비슷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제연합에 의하여 인정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 북한에 있는 공산정권을 괴뢰정부라고 하는 이유가 된다. 다시말해서 공산국가들도 한국정부를 괴뢰라고 악선전할 수 없는 법적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적으로 인식시키려는 까닭은 대한민국의 주권하에 통일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주려는데 목적이 있다.

3. 참고문헌

李基白　韓國史 新編
玄相允　3.1運動 勃発의 概略　思想界　1963.3
國民倫理敎育硏究会　勝共編

Ⅱ. 통일의 요청

1. 내용개요

우리가 승공통일을 이룩하여야 하겠다는 신념은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이냐는 방법의 문제와는 다른 각도에서 나온 것이라야 한다.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의 통일요청에 납득이 갈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신념을 굳게하는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한국의 분단은 첫째로 역사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민족은 원래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고대에는 씨족끼리 작은 집단으로 뭉쳐있다가 씨족들이 부족국가로 모이고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으로 고대국가를 형성하여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하다가 7세기에 신라가 민족통일을 이룩하였다.

민족에 의한 단일국가 성립은 고구려의 옛터를 잃은 결과가 되었지만 통일된 국가로 출발하였다는 데에 뜻있는 과정으로서 그때부터 삼국의 문화 전통을 이어받아 단일 국가로서의 모든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그후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한번도 분단된 일이 없이 오랜 역사를 거듭하여 왔다.

고려시대에는 거란 여진 몽고의 침략등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북진、고구려 영토 회복의 희망을 꾸준히 실현시키려 노력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왜국이나 청국의 침략을 받았어도 국권과 영토를 유지하여 민족의 분열이나 분단은 없었다.

19세기말에 일본과 러시아의 흥정의 대상이 된 때가 있어도 단

일 민족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위엄이 분할 점령을 허용치 않았다

한때 일본에게 주권을 잃었으나 통치권을 강탈당하였을 뿐 민족이 분열되지는 않았었다. 일제에 아부한 친일파가 극소수 있었으나 그들도 조직과 동포에 대한 애정마저 없어진 것은 아니었고 8.15 해방 후 그들에게 커다란 보복을 가하지 않는 것도 동족으로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관용으로 대했기 때문이다

남북의 분단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부당하고 타율적인 것인데 문제가 있다. 한국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결정한 38선은 아프리카 분할이나 폴랜드 분할을 예사로 하는 습성을 가진 강대국의 비인도적인 처사이다. 역사상에 나타난 강대국의 점령도 정치적 분할이었을 뿐 문화와 역사의 단위인 혈연 공동체를 분할하지는 않았는데 2차대전 이후에는 독일 한국, 그리고 월남등 민족국가를 분할하는 것을 예사로 삼는 경향이 보인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인종과 언어와 풍습이 하나로 된 순수한 단일민족으로서 독일과 같이 여러번 분열되었던 경험도 없고 월남과 같이 여러개의 인종이 모여사는 곳도 아니다 이런 민족국가들을 분할하는데는 반드시 소련이 외부지제로 진출하려는 돌마구를 만들려는 야망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소련이 아시아 진출의 전진기지로서 괴뢰정권을 세워 한 민족의 장래를 희생시키는 역사에의 반역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하고야 말겠다는 이유중 하나는 인도적 입장에서 이다.

인간은 나면서 부터 평등하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과연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끌리는 방향으로만 사고력을 발동하는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어 버리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심도 크지만 우리 자유민은 그러한 정치에 신음하고 있는 동포를 구출해야 하겠다는 도의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에 의하여서 생산수단을 공유화 하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공산당만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며 수요에 의하여 공급하여 준다는 그럴듯한 구호는 눈을 가리운 장막속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생활상과 비교할 기회나 능력이 없을때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사실상 극빈자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과 남한에는 전기가 없고 서울 인구의 태반은 실업자, 걸인들이라는 허위선전을 믿는 것은 결국 같은 목적에서 나온 두개의 다른 결과일 뿐 철의장막이 걷히면 곧 무너지고 마는 것들이다.

국민을 속이고 그 생활자재를 공산당에서 이용하여 간첩, 게릴라, 해외활동비에 막대한 자금을 방출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희생을 감수하는 기계가 되어버린다.

이에 대한 처방은 철의장막 뒤에 인도주의를 보내주는 방법도 있다. 문화의 접촉을 통하여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면 항가리 체코와 같은 자유화의 불길이 공산치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를 목격하였다. 소위 공산당에 충성을 강요당하면서 얻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개성을 말살시키는 것임을 알았을때 인류는 죽음으로 자기를 지키는 본성을 나타내게 마련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외부세계에 적을 만들어 국민의 적개심을 밖으로 돌리고 나서 노동의 착취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체코 항가리와 같은 자유화의 물결이라는 내부의 압력과 민주진영 국가들의 강력한 군사력에 위협을 받으면서 항상 전시체제로

나가야 하는 공산북괴도 역시 인도주의에서 멀리 떨어진 정책을 쓰고 있으며, 북한의 동포들은 이 인도주의에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승공통일의 요청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인간애의 작용이라 할 것이다.

세째로 통일의 요청은 국민의 개인적인 요청이기도 한다. 한국민족의 모든 문화는 가족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민족공동체의 중핵적 역할을 하였다. 공산당은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고의로 파괴시킴으로서 역사와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가족적 유대나 윤리를 파괴하고 공산당의 세포조직으로 이를 대체시키며 그 강점을 크레므린에게 두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가족윤리를 무시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기본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물질주의적 인간관에서 우러나온 사회주의의 가족제도는 가족구성을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웃지못할 공산사회의 윤리가 생겨났다.

한국의 전통에 의하면 민족은 하나의 큰 가족이었다. 이러한 정신 문화는 개인과 사회 또는 국가와의 관계를 가정짓는 원천적 원리가 되어왔다. 나의 기쁨이 이웃(민족)의 기쁨이오 이웃의 슬픔이오 또한 내것이기도 했다. 이웃과 나를 대립관계에 두고 경쟁하며 감시하는 서양의 사고방식과는 다르다.

공산주의는 서양의 인생관 중에서도 유물론적인 이론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드는 것이다. 북한의 공산치하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비한국적인 현상을 반신반의로 들어오던 한국민은 6.25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인간성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학살, 납북, 감금, 집회 등에 시달리면서 이북동포들이 가족과 떨어지고 고향을 등지면서까지 남하하게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6.25 사변은 남한

사람들까지 월남한 사람들과 꼭 같은 심정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되었고 공산당으로는 커다란 실패를 한 셈이다.

공산당은 2차대전 당시 독일이 유태인에 가하던 것 보다도 더 심한 처사를 동족에게 하였고, 남북인사나 학살된 국민들중에는 비전투원이나 비정치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보복을 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살 또는 남북으로 괴롭힌다는 것은 민족감정에 대한 공산주의의 반항이고 통일을 위한 의욕은 전혀 없는 공산주의자다운 정복을 위한 싸움이었음이 폭로된 것이다.

해방이후 가족을 버리고 남하한 사람들이나 남북가족들은 북쪽을 향하여 더 큰 적개심을 가질 것이 틀림없고 이들의 통일염원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기회를 엿보다 월남에 성공하지 못한 이북동포들은 남쪽하늘을 바라보며 통일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통일이 이러한 개인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자체를 공산사회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개인의 행복이 모여 국가의 번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번영하면 개인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전체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개인의 요청이 국가정책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다.

승공통일은 국가적 입장에서 시급한 문제이고 해결의 열쇠와 통일의 힘도 국가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통일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 정부가 합법정부임은 헌법 제2조에 한국 영토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 영토의 나머지 부분을 회수하는 일이 곧 승공이라는 과정을 통한 통일인 것이다

이것은 서독정부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헌법은 통일 독일 헌법의 발효될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서독에만 한정된 법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한민국 전영토에 걸친 합법정부로서의 통일을 전제로한 헌법이다.

따라서 서독은 동독과 대등한 상호교섭을 벌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우리는 북괴와 더불어 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전체의 대표 정부이고 김일성 일당은 북한지역에 강제로 설치된 소련의 괴뢰정권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라는 호칭을 써야하고 북괴는 북한 (North korea) 라는 지역명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마땅히 국제연합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도 우리 민족이 입은 피해의 하나이다. 소련은 북괴의 국제연합 가입을 제안할 법적근거가 없기때문에 남북한의 대표를 동시 초청하자는 제안을 되풀이 하고 있으나 그들의 상투수단은 국제연합에서 회의진행을 수라장을 만들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자유진영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이 유엔 가입국이 되어야만 우리의 외교무대가 넓어지고 통일에도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승공통일이 유엔 가입에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올림픽이나 그밖의 국제회의에서 북괴가 호칭에 대하여 고집하는 것도 국제적 지위를 높혀보려하는 수단이지만 세계의 인식은 여전히 소련의 괴뢰정권으로 보는 나라가 많다.

경제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북쪽의 지하자원과 남쪽의 곡창지대가 합쳐야 경제성장을 더 속히 이룩할 수 있다.

또한 국경선으로서 압록강과 두만강은 조선시대이래 내려온 것이다. 우리의 지리적 조건은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의 험한 지세가 방파제

의 구실을 하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국토 양단은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조건을 무시한 인위적 국경아닌 경계선이므로 인간의 손으로 무너뜨리기에 전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국제적 정세에서 보면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일찌기 근세초기부터 한반도는 열강제국의 각축장이 되었고 해방을 전후하여 어느 한 강대국의 세력하에 들어서도 안된다는 진시 연합국사이의 기본적 입장은 결국 한국의 정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말함이고 이것은 또한 승공통일의 당위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북괴의 통일방안은 곧 소련이나 중공에 의한 단독지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자주독립이 될 수 없다.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국력으로서 수호되어야만 이상에서 열거한 통일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 구 한국시대에 국력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외국세력이 밀어닥친 것과 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자주적 국력 배양이 급선무인 것이다. 그러므로서 어떤 외국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해방되고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생각하는 국가나 자기나라의 전초기지로 여기는 인근 국가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중책이며 또 동시의 전쟁의 불씨이기도 한 중요한 요소이며 통일는 한국에게 주어진 당위성인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2. 교수방법

한국의 현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일은 앞으로 닥아올 사태에

관한 대비책도 된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사실은 현실로 아직 남아있지만 그 원인에 대하여서는 기억이 희미해져가고 있다

해방 이후에 출생한 20대는 이 사실에 대하여 너무도 간단히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타의에 의한 국토양단이기는 하였으나 너무나 국제무대에서 발언이 없었던 무기력한 상태는 외부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점도 있다

3.1 운동 당시의 기백이 차차 감퇴되어간 국내사정이나 외국에 있던 망명객들의 활동도 저조했던 상황에다가 야의에 찬 소련의 전통적 동진정책과 미국의 극동에 대한 지식부족등에도 원인이 있다 하겠다.

우리가 통일을 갈망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리하여야만 할 민족적 과제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도적이며 개인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북괴에서 말하는 점과 다르다. 그들도 남북이 공산주의에 의하여 통일되어야 한다고 부르짖을 것임을 고려에 넣고 그들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이 무엇이 다른가를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 정치의식이나 국가의식이외에도 인간주의를 내세우는 우리들은 마음속으로부터 북한 동포의 실정에 대하여 동정을 보내기에 앞서 충분한 지식이 앞서야 한다. 그들의 생활상을 구석구석 알고 있다는 지적 기반 위에 선 통일에의 요청이어야만 실효가 커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요청은 복합적이고 쌍무적이다. 개인、사회、국가 및 국제적 입장과 역사적、정신적、인도적인 견지에서 정치적인 이유를 보강하고 있다. 어느 누구를 위함도 아니요 당연히 되어야할 것을 조리있게 요청할 따름이다. 통일이 된 다음 북쪽의 젊은 세대를 인

도태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우리의 지적, 정신적, 부합이 더 필요하다는 말도 된다.

3. 참고문헌

공산권 문제 연구소, 북한총감 1945～1968

아시아 자유문제 연구소, 북한독본 / 경제생활편

박동운 , 북한통치기구론

통일원 번역,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기백 ·"한국사 신론"

제2장 우리의 통일정책과 사명

남북통일은 양단의 원인이 어떠한 것이건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남북통일의 문제를 남이 해결해 주기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남북통일의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사이긴 하나 국제적인 관심에 따라 우리의 통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방관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도적인 입장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그들의 협조를 구함과 동시에 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해 계속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방안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토착 인구비례로 자유 총선거 실시에 의한 통일"을 검토할 것이며 아울러 북괴의 통일방안을 분석 비판하게될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통일방안은 북괴의 호전적이고 「유·엔」기구의 권위를 무시하는 부정적인 태도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소재만을 따지거나 북괴를 비난만 하고 있을 수 없으며 통일에 대비하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과업과 자세 문제를 본장에서 취급하게 된다.

본장의 첫째 주제 "우리의 통일정책"에서는 우리가 주장하고 「유·엔」이 지지하는 통일방안을 밝히고 북괴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분석 비판하는 문제를 취급할 것이며, 둘째 주제 "우리의 정신적 자세"에서는 북괴도전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

세를 확립하는 문제와 우리가 내세우는 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해 국민이 취해야 할 자세 문제를 분석 제시하게 될 것이다. 북괴의 도발을 극복하고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며 우리의 염원인 국토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취해야할 노력은 무엇보다 우리의 주체 역량의 배양에 있다.

그러나 우리 국토의 양단이 국제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와 같이 국토 통일의 문제도 국제정세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되며 우리가 주장하는 통일 방안이 「유·엔」감시하의 총선거이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의 지지와 협조가 요청되고 있어 국제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뒤 따라야 하는 문제이다.

국토통일을 위해 우리의 주체 역량을 배양함과 아울러 국내외의 여러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를 본장의 마지막 주제 "우리의 주체역량의 배양"에서 취급하게될 것이다.

I. 우리의 통일정책

1. 내용개요

우리의 통일방안을 단적으로 표시하면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토착 인구비례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방안은 우리의 헌법과 유·엔헌장의 기본정신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이 방안을 여러차례 국내외에 천명한 바 있으며 유·엔총회에서도 이 방안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북괴의 비협조와 부정적 태도, 그리고 그들의 호전적 태도로 인하여 우리가 내세운 통일 방안의 구현을 위한 진전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통일방안의 내용을 검토 이해하고 북괴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분석, 비판함으로서 통일에 대비하는 과제와 자세를 분명히 규정할 수 있게될 것이다. 먼저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방안의 내용을 풀이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1) 「유·엔」 감시의 필요성

한때 북괴측에서도 총선거를 통한 통일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엔기구」의 권위를 부인하고 유·엔기구 대신 중립국으로 하여금 총선거를 감시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뒤에가서 북괴의 통일방안을 분석하면서 이 문제를 취급할 것이나 북괴는 그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유·엔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해둔다

총선거를 공명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욱이 북한 지역에서의 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하고 남한

지역에서의 공산당의 폭력 행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은 북괴를 포함하는 공산국가의 선거실태를 파악하면 더욱 절실히 알게된다. 그들은 정당과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유명 무실한 것이며, 공산당 이외의 당을 인정치 않으며 입후보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다.

한 선거구에 한사람만의 입후보를 추천형식으로 내세우는 그 인선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소위 「추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다. 그리고 선거장소에는 백함과 흑함의 두개의 투표함을 만들어 놓고 공산당이 추천한 단 한사람의 입후보자에 찬성하면 투표용지를 백함에 반대하면 흑함에 넣게한다. 이렇게 찬반(贊反)간을 묻게되는 소위 흑백선거에서 개인의 투표행동이 감시원에 공개되기 때문에 비밀투표가 보장될 수 없다. 형식적으로는 반대표가 많이 나오게 되면 공산당이 다른 입후보자를 재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일 입후보자에다 선거운동의 자유도 허용되어 있지 않을 뿐아니라 투표장에 당간부와 안전원이라 불리어지는 공산당이 파견하는 비밀경찰이 어느함에 표를 넣게 되는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표가 거의 나올수 없게 되는 것이 실례라고 한다. 이러한 선거아닌 선거를 자행하는 그들에게 공명선거를 행사하리라는 기대를 걸 수가 없을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들로 하여금 더욱 자유 총선거에 임하게 하려면 유·엔과 같은 권위있고 전능있는 세계 평화기구의 공정한 감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유·엔으로 하여금 감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 그 총회를 한국에 옮겨오게 할 수 없는 이상 총회에서 뽑은 위원장과 대표위원으로 하여금 감시를 담당하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유·엔에서 한국에 파견한 위원단은 (가) 국제연합 한국 임시 위원단 (UNTCOK, 1947년 11월~1948년 12월), (나) 국제연합 한국 위원단 (UNCOK, 1494년 12월~1950년 10월), (다) 국제연합 한국통일 부흥 위원단 (UNCURK 1950년 10월 ~ 현재) 이다.

현재 한국에 파견되고 있는 언커크로 하여금 총선거의 감시의 의무를 대행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기구를 개편하거나 아니면 현존하는 기구의 규모를 확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방식을 택하던 유·엔 총회에서 위임한 원장과 위원으로 하여금 총선거의 감시를 담당하게 하면 한국은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통한 통일 방안을 수락할 것임을 항시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2) 남북한 토착 인구비례

총선거를 실시할 경우 각 투표구 또는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자의 수를 거주 단위의 인구비례에 따라 정하자는 것이 「토착 인구비례」라는 뜻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되고 있는 원리이며,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당연히 사용되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북괴는 인구비례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남북지역 대등을 주장하면서 남북 동수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할 것을 고집한바 있다. 인구비례로 대표자를 선출할 경우 북괴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것은 현재 남한의 인구는 약 3천 5백만이고 북한의 인구의 2배 이상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남북 대등하게 동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이미 총선거의 뜻을 상실케 하는 것이다. 어떤 협상을 위

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대행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총선거에 인구비례로 대표자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토착 인구 비례의 원칙에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토착 인구비례로 남북한에 걸친 총선거라도 실시해서 통일을 성취하자는 것은 우리측이 양보하는 성의있는 최대한의 아량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북괴의 거역으로 남한에서는 이미 1948년 5월10일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유.엔이 인정하는 정부를 수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한 정부임을 주장할 충분한 이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상 북한만의 유、엔감시하에 총선거 실시로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갈라져 있고 국제적 관련성이 얽혀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남북한 동시에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우리측의 제안은 크게 양보를 하고 있는 셈이다.

(3) 자유 총선거의 뜻

우리측이 제안한 자유 총선거란 보통선거, 직접、비밀선거를 의미한다. 보통선거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은 그들의 성별, 신앙별, 사회계층별, 교육정도별등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되며 1인에 1표의 투표권을 주는 선거를 의미한다. 그리고 직접、비밀선거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함으로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민이 행사하는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통선거와 직접、비밀선거의 의미 뿐 아니라 자유 총선거란 총체적인 자유 분위기 보장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그 말은 선거

정과 선거기간 및 선거후에 걸쳐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자 및 그들의 가족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거주이전 등의 자유가 보장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의 기본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자유 분위기 보장에 중요한점은 유、엔에서 파견된 총선거 감시위원들이 그들에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남북의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제안한 통일 방안의 골자를 풀어 설명했다. 우리의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분석하기 전에 북괴측이 주장하는 통일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북괴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은 일관성이 없고 시기와 여건에 따라 자주 달리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대충 그 골자를 요약할 수 있다.

북괴가 주장하는 통일원칙은 자주、민주、평화의 세가지라고 한다. 이들 원칙을 합쳐 그들은 「평화통일방안」이라 선전하고 있다. 그들이 나열한 어휘로 보면 그럴듯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을 주장하게된 시기와 여건을 분석하면 그들의 야욕과 기만을 짐작할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을 기해 일제하에서 해방이된 후 그해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영、소 세나라 외상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최고 5년 기한의 4개국(미、영、중、소) 후견하의 신탁통치 실시를 결정한 있다.

문명국이 미개한 야만국에 대해서 흔히 실시하는 그러한 신탁통치를 우리 남한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격분을 참지 못해 맹렬히 반탁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괴는 소련의 비위를 맞추이면서 공산화를 위한 준비의 이유를 갖고자 4개국의 신탁통치안

을 찬성하고 북한에서 반탁운동을 시도한 지도자를 체포 투옥하는 반민족적 반자주적 행동을 자행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자주를 부르짖게된 것은 1947 년 9월에 있었던 미·쏘 공동위원회 석상에서 이미 남북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쏘양국의 군대는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던 것이다. 북괴는 그때 이미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의 군대가 철수되면 그들은 남한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북괴는 터무니 없이 「민주」를 흔히 내세운다. 천하에 공개된 사실이지만, 언론, 거주, 사유재산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인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국가인 북괴가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오늘날 북한에는 단 하나의 교회도 절도 없다. 사상 및 종교의 자유는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민주」를 내세우는 것은 허울만의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선전에 불과한 것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북괴는 또한 「평화」를 그들의 통일원칙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무력통일을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이 「평화적 통일」이라는 허울좋은 어휘로 선전한다. 6.25 동란을 감행한 자는 그들이며 지금도 계속 전쟁준비에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있으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는 것처럼 거짓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자주·민주·평화」라는 세가지 통일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북괴의 평화통일 방안의 허위 기만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의 방안을 평화통일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간헐적으로 반복 주장하고 있다. 이들 방안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1) 남북 협상론

이 방안은 남한에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기 이전 (1948년 이전) 북괴가 극력 주장한 방안이며 그 이후에도 간혹 내세워진 방안이다. 외국 군대를 양측에서 철수시킨 다음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입법기관 선거를 실시하자는 안이며, 앞서 지적한 "자주"라는 이름으로 주장하는 요지와 같은 것이며 이 방안의 기만성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2) 무력 통일방안

이 방안은 북괴가 이미 1950년 6.25를 도발시켜 시도했던 방안이며 이 방안이 일단 실패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시도하려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3) 중립국 감시하의 총선거 방안

이 방안은 북괴가 1953년 휴전에 이어 1954년에 있었던 「제네바회담」 때 내놓은 바 있는 방안이다. 그 골자는 중립국의 감시하에 남북 지역 대등한 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제시한 유엔의 감시 대신 중립국의 감시를 주장하고 토착인구 비례대신 남북 지역 대등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의 감시와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가 그들에게 불리함을 타산한 그들이 궁색한 명분으로 제시한 통일방안이라는 점을 우리의 통일방안을 설명하면서 지적한 바 있다.

(4) 연방제 통일방안

이 방안은 남한에서 있었던 1960년 4.19의거 이후에 북괴가 제안한 것으로 남한의 혼란한 시기를 이용하여 민심을 현혹하려는 타산으로 만들어진 방안이다. 그 골자인즉 완전 통일에 앞서

양쪽의 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는 연방제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방안은 과도적 조치로서 양쪽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면서 양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한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케 하는 동시에 남북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얼핏 보아 별 모순이 없는 방안 같으나 그들은 남한의 일시적인 혼란을 틈타 인심을 현혹시키고, 유·엔군의 철수와 「언커크」의 해체등 남한의 무력을 약화시킨 다음 그들의 통제를 달성시키겠다는 기만적인 전술에 불과했던 것이다.

2. 교수방법

우리가 제시한 남북 통일방안과 북괴가 주장해 온 여러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의 방안의 타당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본 주제의 목적이다. 따라서 양쪽에서 제시한 방안의 분석과 검토를 하면서 그 장단점을 비교 토론케 함이 좋을 것이다.

본 내용개요에 소개한 통일방안과 그 내용의 설명은 충분한 강의를 위해서 부족할 것이며 다음 참고문헌에 소개된 문헌들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여 충분한 내용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일부층의 관심을 모아온 통일방안이 있었다.

"중립화 통일론", "무조건 협상론" 등이 그 예의 하나이다. 그 밖에 다른 가능한 방안을 스스로 구안케하여 서로 토의케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괴의 야욕과 기만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북괴측의 태도를 전제로 하여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채택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임을 입증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방안의 타당성이 구명되고 나아가 이 방안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문제와 과제등이 암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1) 국토통일원, 민주통일의 길, 서울인쇄 주식회사
1970, PP. 40~67

(2) 白行傑, 兩断된 國家의 統一問題,
大韓公論社, 1968. PP. 81~154, PP. 254~268

(3) 國会國土統一研究 特別委員会報告書,
統一白書, 서울, 1967.

(4) 국토통일원, 분단국가의 제문제, 대한공론사, 1971, PP. 83~92
"조선 노동당의 자주적 평화통일론"

Ⅲ 우리의 정신적 자세

1. 내용 개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많다. 그러나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제일차적 과제이다. 정신적인 자세가 확립되지 않고는 다른 어떠한 과제도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정신적 자세의 기반은 민주 승공통일에의 신념에 두어야 한다. 경제 건설도 중요하고 국방의 강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제는 정신적 자세가 확립된 후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정신적 자세가 확립된 연후에 그들 과제의 성취가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정신적 자세의 기반은 민주통일에의 신념에 있다. 민주 통일에의 신념을 고취하기 위하여 먼저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산주의와 비교하여 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갖도록 할 것이다.

민주 승공통일에의 신념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자유·민주 사상에 대한 우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다. 이에 전 주제들에서 자유경제 체제가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는 유리한 체제라는 것을 설명한바 있다 (참조) 공산국가 내지 독재국가와 민주 국가의 경제 성장을 비교 검토하는 일도 도움이 되겠지만 남북한의 경제성장의 비교는 이에 제외될 수 없다.

민주주의 체제가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을 위해 우월한 체제인지 공산주의가 우월한 체제인지를 판가름하는 세계 양진영의 경쟁에 이미 우리는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의 남과 북은 경제성장의 경쟁을 하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성장의 결과가 민주 대 공산의 대결의 본 보기가 될 것이다. 결과는 이내 명확해진 셈이다. 전쟁준비에만 광분해 온 북괴는 이미 경제파탄을 초래하게 되었고 경제성장율이 매년 저조하기 시작한 반면 날로 부강해가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미 도약을 위한 기초를 견고히 했고 70년대에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려놓게 될 민족중흥의 대업을 성취하게 될 것이 명확해져 왔다. 애당초 공업발전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북한지역에서 북괴 치하의 경제성장이 날로 저조해지고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을 가진 남한지역에서 자유 민주사상에 의한 경제 성장이 날로 촉진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는 외부에서 주어진 체제가 아니며 지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로 형성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이 우연히 혹은 소수인의 지도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제도의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며 오늘과 같은 발전의 기초를 닦은 것이라 믿어 의심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도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에 의하여 가능해지리라는 신념을 굳혀야 할 것이다. 남북한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승리와 공산체제의 패배는 70년대에 있어 분명히 판가름나게 될 것이 전망된다. 이와같은 명백한 판가름이 지어질 때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여력이 북한으로 뻗어지게 될 것이며 바로 이때가 통일의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남한의 역량의 배양은 절로 형성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으며 온 국민의 계속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념으로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승공통일은 기필코 가능해질 것이다

통일에 대비하는 정신적 자세의 확립에 제외될 수 없는 것은 국가관의 확립과 정치 능력의 배양이다. 나라의 번영과 통일의식은 그나라 국민의 애국심에 의존하는 바 크다. 승공통일 의식도 모든 국민이 갖는 한국에 대한 국가 동일성 의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형성될 수 있다. 국가동일성 의식 없이 통일의식이 강화될 수 없다 국가동일성 의식은 동족이라는 민족의식에서 출발하여 민족의식을 넘어서는 근대적 의미의 국가의식을 수반해야 한다

국가의식은 국가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는 영광관을 갖게 됨으로서 형성된다 국가영광관은 역사적 사실에서, 경제적 발전에 대한 국력에서 외국과의 관계에서 나의 국가는 영광된 것이라는 보람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국가영광관을 갖지 못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지거나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통일의식의 함양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발전은 국가영광관을 고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시말하면 국가영광관은 국가 능력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살기좋은 나라라고 하는 생각, 무엇인가 할 줄 아는 의식.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학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도 생산자, 능동자, 성취자라는 의식이 국가영광관의 밑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능력 의식에 대한 국가영광관은 모든 생활양식에서 이루어 진다. 모든 국가적 실적, 행사등을 통해서 국가능력의식을 느끼게 된다.

정치능력은 정치가에게만 필요한 능력은 아니다. 이미 설명한 바

있듯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개인의 자치적 능력을 믿는 신념 위에 세계된다. 민주적 정치제도가 개인의 자치적 능력에 의존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정치적 능력은 그 나라 민주정치의 발전을 결정하는 현실적 요소가 된다.

남한의 민주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의 정치 능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북괴와 단결하기 위해서도 개인의 정치 능력은 필요하다.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될 무렵 사상적 정치적 교육의 배경이 다른 북한의 국민과 마주쳐 그들을 우리의 편에 서게 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정치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뜻하는 정치능력이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투철성, 집단조직력, 집단지도력, 집단사교력, 강력하고 효과적인 의사표시 능력, 사회문제 분석력, 문제의 창의적 해결력, 설득력등을 포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직장등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적 과정에 교육적 배려가 요청된다. 개인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지도자의 요청에 추종하게 하기 보다 개인의 의사와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명케 하며 정신 토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정신적 자세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이 북괴공산당의 도전을 극복하는 능력과 자신을 배양하는 문제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괴의 도전양상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

북괴가 남한에 대해서도하고 있는 도전의 양상에 관해서는 전 주제들에서 분석 제시한 바 있으나 여기에 다시 이들 도전의 양상을 간결히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괴가 시도하는 도전의 양상을 분류하면 사상적 도전, 정치적 도전, 경제적 도전, 군사적 도전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사상적 도전을 위해 먼저 북한내부에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있으며 남한에 대해서는 온갖 기만적 수법으로 남한의 민심을 교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정치적 도전으로 그들의 군사위원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성 및 국가검열성등의 기구를 신설하여 북한 주민의 염전사상을 억제하고 북괴의 호전적 사상에 호응케하는 모든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3) 경제적 면에서는 전략산업 위치의 중공업 우선정책을 강화하고, 중앙의 공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전시를 대비하여 공장을 지하화하고, 100명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공장과 기업체에는 각종 무기를 공급하여 모든 경제활동을 전쟁준비를 위해 총동원하고 있다.

(4) 군사력 도전을 위해 북괴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국민의 무장, 전군의 간부화, 군비의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군편제를 전시체제로 개편하여 군병력의 증원, 군수산업의 확장등 전쟁도발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북괴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막중하고 다양하다. 그중에도 사상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정신적 자세, 자유 민주사상의 육성,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주 승공통일에의 신념등 앞서 지적한 정신적 자세 확립이 크게 요청된다. 개인은 스스로 민주적 정치능력을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치적 지도력은 퇴폐적 풍토와 부정을 일소하기에 과감한 정치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북괴의 정치적 도전에 대비하는 모든 정책수행에 과감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수행은 삼가해야 한다.

과거에 구축한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촉구해야 할 것이며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에 새로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북괴의 군사적 도전에 대비하는 우리 국군의 강화, 장비의 현대화 등 북괴의 것에 능가하는 군사적 보장은 필수적이다. 우리의 통일의식의 고취는 북괴가 광분하는 무력 도발 행위를 봉쇄하기 위한 국방력의 강화와 아울러 경제건설에 매진함으로써 통일의 시기 성숙을 촉진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수방법

본 주제에서 취급되어야 할 내용들은 광범위한 것이며 대부분 전 주제들에서 취급된 내용들이 반복될 수도 있다.

즉, 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민주적 제도와 과정" 그리고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등에서 취급된 내용을 간추려 그 요지를 지적하고 공산주의와 비교하여 민주주의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북괴의 도전의 양상에 대한 것 역시 전 주제에서 취급된 내용을 요약하여 그 요지를 재인식시킬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산주의의 것과 비교하여 여기에 다시 요약 제시하면, 민주주의는 인간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반면에 공산주의는 물질적 가치를 지상의 가치로 삼고 있다.

민주주의가 물질적 가치를 전혀 무시하거나 도외시 하는 것은 아니기 물질적 가치를 최상의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인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며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주인은 사람이며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주인은 「이데올로기」이며 이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행사하는 소수인의 독재자이다.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주인은 사람(국민)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 행하는 행동을 존중하며 따라서 개인성과 개성을 존중히 여긴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는 「이데올로기」와 이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행사하는 소수인의 독재자를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국민은 종이며 수단이다. 독재자의 기만적인 선전에 속고 구속에 억압되어 맹목적으로 독재자에 추종하는 국민의 정신력보다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 스스로 택한길을 지향하는 국민의 정신력이 훨씬 더 강할 것이다. 강상적이고 맹목적으로 독재자에 추종하는 국민의 정신력이 일시적으로는 강해 보일 경우도 있을 것이나 독재자의 우상화가 약해지거나 독재자의 기만성이 폭로되면 독재자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정신력은 쉽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이성과 신념으로 굳힌 정신력은 외부적 조건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사회의 국민의 정신력을 강화시키기는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형성된 정신력은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민주사회의 장점임을 믿어 의심해서는 안된다.

북괴에서 무력으로 남침을 시도하기 위하여 강력한 정신적 무장을 강행하고 있으나 우리의 정신력이 더욱 강할 수 있다는 신념을 위에 예시한 내용의 요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민주사회의 정신력이 흔히 독재사회의 것에 비하여 약할 것이라는 상식을 깨트리고 독재 사회의 정신력이 외부적 강압에 의하여 획일적

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민주 사회의 국민의 정신력은 국민 스스로의 이성적 자각에 의하여 형성되는 점을 강조하여 자각에 의하여 형성된 정신력이 더욱 강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자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본 주제의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 활용되어야 할 실증적 자료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북괴의 도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나 우리의 경제성장의 제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실증적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내용개요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면 효과는 좋을 것이다. 그밖에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우월성을 확인시키는 자료도 수집제시되면 좋다. 이러한 자료의 제시는 민주 승공통일의 가능성과 자유, 민주, 사상에 대한 우리의 국력의 신장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학습자로 하여금, 민주 승공통일에의 신념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갖게하며 국가영광감을 높여 승공통일에의 과업에 자진 참여하는 의식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3. 참고문헌

1. 국토통일원, 민주통일의 길, 서울인쇄주식회사, 1970. PP. 85~93.
2. 국토통일원, 분단국가의 제문제, 대한공론사, 1971 (PP. 15~30 "국토통일과 우리의 과제") (PP. 69~82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3. 국토통일원, 국토통일, 대한공론사, 1970, 7. PP. 15-17 "국토통일과 우리의 자세" 1970, 9, 제3호, PP. 9~12 "통일의식과 우리의자세 확립" PP. 23-25 "북괴도발 행동과 우리의 자세" 1970. 12. 제6호 PP. 13~17 "국토통일과 반공정신의 생활화", 1971. 4월호 PP. 38~41 "반공통일을 위한 교육체제", 1971, 5 월호, PP. 5~19 "북괴의 자유진영 침투현황과 방법에 대한 분석"
4. 오천석, 민주주의의 참된모습,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8. PP. 149-173.
5. 국토통일원, 분단국가의 제문제, 대한공론사, 1971. PP. 15~30 "국토통일과 우리의 과제" PP. 39-50, PP. 64-68, PP. 69-82.

Ⅲ. 우리의 주체역량의 배양

민주 승공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주체역량의 배양" 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10년동안 우리의 주체역량의 배양을 위해 「자주」 「자립」 「번영」 이라는 목표아래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그 동안 주체역량의 배양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세우는데 성공하였다. 불리한 여건에도 유리한 여건을 가진 북괴보다 능가하는 발전의 터전을 닦아 놓았다.

그동안 구축해 놓은 기반 위에 승공통일을 위한 주체역량을 더욱 신장시켜야 할 사명을 우리는 지고 있다. 우리의 주체역량의 배양을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자조정신의 함양, 자립경제의 확립, 그리고 자주 국방태세의 확립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과제를 좀더 상세히 풀이 설명하기로 한다.

(1) 자조정신의 함양

과거에 우리는 주로 남의 힘에 의존하여 국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60년대의 초반기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부진과 빈곤에 도전하여 국민의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계속적인 노력의 결과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계속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도 순조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발달이 절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자주와 자립을 위한 강한 의욕과 노력의 총화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과거에 가졌던 의타심을 버리고 우리도 노력만 하면 자주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며 풍요의 사회를 우리 손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의타심은 물론 부정적 태도와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또한 중상과 모략 대신 이해와 관용과 협동심을 그리고 부정과 아집 대신에 긍정과 양보하는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조정신 함양을 위해 온 국민이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신을 가지고 더 한 발전을 위해 협동하는 정신적 자세를 확립해야 할 시기에 이른 것이다.

(2) 자립경제의 확립

빈곤에서 탈피코자 하는 마음이 강렬해 있다. 과거에 청빈을 미덕으로 여길만치 우리의 살림은 가난했다.

그러나 이제 빈곤 타파는 못견딜 갈망으로 되었다. 과거에 우리는 주어진 여건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노력만 하면 빈곤을 타파할 수 있고 또한 노력만 하면 풍요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 10년동안의 실적으로 보아 우리 사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이렇게 하여 남의 나라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자신을 얻게된 것이다.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경제건설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고 더우기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경제건설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가 어느정도 발전된 다음에 점차적으로 사회복지를 증진시

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고 경제가 높은 수준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때는 소비가 미덕이 될 정도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1차 및 2차 5개년 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자립경제의 기반 구축에 성공하고 자립경제로의 전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은 소비가 미덕이라는 단계에 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나 기타 사회복지사업은 앞으로 제3차 5개년계획에 보다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1〉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성장은 날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 생산에 있어서 1961년에 21억 5,300만불에 불과하던 것이 1969년에는 203억불에 달하고 있다

〈표1〉 주요 경제지표

부문	단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국민 총생산	천만불	215.3	218.5	241.9	266.6	287.3	332.4	367.8	502.0	607.3
1인당 국민총생산	불	84.8	83.6	87.8	96.4	101.2	114.3	123.5	164.7	195.0
경제 성장율	%	4.2	3.5	9.1	8.3	7.4	13.4	8.9	13.1	15.9

또한 1인당 GNP(국민총생산)를 보면 1961년에 84.8불이던 것이 1969년에는 195불로 약 2.3배가 증가되었다. 한편 경제성장율은 1962년도에 이루었던 3.5%로 부터 1966년의 13.4%에 이르러 당초 계획기간중에 연평균 7.1%를 달성하려던 것을

8.5 %로 초과 달성함으로써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실적은 1951 년부터 1961 년까지 평균 4.8 %의 성장밖에 이루지 못했던 사실과 비교해보면 거의 2배에 가까운 높은 성장이 었다. 그후 1967 년에는 8.9 %, 1968 년에는 13.1 %, 1969 년에는 15.9 % 라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다.

국민총생산 가운데 각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1960년도에 농림, 수산업의 비중이 36.9 %이고 광공업이 15.7% 사회간접자본 (도로, 철도, 항방, 써비스, 운수등)이 47.4 % 였다. 그러나 1960 년에 와서는 2차 산업인 공, 광업의 비중이 푹넓이 커져 19.6 % 로 늘어났고 1차 산업인 농림, 수산업이 36.1 %, 사회 간접자본의 3차 산업의 비중이 44.3 % 로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2차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공업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에 있어서도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 전해인 1961 년에도 4,200 만불에 불과하던 것이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와 온 국민의 노력의 결과 년평균 44 % 씩 증가하여 제1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해인 1966 년에는 6배가 넘는 2억 5000 만불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수출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수출상품의 내용도 크게 달라 졌다. 1961 년도만 하더라도 총 수출품의 대부분이 가공되지 않은 농, 수산물 및 광산물이 었고, 공업제품은 불과 22 %인 950 만불이 었던 것이 1966 년에는 그 비율이 반대로 되어 공업제품이 63 %인 1억 6,100 만불에 달하여 5년간에 공업제품 수출액은 무려 17배로 증가 되었다.

또한 수출 대상국도 1961 년에 27 개국에 불과하던 것이 1966 년에는 70 개국으로 늘어 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출 무역은

오늘날 까지 계속 증가되어 1968년에는 5억불, 1969년에는 7억불, 1970년에는 10억불을 달성했던 것이다.

그리고 석탄 전력등의 동력원의 확보, 철도, 도로 항만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시멘트, 비료, 제철등 기간산업의 건설, 농업생산의 증대, 국제수지의 개선등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 국민과 정부가 일치 단결하여 인내하고 노력했다는 점,

둘째, 정부는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기간산업이나 기타 중요부문에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고 전적으로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였다는 점,

세째, 우리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던 전력, 석탄, 연료등 애로 부문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로 이를 타개함으로서 다른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주었다는 점,

네째, 농림부문에 있어 어려운 자연 조건을 극복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한 점,

다섯째,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를 거둔 점,

여섯째, 5개년 계획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손을 댄 현실화 개방정책 (금리현실화, 무역자유화, 변동환률제등) 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민이 계속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수출증진은 물론 외화획득으로 자립경제 확립과 중요사회 건설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한국의 경제건설의 전망은 밝은 것이

나 그 결실은 역시 노력에 의하여서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3) 자주 국방 태세의 확립

우리는 지금 조국근대화와 국토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로 경제면에 눈부신 발전을 성취할 수 있었다.

북괴는 우리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질시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민심교란, 정치혼란, 경제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각종만행(1.21사태, 울진, 삼척 지구 무장공비 남파사건, KAL기 납북 사건등)을 자행하여 한국내 혼란과 불안을 증대시켜 우리의 국가 발전을 저해하려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북괴는 기회만 있으면 남침하려는 흉계로 무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이 윤택해진다 하더라도 국방이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이 허사일 수 밖에 없다. 북괴의 만행에 대비하고 남침을 위한 무장강화에 대비하여 우리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구호아래 국방력의 강화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대한 정책의 변화로 주한 미군을 감소시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손으로 국방을 담당하는 자주 국방의 태세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남의 나라의 힘에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경제적 성장과 아울러 모든 면의 국력이 강화되면 국방도 우리힘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지는 한국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여기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이제 자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긍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우선 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건 국군의 장비를 현대화 하여 강력한 전투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국민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는 자주 국방태세의 확립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역량 배양이 민주 승공통일을 위한 지름길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나 유、엔의 결의나 국제 여론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한국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유엔의 결의나 국제 여론의 지지가 현재 당장 즉효가 있는 것은 아니나 국제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유엔」의 통한 방안이 우리가 제시한 통일 방안과 일치되고 있으며 우리의 통일 방안을 「유、엔」과 국제 여론이 지지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중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비단 통일문제에 대한 지지 여부에만 그치지 않고 지지하는 나라와의 경제적 문화적 협력을 증진시켜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으로도 국제관계의 유대는 중요한 것이다.

유、엔의 결의에 따라 통한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언커크」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유、엔」군의 주둔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 통일 문제에 대한 「유엔」의 결의나 국제 여론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북괴의 무력 적화통일 방안이 부당한 것임을 세계에 인식시키는 동시에 북괴를 계속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한국이 계속 노력한 결과 북괴보다는 많은 지지국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수는 북괴의 것 보다 2배가 넘고 있다.

〈 표 2 〉 한국과 북괴의 외교및 영사관계 대비표

(1969년 10월 31일 현재)

	한 국	북 괴	비 고
아주지역	15	11	상주 대사관 및 겸임
미주지역	21	1	총 영사관
구주지역	18	8	
	21	12	
아(阿)주지역	8	6	
계	83	38	
대표부	4	4	

북괴도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여 국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주로 신생아·아제국 및 남미제국에 대한 외교망을 확장하고 있으며 중립국에 대하여 집중외교를 전개하여 이들 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북괴의 외교목표는 북괴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한국의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화에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진 수법으로 외국과 접촉하고 있으며 그 수법의 몇가지 예를 들면, "방문외교의 강화" "주「유엔」대사의 대거 초청", 친선협회 창설" 등

이다.

더우기 북괴는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 적극적인 침투공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북괴의 적극적인 외교관계 수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교관계에 비해 국제적 여론의 지지도는 한국의 편에 크게 기우러 지고 있다.

북괴는 「유엔」에서 규탄을 받고 있으며 고립되고 있다. 북괴는 소수의 공산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북괴의 만행이 계속되는 한 공산국에서도 고립될 가능성마저 있게 된다. 북괴가 무력 적화통일을 위해 온 정력을 소비하는 한 발전은 저조할 것이고 국내외의 시기도가 악화되고, 김일성 우상화가 약화되면 국내에 자유화 운동이 도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 교수방법

우리의 주체역량의 배양이 민주 승공통일을 위한 가장 신속한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주체역량의 배양을 위한 우리의 노력의 중요성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내용개요에 우리의 경제성장의 추세를 보이기 위한 〈표〉를 제시했으나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더 많은 자료를 수집제시하여 우리의 발전상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체역량의 배양을 위한 노력의 과정을 이해시켜 이러한 국가적 과업에 참여하는 보람을 느끼게 함이 필요하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는」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주」「자립」「번영」의 중요성과 민주 승공 통일을 위한 우리의 각오와 과제를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 우리의 주체 역량을 조속한 시일내에 크게 배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과시하여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시키고 통일 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유엔」및 국제 여론에 호소하여 그들의 지원과 협조를 구하도록 계속 노력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강의를 위해서는 먼저 승공통일을 위해서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광범위하고 밀접한 국제관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제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제관계 현황의 단면을 보여 주기 위하여 내용 개요에 〈표2〉를 제시한바 있으나 보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가능하면 북괴의 외교관계 현황도 분석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주제의 강의로서 본 서가 시도하는 민주 승공통일 교육을 끝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주제에서는 앞서 취급한 모든 문제를 총정리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다소의 중복이 되더라도 앞서 취급한 내용의 골자를 경우에 따라 재 상기시킬 필요도 있게 될 것임을 끝으로 지적해 둔다.

3. 참고문헌

(1) 국토통일원, 민주통일의 길, 서울인쇄주식회사, 1970, PP. 94~116.

(2) 金正明, 韓國統一への道, 日本, 東京 𢁱書房, 1968,
pp 1~30, pp. 102~118

(3) 白行傑, 兩斷된 國家의 統一問題,
大韓公論社, 1968, PP. 81~134, PP. 168~207

(4) 국토통일원 국토통일, 대한공론사,
1970.8. 제 2 호, PP. 23~26 "국토통일의 국제환경,"
1970.9, 제 3 호, PP. 19~22, "「유엔」 총회결의와 국제여론이 한국통일에 미치는 영향", PP. 26~29" 한국통일문제에 대한 UN의 활동", 1970, 10. 제 4 호, PP. 80~97
"한·미관계의 역사적 고찰", 1970. 11, 제5호, PP. 26~30
"북괴 공산주의의 최근 동향과 중립국 외교노선", PP. 47~74
"북괴의 기본 외교정책과 전략", PP. 94~98 "국토통일을 위한 국내외 여건과 그 대비책", PP. 99~102 "북괴의 최근의 대「유엔」 접근정책 및 대외노선 분석"
1970, 12, 제 6 호, PP. 18~22, "한국통일의 국내적요인",
1971. 5월호, PP. 63~90 "북괴의 기본 대외정책과 전략"